한국은행의 증권업무 해설

2021

한국은행

한국은행의 증권업무 해설

2021. 7

한국은행 국고증권실

머 리 말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 수단으로 공개시장에서 통화안정증권 발행, 증권 매매 및 대차 업무를 수행할 뿐만 아니라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국고채권과 재정증권 발행, 수입인지 공급, 정부 유가증권 보관 등의 사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국고채권과 통화안정증권에 투자한 외국 중앙은행 등을 대상으로 증권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국은행의 증권업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2000년에 처음으로 「한국은행의 증권업무 해설」 책자를 발간하였고, 그동안 네 차례에 걸쳐 수정·보완되었습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다섯 번째 개정판에서는 지난 2017년 발간된 네 번째 개정판 이후 변경된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 관련 증권제도 및 정부의 국고채권 발행과 관련한 주요 개선내용을 반영하였으며, 2019년 9월에 시행된 전자증권제도에 대한 설명도 새롭게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 9월 개시된 한국은행의 증권 커스터디 업무와 수입인지 공급, 정부 유가증권 보관 등 업무에 대해서도 그 내용을 보강하였습니다.

통화신용정책과 관련한 증권제도의 주요 개선사항으로는 2018년 3월에 통화안정증권 1년물의 유동성 제고를 위해 통합발행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2개월로 확대하였고, 같은 해 11월에는 1년물에 대해서도 정례 중도환매를 실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코로나 19 이후 경제 · 금융안정을 위한 정책대응의 하나로 환매조건부채권 매매와 관련하여 2020년 4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매매대상증권을 한시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정부의 국고채권 발행과 관련하여서는 2019년 2월 이후 장기물 시장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50년물을 격월로 정례 발행하고, 2021년 2월에는 국채시장 역량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국고채 2년물을 신규발행하고 아울러 국채발행 방법의 하나로 모집방식의 비경쟁 인수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옵션방식으로 발행하던 물가연동국고채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전환하고, 모든 국고채권의 낙찰금리 차등구간을 확대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수정·보완한 「한국은행의 증권업무 해설」이 한국은행의 증권업무에 관심 있는 많은 분들에게 유용한 길라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2021년 7월

국고증권실장 나 승 근

차 례

Ⅰ. 국채 업무 ---- 1

제1장 국채 제도 개요 ---- 3

제2장 국채의 발행 ---- 33

제1절 국채의 발행 ---- 33
제2절 국고채권(명목) 경쟁입찰 ---- 35
제3절 국고채권(명목) 비경쟁입찰(인수) ---- 42
제4절 국고채권 통합발행 ---- 46
제5절 물가연동국고채 ---- 50
제6절 환매조건부 국고채권 발행 ---- 59
제7절 변동금리부 국고채권 발행 ---- 61

제3장 국채의 상환 ---- 67

제1절 개요 ---- 67
제2절 만기상환 ---- 68
제3절 조기상환(Buy Back) ---- 70
제4절 교환(Conversion Offer) ---- 72

제4장 국고채전문딜러 제도 ---- 77

제1절 개요 ---- 77
제2절 신규지정 요건 ---- 79
제3절 혜택과 의무 ---- 81
제4절 금융 지원 ---- 82

제5장 국채 원금·이자 분리거래제도(STRIPS) ---- 83

제1절 개요 ---- 83
제2절 STRIPS의 기대효과 ---- 84

제3절 종목관리코드 부여 방법 ---- 86
제4절 STRIPS 등록 ---- 86

II 통화안정증권 업무 ---- 95

제1장 업무 개요 ---- 97

제2장 통화안정증권의 발행 ---- 101

제1절 통화안정증권의 발행조건 및 발행방법 등 ---- 101
제2절 통화안정증권의 발행방식 ---- 103
제3절 통화안정증권의 발행가액 산정 ---- 105
제4절 통합발행 ---- 107
제5절 발행 종목명 표기 ---- 108

제3장 통화안정증권의 등록 ---- 110

제1절 등록의 의미 ---- 110
제2절 등록의 구분 ---- 110
제3절 일괄등록제도 ---- 112
제4절 등록변경 및 양수도 등록 ---- 115
제5절 증권의 등록전환, 등록삭제 및 현재액 증명 ---- 116

제4장 통화안정증권의 상환 ---- 118

제1절 개요 ---- 118
제2절 이자상환 및 만기상환 ---- 119
제3절 중도환매(조기상환) ---- 119

제5장 발행 및 상환의 회계처리 ---- 122

제1절 통화안정증권 발행 및 상환 회계처리 개요 ---- 122
제2절 통합발행에 따른 회계처리 ---- 124

제3절 중도환매(조기상환) 회계처리 129
제3-1절 이표채(통합발행) 중도환매 회계처리 131
제3-2절 할인채 중도환매 회계처리 133

Ⅲ 국공채 매매 및 대차 업무 135

제1장 업무 개요 137

제1절 매매의 종류 137
제2절 매매 대상증권 138

제2장 환매조건부채권(RP) 매매 139

제1절 매매방식 및 조건 139
제2절 채권의 양수도 및 원천징수 142
제3절 RP매매방식 변경 145
제4절 증거금률 및 수수료 147
제5절 유가증권의 대체 및 교환 149
제6절 국고금의 RP매입 150

제3장 증권 단순매매 152

제1절 매입 152
제2절 원리금 수취 153

제4장 증권대차 157

제1절 증권대차거래 제도의 개요 157
제2절 한국은행의 증권대차업무 개요 158
제3절 증권대차거래 담보관리 및 만기 159
제4절 한국은행의 거래 유형 및 수수료 159
제5절 한국은행 증권대차거래의 회계처리 160

Ⅳ 채권 관련 원천징수 업무 161

제1장 채권 과세제도 개요 163

제1절 개요 163
제2절 채권소득에 대한 과세 방법 164

제2장 채권관련 원천징수제도 166

제1절 원천징수제도 개요 166
제2절 채권관련 원천징수제도 변경 추이 167
제3절 현행 채권관련 원천징수제도 169
제4절 채권 소득자별 원천징수 174

제3장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관련 원천징수업무 181

제1절 원천징수 개요 181
제2절 원천징수세액 납부 및 지급명세서 제출 183
제3절 원천징수세액 산출 예시 184
제4절 국채 통합발행에 따른 발행자 부담세액 환급 187

Ⅴ 수입인지 업무 189

제1장 수입인지 제도 개요 191

제2장 수입인지의 수급 및 판매 199

제1절 수입인지의 수급 199
제2절 수입인지의 판매 202
제3절 수입인지의 교환 및 환매 203

제3장 수입인지 판매대금 회수 및 국고 납입 204

제1절 수입인지 판매대금 회수 204

제2절 판매대금 국고 납입 ---- 207

제4장 수입인지 판매인 관리 및 보고 ---- 209

제1절 수입인지 판매계약의 체결 ---- 209
제2절 수입인지 판매계약의 변경 및 해지 ---- 210
제3절 수입인지 판매인의 판매실적 관리 ---- 212
제4절 수입인지 관련 보고(기획재정부 앞) ---- 213

Ⅵ 정부유가증권 업무 ---- 215

제1장 업무 개요 ---- 218

제2장 정부유가증권 수급 및 관리 ---- 220

제3장 정부유가증권 수탁 및 환부 ---- 221

제1절 정부유가증권 계좌 관리 ---- 221
제2절 정부유가증권 수탁 ---- 223
제3절 정부유가증권 환부 ---- 231

제4장 정부유가증권 월계대사 및 계산보고 ---- 235

제1절 월계대사 ---- 235
제2절 감사원앞 자료 송부 ---- 237

제5장 정부유가증권 관련 기타 업무 ---- 238

제1절 정부유가증권 보관 전환 ---- 238
제2절 상환 등이 개시되는 유가증권의 처리 ---- 238
제3절 잔액 증명(현재액증명서 발급) ---- 239

Ⅶ 징발보상증권 관련 업무 241

제1장 업무 개요 243

제1절 징발보상증권 발행 배경 243
제2절 한국은행의 업무 244

제2장 징발보상증권 발행 및 상환 246

제1절 발행 246
제2절 상환 248

제3장 징발보상금의 공탁 250

제1절 공탁 개요 250
제2절 공탁 실무 252
제3절 반대급부이행증명서 발급 256
제4절 공탁의 소멸시효 258

제4장 징발재산의 환매 260

Ⅷ 현물보관 업무 263

제1장 증권 과목 265

제2장 증권 출납, 관리, 폐기 및 현송 266

제1절 증권 출납 266
제2절 증권 관리 267
제3절 증권 폐기 268
제4절 증권 현송 268

제3장 시재검사 270

Ⅸ 증권 커스터디(Custody) 업무 ---- 271

제1장 한국은행 증권 커스터디 업무 개요 ---- 273

제1절 증권 커스터디 업무 개요 ---- 273
제2절 한국은행의 증권 커스터디 업무 ---- 273

제2장 증권 커스터디 약정체결 절차 ---- 278

제1절 계약 체결 ---- 278
제2절 계좌 개설 ---- 283

제3장 증권 커스터디 업무 세부절차 ---- 286

제1절 채권 결제 ---- 286
제2절 자금거래 ---- 289
제3절 원리금 수령 및 원천징수 ---- 293
제4절 수수료 관리 ---- 296
제5절 보고서 제출 ---- 298

제4장 유관기관의 역할 및 프로세스 ---- 301

제5장 BOK-CS 등 관련 시스템 ---- 304

제6장 SWIFT 메시지 ---- 307

Ⅹ 참고 자료 ---- 309

제1장 채권의 종류 ---- 311

제1절 채권의 종류 ---- 311
제2절 증권표준코드 ---- 319

제2장 전자증권제도의 개요 ---- 325

제3장 증권업무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관련 세법조항 ---- 343

표 차 례

<표 Ⅰ-1> 국채 시장 발전 연혁 ---- 6
<표 Ⅰ-2> 정부의 한국은행 차입 및 재정증권 발행 현황 ---- 9
<표 Ⅰ-3> 연도별 재정증권 발행실적 ---- 10
<표 Ⅰ-4> 외환위기 직후 국내에서 발행된 외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 현황 ---- 11
<표 Ⅰ-5> 해외에서 발행된 외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 및 만기 현황 ---- 12
<표 Ⅰ-6> 연도별 보상채권 발행실적 ---- 14
<표 Ⅰ-7> 연도별 국민주택채권 발행실적 ---- 15
<표 Ⅰ-8> 국민주택채권의 연혁 ---- 15
<표 Ⅰ-9> 국민주택채권의 종류별 현황 ---- 17
<표 Ⅰ-10> 소멸시효완성 국채 현황 ---- 20
<표 Ⅰ-11> 국고채권 및 통화안정증권의 전자등록 발행과정 ---- 34
<표 Ⅰ-12> 국고채권의 만기별 입찰일 및 발행일 ---- 36
<표 Ⅰ-13> 국고채권 입찰 개요 ---- 37
<표 Ⅰ-14> 낙찰가격 결정방식 비교(700억원 발행) ---- 38
<표 Ⅰ-15> 차등낙찰금리구간 변동 추이 ---- 38
<표 Ⅰ-16> 국고채권 통합발행 기간 ---- 47
<표 Ⅰ-17> 신규발행 국고채권의 종목관리코드 부여 방법(예시) ---- 48
<표 Ⅰ-18> 국고채권 수익률 체계 개편 내용(2013. 6월 개편 당시) ---- 49
<표 Ⅰ-19> 물가연동국고채 사례 ---- 50
<표 Ⅰ-20> 만기시 물가수준이 발행일 물가수준보다 낮은 경우 예시 ---- 57
<표 Ⅰ-21> 변동금리부 국고채권 이자지급 예시 ---- 63
<표 Ⅰ-22> 국고채권 종목명칭 및 종목관리코드 체계(2013년 6월 이후) ---- 66
<표 Ⅰ-23> 연도별 국고채권 STRIPS 현황 ---- 85
<표 Ⅰ-24> 국고채권 발행·상환 관련 업무현황 ---- 88
<표 Ⅰ-25> 연도별 국채 발행 현황 ---- 91
<표 Ⅰ-26> 연도별 국고채권 조기상환 및 교환 현황 ---- 91
<표 Ⅰ-27> 연도별 국고채권 발행·상환 현황 ---- 92
<표 Ⅱ-1> 통화안정증권 제도의 변천 ---- 98

<표 Ⅱ-2> 통화안정증권 발행 추이 ---- 99
<표 Ⅱ-3> 한은금융망(BOK-Wire+) 이용수수료 ---- 102
<표 Ⅱ-4> 통화안정증권 업무 주기(2021년 5월말 현재) ---- 104
<표 Ⅱ-5> 통화안정증권 발행 종목명 표기 방법 ---- 108
<표 Ⅱ-6> 통화안정증권 발행수익률 단위 세분화 시행(2017. 11. 13) ---- 108
<표 Ⅱ-7> 통화안정증권의 한국예탁결제원 명의 등록 추이 ---- 113
<표 Ⅱ-8> 통화안정증권 발행 및 상환 회계처리 ---- 123
<표 Ⅱ-9> 통합발행에 따른 할인·할증차금 회계처리 ---- 128
<표 Ⅱ-10> 이표채(통합발행) 중도환매 회계처리 예시 ---- 132
<표 Ⅱ-11> 할인채 중도환매 회계처리 예시 ---- 133
<표 Ⅲ-1>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 현황(2021년 5월말 현재) ---- 138
<표 Ⅲ-2> 환매조건부채권 매매 업무 주기 ---- 139
<표 Ⅲ-3> 한국은행의 RP제도 변천 추이 ---- 141
<표 Ⅲ-4> RP거래의 회계처리 ---- 147
<표 Ⅲ-5> 환매조건부채권(RP) 매매 현황 ---- 151
<표 Ⅳ-1> 채권소득에 대한 과세 ---- 165
<표 Ⅳ-2> 채권이자소득의 보유기간별 원천징수제도의 변천 추이 ---- 168
<표 Ⅳ-3> 원천징수세율 변동 내역 ---- 174
<표 Ⅳ-4> 주요국과의 조세조약상 이자소득 제한세율 ---- 179
<표 Ⅳ-5> 통화안정증권 및 국채의 취급사무별 원천징수 현황 ---- 181
<표 Ⅴ-1> 우표형 수입인지와 전자수입인지 판매대금 비교(국고납부액 기준) ---- 192
<표 Ⅴ-2> 수입인지 권종 변화 추이 ---- 193
<표 Ⅴ-3> 수입인지 수급 업무별 담당 기관 ---- 200
<표 Ⅴ-4> 통할점별 수입인지 판매기관과의 수급 거래 현황(2021년 5월말 현재) ---- 201
<표 Ⅴ-5> 수입인지 판매인 추이 ---- 202
<표 Ⅴ-6> 수입인지 수급 및 판매보고서상의 항목별 내용 ---- 205

<표 Ⅶ-1> 징발보상증권의 발행근거 및 발행회차 내역 ---------- 246
<표 Ⅶ-2> 징발보상증권 상환금액 및 상환일 예시 ---------- 248
<표 Ⅷ-1> 증권 과목의 구분 ---------- 265
<표 Ⅷ-2> 무효증권의 기준 ---------- 266
<표 Ⅷ-3> 증권 종류별 시재검사 근거 ---------- 270
<표 Ⅸ-1> 외국 중앙은행 등의 국내 채권투자 현황 ---------- 274
<표 Ⅸ-2> 한국은행의 증권 커스터디 업무 ---------- 275
<표 Ⅸ-3> 증권 커스터디 업무 추진 경과 ---------- 275
<표 Ⅸ-4> 증권거래(DVP결제방식) 시 자금 회계처리 ---------- 290
<표 Ⅸ-5> 단순 자금거래 시 회계처리 ---------- 291
<표 Ⅸ-6> 국고채권 원리금 수취 회계처리 ---------- 292
<표 Ⅸ-7> 수수료 납부 회계처리 ---------- 293
<표 Ⅸ-8> 거래기관 지급 수수료 수준 ---------- 297
<표 Ⅸ-9> 보고서별 제출 주기 및 제출 기관 ---------- 299
<표 Ⅸ-10> 증권 커스터디 정례 및 비정례업무 ---------- 300
<표 Ⅸ-11> BIC(Bank Identifier Code) 사례 ---------- 307
<표 Ⅸ-12> SWIFT 전문 유형 ---------- 308
<표 Ⅹ-1> 채권의 분류 체계 ---------- 311
<표 Ⅹ-2> 특수채 발행기관 및 기관 설치 근거법 ---------- 317
<표 Ⅹ-3> 표준코드의 기본 체계 ---------- 321
<표 Ⅹ-4> 주요국 국가코드 예시 ---------- 321
<표 Ⅹ-5> 국고채권 및 통화안정증권 표준코드 부여 및 상장 절차 ---------- 324
<표 Ⅹ-6> 채권의 등록발행 ---------- 326
<표 Ⅹ-7> 채권의 양수도 절차(일괄등록 vs 개별등록) ---------- 327
<표 Ⅹ-8> 전자증권제도 계좌 구조 ---------- 330
<표 Ⅹ-9> 채권별 등록과 관련된 법률 ---------- 332
<표 Ⅹ-10> 예탁결제제도 관련 용어 정리 ---------- 340
<표 Ⅹ-11> 예탁결제제도의 변천 ---------- 341
<표 Ⅹ-12> 예탁 관련 법률 ---------- 342

그림차례

<그림 Ⅰ-1> 국채 발행절차 ---- 3
<그림 Ⅰ-2> 국고채권 입찰 및 발행 흐름 ---- 41
<그림 Ⅰ-3> 국고채권 통합발행제도 ---- 46
<그림 Ⅰ-4> 변동금리부 국고채권 발행 / 이자율스왑 거래 체결 흐름(예시) ---- 65
<그림 Ⅰ-5> 국고채권의 만기상환 ---- 69
<그림 Ⅰ-6> 국고채권 교환 ---- 72
<그림 Ⅰ-7> 국고채전문딜러(PD)와 예비국고채전문딜러(PPD) ---- 78
<그림 Ⅰ-8> 국고채권 스트립 흐름도 ---- 87
<그림 Ⅱ-1> 통화안정증권 일괄 등록발행 절차 ---- 114
<그림 Ⅲ-1> 증권대금동시결제(DVP) 흐름도 ---- 142
<그림 Ⅲ-2> 再RP거래와 이자지급 프로세스 흐름도 ---- 144
<그림 Ⅲ-3> RP매매 방식 변경 ---- 146
<그림 Ⅴ-1> 수입인지 수급 경로 ---- 200
<그림 Ⅴ-2> 수입인지 판매대금 납입 경로 ---- 204
<그림 Ⅴ-3> 수입인지 판매계약 체결 절차 ---- 210
<그림 Ⅵ-1> 정부유가증권 수급내역 관리 체계 ---- 220
<그림 Ⅵ-2> 예탁증명서 제도를 이용한 보증금/공탁금 납부 절차 ---- 231
<그림 Ⅸ-1> 거래기관 정보 관리 ---- 282
<그림 Ⅸ-2> 증권 커스터디 업무 관련 채권결제 과정 ---- 289
<그림 Ⅸ-3> 한국은행 증권 커스터디 업무 네트워크 ---- 304
<그림 Ⅸ-4> 증권 커스터디 시스템 하드웨어 구성 ---- 306
<그림 Ⅹ-1> 채권 전자등록발행 절차 ---- 331
<그림 Ⅹ-2> 채권의 전자등록 발행 흐름도 ---- 331

참고차례

<참고 Ⅰ-1> 2년만기 국고채권 최초 발행 ---- 5
<참고 Ⅰ-2> 독립공채 ---- 18
<참고 Ⅰ-3> 국채보조권 ---- 18
<참고 Ⅰ-4> 양곡증권 ---- 19
<참고 Ⅰ-5> 건국국채(보기) ---- 21
<참고 Ⅰ-6> 도로국채(보기) ---- 23
<참고 Ⅰ-7> 징발보상증권(보기) ---- 24
<참고 Ⅰ-8> 국고채권(보기) ---- 25
<참고 Ⅰ-9> 국민투자채권(보기) ---- 26
<참고 Ⅰ-10> 대일민간청구권 보상증권(보기) ---- 28
<참고 Ⅰ-11> 재정증권(보기) ---- 30
<참고 Ⅰ-12> 철도채권(보기) ---- 31
<참고 Ⅰ-13> 국고채권 경쟁입찰 프로세스 ---- 35
<참고 Ⅰ-14> 차등가격 낙찰방식 도입 배경 ---- 39
<참고 Ⅰ-15> 국고채권 발행단가 산출식(10전 단위 미만 절사) ---- 40
<참고 Ⅰ-16> 국고채권 발행시 회계처리 ---- 41
<참고 Ⅰ-17> 스트립 전문딜러 ---- 44
<참고 Ⅰ-18> 물가연동국고채 발행방식 변경 ---- 52
<참고 Ⅰ-19> 물가연동국고채 금리 산정 예시(물가채 옵션인 경우) ---- 53
<참고 Ⅰ-20> 물가연동국고채(옵션)의 금리스프레드 결정방식 ---- 54
<참고 Ⅰ-21> 물가연동국고채 원금 및 이자지급액 산정에 관한 사항 ---- 56
<참고 Ⅰ-22> 물가연동국고채 과세방법 ---- 58
<참고 Ⅰ-23> 환매조건부 국고채권 거래 제도 변경사항 ---- 61
<참고 Ⅰ-24> 변동금리부 국고채권 발행 및 금리 스왑거래시 순이자지급 ---- 64

<참고 Ⅰ-25> 국채별 자금부담 주체 및 주관부서 ---------- 68
<참고 Ⅰ-26> 국고채권 상환시 회계처리 ---------- 69
<참고 Ⅰ-27> 국고채권 매입단가 산출식('십전' 단위 미만은 절사) ---------- 71
<참고 Ⅰ-28> 국고채권 조기상환과 교환 비교 ---------- 73
<참고 Ⅰ-29> 국고채권 교환시 차액 정산 방법 ---------- 76
<참고 Ⅰ-30> 국고채전문딜러 및 예비국고채전문딜러 현황(2021년 5월말 현재) ---------- 78
<참고 Ⅰ-31> 과거 예비국고채전문딜러(PPD) 제도 ---------- 79
<참고 Ⅰ-32> PD 지정요건 ---------- 80
<참고 Ⅰ-33> PD 및 PPD의 권한과 의무 ---------- 81
<참고 Ⅰ-34> 국고채권 발행·상환·스트립 업무 관련 상장처리 ---------- 89
<참고 Ⅰ-35> 국채유통시장 개요 ---------- 90
<참고 Ⅰ-36> 한국은행의 국고전산망과 정부의 dBrain을 연계한 송수신업무 ---------- 93
<참고 Ⅱ-1> 현 통화안정증권(할인채)(보기) ---------- 99
<참고 Ⅱ-2> 현 통화안정증권(이표채)(보기) ---------- 100
<참고 Ⅱ-3> 통화안정증권 발행가액 산출식 ---------- 106
<참고 Ⅱ-4> 증권·대금 동시결제(DVP, Delivery Versus Payment) ---------- 117
<참고 Ⅱ-5> 통화안정증권의 소멸시효 ---------- 120
<참고 Ⅱ-6> 통화안정증권의 멸실 또는 분실 증권의 상환 ---------- 121
<참고 Ⅱ-7> 유효이자율 산출 ---------- 125
<참고 Ⅱ-8> 매출경과료 산출 ---------- 125
<참고 Ⅱ-9> 통화안정증권 종류별 환매가액 산정 ---------- 130
<참고 Ⅲ-1> 한국예탁결제원 예탁 유가증권의 이자수취 절차 ---------- 155
<참고 Ⅲ-2> 단순매매시 회계처리 ---------- 156
<참고 Ⅴ-1> 수입인지 위탁관리 현황 ---------- 191
<참고 Ⅴ-2> 수입인지를 첨부하여 납부하는 수수료 ---------- 192
<참고 Ⅴ-3> 인지세 과세문서(「인지세법」 제3조) ---------- 192

<참고 Ⅴ-4> 현행 우표형 수입인지 도안 및 위·변조 방지요소 ---------- 194
<참고 Ⅴ-5> 기타 우표형 수입인지 도안 ---------- 195
<참고 Ⅴ-6>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견본> ---------- 196
<참고 Ⅴ-7>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견본> ---------- 197
<참고 Ⅴ-8> 전자수입인지 수급 경로 ---------- 198
<참고 Ⅴ-9> 수입인지 판매보고 내용의 전산 심사사항 ---------- 205
<참고 Ⅴ-10> 금융기관 수입인지 판매대금 회계처리 ---------- 206
<참고 Ⅴ-11> 우체국 수입인지 판매대금 회계처리 ---------- 207
<참고 Ⅴ-12> 수입인지 판매대금 국고납입시 납입고지서 및 영수증 작성 예시 ---------- 208
<참고 Ⅴ-13> 수입인지 판매계약 체결 신청서류 ---------- 209
<참고 Ⅴ-14> 수입인지 판매계약 체결시 심사사항 ---------- 210
<참고 Ⅴ-15> 수입인지 판매인의 준수사항 ---------- 211
<참고 Ⅵ-1> 정부유가증권 관련 용어 해설 ---------- 217
<참고 Ⅵ-2> 정부소유유가증권 기탁서 작성 예시 ---------- 224
<참고 Ⅵ-3> 정부소유유가증권 수탁증서 작성 예시 ---------- 225
<참고 Ⅵ-4> 정부보관유가증권 납입서 작성 예시 ---------- 227
<참고 Ⅵ-5> 정부보관유가증권 격지납입인가서 작성 예시 ---------- 228
<참고 Ⅵ-6> 정부보관유가증권 납입 통지서 작성 예시 ---------- 229
<참고 Ⅵ-7> 정부소유유가증권 환부청구서 작성 예시 ---------- 232
<참고 Ⅵ-8> 정부유가증권 월계대사표 작성 예시 ---------- 236
<참고 Ⅵ-9> 정부보관유가증권 현재액증명서 작성 예시 ---------- 240
<참고 Ⅶ-1> 징발보상증권(앞면, 뒷면)(보기) ---------- 247
<참고 Ⅶ-2> 발행대장 발행일별 징발보상증권 회차 ---------- 249
<참고 Ⅶ-3> 공탁의 종류 ---------- 251
<참고 Ⅸ-1> 한국은행 증권커스터디 이용기관의 국내 채권 투자 현황 ---------- 277
<참고 Ⅸ-2> 증권 커스터디 약정서 주요 내용 ---------- 279
<참고 Ⅸ-3> 증권 커스터디 업무 제공 절차 ---------- 281
<참고 Ⅸ-4> 국채 원리금 상환자금 흐름 ---------- 294

Ⅰ. 국채 업무

제1장 국채 제도 개요

제2장 국채의 발행

제3장 국채의 상환

제4장 국고채전문딜러 제도

제5장 국채 원금·이자 분리거래제도(STRIP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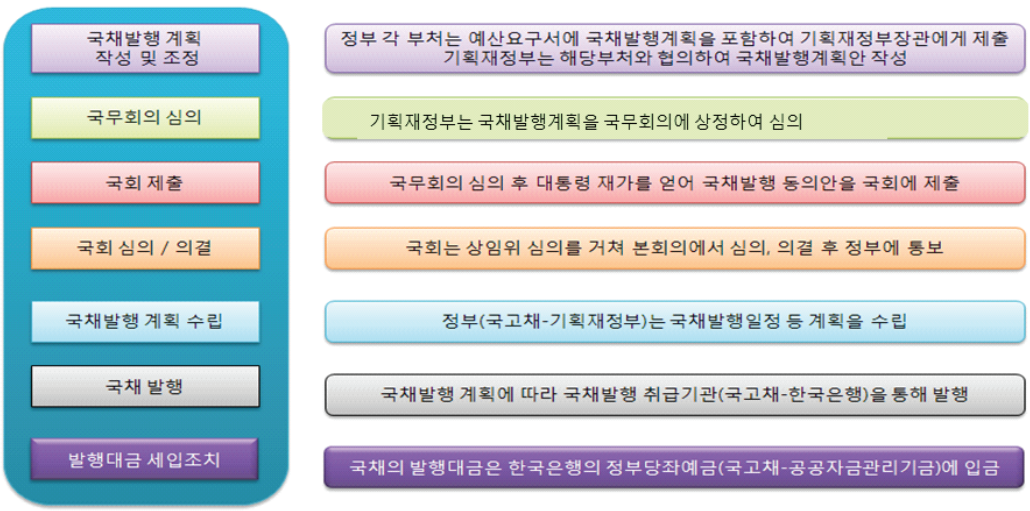
제1장 국채 제도 개요

1. 발행절차

□ 국채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중앙정부의 각 부처로부터 발행요청을 받아 국채 발행 계획안을 작성한 후 국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발행하며, 공개시장에서의 발행을 원칙으로 함

□ 국채 중 국고채권·재정증권의 발행 및 상환 등에 관한 사무는 「국채법」 제15조 및 「국고금 관리법」 제44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담당

<그림 Ⅰ-1> 국채 발행절차



자료 : 기획재정부

2. 국채의 종류

가. 현행 유통국채

□ 정부는 1950년에 부족한 조세수입을 보전하고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최초로 건국국채를 발행한 이후 현재까지 모두 21종의 국채를 발행

□ 2021. 5월말 현재 국고채권(Treasury Bond), 재정증권(Treasury Bill), 외국환평형기금채권(Foreign Exchange Equalization Fund Bond), 제1종 국민주택채권(National Housing Bond) 등 총 4종류의 채권이 발행되고 있으며, 한국은행은 국고채권 및 재정증권 관련 업무를 수행

(1) 국고채권

□ 국고채권(KTB, Korea Treasury Bond)은 정부가 각 기금 및 회계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국채로서 공공자금관리기금의 부담으로 발행되고 있으며, 1998년 9월 "국채관리기금채권"을 현재의 "국고채권"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발행

ㅇ 1993년 이후 국채의 유동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채를 통합하여 발행하는 방향으로 국채관련법을 정비

— 1994년 농지채권, 철도채권, 농어촌발전채권 등을 국채관리기금채권으로 통합하고, 2000년 1월 양곡증권, 2003년 11월 원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을 국고채권으로 통합하여 발행

□ 국채 중 국고채권은 발행물량이 가장 많고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 발행된 국고채권 유통수익률이 지표금리 역할을 하고 있음

□ 2021. 5월말 기준 국고채권은 2년물, 3년물, 5년물, 10년물, 20년물, 30년물, 50년물 등 7종의 고정금리부 채권과 원금과 이자가 물가에 따라 변동하는 10년 만기 물가연동국고채권의 형태로 발행

< 참고 Ⅰ-1 > 2년만기 국고채권 최초 발행

□ 기획재정부는 발행물량 증가에 따른 시장부담 완화 및 단기 지표금리의 안정적 설정 등을 위해 매월 경쟁입찰 방식으로 2년 만기 신규 국고채권을 정례 발행

ㅇ 3개월 단위로 통합 발행되는 2년 만기 국고채권은 2021.2.9일 경쟁입찰 방식으로 발행금리 0.805%에 7,790억원을 처음 발행

<표Ⅰ-1> 국채 시장 발전 연혁

시행연월	내 용
1949년	「국채법」(법률 제75호) 제정·시행
1950년	건국국채 발행, 토지보상을 위해 지가증권 발행
1954년	전후복구 및 경제재건을 위해 산업부흥국채 발행
1967년	국고금 일시부족 재원 조달용 재정증권 발행
1968년	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도로국채 발행
1970년	전력개발재원 조달을 위한 전력채권 발행, 징발보상증권 발행
1972년	국고채권 발행(현재 발행중인 국고채권과 동명이종)
1974년	국민주택채권 발행, 국민투자채권 발행
1975년	대일민간청구권보상증권 발행
1976년	양곡증권 발행
1982년	철도채권 발행, 채권의 예탁결제업무 시행
1987년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
1992년	공공용지보상채권 발행
1994년	농지채권, 철도채권, 농어촌발전채권, 국민주택기금채권 등을 국채관리기금채권으로 통합 발행
1998년 9월	국채관리기금채권을 국고채권으로 명칭 변경
1999년 1월	국채발행의 정례화
3월	국채전문유통시장을 한국거래소에 개설
7월	국고채전문딜러(PD, Primary Dealer) 제도 도입
9월	3년 만기 국채선물(KTB Futures) 상장
11월	증권대금동시결제(DVP) 도입

시행연월	내 용
2000년 1월	양곡증권을 국고채권에 통합
4월	국채관리기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통합
5월	국고채권 통합발행(Fungible Issue) 제도 도입
7월	1년 만기 국채 발행 중단, 채권시가평가제도 실시
8월	국채 낙찰금리결정방식 변경(복수금리→단일금리)
10월	10년 만기 장기국채 발행
12월	국채 환매 제도(Buy-Back) 도입
2002년 10월	PD의 국채 지표종목 국채전문유통시장 거래 의무화
2003년 3월	국고채권 표면금리 단위 변경(0.01%→0.25%)
8월	5년 만기 국채선물 상장
11월	원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을 국고채권에 통합
2004년 6월	「국고채권의 발행 및 국고채전문딜러운영에 관한 규정」제정
2006년 3월	국고채권 입찰 단위 변경(100억원→10억원)
3월	국고채권 원금·이자분리제도(STRIPS) 도입, 시행
9월	비경쟁입찰권한(Non-competitive bids option) Ⅱ 도입
2007년 3월	물가연동국고채(KTBI) 최초 발행(2008년 8월 발행 중단)
2008년 2월	10년 만기 장기국채선물(LKTB Futures) 상장
2009년 5월	국고채권 교환제도(conversion offer) 시행
7월	국고채권ETF(Exchange Traded Fund) 최초 상장
9월	국채입찰방식 변경(단일금리→차등복수금리)
2010년 6월	물가연동국고채 재발행(경쟁입찰→비경쟁 인수)
12월	한국은행↔기획재정부간 국채발행 입찰정보 전자송수신 시행
2011년 1월	국채시장 홈페이지 개설
3월	예비국고채전문딜러(Preliminary PD) 제도 도입

시행연월	내 용
2012년 3월	PD와 PPD 승강제 실시
4월	국고채권 일반인 입찰단위 변경(100만원→10만원)
4월	물가연동국고채 일반인 입찰 허용
9월	30년 만기 국고채권 발행
2013년 1월	지표채권 장기화 추진방침 공표(5년물→10년물)
6월	국고채권 수익률 체계 개편 (소수점 2자리→3자리, 표면금리 12.5bp 단위 결정)
2015년 1월	20년물 · 30년물 · 물가채 통합발행기간 조정(2년→1년)
2015년 7월	「국채법」 전부개정 · 시행
10월	국고채권통합정보시스템 개통
12월	국고채권 발행일전 거래 도입
2016년 3월	스트립전담PD제도 도입
10월	50년만기 초장기 국고채권 발행
2018년 5월	물가채 선매출 실시
2019년 2월	50년물 격월로 정례발행
2021년 1월	PD규정 개정 낙찰금리 차등구간 확대(모든 연물 5bp, 조기상환 및 교환 포함)
2월	2년 만기 국고채권 발행 모집방식 비경쟁인수 실시 물가채 발행방식 변경(비경쟁인수→경쟁입찰)

(2) 재정증권

□ 재정증권(Treasury Bill)은 정부가 회계연도(1월 1일~12월 31일) 중 일시적인 재정부족자금을 보전하기 위해 발행하는 만기 1년 이내의 채권으로 통상 1개월 내지 3개월물로 발행

ㅇ 정부는「국고금관리법」에 따라 국고금 출납상 필요한 경우 국회에서 승인받은 일시차입 최고한도액 범위내에서 재정증권 발행 또는 한국은행 일시차입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당해연도 세입으로 전액 상환

ㅇ 재정증권에 의한 자금조달은 한국은행 일시차입에 비해 상환시기 제한 등의 어려움이 있으나 일시 부족자금을 금융시장에서 조달하여 재정지출에 활용함으로써 한국은행의 통화관리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음

□ 한편 한국은행은「2011년도 한국은행의 대정부 일시대출금 한도 및 대출조건 통보」(금융통화위원회 의결)시 "정부는 일시적인 부족자금을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보다는 가급적 재정증권의 시장발행을 통해 조달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는 문구를 부대조건에 명시

<표Ⅰ-2> 정부의 한국은행 차입 및 재정증권 발행 현황

(조원)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1~5
최고한도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40.0
집행	재정증권	발행누계	36.7	38.0	37.5	20.9	7.9	2.0	48.7	45.3	22.9
		최고잔액	12.0	12.0	12.5	8.0	7.9	2.0	19.0	15.3	13.9
	한은차입	차입누계	74.5	33.0	51.0	9.0	2.0	0.0	36.0	97.2	6.5
		최고잔액	19.5	9.5	12.0	9.0	2.0	0.0	9.1	16.3	6.5

<표Ⅰ-3> 연도별 재정증권 발행실적

(억원)

발행년도	발행횟수	발행금액	발행방식	만기(일물)
1981	17	5,104	경쟁입찰, 매각	15, 30, 40, 90, 91
1982	4	1,898	경쟁입찰, 매각, 인수발행	12, 29, 30, 40
1986	6	2,000	경쟁입찰	182, 364
1987	10	10,000	경쟁입찰, 인수, 매출	364
1988	7	15,000	경쟁입찰, 인수(한국은행)	364
1989	7	25,000	경쟁입찰, 매출	364
1990	19	25,000	매출	364
1991	20	22,072	〃	364
1992	18	15,797	〃	364
1993	7	6,301	〃	364
1994	1	1,000	경쟁입찰, 인수	1년
2003	9	100,000	경쟁입찰, 인수(공자기금)	15, 22, 28, 91
2004	7	118,300	경쟁입찰	28, 63, 91
2005	11	159,900	〃	91
2006	4	47,800	〃	30, 31
2011	10	116,800	〃	28
2012	25	224,160	〃	63, 182
2013	31	366,800	〃	63
2014	29	380,000	〃	63
2015	31	375,100	〃	63
2016	23	209,400	〃	63
2017	8	79,400	〃	28, 63
2018	2	20,000	〃	28
2019	23	487,080	〃	28, 63
2020	31	453,000	〃	63
2021.1~5	16	229,000	〃	63
계				

(3) 외국환평형기금채권

□ 외국환평형기금채권(Foreign Exchange Stabilization Fund Bond)은 원화의 대외가치 안정과 투기적인 외화의 유출입에 따른 악영향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외국환평형기금의 재원조달을 목적으로「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정부가 지급보증 형식으로 발행하는 채권

ㅇ 1987년 이후 원화표시와 외화표시의 2종류를 발행하였으나, 2003년 11월 12일부터 원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을 국고채권에 흡수하여 발행함에 따라 동 일자 이후는 외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만 발행하고 있으며 기발행된 원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은 2008년 7월 4일 상환이 완료되어 현재 잔액은 없음

□ 외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은 국제금융시장에서 국내금융기관의 자금 차입시 외화표시 한국채권의 기준금리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한국경제를 홍보하고 있으며, 한국의 국가신용도를 측정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로 활용

ㅇ 외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은 1998년 4월 이후 해외에서 채권인수단을 통하여 발행되고 있으며 이자는 재정대리인(Fiscal Agent)을 통하여 지급

□ 국내에서는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이 대부분 원화로 발행되었으나, 외환위기 직후 외환보유액 확충을 위해 <표Ⅰ-4>와 같이 외화표시로 발행된 바 있음

<표Ⅰ-4> 외환위기 직후 국내에서 발행된 외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 현황[1)]

표시통화	발행일	만기일	매출일[2)]	발행할인율	발행액
달러화	1998.3.30	1999.3.30	1997.12.31 ~1998.3.30	연 8.0%	$107,697,100
엔 화	1998.4.30	1999.4.30	1998.3.2 ~1998.4.30	연 2.5%	¥2,651,050,000

주 : 1) 무기명 할인발행, 이자소득세(당시 세율 20%) 면제, 국내거주자 및 비거주자를 대상으로 발행
2) 외화표시 국채 매출 취급금융기관을 지정하여 동 금융기관 점포에서 매출 및 상환 실시

<표Ⅰ-5> 해외에서 발행된 외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 및 만기 현황

구 분	2005		2006		2009		2013	2014		2015	2017	2018		2019		2020	
발행(억불)	4	5억 유로	5	3.75억 유로	15	15	10	10	7.5억 유로	30억 위안	10	5	5	5	10	6.25	7억 유로
만기(년)	'25	'15	'16	'21	'14	'19	'23	'44	'24	'18	'27	'28	'48	'24	'29	'30	'25

주) 1998년 : 10억불(5년만기), 30억불(10년만기),
1999~2002년 발행실적 없음
2003년, 2004년 : 10억불(10년만기)
자료 : 기획재정부

(4) 보상채권(구 공공용지보상채권)

□ 보상채권(Reimbursement Bond for Expropriated Land)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구「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정부가 도로, 철도 등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 등을 취득 또는 사용하는 경우 이를 보상하기 위해 교부하는 채권으로 1992년부터 발행

ㅇ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된 토지의 보상금은「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1975년 12월 31일 제정) 제3조(손실보상의 원칙) 제2항에 따라 현금 지급이 원칙이었으나, 보상금의 예산 점유비가 높아져 사업시행에 문제가 발생하자 이의 효율화를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로서 토지소유주가 희망하는 경우 등에는 채권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위 특례법을 일부 개정(1991년 12월 31일)

ㅇ 현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1] 제63조(현금보상 등)에 채권 보상 관련 조문을 수록

1) 손실보상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체계화하기 위해「토지수용법」및「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으로 이원화된 법률을 통합, 2002년 2월 4일「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

□ 한국은행은 1992년 5월 22일 개정된「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제2조의 7(채권의 취급기관 등)에 따라 공공용지보상채권의 발행·상환 등의 사무를 취급하기 시작

ㅇ 현재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4조(보상채권의 취급기관 등)에 한국은행이 취급토록 규정

□ 보상채권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요청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회계별로 국회의 의결을 받아 토지 소유자나 관계인에게 지급함으로써 발행

ㅇ 채권은 무기명증권으로 만기 5년 이내, 이자는 1년 단위 복리로 계산하며 만기에 일시상환

ㅇ 금리는 채권발행 대상자에 따라 만기 3년 이하인 경우 3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 또는 3년 만기 국고채권 금리를 적용하고, 만기 3년 초과 5년 이하의 경우 5년 만기 국고채권 금리를 적용

□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에 따른 보상은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2021년 5월 현재 발행잔액은 없으며 과거에 발행된 보상채권의 소멸시효도 모두 완성됨

<표Ⅰ-6> 연도별 보상채권 발행실적

(천원)

발행년도	소멸시효 완성년도	발행횟수	회 계	
			도로	철도
1992	2000	1	21,700	-
1993	2001	12	8,295,700	-
1994	2002	14(3)	30,321,800	2,239,800
1995	2003	11	14,016,500	-
1996	2004	11	13,444,900	-
1997	2005	4	197,000	-
1998	2006	1	5,700	-
1999	2007	1	36,600	-
2000	2008	1	24,400	-
계		56	66,364,300	2,239,800

주 : (　) 내는 철도회계

(5) 국민주택채권

□ 국민주택채권(National Housing Bond)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주택도시기금의 부담으로 발행(「주택도시기금법」 제7조, 제8조,「동법 시행령」 제4조 내지 제11조)하는 채권

□ 국민주택채권의 매출 및 상환업무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국민주택채권 사무지정취급기관)이 취급

ㅇ 국민주택채권 사무지정취급기관
　제1종 : 우리은행 · 농협은행 · 신한은행 · 중소기업은행 · 국민은행
　제2종 : 우리은행
ㅇ 등록채권(1종 · 2종 · 3종)의 만기상환 : 우리은행
ㅇ 실물채권의 중도 및 만기상환 : 국민은행

<표Ⅰ-7> 연도별 국민주택채권 발행 실적

(조원)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발행	9.7	10.5	12.4	16.2	15.9	14.3	15.1	15.4
상환	9.1	8.8	10.9	9.7	11.2	8.9	11.3	12.3
잔액	49.5	51.3	52.8	59.3	64.0	69.4	73.3	76.4

자료 : 국토교통부

<표Ⅰ-8> 국민주택채권의 연혁

시 기	내 용
1972.12.30	「주택건설촉진법」 제정 · 시행
1973. 1.	한국주택은행에 국민주택자금계정 설치
3. 2.	한국주택은행 부담(정부 지급보증)으로 최초 발행 (제1종채권, 5년 만기, 연6%)
1981. 7.20	국민주택기금을 설치하여 국민주택채권을 흡수
1982. 1. 1	국민주택채권 발행주체 변경 : 한국주택은행→정부(기획재정부)
1983. 5.23	제2종채권 최초 발행(서울시 개포동 현대아파트) *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매입하여야 하는 채권 (만기 20년, 연3%)
1999. 7.15	채권입찰제 폐지로 제2종채권 발행 중단
2003. 5.29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전문 개정
2004. 4. 1	제1종채권 발행방법 변경 : 실물발행→등록발행
2005. 3. 9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제3종채권 최초 발행 (2005년 6월~12월중 발행) * 공공택지 안에서 주거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택지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만기 10년, 0%)

시 기	내 용
2006. 1. 1	재위탁은행(우리은행, 농협) 국민주택채권업무 취급 개시
2006. 2.24	채권입찰제 실시로 제3종채권 폐지 및 제2종채권 부활(만기 10년, 0%) * 공공택지 안에서 주거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만기 10년, 0%)
2012. 8. 1	제1종 국민주택채권 금리인하(3%→2.5%)
2013. 5. 1	제1종 국민주택채권 금리인하(2.5%→2.25%)
2013. 5.31	제2종 국민주택채권 발행 중단
2014.10. 1	제1종 국민주택채권 금리인하(2.25%→2%)
2015. 4. 1	제1종 국민주택채권 금리인하(2%→1.75%)
2015. 7. 1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으로 확대 개편
2016. 2.15	제1종 국민주택채권 금리인하(1.75%→1.5%)
2016. 6.15	제1종 국민주택채권 금리인하(1.5%→1.25%)
2016.11.24	제1종 국민주택채권 금리인상(1.25%→1.5%)
2017. 1. 1	제1종 국민주택채권 금리인상(1.5%→1.75%)
2019. 6. 4	제1종 국민주택채권 금리인하(1.75%→1.5%)
2019. 7.23	제1종 국민주택채권 금리인하(1.5%→1.25%)
20.19. 8. 8	제1종 국민주택채권 금리인하(1.25%→1%)
2019. 9.16	제1종 채권 발행방법 변경(등록발행→전자등록발행)

자료 : 국토교통부

<표Ⅰ-9> 국민주택채권의 종류별 현황

<table>
<tr><th colspan="2">구 분</th><th colspan="2">1종</th><th colspan="2">2종</th><th>3종</th></tr>
<tr><td rowspan="2">최초발행</td><td>발행일시
(만기·금리)</td><td colspan="2">1973. 3. 2
(만기5년, 연6%)</td><td colspan="2">1983. 5.23
(만기20년, 연3%)</td><td>2005. 3. 9
(만기10년, 연0%)</td></tr>
<tr><td>목적</td><td colspan="2">인·허가·면허,
등기·등록신청시</td><td colspan="2">투기과열지구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td><td>공공택지내 85㎡ 초과주택
건설을 위한 택지를 공급
받는 경우</td></tr>
<tr><td rowspan="17">연 혁</td><td rowspan="17"></td><td>기간</td><td>금리</td><td colspan="2" rowspan="4">■'99. 7.15 채권입찰제폐지로 발행 중단
• '83년~'98년까지 발행
■'06. 2.24 제3종을 폐지하고 제2종을 부활
■'13. 5.31 채권입찰제폐지로 발행 중단</td><td rowspan="17">■'06. 2.24 폐지('05. 3. 9 최초 5,942억원 발행후 종료)</td></tr>
<tr><td>'73. 3. 2
~ '77.12.31</td><td>6%</td></tr>
<tr><td>'78. 1. 1
~ '80. 1.11</td><td>10%</td></tr>
<tr><td>'80. 1.12
~ '82.12.31</td><td>12%</td></tr>
<tr><td>'83. 1. 1
~ '01. 7.31</td><td>5%</td><td>'83년
~ '98년</td><td>20년
(3%)</td></tr>
<tr><td>'01. 8. 1
~ '12. 7.31</td><td>3%</td><td rowspan="12">'06년
~ 현재</td><td rowspan="12">10년
(0%)</td></tr>
<tr><td>'12. 8. 1
~ '13. 4.30</td><td>2.5%</td></tr>
<tr><td>'13. 5. 1
~ '14. 9.30</td><td>2.25%</td></tr>
<tr><td>'14.10. 1
~ '15. 3.31</td><td>2%</td></tr>
<tr><td>'15. 4. 1
~ '16. 2.14</td><td>1.75%</td></tr>
<tr><td>'16. 2.15
~ '16. 6.14</td><td>1.5%</td></tr>
<tr><td>'16. 6.15
~ '16.11.23</td><td>1.25%</td></tr>
<tr><td>'16.11.24
~ '16.12.31</td><td>1.5%</td></tr>
<tr><td>'17. 1. 1
~ '19. 6. 3</td><td>1.75%</td></tr>
<tr><td>'19. 6. 4
~ '19. 7.22</td><td>1.5%</td></tr>
<tr><td>'19. 7. 23
~ '19. 8. 7</td><td>1.25%</td></tr>
<tr><td>'19. 8. 8
~ 현재('19.8)</td><td>1%</td></tr>
<tr><td colspan="2">만기(금리)</td><td colspan="2">5년(1.00%)</td><td colspan="2">10년(0%)</td><td>10년, 0%</td></tr>
<tr><td colspan="2">소멸시효</td><td colspan="2">만기일로부터 5년</td><td colspan="2">만기일로부터 5년</td><td>만기일로부터 5년</td></tr>
</table>

자료 : 국토교통부

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국채의 종류

□ 과거에 발행되었던 건국국채, 산업부흥국채, 도로국채, 징발보상증권, 국민투자채권, 대일민간청구권보상증권, 양곡증권, 철도채권 등은 상환이 완료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

□ 국채의 소멸시효는 원금, 이자 모두 5년(단, 1년 이내 기간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이자를 받을 권리는 3년)이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국채는 상환이 불가능(「국채법」 제14조)

ㅇ 다만, 독립공채의 경우 특별법에 따라 예외적으로 상환을 인정한 바 있음

< 참고 Ⅰ - 2 > 독립공채

□ 상해 임시정부 당시에 발행된 독립공채는「독립공채 상환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까지 신고할 경우 상환받을 수 있도록 하였음

ㅇ 독립공채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명의로 발행된 공채로서, 상해에서는 재무부 총장 이시영 명의의 원화표시로, 미주지역에서는 집정관 총재 이승만 명의의 달러표시로 발행

ㅇ 독립공채 원본을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제출하여 상환을 신청받았으며, 접수된 독립공채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 진본임이 판명되면 독립공채상환위원회에 회부하여 상환 여부를 결정

< 참고 Ⅰ - 3 > 국채보조권

□ 국채보조권은 1951년 4월 1일 제정되어 1962년 9월 24일 폐지된「국채보조권법」에 따라 발행된 증권으로 국채구입에 충당할 목적으로 발행

ㅇ 국채보조권은 무기명, 무이자로 권면금액을 발행년 및 그 익년중에 국채구입에 충당하고 기간 경과시에는 효력 상실

ㅇ 국채보조권의 액면은 백원, 이백원 및 오백원의 3종으로 발행됨

< 참고 Ⅰ - 4 > 양곡증권

□ 양곡가격의 안정 및 양곡의 원활한 수급과 양곡매입자금의 효율적인 조달을 위해 발행된 증권으로 1975년 12월 31일 개정된「양곡증권법」에 따라 농림수산부장관의 요청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이 발행하고 발행에 따른 비용부담은 양곡관리특별회계 또는 양곡관리기금에서 충당

ㅇ「양곡증권법」에 따라 발행된 양곡증권은 1999년에 폐지되었고 2000년부터 국고채권으로 통합・발행되었음. 이 법에 따라 발행된 양곡증권의 원리금 미상환 잔액 등의 부채상환을 위하여「양곡증권 정리기금법」이 제정되어 시행됨

ㅇ 양곡증권의 교부 및 상환과 관련된 업무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양곡증권계정을 설치하여 취급하였으며 만기는 1~5년, 시장이자율로 발행됨

< 표 Ⅰ - 10 > 소멸시효완성 국채 현황

국채 종류 및 발행 목적	발 행 개 요
건국국채 6.25동란 중 전비조달, 정부예산상 일반세입 부족 보전	- 1950~1963년 중 17회, 100억원 발행 - 2~3년 거치 2~5년 분할상환조건 발행, 연 5%(인수의 경우 2%) 연 5%의 이자를 지급한다하여 국채 권면에 '五分利 건국국채' 라고 표기되어 있음
산업부흥국채 전후 재정투자 재원 조달	- 1954~1963년 중 14회, 196억원 발행 - 2~20년 거치 3~30년 분할상환조건으로 발행 - 한국은행이 전액 인수하였으며, 1984년 조기상환 완료
도로국채 고속도로 건설 및 도로 정비사업 재원 조달	- 1968~1976년 중 9회, 360억원 발행 -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조건으로 발행, 연 12~23.68%
징발보상증권 군 작전상 필요에 의해 군에 징발된 사유재산에 대한 징발보상금 및 매수대금 지급	- 1970~1977년 중 13회, 353억원 발행 - 1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조건으로 발행, 연 5% - 보상금액이 1만원 이상인 경우 증권교부, 1만원 미만은 현금지급 - 징발보상증권(현금 포함) 미수령분은 법원에 공탁
국고채권 일반회계 세입부족 보전 (현재 발행되고 있는 국고채권과 동명이종)	- 1972년 중 1회 225억원 발행 ·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조건, 전액 한국은행 인수 후 금융기관 매각 - 1981~1983년 중 8회 5,014억원 발행 · 원금은 2~4년 거치 후 만기일시상환조건, 이자는 매3개월 후급, 대부분 금융기관 인수
국민투자채권 국민투자기금의 재원 조달	- 1974~1991년 중 4조 2,581억원 발행 - 원금은 2~5년 거치 만기일시상환, 이자는 정기예금금리수준으로 1~3개월 후급, 인수발행
대일민간청구권 보상증권 해방이전의 일본에 대한 민간청구권을 대일청구권 자금으로 보상	- 1975~1977년 중 24.7억원 발행 - 1980년 2백만원 발행 -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조건으로 발행, 연 5% - 보상금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증권교부, 30만원 미만은 현금지급
양곡증권 양곡가격의 안정 및 양곡의 원활한 수급과 양곡매입자금의 효율적 조달	- 1975~1999년 중 40조 6,846억원 발행 - 2000년 국고채권에 통합되어 발행
철도채권 철도사업특별회계세출 재원 충당	- 1982~1983년 중 7회, 750억원 발행 - 원금은 3년 거치 만기일시상환, 이자는 3개월 후급

<참고 Ⅰ-5> 건국국채(보기)

< 앞 면 >

< 뒷 면 >

< 참고 Ⅰ - 6 > 도로국채(보기)

< 앞 면 >

大韓民國政府

壹萬원

道路國債證書

第壹回貳次

財務部長官

ㅋ000000000ㅋ

一、이國債는 西紀一九六九年九月一日부터 裏書한바에依하여 二年間에 國債法施行令 第四十條의 規定에依하여 이를 抽籤償還한다.

二、이國債의 利率은 年二割로 한다.

三、이國債의 利子는 裏書한바에依하여 西紀一九六八年九月二日부터 元金償還時까지의 期間分을 複利로 計算하여 元金償還時에 支給한다.

四、이國債의 元利金은 韓國銀行本、支店에서 支給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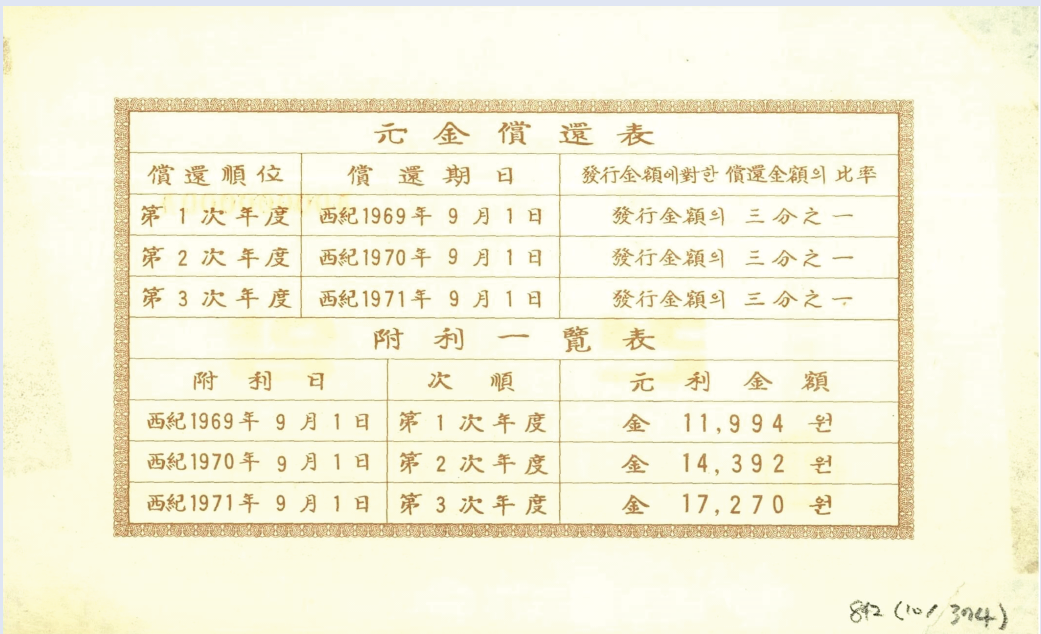
五、이國債의 消滅時效는 元金에 있어서는 五年 利子에 있어서는 一年으로 한다.

六、이國債의 相換、登錄、其他 證券에 關한 取扱은 韓國銀行本、支店에서 한다.

西紀一九六八年九月二日發行

10,000

< 뒷 면 >



元金償還表

償還順位	償還期日	發行金額에對한 償還金額의 比率
第 1 次年度	西紀1969年 9月 1日	發行金額의 三分之一
第 2 次年度	西紀1970年 9月 1日	發行金額의 三分之一
第 3 次年度	西紀1971年 9月 1日	發行金額의 三分之一

附利一覽表

附利日	次順	元利金額
西紀1969年 9月 1日	第 1 次年度	金 11,994 원
西紀1970年 9月 1日	第 2 次年度	金 14,392 원
西紀1971年 9月 1日	第 3 次年度	金 17,270 원

812 (101/304)

< 참고 Ⅰ - 7 > 징발보상증권(보기)

<앞 면>

10,000 10,000

대 한 민 국 정 부

1970년 일 만 원 1

가00000000가

징발보상증권증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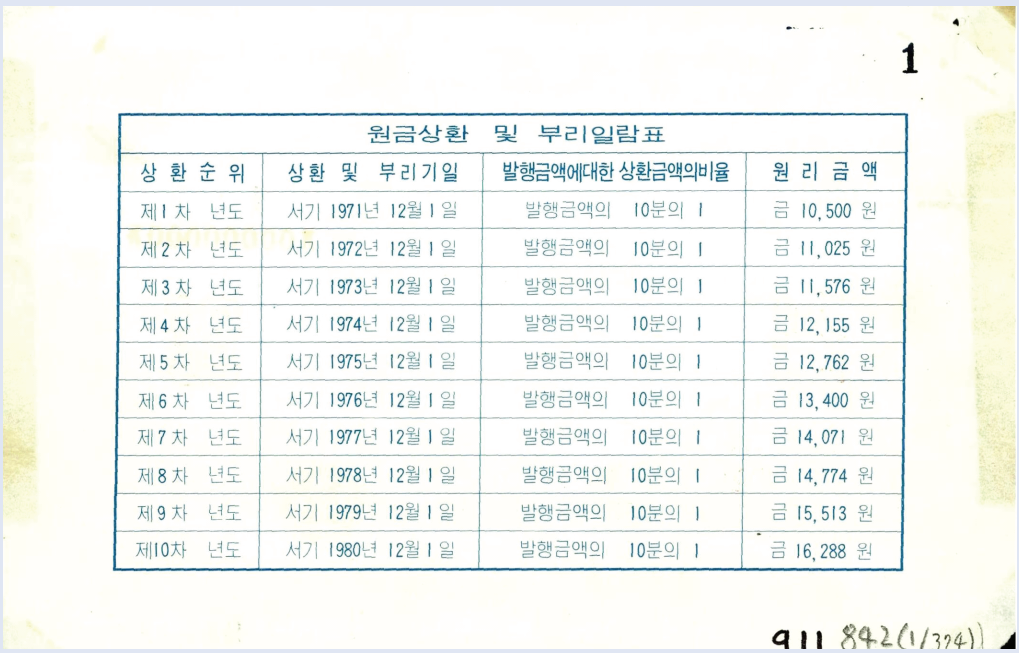
1. 이 증권은 서기 1971년부터 이서한바에 의하여 10년내에 국채법시행령 제48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추첨 상환한다.
2. 이 증권의 이율은 년 5 푼으로 한다.
3. 이 증권의 이자는 이서한바에 의하여 서기 1970년 12월 1일부터 원금상환시까지 이 기간분을 부리로 계산하여 원금상환시에 지급한다. 단 상환기 이전에 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할 경우의 이자계산은 실제 원금상환전일까지로 한다.
4. 이 증권의 원리금은 한국은행에서 취급한다.
5. 이 증권의 소멸시효는 원금에 있어서는 5년, 이자에 있어서는 2년으로 한다.
6. 이 증권의 상환, 등록, 기타 증권에 관한 취급은 한국은행에서 한다.

서기 1970년 발행

재 무 부 장 관

910

<뒷 면>



1

원금상환 및 부리일람표

상 환 순 위	상환 및 부리기일	발행금액에대한 상환금액의비율	원 리 금 액
제1차 년도	서기 1971년 12월 1일	발행금액의 10분의 1	금 10,500 원
제2차 년도	서기 1972년 12월 1일	발행금액의 10분의 1	금 11,025 원
제3차 년도	서기 1973년 12월 1일	발행금액의 10분의 1	금 11,576 원
제4차 년도	서기 1974년 12월 1일	발행금액의 10분의 1	금 12,155 원
제5차 년도	서기 1975년 12월 1일	발행금액의 10분의 1	금 12,762 원
제6차 년도	서기 1976년 12월 1일	발행금액의 10분의 1	금 13,400 원
제7차 년도	서기 1977년 12월 1일	발행금액의 10분의 1	금 14,071 원
제8차 년도	서기 1978년 12월 1일	발행금액의 10분의 1	금 14,774 원
제9차 년도	서기 1979년 12월 1일	발행금액의 10분의 1	금 15,513 원
제10차 년도	서기 1980년 12월 1일	발행금액의 10분의 1	금 16,288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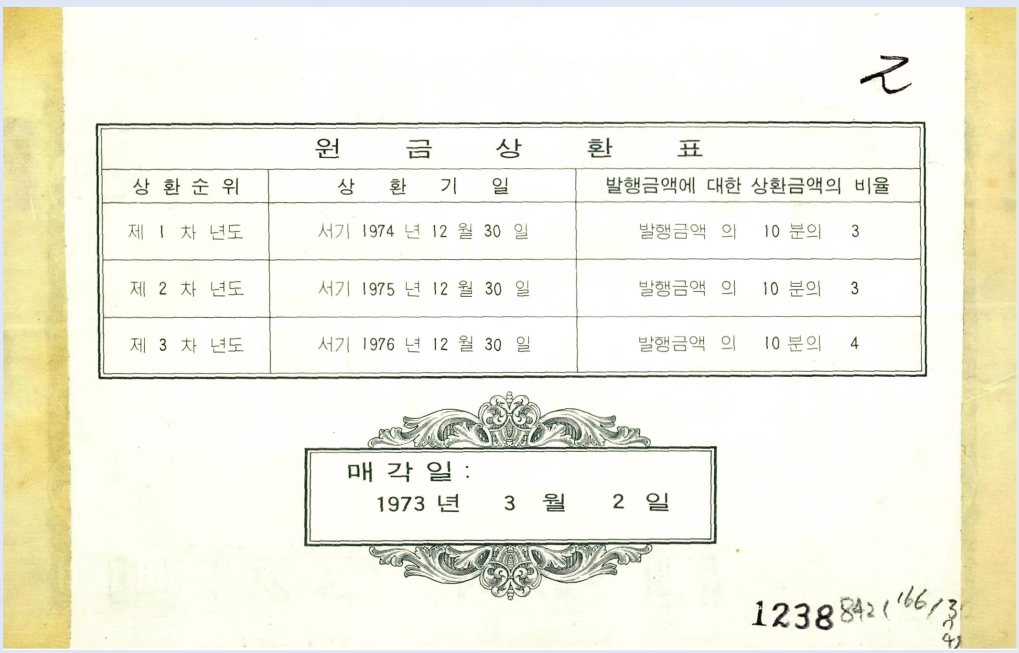
911 842(1/324)

< 참고 Ⅰ - 8 > **국고채권[1](보기)**

<앞 면>

주: 1) 현재 발행중인 국고채권과 동명이종인 국고채권

<뒷 면>



원 금 상 환 표		
상 환 순 위	상 환 기 일	발행금액에 대한 상환금액의 비율
제 1 차 년도	서기 1974 년 12 월 30 일	발행금액 의 10 분의 3
제 2 차 년도	서기 1975 년 12 월 30 일	발행금액 의 10 분의 3
제 3 차 년도	서기 1976 년 12 월 30 일	발행금액 의 10 분의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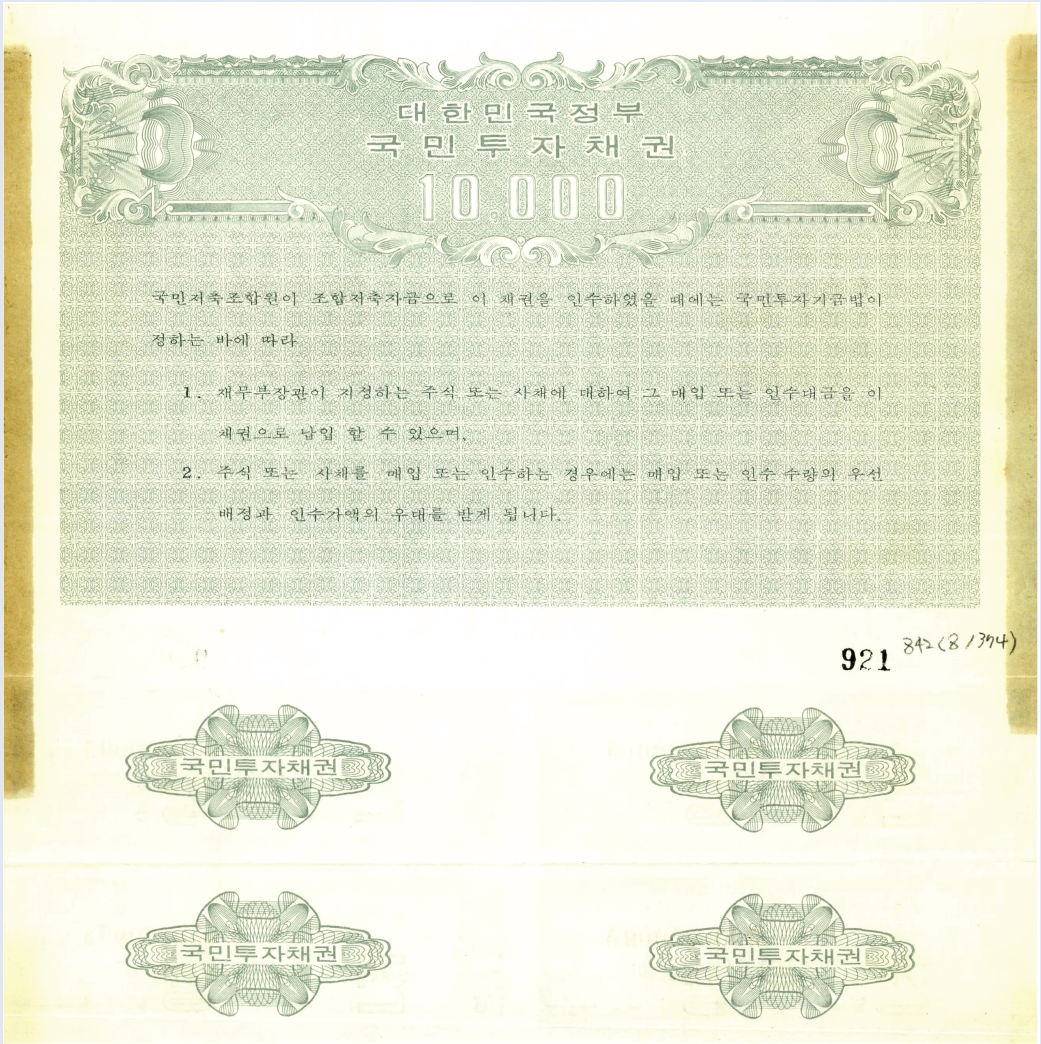
매 각 일 :
1973 년 3 월 2 일

1238

<참고 Ⅰ - 9> 국민투자채권(보기)

< 앞 면 >

< 뒷 면 >



대한민국정부
국민투자채권
10,000

국민저축조합원이 조합저축자금으로 이 채권을 인수하였을 때에는 국민투자기금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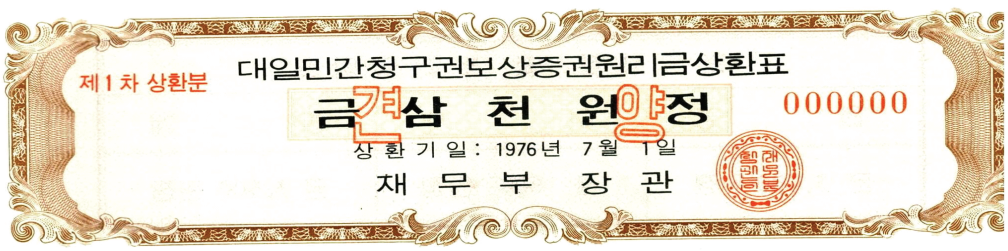
1. 재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주식 또는 사채에 대하여 그 매입 또는 인수대금을 이 채권으로 납입 할 수 있으며,
2. 주식 또는 사채를 매입 또는 인수하는 경우에는 매입 또는 인수 수량의 우선 배정과 인수가액의 우대를 받게 됩니다.

921 842(8/374)

국민투자채권 국민투자채권 국민투자채권 국민투자채권

<참고 Ⅰ-10> 대일민간청구권 보상증권(보기)

< 앞 면 >



< 뒷 면 >

1. 이 증권은 대일민간청구권 보상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한것입니다.
2. 이 증권의 원금은 증권에 표시된 내용에 따라 1976년 7월 1일부터 1978년 7월 1일까지 3년간 분 상환 합니다.
3. 이 증권의 이율은 년 5푼 입니다.
4. 이 증권과 원리금 상환표는 동시에 제출하여야 원리금을 지급받을 수 있읍니다.
5. 이 증권의 소멸시효는 원금에 있어서는 상환개시일로부터 5년, 이자에 있어서는 지급일로부터 2년 입니다.
6. 이 증권의 상환, 등록, 기타 증권에 관한 사무는 한국은행 본, 지점, 출장소와 한국은행 국채대리점에서 취급 합니다.

1348

원금상환 및 부리일람표		
원 금	이 자	합 계
금 4,000 원정	금 200 원정	금 4,200 원정

원금상환 및 부리일람표		
원 금	이 자	합 계
금 3,000 원정	금 350 원정	금 3,350 원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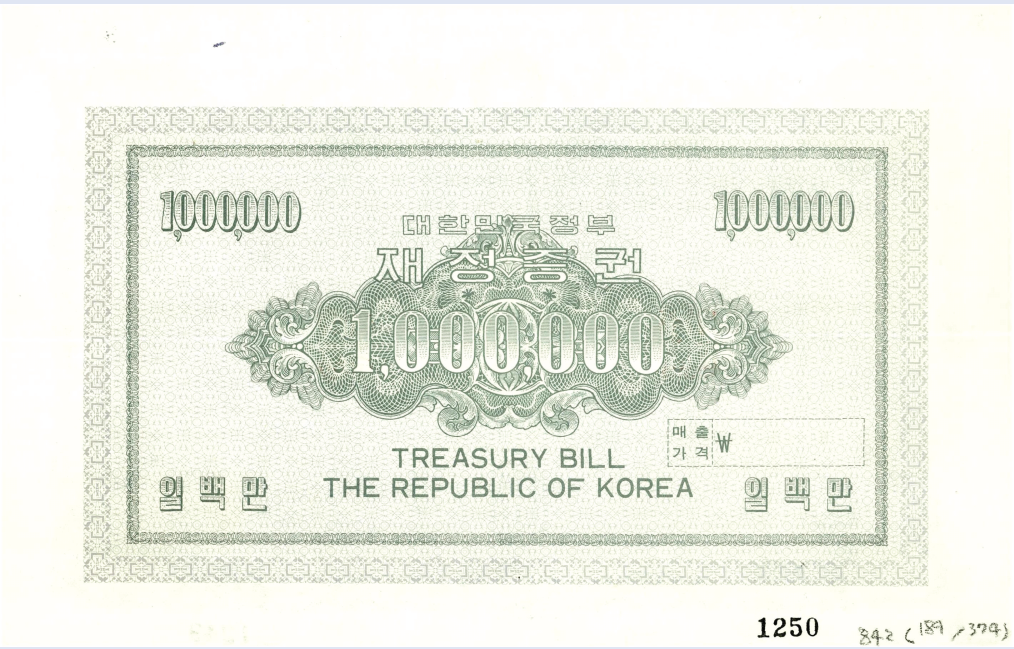
원금상환 및 부리일람표		
원 금	이 자	합 계
금 3,000 원정	금 500 원정	금 3,500 원정

842 (220 / 374)

< 참고 Ⅰ - 11 > 재정증권(보기)

<앞 면>

<뒷 면>



<참고Ⅰ-12> 철도채권(보기)

< 앞 면 >

< 뒷 면 >

1. 이 채권의 원금은 상환일에 액면금액으로 상환한다.
2. 이 채권의 이율은 발행일로부터 최초 1년간은 연 20 %로 하고, 제 2 차년도는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의 1.2 배, 제 3 차년도는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의 1.25 배로 한다. 다만, 1년만기 정기예금의 이자율이 변동될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날로부터 일할 계산한다.
3. 이 채권의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3개월마다 후급하며, 5 월 · 8 월 · 11 월 · 2 월의 각 26 일을 지급기일로 하여 12 회 (연 4 회) 에 걸쳐 이 채권에 붙어 있는 이자지급 교부표와 교환으로 지급한다. 다만, 이자 지급기일이 은행휴업일인 때에는 이자 지급은 그 다음날로 하고 이자 지급기일 후에는 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4. 이 채권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그 상환일로부터 5년, 이자는 그 지급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5. 이 채권의 원금상환, 이자지급, 등록 기타 채권에 관한 사무는 한국은행 및 한국은행 국채 대리점에서 취급한다.

1332

이자 지급은 이자지급교부표부 절도채권을 제출하는 청구인에게 지급한다.

842 (220/374)

제2장 국채의 발행

제1절 국채의 발행

1. 국채발행 방식

□ 국채 발행방식은 입찰발행, 소화발행 및 교부발행으로 구분되며, 증권 실물 발행 여부에 따라 현물발행과 등록발행으로 구분

ㅇ 입찰발행 :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들을 대상으로 경쟁입찰을 실시하여 발행하는 것으로, 국고채권과 재정증권 발행시 적용

ㅇ 소화발행 : 부동산 등기 및 각종 인허가시 매입을 의무화하여 발행하는 방식으로, 제1종 국민주택채권이 이에 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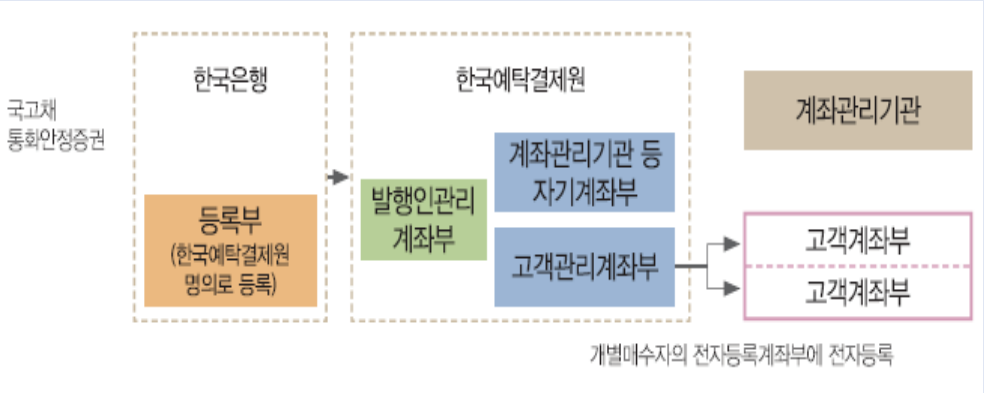
ㅇ 교부발행 :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법률상의 채무부담 발생에 대한 대물변제 방법으로 국채를 발행하는 것으로, 정부는 현금을 지급하는 대신 일방적 의사로서 국채를 발행하여 교부하며 보상채권이 이에 해당

ㅇ 현물발행 : 국채 발행시 증권실물을 인수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보상채권이 이에 해당

ㅇ 등록발행 : 증권실물을 교부하는 대신 '국채등록부'에 등록하여 발행하며, 현재 국고채권과 재정증권은 모두 등록방식으로 발행

* 2019.9.16일부터 시행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식, 사채권 등의 실물증권 발행 없이 증권의 발행, 유통 권리행사 등 증권 관련 모든 사무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처리함에 따라 한국은행은 전자등록을 위한 국채발행 업무를 수행하여 국채등록부에 한국예탁결제원 명의로 일괄 등록 하고 있음

< 표 Ⅰ - 11 > 국고채권 및 통화안정증권의 전자등록 발행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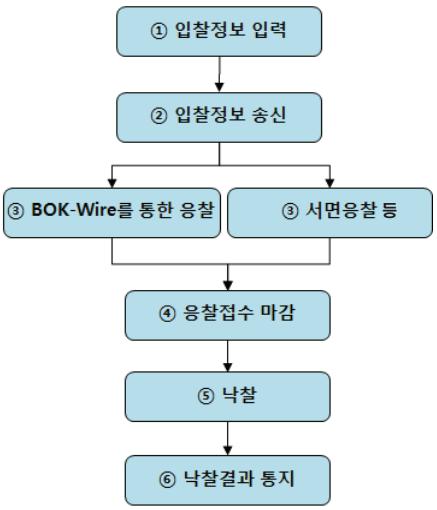
제2절 국고채권(명목) 경쟁입찰

□ 명목 국고채권은 국고채전문딜러(PD, Primary Dealer) 및 예비국고채전문딜러(PPD, Preliminary Primary Dealer)를 대상으로 한은금융망(BOK-Wire+)을 통한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정례적으로 경쟁입찰[2] 실시

○ 전산장애 등으로 한은금융망(BOK-Wire+)을 통한 입찰이 불가능할 경우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모사전송, 전자우편, 서면입찰 실시 가능

* 한은금융망, 모사전송 및 전자우편에 의한 입찰은 비대면(untact) 방식에 의한 입찰로 감사실 검사역의 입회가 생략되는 반면 대면(face-to-face) 방식의 서면입찰은 입찰참가자를 소집하여 감사실 검사역 입회하에 서면 응찰 실시

< 참고 Ⅰ-13 > 국고채권 경쟁입찰 프로세스



① 기획재정부로부터 입찰공고문 접수 후 입찰정보 입력(통상 입찰일 전일)

② 국고채전문딜러(예비딜러 포함)앞 BOK-Wire+를 통해 입찰정보 송신 (통상 입찰일 전일)

③ 국고채전문딜러(예비딜러 포함)는 BOK-Wire+를 통한 응찰 또는 전산장애시 서면응찰 등 가능

④ 접수 마감

⑤ 기획재정부로부터 낙찰금액 및 낙찰금리 수신 후 낙찰 조치

⑥ BOK-Wire+를 통해 낙찰결과를 국고채 전문딜러 앞 송신

---

2) 국고채권은 외환위기 이전에 시장원리에 의해 발행되지 않고 인수단(syndicate)에게 정부가 미리 설정한 금리로 인수 할당하는 방식으로 발행되었으나 1999년 7월부터는 국고채전문딜러를 대상으로, 2011년 5월부터는 예비국고채전문딜러를 포함하여 경쟁입찰 실시

< 표 Ⅰ - 12 > 국고채권의 만기별 입찰일 및 발행일

	2년 만기	3년 만기	5년 만기	10년 만기	물가채 (10년만기)	20년 만기	30년 만기	50년[2] 만기
입찰일[1]	둘째주 화요일	둘째주 월요일	넷째주 월요일	셋째주 월요일	셋째주 (짝수월) 금요일	넷째주 화요일	첫째주 월요일	첫째주 (또는 둘째주) 금요일
신규종목 발행일	3월10일 6월10일 9월10일 12월10일	6월10일 12월10일	3월10일 9월10일	6월10일 12월10일	6월10일	9월10일	3월10일	9월10일

주 : 1) 입찰시간은 10:40 ~ 11:00임(선매출의 경우 09:40~10:00)
2) 50년물은 2021. 5월부터 경쟁입찰을 격월 → 매월로 변경하여 발행

□ 신규물 발생 초기 지표채권 교체로 인한 유동성 감소 현상 완화를 위해 신규 발행 1~2개월 전부터* 차기 지표종목을 지표종목과 함께 발행하는 선매출 제도를 도입(2015.3월부터 시행)

* 2년물 및 물가채는 1개월전, 3년물, 5년물 및 10년물은 2개월전, 20년물, 30년물은 1개월전에 선매출 실시 가능

□ 참가기관별 응찰한도는 국고채전문딜러(PD)가 전체 발행예정금액의 30% 이내, 예비국고채전문딜러(PPD)가 15% 이내로 응찰금액은 최저 10억원으로 하고 그 이상은 10억원의 정수배로 증액

○ PD 및 PPD 1개 기관당 7개까지 복수금리로 응찰하는 것은 가능하나 동일 응찰금리로 재응찰은 불가

□ 낙찰은 응찰금리가 낮은 순서부터 발행예정액에 달할 때까지 순차적으로 결정하되 동일한 금리로 응찰한 응찰금액이 배정 가능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액 낙찰

ㅇ 다만, 대규모 입찰 등으로 입찰 물량이 발행예정액을 크게 초과할 경우에는 국채발행계획 등을 고려하여 전액낙찰을 실시하지 않고 부분낙찰[3)]

<표Ⅰ-13> 국고채권 입찰 개요

구 분	입 찰 관 련 내 용
입찰시간	경쟁입찰일 오전 10:40~11:00(선매출 09:40~10:00), 20분간
입찰형태	한은금융망(BOK-Wire+)을 통한 전자입찰
입찰참가자	국고채전문딜러(PD) 및 예비국고채전문딜러(PPD)
응찰단위	10억원의 정수배액
응찰한도	PD : 발행예정금액의 30%, PPD : 발행예정금액의 15%
응찰개수	각 PD, PPD별로 최대 7개까지 제출 가능
낙찰방식	차등가격 낙찰 (최고낙찰금리로부터 5bp 간격으로 구간을 구분하여 각 구간의 최고금리로 낙찰)

□ 낙찰금리는 최고 낙찰금리 이하 응찰금리를 5bp*(물가채 포함, 50년물 제외) 간격으로 그룹화하여 각 그룹별로 최고 낙찰금리를 적용하는 차등가격 낙찰방식(Differential Pricing Auction Method) 적용

* 기획재정부는 코로나 19에 대응하여 2020.3.30일 이후 한시적으로 차등금리간격을 5bp(조기상환 및 국채교환은 2020. 4월부터 적용) 간격으로 적용하다가 2021.1.1부터 PD규정을 개정하여 차등금리간격을 5bp로 명시. 2021.3.15부터는 채권시장 여건 등을 감안하여 한시적으로 단일금리방식으로 변경·운용

ㅇ 입찰시 최고낙찰금리가 5.050%일 경우 응찰금리를 (5.050~5.005%), (5.000~4.955%), (4.950~4.905%) 등으로 그룹화하고 각 그룹별로 낙찰금리는 각 그룹의 최고금리인 5.050%, 5.000%, 4.950%을 적용

3) 부분낙찰률(동일한 금리로 응찰한 금액에 비례하여 배정하는 비율)에 의해 10억원 단위로 배정하되 낙찰자별 10억원 미만의 잔여배정금액이 큰 낙찰자부터 10억원 단위로 배정하고 잔여배정금액이 동일한 경우 응찰번호 순서대로 배정

□ 낙찰가격 결정은 2000년 7월까지 복수금리 결정방식, 2000년 8월부터 단일금리 결정방식을 적용하다가 2009년 9월부터 복수금리 결정방식과 단일금리 결정방식의 장점을 혼합한 차등가격 낙찰방식을 적용

<표Ⅰ-14> 낙찰가격 결정방식 비교(700억원 발행)

응찰현황		단일가격낙찰방식	차등가격낙찰방식 (5bp 예시)	복수가격낙찰방식
기관	응찰수준			
A	5.100% 100억원	유 찰	유 찰	유 찰
B	5.050% 200억원	모두 5.050%(최고금리), 700억원	B,C,D : 5.050%, 500억원	5.050%, 200억원
C	5.040% 200억원			5.040%, 200억원
D	5.030% 100억원			5.030%, 100억원
E	4.995% 200억원		E : 5.000%, 200억원	4.995%, 200억원

<표Ⅰ-15> 차등낙찰금리구간 변동 추이

	2년물	3년 · 5년물	10년물	20년 · 30년물	50년물
2009. 9월 이전		단일금리	단일금리	단일금리	
2009. 9. ~ 2013. 5.		0.03%p	0.03%p	0.03%p	
2013. 6. ~ 2013. 6.		0.02%p	0.02%p	0.02%p	
2013. 7. ~ 2013.12.		0.02%p	0.03%p	0.03%p	
2014. 1. ~ 2014.12		0.02%p	0.02%p	0.03%p	
2015. 1. ~ (선매출2015.7.~)		0.02%p (0.03%p)	0.03%p (0.04%p)	0.03%p (0.04%p)	단일금리[3]
2017. 4. ~		0.03%p	0.04%p	0.04%p	
2021. 1. ~[1)2)]	0.05%p	0.05%p	0.05%p	0.05%p	

주: 1) 코로나 19 대응으로 2020.3.30일부터 한시적으로 모든 연물의 차등금리간격을 5bp로 적용(조기상환 및 국채교환은 2020.4월부터 적용)하고 2021.1.1부터 PD규정을 개정하여 차등금리간격을 5bp로 명시
2) 2021.3.15일부터 단일금리방식으로 한시적 운용
3) 50년물은 2016.10월 이후부터 단일금리방식으로 운용

< 참고 Ⅰ - 14 > **차등가격 낙찰방식 도입 배경**

□ 1999년 7월부터 적용한 복수금리결정방식(Conventional auction)은 낙찰자마다 각기 다른 가격을 적용하여 가격차별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발행자에게 유리한 것처럼 보이나, 응찰자가 낙찰만을 목표로 가중평균 낙찰금리보다 낮은 금리를 제시할 경우 응찰자가 상대적으로 손실을 볼 가능성(승자의 불행, winner's curse)이 있기 때문에 응찰규모를 축소하거나 적정하다고 생각되는 금리보다도 가급적 높은 금리를 제시하려는 경향이 있어 결과적으로 국채발행금리가 상승하여 정부 입장에서 손실을 볼 가능성이 높아짐

□ 이에 따라 2000년 8월부터 낙찰자가 제시한 수익률 중 가장 높은 수일률을 모든 낙찰자에게 낙찰금리로 일괄 적용하는 단일금리 결정방식(Dutch auction)을 도입하였으나 국고채전문딜러간 과다경쟁으로 인해 응찰금리가 왜곡되고, 이에 따라 낙찰기관이 손해를 입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국고채권 응찰률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현상이 발생

□ 그리하여 2009년 9월부터 각각의 국고채전문딜러가 제시한 응찰금리를 기준으로 그룹을 차등함으로써 적정 금리로 응찰하려는 유인을 제공하고, 동일 그룹내에서는 최고 낙찰금리를 적용함으로써 국고채권을 인수하는 딜러들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차등가격 낙찰방식(Differential pricing auction)을 도입

□ 발행 및 대금 납입은 경쟁입찰일의 다음 영업일(다만, 해당일이 지준마감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실시하며 납입 받은 국채발행 대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에 납입하고, 기획재정부의 요청에 따라 타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

□ 납입대금은 1만원당 발행단가(세전단가)에 의해 산정

ㅇ 납입대금 = 낙찰액면금액 × 발행단가* / 10,000

* < 참고 Ⅰ - 15 > 국고채권 발행단가 산출식 참조

<참고 Ⅰ - 15> 국고채권 발행단가 산출식(10전 단위 미만 절사)

$$\left[\left(\sum_{t=1}^{n}\frac{10,000\times\frac{R}{m}}{\left(1+\frac{r}{m}\right)^{t-1}}\right)+\frac{10,000}{\left(1+\frac{r}{m}\right)^{n-1}}\right]\times\frac{1}{\left(1+\frac{r}{m}\times\frac{a}{b}\right)}$$

n : 잔존이자지급횟수 m : 연간이자지급횟수

R : 표면금리

r : 낙찰금리(국고채교환 발행종목 금리의 경우는 입찰일 09:30, 10:00, 10:20를 기준으로 국채전문유통시장을 통한 각각의 직전 체결수익률을 단순 산술평균한 값)

a : 이자지급기중 잔존일수(한편넣기) b : 이자지급기중 일수(한편넣기)

단, 매출일이 발행일보다 앞서는 경우(선매출시)

$$\left[\left(\sum_{t=1}^{n}\frac{10,000\times\frac{R}{m}}{\left(1+\frac{r}{m}\right)^{t}}\right)+\frac{10,000}{\left(1+\frac{r}{m}\right)^{n}}\right]\div\left(1+\frac{r}{m}\times\frac{a}{b}\right)$$

n : 잔존이자지급횟수 m : 연간이자지급횟수

R : 표면금리 r : 낙찰금리

a : 선매출일수(한편넣기) b : 발행일 직전 6개월 일수(한편넣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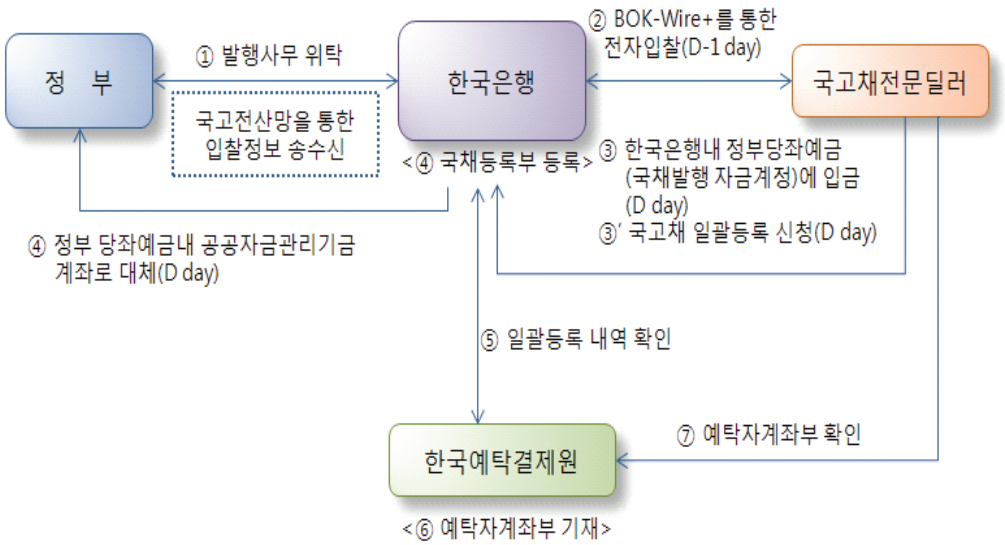
* 선매출이자 단가 = 10,000 - {10,000/(1+R/m x a/b)}

< 참고 Ⅰ-16 > 국고채권 발행시 회계처리

2021. 4. 27 낙찰된 국고채권 20년물(01500-4009-2013) 발행자금 회계처리
표면금리 : 1.500%, 발행일 : 2020.9.10, 매출일 : 2021.4.28, 낙찰금리 : 2.145%,
발행단가 : 9,002.00, 발행액 7,590억원 중 A은행 700억 낙찰
(매출실행은 낙찰기관별로 처리, 자금이체거래는 전 기관 매출완료 후 별도 처리)

구분	차변	대변
매출실행시 (자금계리)	원화본지점 63,014,000,000 (금융결제국)	정부당좌예금 63,014,000,000
	당좌예금 63,014,000,000 (A은행)	원화본지점 63,014,000,000 (국고증권실)
(국고계리)	—	국고채권발행자금 (777) (수입) 63,014,000,000
총발행자금 이체시 (국고계리)	국고채권발행자금 (777) (지급) 683,251,800,000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 (676) (수입) 683,251,800,000

< 그림 Ⅰ-2 > 국고채권 입찰 및 발행 흐름



*「전자증권법」시행(2019.9.16일)으로 예탁자계좌부 명칭이 전자등록계좌부로 변경

제3절 국고채권(명목) 비경쟁입찰(인수)

1. 일반인 입찰 (Option Ⅰ)

□ 국고채권 경쟁입찰시 총 발행예정금액의 20%를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없는 개인, 금융기관 및 기타 모든 법인을 포함한 일반인을 위해 비경쟁입찰 방식으로 배정

ㅇ 입찰 참가를 원하는 일반인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 전일까지 입찰대행기관(국고채전문딜러)에 매입희망금액을 기재한 입찰서를 제출하고 입찰보증금(매입 희망금액의 100%)을 납부

ㅇ 입찰대행기관(국고채전문딜러)은 입찰에 참여한 일반인의 응찰내역을 입찰일 당일 10시(선매출 9시)까지 한국은행(국채사무처리기관)에 제출

ㅇ 일반인의 응찰최저금액은 10만원, 응찰최고금액은 10억원이며,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0만원 단위로 증액

□ 일반인의 총 응찰금액이 일반인 배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입찰 대행기관(국고채전문딜러)의 일반인 응찰총액에 안분비례하여 배정

ㅇ 일반인이 낙찰 받은 국고채권은 입찰대행기관(국고채전문딜러)의 명의로 배정하고, 입찰대행기관(국고채전문딜러)은 이를 일반인의 고객계좌에 대체함으로써 배정 완료

ㅇ 적용금리는 경쟁입찰방식에 의해 결정된 국고채권의 최고낙찰금리

2. 전문딜러 비경쟁인수(Option Ⅱ)

□ 당해 경쟁입찰에서 국고채권을 인수한 국고채전문딜러가 경쟁입찰에서 결정된 최고낙찰금리로 국고채를 인수할 수 있도록 하여, 옵션 행사일의 시장금리에 따라 옵션행사 여부를 결정토록 함으로써 추가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

ㅇ 경쟁입찰 시행 당일(12:00~15:30), 경쟁입찰시행일 이후 1영업일부터 3영업일까지(09:00 ~ 15:30) 중 1회 또는 한도 내에서 수회 분할행사 가능(매년 1월 ~ 11월까지 시행)하며, 인수 최소 단위는 10억원임

□ 최근 반기실적에 따라 우수, 차상위, 차차상위 및 기타 국고채전문딜러로 그룹화하여 각각 당해 경쟁입찰에서 인수한 금액의 20%, 15%, 10%, 5%를 부여하고, 배분 시 10억원 미만은 버림(단, 직전월(월별평가실적) 우수 국고채전문딜러 1위~5위는 10%p, 6~10위는 5%p 추가 부여)

3. 스트립조건부 비경쟁인수(Option Ⅲ)

□ 원금이자분리채권(Separate Trading of Registered Interest and Principal of Securities, STRIPS)시장 활성화를 위해 스트립전문딜러가 경쟁입찰 시행일 이후 3영업일 09:00~15:30까지 종목별 배정한도의 20%내에서 비경쟁인수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되 배정일이 속한 월의 익월중 배정액 이상의 STRIPS를 이행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

ㅇ 명목채의 낙찰여부와 무관하며, 종목별 배정한도는 경쟁입찰 발행예정금액의 30%내(옵션행사한도 200억원)* 1회만 행사 가능(매년 1월 ~ 11월 시행)

* 스트립스 의무 불이행에 따른 부분 배정의 경우 옵션행사한도 조정

ㅇ 최소 행사금액은 10억원이며 행사가격(금리)은 경쟁입찰방식에 의해 결정된 최고낙찰금리

□ 월별 평가실적이 높은 스트립전문딜러부터 총 배정한도의 10%내에서 순차적으로 배정* 하되, 잔여배정금액이 발생하는 경우 월별 평가실적이 높은 스트립전문딜러부터 순차적으로 배정

* 3·5·10·30년물은 130억원(20년물은 50억원 이내) 이내에서 1차적으로 배정하고 잔여 금액은 50억원 이내에서 순차적(2차~4차)으로 배정(단, 2년물 및 50년물은 스트립조건부 비경쟁인수 제외)

<참고 Ⅰ-17> 스트립 전문딜러

□ 기획재정부는「2016년 국고채 발행 계획 및 제도개선 방안」으로 스트립 채권시장 활성화를 위해 스트립 전문딜러 제도를 도입하여 2016.4.1일 최초로 15개의 스트립 전문딜러를 지정한 바 있으며, 2021.5월말 현재 16개의 스트립 전문딜러가 지정되어 있음

ㅇ 스트립 전문딜러는 최근 만기가 도래하는 원금분리채권 또는 이자분리채권으로 한국거래소가 지정하는 3개 종목에 대해 종목당 3개 이상의 양방향 호가를 제출해야하는 의무를 가짐

ㅇ 호가 제시의무에 대한 인센티브로써 스트립 전문딜러들에게는 원금이자분리 조건부 비경쟁인수권한이 부여됨

4. 모집 방식의 비경쟁인수(Option Ⅳ)

□ 기획재정부는 2021년부터 국고채의 월별 발행물량의 변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고채 전문딜러가 모집방식으로 국고채를 인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신설

ㅇ 발행종목은 단기물을 중심으로 발행하나 필요시 중장기물도 발행할 수 있으며 발행금리는 입찰당일의 시장금리 등을 고려하여 당일 입찰시간 40분 전까지 기재부에서 공고(정례모집 발행시기는 매월 넷째주 금요일)

○ 발행방법은 전문딜러의 응찰금액에 따라 배분하며, 1개 기관당 응찰한도는 그룹 I*의 경우 발행예정금액의 20% 이내(그룹 II는 발행예정금액의 30% 이내)로 1개 기관당 각 종목별로 1개까지만 응찰 가능

* 그룹 I 기관은 국고채 전문딜러(2021.5월말 현재 17개사)이고, 그룹 II 기관은 월별 우수 전문딜러(2021.5월말 현재 10개사) 임

○ 낙찰금액 결정 시 응찰금액이 발행예정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발행예정금액 범위 내에서 응찰금액에 비례하여 10억원 단위로 배정하고 잔여배정금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입찰번호순으로 배정

제4절 국고채권 통합발행

□ 국채 통합발행(Fungible Issue) 제도는 국채시장 활성화를 위해 만기, 표면금리 등 발행조건이 동일한 국채를 일정기간 동안 추가로 발행하여 동일종목의 유통물량을 확대하고자 하는 제도로 우리나라는 2000년 5월부터 실시

1. 통합발행의 효과

□ 국채의 통합발행은 종목당 국채발행규모를 확대함으로써 국채의 유동성을 제고시킴

ㅇ 유동성이 높은 채권은 유동성 프리미엄(liquidity premium)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국채를 발행할 수 있어 국채발행 비용 절감

ㅇ 국채의 유동성 증가는 거래를 활성화하여 국채지표금리의 안정화 도모

ㅇ 국채 유동성을 확보하면서 분산 발행할 수 있어 1회 대량발행에 따른 발행금리 상승과 유찰 가능성을 방지

ㅇ 일부 기관의 과점 등으로 시장압력이 발생할 경우 통합발행을 통해 국채 가격 및 시장의 안정성 확보

< 그림 Ⅰ - 3 > 국고채권 통합발행제도

자료 : 기획재정부

2. 통합발행 기간

□ 통합발행 기간은 신규종목 발행일로부터 각각 3개월(2년물), 6개월(3년물, 5년물, 10년물), 1년(20년물, 30년물), 2년(50년물, 물가연동국고채) 이내

ㅇ 예를 들어 3개월 통합발행 하는 2년만기 국고채권의 경우 2021년 2월 9일 화요일 입찰을 통해 2021년 3월 10일자로 발행하고 2021년 3월 9일 화요일, 2021년 4월 13일 화요일, 2021년 5월 11 화요일에 입찰을 통해 동일한 조건(만기, 표면금리 등)으로 추가 발행

< 표 Ⅰ - 16 > 국고채권 통합발행 기간

연 물	신규발행 횟수	통합기간	신규 발행일
2년물	연 4회	3개월	3월 10일 6월 10일 9월 10일 12월 10일
3년물	연 2회	6개월	6월 10일 12월 10일
5년물	연 2회	6개월	3월 10일 9월 10일
10년물	연 2회	6개월	6월 10일 12월 10일
20년물	연 1회	1년	9월 10일
30년물	연 1회	1년	3월 10일
50년물	격년 1회	2년	9월 10일
물가연동국고채	격년 1회	2년	6월 10일

3. 표면금리 결정 및 종목관리코드 표기방법

□ 국고채권의 표면금리는 신규로 발행되는 국고채권의 가중평균 낙찰금리(소수점 넷째자리 이하 절사)를 기준으로 0.125%의 배수로 하되 가중평균 낙찰금리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결정

ㅇ 2021년 6월 10일 2년물 신규발행시 가중평균낙찰금리가 0.970%일 때 표면금리는 0.875%

□ 국고채권 종목관리코드 부여방법은 표면금리(5자리) – 만기년월(4자리) – 연물 및 통합발행회차(2자리+2자리)의 총 13자리

ㅇ 2024년 6월 만기, 표면금리 1.125%의 3년 만기 국고채권을 2021년 5월 2번째로 추가 발행인 경우 종목명은 01125 – 2406 – 0302

□ 신규발행인 경우 입찰시에는 표면금리를 '00000'으로 표시하고 낙찰금리 결정 후 금리를 포함한 종목명 부여

<표Ⅰ-17> 신규발행 국고채권의 종목관리코드 부여 방법(예시)

2021년 5월 11일 2년물 신규 발행시(발행일자 : 2021년 6월 10일)	
입찰시	00000-2306-0200
입찰결과	낙찰금리 0.970%, 표면금리 0.875%
종목명	00875-2306-0200

<표 I - 18> 국고채권 수익률 체계 개편 내용(2013.6월 개편 당시)

□ (추진 배경) 기획재정부는 채권가격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국고채권 수익률 체계 개편 실시(발행시장의 경우 2013.6월 시행, 유통시장의 경우 2014.2월 시행)

○ 30년물 발행('12.9월), 10년물 지표채권화 등에 따라 단기물에 비해 금리변동에 민감한 장기채 발행 · 거래 비중 확대 현황 고려

○ 금리변동성 축소로 인한 정밀한 가격 탐색의 필요성 증대 현실 반영

○ 주요 선진국 발행시장에서는 대부분 소수 3자리를 채택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경우도 국고채권 수익률을 세분화 하는 것이 국제적 정합성 증대에 부합

□ (개편 내용) 국고채권 수익률을 소수점 2자리 → 3자리로 확대

국고채권 수익률 세부 개편 내용

		<전>		<후>
발행시장	▪ 표면금리	0.25% 반올림 (1/4단위)	➡	0.125% 절사 (1/8단위)
	▪ 종목명 표시	국고0000-0000 (국고 표면금리-만기년월)	➡	국고00000-0000 (국고 표면금리-만기년월)
	▪ 응찰 · 낙찰금리	0.01%	➡	0.005%
	▪ 낙찰단가	원미만 절사	➡	10전미만 절사
	▪ 낙찰방식(차등 구간)	3bp	➡	2bp
	▪ 응찰가능 호가개수	5개	➡	7개
유통시장	▪ 거래수익률	주로 0.01% (최근 0.005%)	➡	자율
	▪ 유통수익률 공시	소수 2자리	➡	소수 3자리
	▪ 유통단가	원미만 절사	➡	점진적으로 추진[1] (10전미만 절사)

주: 1) 2016.6월부터 소수점 1자리까지 표시

제5절 물가연동국고채

1. 개 요

□ 물가연동국고채(Inflation-linked Korea Treasury Bond)는 원금 및 이자지급액을 물가에 연동시켜 물가변동위험을 제거함으로써 채권의 실질구매력을 보장하는 국채[4)]

○ 물가연동국고채는 물가 변동분을 반영, 원금을 재계산하여 이자를 지급하고 만기시에도 물가 변동에 따라 조정된 원금을 지급함으로써 투자금의 실질 가치를 보장

< 표 Ⅰ - 19 > 물가연동국고채 사례

	발행일	0.5년	1년	1.5년	…	9.5년	10년
CPI	100	101	102	103	…	119	120
물가연동원금(억원)	100	101	102	103	…	119	120
이자(억원)	-	2.02	2.04	2.06	…	2.38	2.4

○ 가정 : 액면 100억원, 표면금리 4%, 만기 10년, 6개월 이표,
6개월마다 CPI 1씩 증가, 계산 편의를 위해 세금은 제외

○ 지급이자 계산식

: 물가연동원금(액면금액 × 지급일기준 CPI / 발행일기준 CPI) × 표면금리 × 1/2

※ 10년 후 만기일 : 원금 120억원, 이자 2.4억원 등 총 122.4억원 지급

4) 물가연동채권은 물가연동방식에 따라 자본지수연동채권, 이자지수연동채권, 연금형지수연동채권으로 나눌 수 있음. 이자지수연동채권은 원금은 액면대로 지급하되 물가상승에 따른 원금의 실질 가치 감소분을 자본지수연동채권보다 높은 표면금리로 보상하는 채권이고, 연금형지수연동채권은 매기 원리금을 물가상승률에 연동하여 연금형태로 지급하는 채권임. 우리나라에서 도입한 형태는 물가상승률에 연동하여 원금가치를 조정하고 이자는 조정된 원금에 표면금리를 곱하여 지급하는 자본지수연동채권에 해당

2. 발행 방법

□ 2007년 3월 물가연동국고채를 처음 발행하였으나 주요 투자기관(연기금, 보험 등)의 수요부족 및 유동성 부족 등으로 2008년 8월 발행을 일시 중단

ㅇ 이후 경기회복 등에 따라 미래 물가상승에 대비한 물가연동국고채 수요가 증가하면서 2010년 6월 국고채권 10년물 낙찰금액의 옵션형식으로 재발행하다가 2021년 2월부터는 발행방식을 경쟁입찰로 변경하여 발행

□ 물가연동국고채의 경쟁입찰방식은 한은망(BOK-Wire+)을 통한 전자입찰방식으로 한은망(BOK-Wire+)를 통한 입찰이 불가능한 금융기관은 모사전송, 전자우편, 서면입찰 방식으로도 응찰 가능

ㅇ 낙찰결정방식은 응찰한 금리 중 가장 낮은 금리부터 발행예정금액에 달할 때까지 순차적으로 정하고, 결정된 낙찰금리는 낙찰된 국고채의 최고응찰금리부터 순차적으로 매 0.05%p 간격으로 구분한 각 구간 중 응찰금리가 속하는 각 구간의 최고금리를 적용

□ 일반인(개인과 국채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는 금융기관 및 기타 모든 법인)에게는 경쟁입찰 발행예정금액의 20%이내 범위에서 비경쟁입찰 방식으로 배정 및 발행

ㅇ 일반인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전일까지 입찰대행기관(국고채전문딜러)에게 매입희망금액을 기재한 입찰서를 제출하고 입찰보증금(매입희망금액의 100%)을 납부

ㅇ 입찰대행기관(국고채전문딜러)은 입찰에 참여한 일반인의 응찰내역을 입찰일 당일 10시까지(선매출은 9시까지) 국채사무처리기관(한국은행)에 제출

□ 일반인의 응찰최저금액은 10만원, 응찰최고금액은 10억원으로 하고, 10만원의 정수배로 증액

○ 일반인의 총 응찰금액이 일반인 배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일반인 응찰총액에 안분비례하여 배정

○ 일반인이 낙찰 받은 국고채권은 입찰대행기관(국고채전문딜러)의 명의로 배정하고, 입찰대행기관(국고채전문딜러)은 이를 일반인의 고객계좌에 기재함으로써 배정 완료

○ 일반인에게 적용하는 금리는 경쟁입찰방식에 의해 결정된 최고낙찰금리

<참고 Ⅰ-18> 물가연동국고채 발행방식 변경

	2007년 3월~2008년 8월	2010년 6월 ~ 2020년 12월	2021년 1월 이후[1]
발행방식	고정물량 발행	고정금리발행	경쟁입찰 발행
원금 보장여부	없음	만기시 원금보장	만기시 원금보장
주요내용	사전에 발행물량 결정	사전에 발행금리 결정	경쟁입찰방식을 통해 발행물량 및 낙찰금리(차등가격 5pb) 결정
	주어진 물량을 입찰시각 PD가 의무적으로 참여하여 인수	주어진 발행금리로 인수할지 여부 및 인수물량을 결정(option 부여)	
	PD에 인수의무 부담	자율적 인수 여부 결정	낙찰 여부에 따라 PD 기관의 낙찰물량 결정

주: 1) 「국고채권의 발행 및 국고채권 전문딜러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 (2021.1.1 시행 기준)

<참고Ⅰ-19> 물가연동국고채 금리 산정 예시(물가채 옵션인 경우)

□ 물가연동국고채 금리 = 명목국고채 10년물 금리 - 금리스프레드

— 명목국고채 10년물 금리는 경쟁입찰에서 결정된 최고 낙찰금리

— 금리스프레드는 10년 만기 국고채권 경쟁입찰 전 5영업일간의 장내 금리스프레드*의 단순산술평균(소수점 넷째자리에서 절사)으로 한국거래소가 10년물 국고채권 입찰 종료 직후 발표

* 10년 만기 국고채권 지표종목의 국채전문유통시장 장종료 1시간 전부터 장종료시까지의 거래량 가중평균 체결수익률 — 10년 만기 물가연동국고채 지표종목의 국채전문유통시장 장종료 1시간 전부터 장종료시까지의 거래량 가중평균 체결수익률

○ 가정 : ① 2017년 3월 20일 한국거래소에서 발표한 금리스프레드 : 0.915
② 선매출 종목 02125-2706-1000의 최고낙찰금리 : 2.215%
③ 본매출 종목 01500-2612-1013의 최고낙찰금리 : 2.200%

○ 결과 : 선매출 연계 물가연동국고채(01000-2606-L111) 발행 금리 = 1.300%
· (2.215% - 0.915% = 1.300%)
본매출 연계 물가연동국고채(01000-2606-L112) 발행 금리 = 1.285%
· (2.200% - 0.915% = 1.285%)

< 참고 Ⅰ - 20 > 물가연동국고채(옵션)의 금리스프레드 결정방식

구 분	2010년 6월 ~ 2011년 8월	2011년 9월 이후 ~	2017년 6월 ~ 2020년 11월
발표기관	한국거래소		
발표일시	10년물 국고채권 입찰 종료 후		
금리제출기관	3개 채권평가사	PD 및 PPD	-
제출 금리	매 거래일 15시 30분에 평가한 값	10년물 국고채권 경쟁입찰 전일 15시 30분 현재의 금리스프레드	-
금리스프레드	다음 각 호의 값중 큰 값 1. 10년물 국고채권 경쟁입찰 시행일 직전 영업일의 금리 스프레드 평가치의 산술평균 2. 다음 각 목을 산술평균한 값 가. 10년물 국고채권 경쟁입찰 시행일 직전 영업일의 금리 스프레드 평가치의 산술평균 나. 10년물 국고채권 경쟁입찰 시행일 직전 1주일간 금리 스프레드 평가치의 산술평균 다. 10년물 국고채권 경쟁입찰 시행일 직전 1개월간 금리 스프레드 평가치의 산술평균	각 전문딜러가 제출한 금리 스프레드 중 상하 각 2개를 제외하고 산출평균한 값	1호에서 2호를 차감한 값 1. 10년 만기 국고채권 지표종목의 국채전문유통시장 장종료 1시간 전부터 장종료시까지의 거래량 가중평균 체결수익률 2. 10년 만기 물가연동국고채 지표종목의 국채전문유통시장 장종료 1시간 전부터 장종료시까지의 거래량 가중평균 체결수익률
자릿수	소숫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소수점 넷째자리 이하 절사	

3. 물가연동지수 계산 및 발행자금 납부 등

□ 물가연동국고채의 연동 지수는 소비자물가지수(CPI, Consumer Price Index)를 사용하며, 특정일의 물가지수 계산시 2개월 전의 CPI를 중점 반영하는 'Canadian Model'(국제적 기준)을 채택

□ 물가연동국고채의 원금 지급액은 아래 방식으로 산출하며, 이에 표면금리를 곱하여 이자 지급액을 산출

ㅇ 물가연동원금 = 발행당시액면 × 물가지수연동계수

– 물가지수연동계수 $= \dfrac{\text{원리금지급일물가지수}}{\text{발행일물가지수}}$

– 특정일의물가지수 $= CPI_{m-3} + (t-1)/D_m \times (CPI_{m-2} - CPI_{m-3})$

$\left(m: \text{특정일이 속한 월},\ t: \text{특정일},\ D_m: \text{특정일이 속한 월의 일수},\ \text{소수점 여섯째자리에서 반올림}\right)$

□ 발행대금 납부금액은 경쟁입찰을 통해 낙찰된 최고응찰금리(차등금리가 있는 경우에는 차등금리 각각의 최고금리 적용)가 물가연동 국고채 낙찰 금리로 하여 <참고 I-15> 국고채권 발행단가 산출식을 통해 산출한 단가에 매출일의 물가지수연동계수를 곱하여 산정

< 참고 Ⅰ - 21 > 물가연동국고채 원금 및 이자지급액 산정에 관한 사항[1)]

구 분		내 용	비 고
연동지수		소비자물가지수 (CPI:Consumer Price Index)	통계청 발표지수
참조지수 (Ref-CPI)		CPI_{m-3} + {(t-1) / D_m} × (CPI_{m-2} - CPI_{m-3}) (m : 해당일이 속한 월, t : 해당일, D_m : 일수)	소수점 여섯째자리에 서 반올림
물가연동계수 (Index Ratio)		(기준일의 참조지수) / (발행일의 참조지수)	
연동 방법	원금	발행액면금액 × 물가연동계수	물가연동원금
	이자	(표면금리 / 2) × 물가연동원금	
원금보장		만기일의 물가연동원금이 발행액면금액보다 작은 경우 만기일에 상환하는 원금은 발행액면금액으로 한다.	2010.6월 이후 발행분에 한함
기 타		1. 기획재정부, 한국은행과 한국거래소는 일별, 종목별 물가연동계수를 공표한다. 2. 특정월의 CPI가 연동계수 적용월 초까지 발표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을 이용하여 대체 CPI를 산출할 수 있다. $\text{직전월의 } CPI \times \left(\frac{\text{직전월의 } CPI}{\text{직전12개월째의 } CPI}\right)^{\frac{1}{12}}$ 3. CPI 발표 이후, 공표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지수를 수정하는 경우에는 과거 CPI 및 참조지수를 수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CPI 발표 이후 지수의 구성항목, 가중치 등이 바뀌어 지수 변경이 발생할 경우 발행일 참조지수는 다음의 산식을 이용하여 산출한다. 발행일 참조지수 = 물가지수 변환계수 × 기존 발행일의 참조지수 ※ 물가지수 변환계수 $= \frac{\text{舊기준 물가지수가 최종적으로 발표된 월의 新기준 물가지수}}{\text{舊기준 물가지수가 최종적으로 발표된 월의 舊기준 물가지수}}$	

주 : 1)「국고채권의 발행 및 국고채전문딜러 운영에 관한 규정」제21조관련 <별표 1>

4. 원금 보장

□ 2010년 6월부터 발행한 물가연동국고채는 원금을 보장. 즉, 만기시 물가수준이 발행일보다 낮아져 물가연동국고채의 원금이 액면가를 하회할 경우 액면가를 지급

< 표 Ⅰ - 20 > 만기시 물가수준이 발행일 물가수준보다 낮은 경우 예시

	발행일	1년		8년	9년	10년
CPI	100	99	…	92	91	90
물가연동원금(억원)	100	99		92	91	90
이자(억원)	-	1.98		1.84	1.82	1.80

○ 가정 : 액면 100억원, 표면금리 4%, 만기 10년, 6개월 이표,

○ 지급이자 계산식

: 물가연동원금(액면금액 × 지급일기준 CPI/발행일기준 CPI) × 표면금리 × 1/2

※ 만기일 총 지급액

- 원금 보장시 101.8억원(원금 : 100억원, 이자 1.8억원)
- 원금 미보장시 91.8억원(원금 : 90억원, 이자 1.8억원)

5. 과세 방법

□ 물가연동국고채를 개인 및 법인이 보유한 경우 이자소득(원금상승분 포함)의 15.4%{소득세(이자소득의 14%) +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를 원천징수

<참고 Ⅰ-22> 물가연동국고채 과세방법

	자본이득	원금상승	이자소득	기타
개인	비과세	이자소득에 포함[1]	15.4%(소득세+지방소득세) 원천징수[2]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에 대한 분리과세 가능[3]
법인	매도 또는 상환시 실현된 채권 양도차익에 대해 결산시 사업소득에 합산하여 과세	이자소득에 포함	15.4%(법인세+지방소득세) 원천징수[4]	만기보유증권으로 회계처리 가능[5] (가격변동에 따른 평가손익 반영 의무 없음)

주 1) 「소득세법시행령」 제 22조의 2 (국채 등의 이자소득) 제3항
2) 소득세 14%(「소득세법」 제 127조 제1항), 지방소득세 1.4%(소득세의 10%)
3)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제1항
4) 법인세 14%(「법인세법」 제 73조 제1항), 지방소득세 1.4%(법인세의 10%)
5) 한국회계기준원의 해석(<물가연동국채에 대한 회계처리방안 검토요청에 대한 회신>, 2010-KAI179 (2010.8.26)

제6절 환매조건부 국고채권 발행

1. 개요

□ 환매조건부(Repurchase Agreement, Repo) 국고채권은 국고채전문딜러가 특정 종목의 국고채권에 대한 수요증대로 국채시장 수급불안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 당해 종목의 국고채권을 환매조건부로 발행하여 줄 것을 정부에 신청하고 정부가 국채시장 여건을 감안하여 발행 여부를 결정

ㅇ 국채 시장에서 발행 당시 일정기일 후 정부에 국고채권을 다시 반환할 것을 조건으로 발행되는 채권

□ 국채로서의 지위와 성격은 일반 국고채권과 동일

2. 발행방법 및 주요내용

□ 특정 종목의 국고채권에 대한 수요증대로 국채시장 수급불안의 우려가 있는 경우 국고채전문딜러가 발행요청하고 정부가 시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발행

ㅇ 발행대상채권은 지표종목 및 경과종목 모두 가능

ㅇ 국고채전문딜러는 종목당 최소 10억원에서 최대 500억원을 10억원 단위로 신청 가능

ㅇ 매매대금 및 환매대금의 산정

매매대금 = (환매국고채권의 액면총액 × 시장가치*/10,000)

* 시장가치는 채권평가회사가 발표하는 당해 환매국고채권의 평가가격을 기초로 한국거래소가 산출한 가격(시가평가가격)

단, 국고채권 매매거래 계약 갱신의 경우 매매대금은 갱신 당일 환매대금

환매대금 = {매매대금 × (1 + 환매이자율* × 거래기간일수/365)}

* 환매이자율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자금중개회사거래 은행간 무담보콜 금리(익일물)의 90%(소숫점 셋째자리 이하 절사)

□ 환매거래기간은 국고채권 환매거래 계약의 갱신을 통해 최대 90일 또는 동일 종목 국고채권의 다음 발행일까지 연장 가능

○ 국고채권 환매거래는 정부가 환매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하고 국고채전문딜러가 환매국고채권을 반환함으로써 거래가 종료, 반환된 환매국고채권은 정부가 소각

○ PD가 환매일에 불가피한 사유로 환매국고채권을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 환매국고채권에 상응하는 현금*으로 대신 납부 가능

* 환매일까지 동일 종목의 국고채권 발행이 있는 경우
환매국채 액면총액 × 시장가치* / 10,000 × (1 + 0.5%)

* 환매일까지 동일 종목의 국고채권 발행이 없는 경우
환매국채 액면총액 × 시장가치# / 10,000 × (1 + 0.2%)

\# 시장가치는 당해 국채 환매거래 성립일과 환매일의 시장가치 중 높은 가격

□ 환매조건부 국고채권 제도는 2003년 6월 도입되었으며 2009년 4월 14일 3년 만기 국고채권 200억원(액면가격)이 처음 발행, 동년 5월 환매된 바 있음

<참고 Ⅰ-23> 환매조건부 국고채권 거래 제도 변경사항

	2003년 6월 ~ 2011년 3월	2011년 4월 이후
신청요건	국고채권전문딜러의 공매도 발생	국채시장 수급불안 우려
대상채권	지표종목	지표종목 및 경과물
발행신청시 정부승인	국고채권전문딜러가 발행요청 시 정부는 발행에 응하여야 함	국채시장 여건을 감안하여 발행 여부 결정
신청가능수량 및 신청단위	종목당 최대한도 500억원	종목당 최소 10억원~최대 500억원, 10억원 단위 신청
거래기간	90일의 범위내에서 동일종목 국고채권의 다음발행일까지 연장가능	최대 90일 또는 동일종목 다음 발행일까지 연장가능

□ 국고채권의 자금부담 주체인 공공자금관리기금은 환매거래 만기일에 당해 국고채권 전문딜러에게 소정의 환매이자(기간 중 콜금리의 90%)를 지급

□ 환매대상 국고채권의 발행 및 상환은 한국은행 전산시스템을 이용(증권업무 담당자)하고 환매가격 산정 및 만기관리 등은 한국거래소 전산시스템을 이용

제7절 변동금리부 국고채권 발행

1. 개 요

□ 변동금리부 국고채권은 발행시 기준금리(Reference Rate)에 연동되어 지급 이자가 매 지급 주기마다 정기적으로 변동되는 국고채권

ㅇ 기준금리는 시장에서 대표성을 갖는 금리로 CD 금리나 고정금리부 국고채권 유통금리를 활용

ㅇ 동 국고채권의 지급이자율은 발행시 기준금리에 가산금리(Spread)를 더하여 결정하며, 차기 지급이자율은 매 이자지급기간 개시 전에 결정

□ 변동금리부 국고채권은 고정금리부 국고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금리하락기에는 발행자에게 유리한 반면 금리상승기에는 투자자에게 유리한 특징을 갖고 있음

ㅇ 발행자는 향후 금리가 하락하는 경우에 지급이자 비용을 줄일 수 있고 투자자는 향후 금리가 상승할 경우에 고정금리부 국고채권에 비해 더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음

□ 변동금리부 국고채권 제도는 2008년 7월 도입되었으나 2021년 5월말 현재까지 발행된 실적은 없음

□ 변동금리부 국고채권은 통합발행을 실시하지 않고 조기상환 및 원금·이자 분리(STRIPS) 대상에서 제외하며, 비경쟁인수권한도 부여하지 않음

2. 변동금리부 국고채권의 지급이자

□ 변동금리부 국고채권의 지급이자는 "기준금리 + α(가산금리)"로 구성

□ 기준금리는 변동금리부 국고채권 가격의 기본을 이루는 부분으로, 실세 금리를 반영하는 대표적인 단기 시장금리를 이용

ㅇ 기준금리는 금융투자협회가 국채전문유통시장 종료 후 공시하는 최종호가 수익률로 91일물 CD금리 또는 국고채권유통금리 중 변동금리부 국고채권 발행 시점의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결정

□ 변동금리부 국고채권의 가산금리는 발행시 경쟁입찰에 의해 확정되어 만기까지 고정

ㅇ 가산금리는 기준금리에 더하여 지급이자율을 결정하는 부분으로 국가 신용도, 시장 상황 등이 반영되므로 +, - 모두 가능

□ 이자지급액은 전기 이자지급일의 직전영업일의 기준금리를 적용하여 산정하되 최초 이자지급액은 입찰일 직전영업일의 기준금리를 적용

< 표 Ⅰ - 21 > 변동금리부 국고채권 이자지급 예시

(예시) 발행조건 : 만기 3년(발행일 '08.7.11, 상환일 '11.7.11), 3개월 이표, 가산금리 - 5bp인 경우

	08.7.09 입찰전일	08.7.10 입찰일	08.7.11 발행일	08.10.10	08.10.11 이자지급일	09.1.10	09.1.11 이자지급일
기준금리	5.00%	5.08%	5.10%	5.20%	5.05%	5.15%	5.17%
지급금리					5.00%-5bp		5.20%-5bp

3. 발행 조건 등

□ 만기는 국채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만기와 발행일을 결정, 이자는 기준금리의 변동 주기에 따라 지급

□ 발행은 한은금융망(BOK-Wire+)을 통한 경쟁입찰을 통해 발행하되 입찰시간은 10시 20분부터 10시 40분까지임

□ 변동금리부 국고채권의 표면금리는 기준금리와 낙찰된 최고가산금리의 합으로 하고 가산금리는 0.005%의 정수 배수가 되도록 표기

□ 기준금리(91일물 CD금리 또는 잔존만기 3개월 기준 국고채권 금리)는 변동금리부 국고채권 발행을 위한 입찰일 1영업일 전 및 이자지급일 1영업일 전의 최종호가수익률(금융투자협회 공시)을 적용

4. 금리 변동 위험 헤지

□ 변동금리부 국고채권 발행시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스왑은행과 변동금리부 국고채권과 동일한 만기의 금리스왑(IRS, Interest Rate Swap) 거래를 통해 고정금리를 지급하고, 변동금리를 수취

□ 변동금리부 국고채권 발행일 1영업일 전(국채 입찰일) 09:40 ~ 10:00에 IRS 금리 결정을 위한 입찰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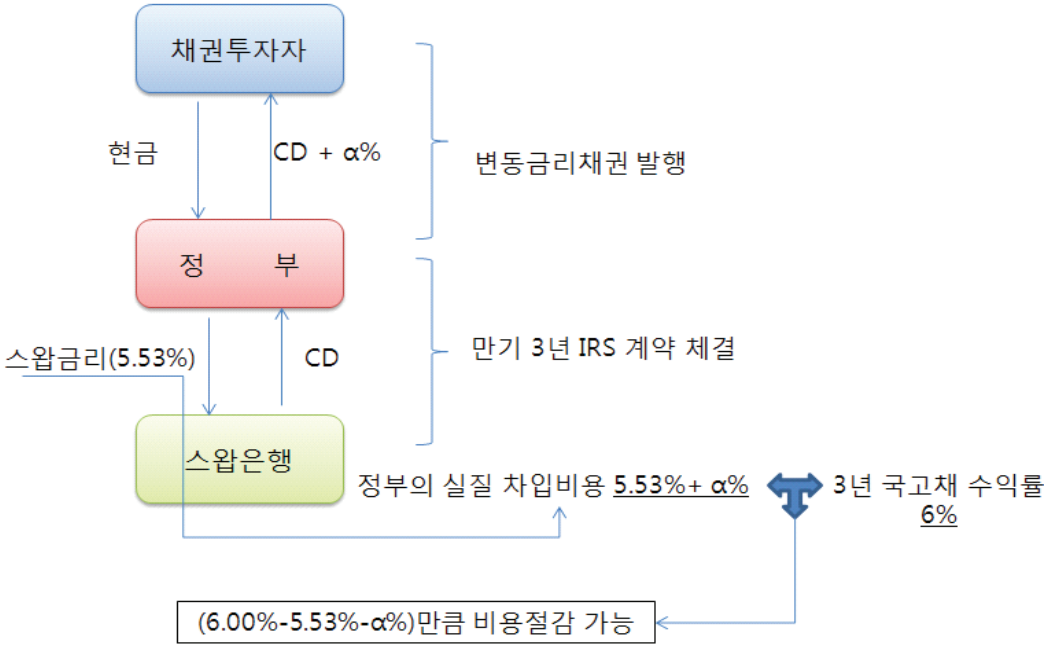
ㅇ 금리스왑은"CD금리(변동)"수취,"CD금리(변동) + α(고정) + IRS금리(고정)"지급이므로"α + IRS금리"가"고정금리부 국고채권 발행금리"보다 낮으면 금리 변동 위험을 헤지하면서 발행비용 절감이 가능

< 참고 Ⅰ - 24 > 변동금리부 국고채권 발행 및 금리 스왑거래시 순이자지급

구분	금 리	비 고
지급(변동금리) (-)	기준금리(변동) + α(고정)	변동금리부 국고채권 발행
지급(고정금리) (-)	IRS 금리(고정)	금리스왑거래
수취(변동금리) (+)	기준금리(변동)	
순지급 이자	IRS 금리(고정) + α(고정)	지급이자가 고정됨

□ 스왑은행의 파산 등에 따른 채무불이행 가능성에 대비하여 스왑은행 보유 국고채권을 담보로 사전 확보

< 그림 Ⅰ - 4 >	변동금리부 국고채권 발행 / 이자율스왑 거래 체결 흐름(예시)



5. 종목관리코드 부여

□ 변동금리부 국고채권의 종목관리코드는 현행 국고채권의 13자리수 체계를 기준으로 표기하되 만기 앞에 영문자 "C"(CD금리 연동시) 또는 "T"(국고채권 금리 연동시)를 넣어 일반 국고채권과 구분

ㅇ 가산금리(5자리) - 만기년월(4자리) - C 또는 T + 발행만기(2자리) + 통합발행 회차(1자리)

□ 가산금리가 양수이면 '+' 를, 음수이면 '-' 를 각각 금리 앞에 표시하고 통합 발행회차는 1부터 시작하되 10회부터는 알파벳 순서로 부여

<예시> + 0250 - 1709 - C101, C102 ~ C109, C10A, C10B…
- 0250 - 1709 - T101, T102 ~ T109, T10A, T10B…

□ 금리스왑 거래를 위한 스왑입찰 종목의 코드도 기본 구조는 상기와 같이 하되 발행만기 앞에 영문자 'S'를 넣어 표기

ㅇ 스왑금리(5자리) - 만기년월(4자리) - S + 발행만기(2자리) + 통합발행회차(1자리)

ㅇ 통합발행회차는 1부터 시작하고 10회부터는 알파벳 순서로 부여

<예시> 04250 - 1709 - S101, S102 ~ S109, S10A, S10B…

< 표 Ⅰ - 22 > 국고채권 종목명칭 및 종목관리코드 체계[1] (2013년 6월 이후)

			일반(명목) 국고채	물가연동 국고채	STRIPS 원금분리국고채	STRIPS 이자분리국고채	변동금리부 국고채
종목명칭	국채종류		국고	물가	국고	국고	변동
	표면금리(5)		표면금리(5)	표면금리(5)	표면금리(5)	00000(5)	가산금리(5)
	만기년월(4)		만기년월(4)	만기년월(4)	만기년월(4)	만기년월(4)	만기년월(4)
종목관리코드	표면금리(5)		표면금리(5)	표면금리(5)	표면금리(5)	00000(5)	가산금리(5)
	만기년월(4)		만기년월(4)	만기년월(4)	만기년월(4)	만기년월(4)	만기년월(4)
	발행관리코드	발행만기(2)	발행만기(2)	L	P	I	C 또는 T
				발행만기(1)	발행만기(2)	000(3)	발행만기(2)
		통합발행회차(2)	통합발행회차(2)	통합발행회차(2)	통합발행회차[2](1)		통합발행회차[2](1)
종목관리코드 부여 예시			02000-2209-0503[3]	01000-2606-L120[4]	01500-3609-P201[5]	00000-1809-I000[6]	+0050-1703-C031[7] -0050-1806-T053[8]

주 : 1) ( ) 안은 자리수임
2) 10회 통합(추가)발행부터는 알파벳 순서로 부여
3) 표면금리 2.000%, 만기 2022년 9월, 5년물 3번째 통합(추가)발행인 명목국고채
4) 표면금리 1.000%, 만기 2026년 6월, 10년물 20번째 통합(추가)발행인 물가연동국고채
5) 표면금리 1.500%, 만기 2036년 9월, 20년물 1번째 통합(추가)발행된 국고채권의 원금분리채권
6) 2018년 9월에 지급하는 이자분리채권
7) 가산금리 +0.050%, 만기 2017년 3월, 기준금리가 CD금리인 3년물 변동금리부 국고채권의 신규발행된 채권
8) 가산금리 -0.050%, 만기 2018년 6월, 기준금리가 국고채금리인 5년물 변동금리부 국고채권의 3번째 발행된 채권

제3장 국채의 상환

제1절 개 요

□ 국채의 상환이란 국채의 원리금이 보유자에게 지급되고 국채가 소멸되는 일련의 과정

□ 국채의 상환 방법에는 만기상환, 추첨상환, 조기상환(국채교환 포함), 매입소각이 있으며 국채의 대부분은 만기에 상환이 이루어짐

- ㅇ 만기상환 : 발행시 약정한 만기일에 일시 상환
- ㅇ 추첨상환 : 추첨에 당첨된 국채에 한하여 원리금을 상환(예 : 징발보상증권)
- ㅇ 조기상환 : 만기일 이전에 상환(새로운 국고채권을 발행하여 기 발행된 국고채권과 교환해주는 국고채권교환도 포함)
- ㅇ 매입소각 : 국채의 시가가 하락하여 액면가 이하가 되었을 경우 정부가 국채유통시장에서 국채를 매입하여 소각

□ 한국은행은 국채상환시 사전에 국채발행 자금부담 주체에게 상환자금을 청구하고 상환 전일까지 수령하여 국고채권은 국고채권상환자금(778 국고계정), 재정증권은 재정증권원리금상환자금(758 국고계정)에 입금

□ 국채의 소멸시효는 원금, 이자 모두 만기일로부터 5년임. 다만, 1년 이내의 기간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이자의 경우에는 3년임(「국채법」 제14조)

< 참고 Ⅰ - 25 > 국채별 자금부담 주체 및 주관부서

국채명		자금부담 주체	주관부서
국 고 채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기획재정부 국고과[1)]
재정증권	원금	통합계정	기획재정부 국고과
	이자	국고금운용수익계정	기획재정부 국고과

주: 1) 위탁받아 한국은행 증권팀(기금계)에서 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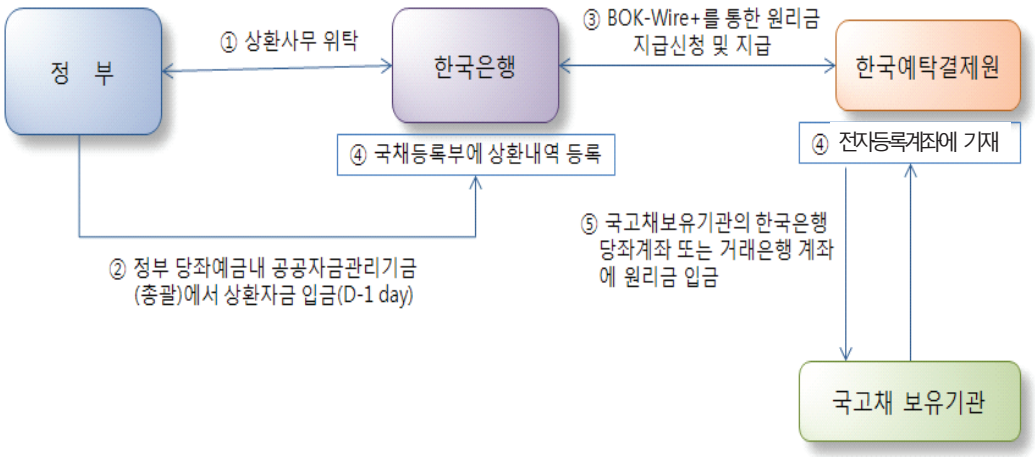
제2절 만기상환

□ 국채의 발행 시 약정한 만기일에 일시 상환하는 것으로 대부분 국채가 만기상환 방식으로 상환되나 국고채권 만기 일시 집중 방지 및 채권 시장 유동성 조절을 위한 조기상환의 규모 및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

□ 국고채권은 현재 한국은행이 관리하는 국채등록부에 모두 한국예탁결제원 명의로 일괄등록되어 있어 한국예탁결제원이 원리금 상환신청 전문을 통해 원리금을 수취해가고 이를 국고채권 보유기관 및 거래은행의 한국은행 당좌예금계좌에 원리금을 입금함으로써 완료

□ 국고채권 원금은 만기일에 일시 상환하고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매 6개월마다 지급하는데, 원금상환일 또는 이자지급일이 금융기관 휴무일인 경우에는 직전 영업일, 법정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이며, 금융기관 휴무일과 법정공휴일이 겹치는 경우에는 법정공휴일로 봄

< 그림 Ⅰ - 5 > 국고채권의 만기상환



< 참고 Ⅰ - 26 > 국고채권 상환시 회계처리

o 국고채권 상환자금 수취 (D-1)

2021. 3. 9 국고채권 원리금 상환예정액 11,203,359,842,360원 수취

구분	차변	대변
실시간 이체시 (국고계리)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 (676) (지급) 11,203,359,842,360	국고채권상환자금 (778) (수입) 11,203,359,842,360

o 국고채권 상환(D)

2021. 3. 10 국고채권 원리금 상환
: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종목 건별 신청하면 신청순으로 전표 발생

구분	차변	대변
상환신청시 (자금계리)	정부당좌예금 11,203,359,842,360	원화본지점 11,203,359,842,360 (금융결제국)
	원화본지점 11,203,359,842,360 (국고증권실)	당좌예금 11,203,359,842,360 (예탁결제원)
(국고계리)	국고채권상환자금 (778) (지급) 11,203,359,842,360	—

제3절 조기상환(Buy Back)

1. 개 요

□ 국고채권 조기상환(buy back)[5]은 만기를 분산하거나 유동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아직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국고채권을 매입하는 제도로 만기가 짧은 국고채권을 시장에서 매입하여 유통 국고채권의 만기구조를 장기화함으로써 국고채권 유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2000년 12월에 도입

□ 국고채권의 만기가 단기간 집중적으로 도래할 경우 이를 차환하기 위해 일시에 국고채권 발행을 확대하면 시장금리가 급등하는 등 시장의 왜곡이 발생 할 수 있음

ㅇ 조기상환을 통해 경과물 국고채권의 유동성을 제고시키고 만기분산을 통해 재정부담이 일시에 가중되는 차환위험을 예방

2. 상환방법

□ 국고채권의 매입(buy back)은 국고채 전문딜러 및 예비국고채 전문딜러를 대상으로 한은금융망(BOK-Wire+)을 통해 입찰 또는 국고채권 보유자로부터 직접 매입 가능

□ 국고채권 매입(buy back) 경쟁입찰 시 1개사당 응찰한도는 매입예정금액의 30% 이내(단, 예비국고채전문딜러의 응찰한도는 15% 이내) 이며, 종목별 최저응찰금액은 10억원이며, 10억원의 정수배로 응찰, 종목당 응찰금리는 최대 7개까지 가능(단, 동일금리로 중복응찰 불가)

---

5) 조기상환제도는 이론적으로 재정증권에도 활용될 수 있으나 만기가 긴 국고채권에서만 이용되고 있음

ㅇ 조기상환 낙찰결정방법은 종목별로 응찰금리 중 높은 금리 제시분부터 순차적으로 결정하며, 낙찰된 국고채권의 최저응찰금리부터 순차적으로 매 5bp 간격으로 구분한 각 구간 중 각 응찰자별 응찰금리가 속하는 구간의 최저금리를 낙찰금리로 적용(차등가격 낙찰방식, Differential pricing auction)

ㅇ 다만, 응찰률이 현저히 낮거나 응찰금리가 시장금리 수준에 비하여 과도하게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낙찰물량 축소가 가능하며, 동일조건으로 응찰한 경우 응찰금액별로 10억원 단위로 배정하고 부분낙찰 가능

□ 조기상환 재원은 초과세수 등 재정여유자금 또는 신규 국고채권 발행(차환발행) 자금이며, 한국은행은 국고채권 조기상환 시 사전에 국고채권 발행주체(공공자금관리기금 총괄계정)에게 상환자금을 청구하고 상환 전일까지 수령하여 국고채권상환자금(778 국고계정)에 입금

ㅇ 국고채권 교환의 경우 교환당일에 국고채권상환자금(778 국고계정)에 입금

□ 조기상환 매입가액은 <참고I-27>에 의한 매입단가(1만원 단위)를 적용한 금액

ㅇ 조기상환 입찰일 다음 영업일에 각 낙찰자가 한국은행에 제출한 보유기간 확인서를 토대로「법인세법」에 따라 2010.1.1이후 보유기간에 대해서는 채권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소득세)과「지방세법」(2015.1.1.시행)에 따른 특별징수액(지방소득세)을 차감하여 환매가액을 지급

<참고Ⅰ-27> 국고채권 매입단가 산출식(‘십전’ 단위 미만은 절사)

$$\left[\left(\sum_{t=1}^{n}\frac{10,000\times\frac{R}{m}}{\left(1+\frac{r}{m}\right)^{t-1}}\right)+\frac{10,000}{\left(1+\frac{r}{m}\right)^{n-1}}\right]\times\frac{1}{\left(1+\frac{r}{m}\times\frac{a}{b}\right)}$$

n : 잔존이자지급횟수 m : 연간이자지급횟수
R : 표면금리 r : 낙찰금리
a : 이자지급기중 잔존일수(한편넣기) b : 이자지급기중 일수(한편넣기)

제4절 교 환(Conversion Offer)

1. 개 요

□ 국고채권 교환제도(conversion offer)는 국고채전문딜러 및 예비국고채전문딜러를 대상으로 국고채권을 신규로 발행하여 경과물 국고채권과 교환해 주는 제도로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 5월에 도입

ㅇ 대금결제는 신규발행 국고채권 대금과 경과물 국고채권 대금의 차액만을 정산

< 그림 Ⅰ - 6 > 국고채권 교환

자료: 기획재정부

□ 국고채권 교환제도를 활용할 경우, 국고채권 만기가 일시에 집중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며 특정 종목의 국고채권(지표물, 경과물 모두 가능) 공급을 확대하여 해당 종목의 유동성 제고 가능

□ 국고채권 교환은 기 발행된 경과물이 새로 발행되는 국고채권과 교환된다는 점에서 국고채권 발행자금을 활용한 조기상환(buy back)과 유사하나 발행 절차, 거래 상대방, 자금 흐름 등이 상이

< 참고 Ⅰ - 28 > 국고채권 조기상환과 교환 비교

	조기상환(buy back)	교환(conversion offer)
목 적	- 유동성이 낮은 채권을 신규채권으로 전환하여 유동성을 제고 - 단기물 매입, 장기물 발행 등을 통한 국채 만기분산	- 유동성이 낮은 채권을 신규채권으로 전환하여 유동성을 제고
절 차	- 신규 국고채권 발행을 통한 자금 마련, 동 자금을 활용한 경과물 매입의 2단계 절차	- 경과물과 신규 국고채권을 직접 교환하는 1단계 절차
거래상대방	- 신규 국고채권 인수자와 경과물 매입자가 상이	- 동일인을 상대로 국고채권 경과물 매입 및 신규물 매출
자금흐름	- 정부와 거래상대방간 채권매매 대금을 각각 현금으로 결재	- 신규물과 경과물을 현물로 교환하고 차액만 현금 정산

2. 국고채권 교환에 따른 효과

□ 유동성이 낮은 경과물을 유동성이 높은 지표물로 대체하여 국고채권의 거래 유동성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와 국고채권 거래 활성화 도모 가능

ㅇ 신용경색 상황에서도 경과물(off-the-run)이 지표물(on-the-run)[6]로 교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경과물의 가격하락폭을 제한하는 효과를 지님

3. 국고채권 교환 진행 절차

□ 국고채권 교환은 국고채전문딜러 및 예비국고채전문딜러를 대상으로 한은금융망(BOK-Wire+)을 통한 경쟁입찰을 통해 이루어짐

6) 지표물(on-the-run)은 경쟁입찰을 통해 현재 발행되고 있는 종목의 국고채권(단, 선매출종목과 경과종목은 제외)을 말하며, 경과물(off-the-run)은 이미 발행은 종료되었으나,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종목의 국고채권을 말함

ㅇ 국고채권의 교환은 발행금리 공고, 입찰 및 낙찰, 교환 차액의 정산 순으로 이루어짐

가. 발행금리 공고

□ 신규발행 국고채권의 가격은 사전에 공고할 경우 입찰결과에 당일 시장의 변동 상황을 반영하기 어려우므로 입찰 당일[7]에 공고

나. 입 찰

□ 입찰은 공고된 신규발행 국고채권의 금리를 기준으로, 경과물의 금리를 응찰하여 경과물별 낙찰금액을 결정(물량은 지표물과 경과물 각각 10억원 단위이며 액면가 1:1로 교환)

ㅇ 각 국고채전문딜러별 1개사당 응찰한도는 교환예정금액의 30% 이내(예비국고채전문딜러의 응찰한도는 15% 이내)로 매입대상 경과물 1종목당 7개까지 복수 응찰금리로 응찰이 가능하나 동일금리로 중복응찰은 불가

다. 낙 찰

□ 종목별로 응찰금리 중 높은 금리 제시분부터 순차적으로 결정

ㅇ 낙찰금리는 발행 경쟁입찰에서와 같이 차등가격 낙찰방식(Differential Pricing Auction Method)에 의하고 최저낙찰금리부터 응찰금리를 일정 간격(5bp)으로 그룹화 하여 각 그룹별로 최저금리를 적용

---

7) 교환 입찰일 09:30, 10:00, 10:20를 기준으로 국채전문유통시장을 통한 각각의 직전 체결수익률을 단순 산술평균하여 한국거래소가 공표하는 금리로 소수점이하 셋째자리(이하 버림)까지 계산, 다만, 직전 체결수익률이 없는 경우에는 각 기준시각의 최우선매도가격과 최우선매수가격간 중간값 등을 직전 체결수익률로 할 수 있음

ㅇ 다만, 응찰률이 현저히 낮거나 응찰금리가 시장금리 수준에 비하여 과도하게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낙찰물량 축소가 가능하며, 동일조건으로 응찰한 경우 응찰금액별로 10억원 단위로 배정하고 부분낙찰 가능(단, 잔여금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입찰번호순서가 앞선 응찰금액이 우선)

라. 차액정산

□ 정산은 국고채권 액면 10억원 단위로 교환하며, 입찰일로부터 2영업일에 정산하되 교환되는 경과물 상환, 국고채권의 신규발행 및 차액정산을 동시에 실시

ㅇ 국고채권 교환 자금은 교환 입찰결과 정부 승(+)인 경우 교환결제 당일 PD 및 PPD로부터 수령한 정산차액을 국고채권 발행 주체(공공자금관리기금 총괄계정) 계좌로 입금

ㅇ 정부 패(−)인 경우 결제 당일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으로부터 동 정산액을 수령하여 교환차액 결제

ㅇ 국고채교환 입찰일 다음 영업일에 각 낙찰자가 한국은행에 제출한 보유기간확인서를 토대로「법인세법」에 따라 2010.1.1이후 보유기간에 대해서는 채권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소득세)과「지방세법」(2015.1.1.시행)에 따른 특별징수액(지방소득세)을 차감하여 환매가액을 지급하며, 과세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Ⅳ. 채권 관련 원천징수 업무> 참고

□ 국고채권 교환을 통해서 발행된 국고채권 신규 종목에 대해서는 비경쟁인수(옵션)는 부여하지 않음

< 참고 Ⅰ - 29 > 국고채권 교환시 차액 정산 방법

□ 정산액 = 신규물 발행대금 - 경과물 상환대금

○ 정산액 > 0 ⇒ 정부 승(+), PD가 정산액 납입

○ 정산액 < 0 ⇒ 정부 패 (-), PD앞 정산액 지급

□ 각 낙찰자별로 신규물 발행대금은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금리를 국채 발행단가식<참고 I-15>에 대입하고, 경과물 상환대금은 각자의 낙찰금리(세전단가 적용)를 국채매입단가식<참고 I-27>에 대입하여 계산

□ 물가연동국고채를 신규물로 발행하거나 매입할 경우 발행가액 및 납입가액은 명목국고채의 단가계산식을 각각 적용하여 계산한 후 국고채권 교환일(결제일)의 물가연동계수를 적용하여 산출

제4장 국고채전문딜러 제도

제1절 개 요

□ 국고채전문딜러(PD, Primary Dealer) 제도는 국고채권의 원활한 발행 및 국채유통시장 활성화를 통해 금융시장 구조의 선진화를 이루고 정부의 안정적인 재정기반 확립, 정책 당국과 시장 참여자들간의 원활한 소통 강화 등을 목적으로 대부분의 OECD국가에서 도입하고 있음

ㅇ 국고채전문딜러(PD, Primary Dealer)는 자금력과 국채투자매매업에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금융기관으로서 국고채권 발행시장(primary market)에서 독점적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과 인수·유통금융 등의 지원을 받는 대신 국채유통시장(secondary market)에서 매도·매수 호가를 제시하는 등 시장조성(market making)의 의무를 수행

□ 1999년 기존의 발행·인수 중심의 국채인수단제도(syndicate)를 시장조성 중심의 PD제도로 개편한 이래 국채에 대한 투자매매업을 인가받은 금융기관 중 일정수준 이상의 국고채권 거래실적 및 재무건전성 등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며 국내 채권시장의 규모 및 질적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함

□ 2011년 PD제도를 보다 시장지향적인 시스템으로 만들기 위해 2007년 7월 폐지한 예비국고채전문딜러(PPD, Preliminary Primary Dealer) 제도를 재도입하였고, 2012년에는 우수한 PPD는 PD로 지정하고, 실적이 부진한 PD는 PPD로 강등하는 PD와 PPD간 승강제를 도입

□ 2021년 1분기에는 PD와 PPD간 패스트트랙을 실시하여 PPD는 6개월내 실적 평가 등을 통해 PD로 조기승격이 가능하도록 함

ㅇ 현재 PD로 지정받고자 하는 금융기관은 우선 PPD로 지정받아야 함

< 그림 Ⅰ - 7 > 국고채전문딜러(PD)와 예비국고채전문딜러(PPD)

자료: 기획재정부

□ 2021년 5월말 현재 국고채전문딜러는 17개 기관(은행 7개, 증권사 등 10개), 예비국고채전문딜러는 4개 기관(은행 1개, 증권사 3개)임

< 참고 Ⅰ - 30 > 국고채전문딜러 및 예비국고채전문딜러 현황(2021년 5월말 현재)

구 분	은 행	증 권
국고채 전문딜러	한국산업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 스탠다드차타드은행, 크레디아그리콜은행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신한금융투자, NH투자증권, KB증권, 대신증권, 메리츠증권, 교보증권, DB금융투자, 삼성증권
예비국고채 전문딜러	BNP파리바은행	유진투자증권, 유안타증권, 키움증권

<참고 Ⅰ-31> **과거 예비국고채전문딜러(PPD) 제도**

□ 1999년 국고채전문딜러(PD) 제도 신설시 예비국고채전문딜러(PPD) 제도를 함께 도입하여 PD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PPD로 지정(PPD 수는 전체 PD 수의 30%이내) 받은 후 1년 뒤 실적 평가를 통해 PD로 지정 받아야 했으나, 2007년 7월 PD 지정요건을 강화하면서 PPD 제도를 별도로 관리·운영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동 제도를 폐지한 바 있음

제2절 신규지정 요건

□ 국고채전문딜러 또는 예비국고채전문딜러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정부가 정하고 있는 재무건전성기준, 인력기준, 실적기준 등 다소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ㅇ 예비국고채전문딜러도 국고채전문딜러에 준하는 시장조성자 역할을 수행하므로 지정요건이 국고채전문딜러 지정요건에 준하나 은행의 경우 재무제표상의 자기자본 총계 3조원 이상(「은행법」 제2조에 따른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자기자본은 3천억원 이상), 증권사의 경우 자기자본 총계가 3천억원 이상으로 국고채전문딜러보다 자기자본 총계 요건이 다소 완화

□ 매년 5월 및 11월중 PPD 신청을 받고 PD로의 지정여부는 당해연도 6월말 및 12월말까지 결정

<참고 Ⅰ - 32> PD 지정요건

<table>
<tr><th>구 분</th><th colspan="2">요 건</th></tr>
<tr><td>재무건전성 기준</td><td colspan="2">- 은행 및 종금사
ㅇ 전문딜러 지정일이 속한 분기의 직전 분기말의 자기자본비율(BIS)이 「은행법」 제34조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영개선권고 기준 이상이고 재무제표상 자기자본 총계가 4조원 이상일 것.
다만,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자기자본은 5천억원 이상일 것
- 증권회사
ㅇ 전문딜러 지정일이 속한 분기의 직전 분기 말의 순자본비율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영개선권고 기준 이상이고 재무제표상 자기자본 총계가 4천억원 이상일 것</td></tr>
<tr><td>인력 및 경력 기준</td><td colspan="2">- 딜링 인력
ㅇ 국고채권 딜링 업무를 전담하는 딜러로 채권 딜링이나 중개업무에 3년이상 근무경력자 5인 이상(책임자 포함)
- Research 인력
ㅇ 조사분석 등 연구업무 3년 이상 경력을 구비한 경제 및 금융분야 전문 인력 3인 이상
- Back office 인력
ㅇ 국고채권 및 자금결제관련 전문 인력으로 유가증권 및 자금 결제업무 1년 이상 경력자 4인 이상
- 국고채권 딜링업무기간
ㅇ PD규정 제2조제1호에 따라 국채딜러로 인가받은 날로부터 지정신청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td></tr>
<tr><td rowspan="3">실적기준</td><td>국채전문유통시장 지표종목 거래실적</td><td>- 전문딜러 지정일이 포함된 분기 직전의 2분기의 당해 딜러의 총 국고채권 지표종목 거래량과 비교한 국채전문유통시장에서의 국고채권 지표종목 거래 실적(분기별 실적 25% 이상)</td></tr>
<tr><td>유통시장 거래실적</td><td>- 전문딜러 지정일이 포함된 분기 직전의 2분기의 전문딜러인 은행 등 또는 증권회사의 평균 국고채권 거래량과 비교한 당해 딜러의 국고채권 거래실적(분기별 실적 25% 이상)</td></tr>
<tr><td>국고채권 보유잔액</td><td>- 최근 6개월 자기매매(딜링)용 국고채권 보유 평균잔액이 2천억원 이상</td></tr>
</table>

* 세부내용 및 전문딜러·예비전문딜러의 의무이행 평가기준 등은 「국고채권의 발행 및 국고채 전문딜러 운영에 관한 규정」 참고

제3절 혜택과 의무

□ 국고채권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국고채전문딜러(PD) 및 예비국고채전문딜러(PPD)에게 국고채권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시장조성을 위한 일정 의무를 부과

ㅇ 다만, 예비국고채전문딜러의 경우 국고채전문딜러에 비해 제한적인 시장조성 의무와 권한을 부여

<참고 Ⅰ-33> PD 및 PPD의 권한과 의무[1)]

구 분		국고채전문딜러(PD)	예비국고채 전문딜러(PPD)
권한	입찰참여	▪ 입찰물량의 30%까지 인수 (조기상환 및 교환도 동일)	▪ 입찰물량의 15%까지 인수 (조기상환 및 교환 동일)
	비경쟁인수	▪ 경쟁입찰시 낙찰금액의 30%이내(반기별 우수 20%, 차상위 15%, 차차상위 10%, 기타 5%까지 인수 가능하며, (직전월)월별평가 우수 1~5위 10%p, 6~10위 5%p 추가 인수)	없음
	금융지원	▪ 의무이행실적이 우수한 PD들에게 저리로 융자 제공	없음
의무[2)]	국고채권 인수	▪ 경쟁입찰 발행물량의 10% 이상 인수	없음
	국고채 매입	▪ 매입 또는 교환 물량의 5% 이상 낙찰	없음
	호가제시	▪ 국채전문유통시장에서 매도·매수 양방향 호가 각각 10개 이상(단, 30년물은 5개 이상, 물가채는 5개이상)씩 장내시장 개장시간 동안 제출	<좌 동>
	유통	▪ 은행 등 · 증권사 전물딜러 중 평균 국고채 거래량의 110% 이상 거래 ▪ 은행 등 · 증권사 전물딜러 중 평균 원금이자분리채권 거래량의 110% 이상 ▪ 은행 등 · 증권사 전물딜러 중 평균 10년국채 선물 거래량의 1100%이상	<좌 동>
	보유	▪ 매분기별 자기매매(딜링)용 국고채권 보유 평균잔액 1조원 이상 유지	없음
	보고	▪ 국채종류별 보유잔액현황, 국고채권거래실적 등을 매달 한국거래소를 경유하여 기재부 장관에게 보고	<좌 동>

주 : 1) 「국고채권의 발행 및 국고채 전문딜러 운영에 관한 규정」 참고

제4절 금융 지원

□ 국고채권의 발행 및 유통의 원활화를 위해 국고여유자금 및 「공공자금관리기금법」제8조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 여유자금을 활용하여 전문딜러를 대상으로 국채시장의 활성화와 발전을 위한 금융을 지원

ㅇ 국고채권, 재정증권, 국민주택채권을 담보로 의무이행실적이 우수한 PD들에게 저리로 대여

ㅇ 금융지원 대상은 국고채전문딜러에 대한 의무이행 실적을 평가한 결과 상위 10개 전문딜러로, 전문딜러별 금융지원 한도는 지원자금총액의 15%

ㅇ 지원금리는 의무이행 실적 평가 결과 1위~5위까지의 전문딜러에게는 한국은행이 공시한 전일자 익일물 콜금리에 0.7을 곱한 금리(소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한 후 소수 세자리로 표기)로 하며, 6위~10위까지의 전문딜러에 대해서는 0.8을 곱한 금리로 함

ㅇ 금융지원은 공공자금관리기금 여유자금 운영기관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지정기관)을 통하여 지원하며, 지정기관이 금융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한국거래소 내 환매조건부 채권시장을 통해 환매조건부채권 매수의 형태로 지원하되 환매조건부 거래 대상 채권은 거래당시 잔존만기가 거래일로부터 환매일까지의 기간 이상인 국고채, 재정증권, 국민주택채권 또는 물가연동국고채로 한정

□ 금융지원 신청가능액 산정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고시 「국고채전문딜러에 대한 금융지원에 관한 기준」참고

제5장 국채 원금·이자 분리거래제도(STRIPS)

제1절 개 요

□ 원금·이자 분리거래제도(STRIPS, Separate Trading of Registered Interest and Principal of Securities)는 이표채권의 원금과 이자를 분리하여 각각 별개의 무이표채권(zero coupon bond)으로 유통될 수 있도록 고안된 제도(다만, 2년만기 국고채, 물가연동국고채*, 변동금리부국고채는 제외)

* 물가채의 경우 원금 및 이자가 소비가물가지수에 따라 변동되기 때문

ㅇ 예를 들어 만기 20년, 매 6개월 이자지급의 이표채권을 분리할 경우 원금분리채권 1개, 이자분리채권 40개로 총 41개의 채권으로 분리

ㅇ 원금과 이자가 분리된 채권은 원금부분과 이자부분 모두 할인하여 매매되고 만기시에는 액면으로 상환

ㅇ 원금과 이자를 분리하기 전의 이표 채권을 '원본채권', 분리 후 원금 분리분을 '원금분리채권', 이자 분리분을 '이자분리채권'으로 지칭

□ 지표 국고채권의 유동성 제고, 장기채시장 발전을 위한 수익률곡선 구축, 장기 무이표채권에 대한 수요 대응 및 채권시장의 국제화 등을 위하여 2006년 3월부터 국고채권 스트립을 도입하였으며, 최초 스트립은 20년만기 국고채권을 대상으로 2007년 4월 시행

ㅇ 원금·이자 분리대상채권은 2006년 이후부터 신규로 발행되는 3년물 이상의 중장기 국고채권

ㅇ 스트립 가능금액은 국고채권 액면가 1,600만원의 정수배이며, 이는 이자스트립의 액면가가 최소 1만원 이상으로 유지되도록 하기 위함

□ 이자분리채권의 경우 원본채권이 달라도 만기일이 동일하면 동일한 종목임

□ 한편, 원금분리채권과 이자분리채권을 원금과 이자 분리 이전의 이표채권으로 복원하는 것을 재결합(reconstitution)이라고 함

ㅇ 재결합시 원금분리채권은 반드시 원본채권에서 분리된 것이어야 하나, 이자분리채권은 만기가 동일한 경우 다른 채권에서 분리된 것도 가능

제2절 STRIPS의 기대효과

□ 무위험채권에 대한 투자자의 수요 충족

ㅇ 원금·이자 분리채권은 재투자위험 없이 만기 시 확정된 수익을 보장[8]하기 때문에 연·기금, 보험회사 등 장기투자자의 무위험채권에 대한 수요를 충족

ㅇ 원금·이자 분리채권을 이용하여 다양한 현금흐름(6개월~50년)을 갖는 자산운용이 가능

ㅇ 원금·이자 분리채권을 구입하여 일정기간 동안 동일한 현금흐름을 갖는 연금형 금융상품과 같은 투자자의 선호에 맞는 다양한 금융상품을 구성할 수 있음

8) 만기 시 1회의 현금흐름만을 가지고 있어 재투자위험이 제거됨으로써 투자시점에서 확정 수익률을 확보할 수 있음

□ 자산 듀레이션 확대

ㅇ 원금·이자 분리채권은 만기에만 현금흐름이 발생하기 때문에 6개월마다 이자지급이 발생하는 이표채에 비해 듀레이션이 장기이므로 원금분리채권 보유를 통한 운용자산 듀레이션 확대가 용이

□ 이자소득세 이연 효과

ㅇ 국고채권 스트립을 통해 이표채가 할인채로 전환되면 이자소득세 이연을 통한 절세효과가 발생

ㅇ 원금분리채권과 이자분리채권의 할인액을 이자소득으로 인식하여 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 22조의2 제1항)

□ 채권시장의 유동성 제고

ㅇ 거래가 적은 원본채권 경과물을 스트립하여 신규발행채권으로 재구성하거나 개별 원금·이자 분리채권으로 거래함에 따라 채권시장의 유동성을 제고

< 표 Ⅰ - 23 > 연도별 국고채권 STRIPS 현황

(조원)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5월말
분리	11.9	16.8	18.4	20.5	17.0	6.5
재결합	2.9	4.1	7.1	8.6	6.8	1.9
원금상환	2.9	5.6	4.8	4.8	4.2	0.5
잔액	36.8	43.9	50.5	57.5	63.6	67.7

제3절 종목관리코드 부여 방법

□ 원금분리채권

ㅇ 원본채권의 "발행만기 및 통합발행회차" 4자리를 "P(1) + 발행만기(2) + 통합발행회차(1)" 형식으로 표기

* 단, 통합발행회차의 10회부터는 알파벳 순서로 부여
(예시 : 02125 - 4703 - P300 ~ P30A, P30B....)

□ 이자분리채권

ㅇ 앞자리 5자리는 '00000'으로 하고, "발행만기 및 통합발행회차" 4자리를 "I000" 형식으로 표기

* 단, 이자지급 완료분은 대상에서 제외
(예시 : 00000 - 1712 -I000)

□ 종목별 분리 및 재결합 순서

ㅇ 원금·이자 분리 시에는 원본채권 신규발행(00회)부터 시작하여 통합발행 순으로 차감하고, 재결합 시에는 이의 역 순으로 가산

제4절 STRIPS 등록

□ 원금·이자 분리 신청권자(국고채권 보유자)가 직접 또는 예탁자를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원금·이자 분리(재결합)를 신청하고, 한국예탁결제원이 채권의 수량·소유 여부·스트립 가능 채권 여부를 확인한 후, 한국은행 앞 일괄 재신청하는 순서로 처리

① 국고채권 예탁자는 한국예탁결제원의 e-SAFE 시스템을 이용하여 소유한 원본채권의 원금·이자 분리(재결합)를 오후 4시 30분까지 신청

ㅇ 한국예탁결제원은 원금·이자 분리(재결합) 신청 채권에 대해 소유권 처분을 제한

② 한국예탁결제원은 신청 기관의 소유 여부를 확인한 후, 한은금융망(BOK-Wire+)을 통해 한국은행 앞으로 오후 4시 30분 이후에 일괄 재신청

③ 한국은행은 원금·이자 분리(재결합) 신청내용을 확인한 후 국채등록부에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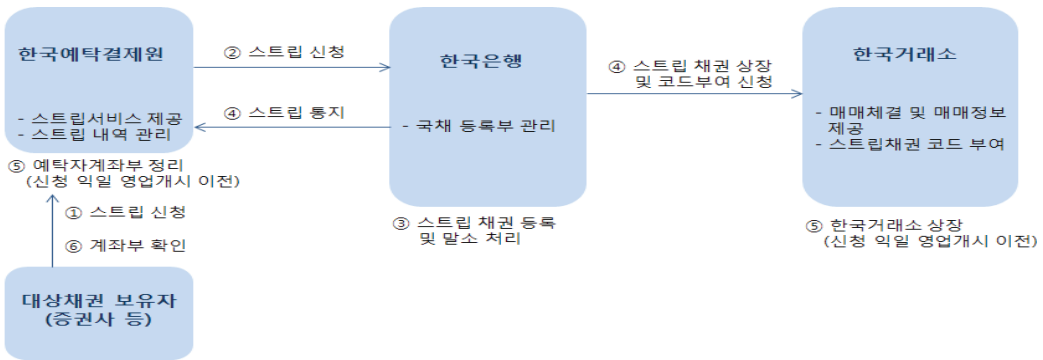
④ 원금·이자 분리(재결합)채권의 등록사실을 한은금융망(BOK-Wire+)을 통한 전문송신 방법으로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고, 한국거래소 앞으로 상장을 의뢰

ㅇ 원금·이자 분리 시 원본채권 차감, 원금분리채권 및 이자분리채권 등록 (재결합시 원금분리채권 및 이자분리채권 삭제, 원본채권 가산)

※ 재결합 시 이자분리채권간 대체는 허용하되, 원금분리채권간 대체는 불허하며, 원금·이자 분리 이전의 원본채권에 가산

⑤ 한국예탁결제원은 원금·이자 분리(재결합) 내용을 익영업일 오전 업무개시 이전에 예탁자계좌부에 일괄 기재, 한국거래소도 국채전문유통시장에 익일 오전 업무개시 이전에 상장

< 그림 Ⅰ-8 > 국고채권 스트립 흐름도



< 표 Ⅰ-24 > 국고채권 발행·상환 관련 업무현황

<국고채권 발행· 상환 등 관련 업무>		
- 경쟁입찰		
·명목 국고채	매주 월요일	· 입찰시간 10:40~11:00, 단, 선매출의 경우 09:40~10:00
·공고문 게시 의뢰	매월 하순	· 당행 홈페이지(국고채권 발행, 환매 공고 및 공지사항내) 게시
- 옵션행사 관리		
·명목 국고채 (50년물, 물가채 제외)	매주 월~목요일	· 행사시간 월 12:00~15:30 목 09:00~15:30
- 낙찰(옵션)대금 납입	입찰일(행사일)익일	· 마감시간 15:50 · 지준일인 경우 그 다음 영업일
- 물가연동계수 생성,게시	매월 첫 영업일	· 당행 홈페이지 게시
- 원리금 상환	매분기	· 3, 6, 9, 12월 10일
- 조기상환	하반기	
- 교환	매월	
- STRIPS (원금이자분리, 재결합)	매일 16:30분	· 한국예탁결제원이 신청분을 취합하여 일괄신청
- 상장업무	매일	· 발행, 상환, 스트립신청에 따른 변경사항을 한국거래소앞 상장신청
<원천징수 업무>		
- 이자소득 원천징수	부정기	· 조기상환 및 교환시
- 월중 원천징수액 납부	매월 10일한	· 가수금(원천징수액)은 재무운영팀앞 전금
- 지급명세서 제출	매년 2월말	· 국세청 및 지방자치단체 앞 제출

<참고 Ⅰ- 34> 국고채권 발행·상환·스트립 업무 관련 상장처리

□ 국고채권 입찰일(발행입찰, 조기상환 및 교환 입찰 모두 포함)에는 낙찰 내역에 기초하여 한국거래소앞(채권상장시스템) 해당 종목에 대한 신규 상장, 추가상장 및 중도상환 상장신청을 하여야 함

ㅇ 한국거래소 채권상장시스템에 접속하여 신청내역을 입력 → 별도 작성한 채권상장의뢰서에 한국은행(증권팀) 관인을 날인하여 한국거래소 채권상장공시팀앞 팩스 송부 → 처리 완료여부 확인

ㅇ 상장의 효력발생일은 항상 신청일 익영업일이며, 지준마감일 등으로 매출일이 동일한 경우 마지막 신청일에 한 번만 상장의뢰함

□ 스트립 신규 및 분리·재결합 신청시에도 스트립 및 재결합 내역에 대해 채권상장시스템에서 상장신청

ㅇ 스트립업무 처리 실행시 한국은행 회계결제시스템에서 출력되는 상장신청의뢰서에 한국은행(증권팀) 관인을 날인하여 한국거래소 채권상장공시팀앞 팩스 송부 → 처리 완료여부 확인

ㅇ 분리 및 재결합 효력발생일 역시 신청일 익영업일임

< 참고 Ⅰ - 35 > 국채유통시장 개요

□ 채권유통시장은 이미 발행된 채권이 거래되는 제2차 시장(Secondary Market)으로서 채권보유자에게 매매를 통한 투자수익 실현기회를 제공하고 공정한 채권가격 형성, 발행채권의 가격 결정기능을 수행

ㅇ 우리나라의 국채시장은 한국거래소시장(장내시장)과 장외시장으로 나뉘며, 전자는 경매시장의 형태이고 후자는 브로커시장과 딜러시장의 형태로 거래가 이루어짐

(국채전문유통시장)

□ 국채전문유통시장은 한국거래소가 국고채권시장 활성화 및 거래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부지원으로 1999년 3월에 개설한 국고채전자거래시장으로 국채자기매매인가기관인 딜러들이 국고채권을 대량으로 매매하는 완전경쟁매매시장의 형태로 운영

국채전문유통시장 개관

구 분	내 용
거래시간	09:00 ~ 15:30
거래대상 종목	국고채권, 통화안정증권, 예금보험공사채권
거래수량 단위	액면 10억원의 정수배
호가 방식	가격호가 (잔존만기 2년미만 0.1원, 2년 이상 10년미만 0.5원, 10년이상 1원)
체결방식	복수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
참가자	국채딜러(은행,증권), 위탁참가자(일반기관 등)
결제일	T+1일

(장외시장)

□ 장외시장(Over-the-Counter Market)은 은행, 증권 등 금융투자회사 창구를 중심으로 상대매매가 이루어지는 딜러시장, 브로커시장 등 국채전문유통시장이외의 모든 시장을 통칭하는 개념임

ㅇ 메신저와 전화 등을 통해 거래담당자 사이에 실시간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액면 100억단위로 거래가 이루어짐

< 표 Ⅰ - 25> 연도별 국채[1] 발행 현황

(조원)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1 ~ 5
국고채권	발행	77.7	81.3	79.7	88.4	97.5	109.3	101.1	100.8	97.4	101.7	174.5	87.7
	상환	48.5	51.3	56.8	50.6	59.9	62.4	69.3	71.0	77.1	57.2	59.2	8.3
	잔액[2]	310.1	340.1	362.9	400.7	438.3	485.1	516.9	546.7	567.0	611.5	726.8	806.2
재정증권	발행	-	11.7	22.4	36.7	38.0	37.5	20.9	7.9	2.0	48.7	45.3	22.9
	상환	-	11.7	22.4	36.7	38.0	37.5	20.9	7.9	2.0	48.7	45.3	13.4
	잔액[2]	-	-	-	-	-	-	-	-	-	-	-	9.5

주: 1) 당행이 발행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채
2) 해당기간의 말 잔액

< 표 Ⅰ - 26 > 연도별 국고채권 조기상환 및 교환 현황

(회, 조원)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1 ~ 5
조기상환	회수	18	18	11	7	5	13	10	13	15	17	9	-
	금액	19.4	22.3	12.0	5.6	5.2	12.1	11.3	17.6	27.1	20.2	12.0	-
교환	회수	7	13	9	9	18	20	17	15	16	16	18	8
	금액	2.9	4.8	2.0	2.9	3.1	4.6	4.2	1.7	2.2	1.6	2.1	1.5

< 표 Ⅰ - 27 > 연도별 국고채권 발행·상환 현황

(억원, %)

년도	발행	증감률	상환	증감률	발행잔액[1)]	증감률
2010	777,214	-8.5	484,980	11.7	3,100,767	10.4
2011	813,061	4.6	513,220	5.8	3,400,608	9.7
2012	796,665	-2.0	568,340	10.7	3,628,934	6.7
2013	883,826	10.9	505,830	-11.0	4,006,930	10.4
2014	974,662	10.3	599,044	18.4	4,382,548	9.4
2015	1,092,891	12.1	624,400	4.2	4,851,038	10.7
2016	1,011,241	-7.5	693,197	11.0	5,169,082	6.6
2017	1,007,920	-0.3	709,850	2.4	5,467,152	5.8
2018	974,060	-3.4	770,772	8.6	5,670,440	3.7
2019	1,017,000	4.4	572,110	-25.8	6,115,330	7.8
2020	1,744,731	71.6	592,400	3.5	7,267,661	18.8
2021.1 ~ 5	877,040	-	83,170	-	8,061,531	10.9

주: 1) 해당기간의 말 잔액

< 참고 Ⅰ - 36 > 한국은행의 국고전산망과 정부의 dBrain을 연계한 송수신업무

□ 한국은행(BOK)과 기획재정부(MOEF)는 2010년 12월부터 국고채권 발행, 2011년 10월부터 국고채권 매입 및 교환과 관련된 입찰 및 낙찰정보를 전자방식으로 송수신

(송수신 전송 방법)

ㅇ 응찰 및 낙찰결과정보 : 일괄 송수신 (FTP, File Transfer Protocol)

ㅇ 낙찰금리정보 : 온라인 송수신 (OLTP, On-Line Transaction Processing)

(국고채권 발행 입찰정보)

업무 구분	송수신 내역	송수신 시기
응찰 (BOK ⇒ MOEF)	참가기관별 응찰내역 : 응찰 금액, 응찰금리 등	당일 응찰접수 마감(11시) 직후
낙찰금리 (MOEF ⇒ BOK)	낙찰관련정보 : 낙찰금리, 금액 등	당일 11시 20분 전후
낙찰 결과 (BOK ⇒ MOEF)	낙찰결과정보 : 낙찰기관, 금액, 금리 등	당일 낙찰통지(11:30) 직후

(국고채권 매입 및 교환 입찰정보)

업무 구분	송수신 내역	송수신 시기
응찰 (BOK ⇒ MOEF)	참가기관별 응찰내역*: 응찰 금액, 응찰금리 등 * 교환의 경우 발행 정보내역 (금리, 단가 등) 추가 송신	당일 응찰접수 마감(11시) 직후
낙찰금리 (MOEF ⇒ BOK)	낙찰관련정보*: 낙찰금리, 금액 등 * 종목별과 합산분으로 구분	당일 12시 전후
낙찰 결과 (BOK ⇒ MOEF)	낙찰결과정보 : 낙찰기관, 금액, 금리 등	당일 낙찰통지(14시 이전) 직후

Ⅱ. 통화안정증권 업무

제1장 업무 개요

제2장 통화안정증권의 발행

제3장 통화안정증권의 등록

제4장 통화안정증권의 상환

제5장 발행 및 상환의 회계처리

제1장 업무 개요

□ 통화안정증권(Monetary Stabilization Bond)은 1961년 11월「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제정과 함께 도입[9]되어「한국은행법」제69조 및「한국은행 통화통화안정증권법」에 따라 유동성 조절을 목적으로 금융기관 및 일반인을 상대로 발행

- ㅇ 1962년 경제개발 5개년계획 시행과정에서 은행들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자 1965년까지 발행을 중단하였으나, 1966년 들어 해외부문을 통한 통화팽창에 따라 유동성 조절을 목적으로 1966년 3월부터 발행 재개
- ㅇ 1972년부터 은행 이외에 일반인을 상대로 한 매출이 실시되고, 1977년부터는 매매대상을 제2금융권으로 확대
- ㅇ 1987년 10월에 도입되었던 증권, 은행신탁, 투자금융, 투자신탁, 보험 등을 대상으로 한 총액인수제[10]를 1993년에 폐지하고 발행방식을 경쟁입찰 및 일반매출 위주로 변경하였으며, 1989년 12월「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개정에 따라 할인발행 이외에 액면발행(이표채) 방식이 추가

□ 수요기반 확충 및 유동성 제고 등을 위하여 2009년 6월에 통합발행제도[11]를 도입하면서 1996년 12월부터 발행되기 시작한 2년물 통화안정증권을 통합발행하고, 2010년 6월에는 통합발행을 1년물까지 확대

- ㅇ 아울러 2009년 6월 현물 증권 교부를 전제로 하는 창구판매 제도를 잠정 중단

□ 2016년 5월부터 시장참가자들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월별 통화안정증권 발행계획을 공표하고 2017년 11월 13일부터 통화안정증권 발행수익률 단위를 세분화

---

9) 도입 당시에는 예금금리 인상으로 은행수신은 크게 증가한 반면, 최고 한도제 실시 등에 따라 대출은 여의치 않아 은행의 수익성이 악화되자 은행의 여유자금 운용을 위해 발행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으며 대상기관도 은행으로 국한

10) 대상 금융기관들이 발행물량을 총액으로 인수하여 사전에 합의된 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방식

11) 일정기간 동안 추가하여 발행하는 증권의 표면금리와 만기 등 발행 조건을 일치시켜 증권을 발행하는 제도로 유통되는 증권의 종류가 표준화 또는 단순화되어 증권의 유동성이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

□ 1년물 통화안정증권의 거래 활성화 및 수요기반 확충을 위해 2018년 3월 1년물 통합발행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2개월로 확대하고 2018년 11월부터 정례 중도환매를 실시

< 표Ⅱ-1 > 통화안정증권 제도의 변천

시행연월	내 용
1961년 11월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제정에 따른 통화안정증권 발행 개시
1972년 12월	통화안정증권 발행방식 변경(공개시장에서의 일반공모방식 추가)
1973년 8월	시장금리에 의한 공개입찰방식 도입
1985년 6월	통화안정증권 일반공모제도 개선(발행금리를 시장금리 수준에 연동)
1989년 2월	통화안정증권 만기 다양화(546일 만기 도입)
12월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개정 : 액면발행방식 추가
1995년 3월	만기 28일물 통화안정증권 신규 발행
9월	만기 392일물 통화안정증권 신규 발행
1996년 12월	2년 만기 통화안정증권 발행 개시
1997년 8월	경쟁입찰시 한은금융망(BOK-Wire+)을 통한 전자입찰제 도입
2001년 11월	통화안정증권 중도환매 및 국고채권 단순매입 실시
2002년 6월	통화안정증권 최소입찰 및 최소낙찰금액 상향 조정
7월	금융권 토요휴무제 실시에 따른 통화안정증권 원리금지급 특례 시행
2003년 1월	통화안정증권 발행방식 개선(만기별 발행 정례화)
2004년 3월	91일물 통화안정증권 첫 정례입찰 실시
8월	통화안정증권 경쟁입찰시 최소입찰/낙찰 금액단위 100억원으로 상향
2005년 1월	통화안정증권 기일물별 입찰일정 변경
2006년 4월	통화안정증권 낙찰결과 예탁결제원 앞 실시간 전송 개시
2009년 6월	통화안정증권 통합발행 시행(2년물 이표채)
2010년 6월	통화안정증권 통합발행 대상 확대(1년물 이표채)
9월	통화안정증권 중도환매(조기상환)제도 정례 시행(2년물 이표채)
2014년 8월	통화안정증권 발행시 초과낙찰한도 10% → 20%로 상향 조정 통화안정증권 경쟁입찰시 응찰한도 60% 신규 설정

2016년 5월	통화안정증권 월별 발행계획 공표 시행
2017년 11월	통화안정증권 발행수익률 등 체계 개선·시행
2018년 3월	통화안정증권 통합발행기간 확대(1년물 이표채)
11월	통화안정증권 정례 중도환매(조기상환) 대상 확대((1년물 이표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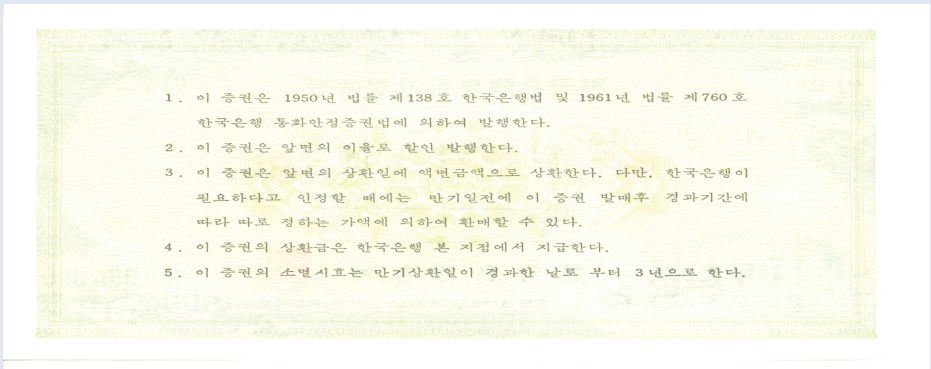
< 표 Ⅱ - 2 > 통화안정증권 발행 추이

(조원)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1~5
발 행	167.2	175.0	193.3	191.5	161.1	163.7	159.8	142.1	144.1	55.9
잔 액	163.1	163.7	181.5	184.4	168.4	170.9	171.6	164.1	159.3	154.6

주 : 발행은 기간 중, 잔액은 기간 말 기준임

< 참고 Ⅱ - 1 > 현 통화안정증권(할인채)(보기)



1. 이 증권은 1950년 법률 제138호 한국은행법 및 1961년 법률 제760호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에 의하여 발행한다.
2. 이 증권은 앞면의 이율로 할인 발행한다.
3. 이 증권은 앞면의 상환일에 액면금액으로 상환한다. 다만, 한국은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만기일전에 이 증권 발매후 경과기간에 따라 따로 정하는 가액에 의하여 환매할 수 있다.
4. 이 증권의 상환금은 한국은행 본 지점에서 지급한다.
5. 이 증권의 소멸시효는 만기상환일이 경과한 날로 부터 3년으로 한다.

<참고 Ⅱ-2> 현 통화안정증권(이표채)(보기)

제2장 통화안정증권의 발행

제1절 통화안정증권의 발행조건 및 발행방법 등

□ 통화안정증권은 한국은행 금융시장국의 경쟁입찰 또는 모집 결과에 따라 국고증권실에서 한은금융망(BOK-Wire+)을 통해 발행

ㅇ 통화안정증권 발행·상환업무[12]는 한국은행 본부 국고증권실에서 취급

□ 발행한도 : 금융통화위원회가 금융시장 여건과 시중 유동성 사정 등을 감안하여 6개월마다 분기별 발행한도를 정함

□ 만기 : 2021년 5월말 현재 발행할 수 있는 만기는 모두 13종이며, 만기별 발행물량은 필요에 따라 수시로 변동

ㅇ 할인채(10종) : 14, 28, 63, 91, 140, 182, 364, 371, 392, 546일
ㅇ 이표채(3종) : 1년, 1년 6개월, 2년

* 2021.6월 금융통화위원회는 유동성조절 수단을 확충하여 시장상황 변화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3년물을 신규 도입하기로 의결하였으며, 첫 발행은 2021.9월 이후 실시될 예정

□ 발행금액 : 전자입찰을 통한 공모발행시 최저 발행금액은 100억원이며, 그 이상은 100억원의 정수배를 발행금액단위로 함

□ 발행방법 : 전자적인 방식에 의하여 통화안정증권등록부에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으로 등록(다만,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인 경우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 현물증권을 발행*,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법」 제3조 제2항)

* 현물증권 종류 : 1백만원권, 5백만원권, 1천만원권, 5천만원권, 1억원권

---

12) 통화안정증권 발행 및 상환 업무는 한국은행총재가 선정(「공개시장운영규정」 제2조 제2항)한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에 위임 또는 대행시킬 수 있으며(「공개시장운영규정」 제11조 제2항), 모집·매출발행의 경우 대상기관에 위탁하거나 인수시켜 발행할 수 있음(「공개시장운영규정」 제13조 제2항)

□ 발행공고 :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환매하고자 할 때에는 한국은행 홈페이지와 1개 이상의 일간신문(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를 포함)을 통해 공고. 다만, 금융기관, 그 밖의 특정기관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거래하고자 할 때는 예외(「공개시장운영규정」제52조, 「공개시장운영세칙」제42조)

□ 발행 상장 : 발행된 증권은 모두 한국거래소에 상장

□ 한은금융망(BOK-Wire+) 가입기관의 경우 한은금융망(BOK-Wire+)을 이용하여 통화안정증권 거래(발행, 상환, 양수도 등)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 중 일부 거래에 대하여는 <표 Ⅱ-3>의 한은금융망(BOK-Wire+) 이용수수료(잡수입-잡수수료 계정으로 처리)를 징수

< 표 Ⅱ - 3 > 한은금융망(BOK-Wire+) 이용수수료

거래 구분	이용수수료(원)		
	한은금융망(BOK-Wire+) 이용시		
	16:00 이전	16:00 후~ 17:30 이전	17:30 후
증권·대금 동시결제	150	500	4,000
한국은행의 증권 커스터디업무 관련 자금이체			
부기등록 신청			
등록변경(양수도)신청			
취 소	800	800	4,000

제2절 통화안정증권의 발행방식

□ 통화안정증권은 공모 또는 상대매출로 발행하며 공모발행은 경쟁입찰, 모집, 매출로 구분(경쟁입찰과 모집이 주로 활용)

1. 경쟁입찰

□ 경쟁입찰은 「공개시장운영규정」 제2조에 따라 선정된 대상기관*을 상대로 이루어지며, 발행물량의 배분은 한국은행이 내부적으로 설정한 금리수준을 상한으로 저금리 응찰분부터 이루어짐

* 한국은행총재는 원칙적으로 매년 1회 공개시장운영과 관련한 거래를 행할 대상기관을 공개시장운영 수단별로 구분하여 선정

ㅇ 경쟁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한은금융망(BOK-Wire+)을 통해 실시하며 낙찰결과는 입찰참가기관에 통보하고 일반적으로 입찰일 다음 영업일에 자금 결제

□ 발행금리는 금융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단일금리방식 또는 복수금리방식[13] 중에서 정하는데 일반적으로 단일금리방식을 사용

2. 모집

□ 모집*도 「공개시장운영규정」 제2조에 따라 선정된 대상기관을 상대로 이루어지며 한국은행은 일정한 발행조건(발행예정금액, 발행금리)을 미리 정하여 공고한 상태에서 응모자들의 응모금액에 따라 발행물량을 배분

* 2009년 6월 도입된 모집제도는 현재 매월 넷째 수요일에 2년물과 1년물을 대상으로 발행예정금액의 40%는 월중 경쟁입찰시 낙찰실적이 우수한 기관이 응모하고 60%는 전체 대상기관에게 응모권한을 부여

---

13) 단일금리(Dutch) 방식은 각 낙찰자가 입찰시 제시한 금리 중 최고 금리를 일률적으로 모든 낙찰자에게 적용, 복수금리(Conventional) 방식에서는 각 낙찰자가 입찰시 제시한 금리를 각각의 발행금리로 정함. 일반적으로 유동성 흡수시에는 대상기관의 자금운용을 제약하므로 입찰참가자에 유리하게 단일금리방식을 적용하며, 유동성 지원시에는 복수금리방식을 적용하는 경향이 있음

3. 매 출

□ 매출은 일정한 발행시간을 정하여 그 시간 내에 균등한 조건으로 발행하되, 발행예정금액 범위내에서 신청순서에 따라 발행물량을 배분

ㅇ 2009년 6월 모집제도가 도입되면서 잠정 중단

4. 상대매출

□ 상대매출은 유동성 조절 또는 통화신용정책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특정 금융기관 또는 정부 출자·출연기관을 상대로 실시

□ 만기 및 발행금리는 공모발행할 때와 다르게 적용 가능(「공개시장운영규정」 제13조 제3항)

< 표Ⅱ-4 > 통화안정증권 업무 주기[1](2021년 5월말 현재)

업 무 명	주 기		비 고
통화안정증권 발행			
경쟁입찰 - 입찰 : 금융시장국 - 매출(자금결제, 입찰일 익일) :증권팀	첫째	월요일	182일물, 91일물
		수요일	2년물
	둘째	월요일	1년물, 91일물
	셋째	월요일	182일물, 91일물
		수요일	2년물
	넷째	월요일	1년물, 91일물
정례모집	넷째	수요일	2년물, 1년물
통화안정증권 원리금 상환	수시		
통화안정증권 중도환매	홀수월 첫째, 셋째 화요일에 실시		환매결제일은 환매입찰일+2일

주: 1) 매월말경 익월중 통화안정증권 발행계획을 미리 공고하며, 발행계획은 공개시장운영 여건 및 채권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제3절 통화안정증권의 발행가액 산정

1. 할인채

□ 만기별 발행할인율에 의해 매출일부터 만기일까지 기간(한편넣기)의 이자를 액면금액에서 차감하여 발행가액을 산정

2. 이표채

□ 발행일자에 매출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액면가로 발행되므로 발행가액은 액면가액과 동일

□ 통합발행되는 만기 1년물과 2년물 증권으로서 통합발행일 이후에 매출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발행일부터 매출일까지 기간(한편넣기)의 경과이자를 포함하여 발행가액 산정

ㅇ 발행일 이후 매출로 발생하는 경과이자는 통화안정증권매출경과료계정(기타유동부채)으로 회계처리하며, 동 이표채에 대한 최초 이자 지급시 이를 상계처리

< 참고 Ⅱ - 3> 통화안정증권 발행가액 산출식

□ 발행가액은 1백만원당 가액으로 산출하며, 산출 금액에서 원 미만은 버림

< 할인채 >

$$\text{발행가액} = \text{액면금액} \times \left(1 - r \times \frac{d}{365}\right) \quad [r\text{: 발행할인율,} \quad d\text{: 만기까지 남은 일수}]$$

< 이표채 >

$$\text{발행가액} = \left[\sum_{t=1}^{n} \frac{\text{액면금액} \times \frac{R}{m}}{\left(1+\frac{r}{m}\right)^{t-1}} + \frac{\text{액면금액}}{\left(1+\frac{r}{m}\right)^{n-1}}\right] \times \frac{1}{\left(1+\frac{r}{m}\right)^{\frac{d}{D}}}$$

*R: 표면금리, r: 발행수익률,

m: 연간 이자지급 횟수, n: 남은 이자지급 횟수,

d: 매출일 다음날부터 다음 이자지급기일까지의 일수,

D: 직전 이자지급기일(이자지급이 없는 경우 발행일) 다음날부터 다음 이자지급기일까지의 일수

제4절 통합발행

1. 통합발행 개요

□ 통합발행이란 일정기간 동안 추가로 발행하는 증권의 표면금리와 만기 등 발행조건을 일치시켜 발행하는 방식으로, 통화안정증권의 차환부담 경감 및 유동성 제고와 이를 통한 수요증대를 위해 2009년 6월부터 만기 2년물에 대하여, 2010년 6월부터는 만기 1년물에 대하여 통합발행을 실시

□ 통합발행기간은 2개월로 하며, 통합발행일은 1년 만기의 경우 홀수월 9일, 2년 만기의 경우 짝수월 2일이나 금융시장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 발행일을 조정 운용(「공개시장운영세칙」 제15조의2)

2. 표면금리 결정

□ 통합발행되는 통화안정증권의 표면금리는 통합발행기간 중 신규종목 발행시 입찰결과 낙찰금리를 표면금리로 사용

ㅇ 예를 들어, 2021년 2월 2일, 2년물 신규 입찰발행에 따른 낙찰금리가 0.870%이었으므로, 동 0.870%를 동일 조건으로 통합발행되는 2년물 통화안정증권의 표면금리로 사용

제5절 발행 종목명 표기

1. 종목명 표기

□ 통화안정증권의 종목명은 할인채는 “DC만기년-만기월일”, 이표채는 “표면금리-만기년월”로 표기

< 표 Ⅱ - 5 > 통화안정증권 발행 종목명 표기 방법

종목명	변경 전	변경 후(2017년 11월 이후)
할인채	DC만기년(2자리) - 만기월일(4자리) - 만기물(4자리) (예: DC17-0822-0140)	DC**0**만기년(2자리) - 만기월일(4자리) - 만기물(4자리) (예: DC**0**17-0822-0140)
이표채	표면금리(4자리) - 만기년월(4자리) - 만기물(4자리) (예: 0133-1810-0201)	표면금리[1](5자리) - 만기년월(4자리) - 만기물(4자리) (예: 0133**5**-1810-0201)

주: 1) 발행수익률 단위 세분화(0.01%에서 0.005%로 변경)로 자리수 증가

< 표 Ⅱ - 6 > 통화안정증권 발행수익률 단위 세분화 시행(2017.11.13)

□ 통화안정증권 발행·환매시 응찰 및 낙찰수익률 단위를 0.01%에서 0.005%로 변경

□ 이표채 종목명(표면금리-만기년월)의 표면금리 부분을 4자리에서 5자리로 변경

□ 다양한 응찰기회 제공을 위해 기관별 응찰개수를 4개에서 6개로 확대

2. 종목명 표기 사례

가. 이표채

□ 이표채 신규발행인 경우 표면금리를 ‘00000’으로 표기하여 종목명을 관리하고, 낙찰금리가 결정되면 이를 포함하여 종목명 부여

ㅇ 예를 들어, 2021년 2월 2일, 2년물 신규 발행과 관련하여 입찰결과 낙찰금리가 0.870%로 결정되면 해당 증권의 종목명을 낙찰 전과 낙찰 이후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부여

이표채 신규발행시 종목명 부여 사례

	낙찰 전	낙찰 이후
종목명	00000 - 2302- 0200	00870-2302-0200

□ 2021년 2월 18일, 위와 동일한 조건으로 2년 만기 2번째 발행, 표면금리 0.870%, 만기년월 2023년 2월인 이표채의 경우

→ 00870- 2302 - 0201

나. 할인채

□ 2021년 10월 5일 만기인 182일물 할인채 통화안정증권 발행의 경우

→ DC021 - 1005 - 1820

제3장 통화안정증권의 등록

제1절 등록의 의미

□ 통화안정증권의 등록발행은 증권현물을 교부하지 않고 증권등록부에 일정 내역을 기재 관리함으로써 현물을 소유하는 것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는 것으로, 현물소지에 따른 분실위험을 제거하고 현물관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등록발행된 통화안정증권은 필요에 따라 명의변경(양수도), 등록발행 후 현물발행으로의 전환(등록삭제), 현물발행 후 등록발행으로의 전환(등록전환) 등이 모두 가능

제2절 등록의 구분

1. 주등록

□ 소유권의 발생, 소멸 및 변경사항 등 등록증권의 소유권 자체에 대한 변경 상황을 증권등록부에 기재하는 것으로, 매수인이 통화안정증권 등록청구서에 의해 등록을 청구하며, 한국은행은 등록 후 매수인에게 통화안정증권 등록통지서를 교부

2. 부기등록

□ 소유권 자체는 변동 없이 주등록 금액의 범위내에서 질권, 전질 또는 기타 담보에 관한 등록과 말소상황, 신탁에 관한 등록과 말소상황을 등록부의 부기등록란에 기재

□ 부기등록 청구는 부기등록설정자(증권소유자) 및 부기등록권자(질권자)의 인감을 날인한 통화안정증권 부기등록(말소)청구서에 의해 청구하며, 부기등록 후 한국은행은 질권자 앞으로 통화안정증권 부기등록통지서를 교부

□ 한국은행은 부기등록권자로서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다시 금융중개지원대출 담보용(결제업무팀), 결제리스크 담보용(결제운영팀)으로 구분 가능

□ 부기등록의 해지는 부기등록설정자 및 부기등록권자의 인감을 날인한 부기등록(말소)청구서에 부기등록통지서를 첨부하여 청구

제3절 일괄등록제도

□ 한국은행은 통화안정증권의 등록기관으로서 통화안정증권 매수 금융기관 등 등록권자의 요청에 따라 한국은행이 관리하는 통화안정증권등록부에 해당 증권을 "한국예탁결제원" 명의로 일괄하여 등록[14]하는 한편 한국예탁결제원은 해당 증권을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에 전자등록하거나 고객관리계좌부에 기록하고 동 내용을 고객계좌를 개설한 계좌관리기관에 통지(계좌관리기관은 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

□ 한국예탁결제원은 거의 대부분 금융기관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및 고객관리계좌를 관리하고 이를 통해 예탁자(금융기관 등)간 증권대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일괄등록제도 하에서는 증권의 양수도가 한국예탁결제원에 개설된 계좌간 대체를 통해 이루어지게 됨

□ 현재 발행되고 있는 국고채권, 재정증권 및 통화안정증권은 한국은행이 관리하는 해당 등록부에 모두 한국예탁결제원 명의로 등록되어 관리되고 있음

ㅇ 이에 따라 통화안정증권 등에 대한 원금 및 이자 상환 등의 업무는 한국은행이 한국예탁결제원에 대금을 일괄하여 지급하고, 한국예탁결제원은 이를 예탁자별로 상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14)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72조(한국은행에 관한 특례)
① 한국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국채등"이라 한다)의 소유자가 되려는 자가 국채등의 발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가 되려는 자의 신청으로 이들을 갈음하여 전자등록기관을 명의인으로 하는 국채등의 등록(「국채법」, 「국고금 관리법」 또는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에 따른 등록을 말한다)을 할 수 있다.
1. 「국채법」에 따른 국고채권
2. 「국고금 관리법」에 따른 재정증권
3.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에 따른 통화안정증권

○ 한국예탁결제원이 예탁자를 대신하여 원리금수령을 수행하며 원리금은 지급일 당일 예탁자(금융기관 등)의 계좌로 자동 입고

<표 Ⅱ-7> 통화안정증권의 한국예탁결제원 명의 등록 추이[1)]

(조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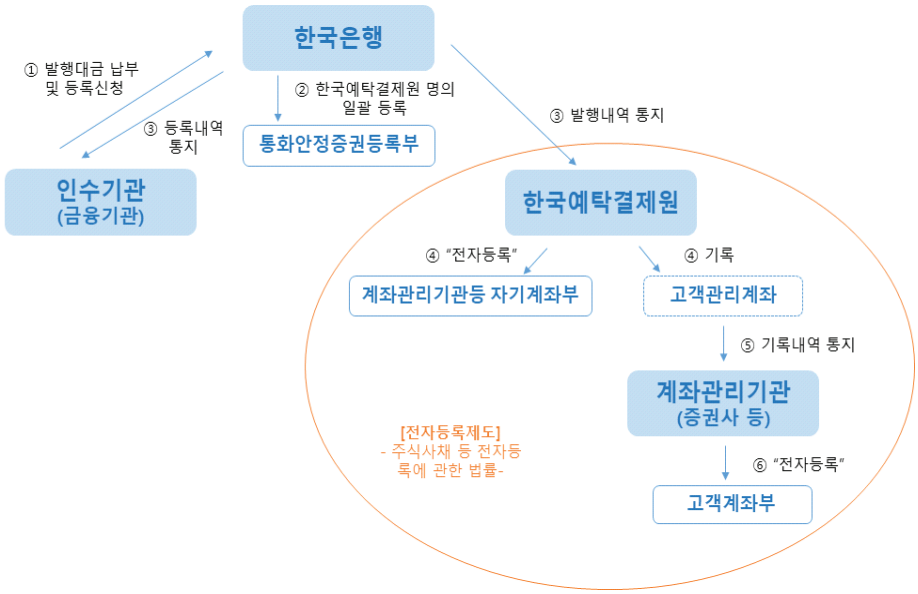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	2018	2019	2020	2021. 1~5
등록액	175.0	193.3	191.5	161.1	163.7	159.8	142.1	144.1	55.9
등록비율[2)]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 1) 기간 중 기준, 2) 등록액/총발행액

< 그림 Ⅱ - 1 >	통화안정증권 일괄 등록발행 절차

□ 통화안정증권 인수기관이 한은금융망(BOK-Wire+)을 통해 증권의 발행대금을 납부 및 등록 신청을 하면 한국은행의 통화안정증권 등록부에 해당 증권이 한국예탁결제원 명의로 기재되고, 거의 실시간으로 한국예탁결제원은 해당 증권을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에 전자등록하거나 고객관리계좌부에 기록하고 동 내용을 고객계좌를 개설한 계좌관리기관에 통지(계좌관리기관은 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

통화안정증권 일괄 등록발행 절차



□ 매수인의 통화안정증권 등록청구는 대금납부할 때 통화안정증권등록청구서를 제출하거나 한은금융망(BOK-Wire+)(일반적)을 통하여 한국은행에 청구하며, 한국은행은 등록 후 등록청구인 앞 통화안정증권등록통지서를 교부하나 한은금융망(BOK-Wire+)을 통한 경우에는 처리결과 통지 전문송신으로 갈음

□ 고객이 통화안정증권등록통지서, 부기등록통지서 및 일괄등록확인서 등의 서류를 발급 또는 재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화안정증권등록관련서류 발급청구서"에 의해 청구

제4절 등록변경 및 양수도 등록

1. 등록변경

□ 통화안정증권의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통화안정증권등록변경청구서"와 변경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한국은행에 제출

< 변경 사실 입증서류 >

ㅇ 자연인 개명시 : 개명 사실이 기재된 기본증명서(또는 주민등록초본), 인감신고서

ㅇ 법인명칭 변경시 : 변경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부초본, 인감신고서

ㅇ 주소 변경시 : 자연인인 경우 주민등록증(대조 후 반환),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초본

2. 양수도 등록

□ 증권의 양수도 등록이란 등록증권에 대한 권리 이전에 따라 등록명의인을 변경하는 것으로, 양도자의 주등록금액을 삭제하고 양수자 명의로 증권금액을 주등록하는 절차를 말하며, 등록통지서와 함께 "통화안정증권양수도청구서"에 의해 청구하거나 한은금융망(BOK-Wire+)을 통하여 전문송신으로 청구

□ 부기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의 양수도는 부기등록 금액을 제외한 등록잔액에 한하며, 양수도의 원인이 되는 증권매매의 대금결제는 양수도 당사자간에 별개 거래로 수행

제5절 증권의 등록전환, 등록삭제 및 현재액 증명

1. 등록전환

□ 등록전환이란 통화안정증권 현물발행분을 등록발행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기 발행된 현물과 함께 "통화안정증권등록청구서"에 의해 청구하며, 한국은행은 등록 후 청구자앞 등록통지서를 교부

2. 등록삭제

□ 등록삭제란 주등록부에 등록발행된 통화안정증권을 삭제하면서 이와 교환하여 현물을 발행하여 주는 것으로, 등록통지서와 함께 "통화안정증권등록삭제청구서"를 접수하여 현물 수령증을 받고 교부 발행하며, 부기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등록삭제는 부기등록 금액을 제외한 등록잔액에 한함

□ 한국은행은 등록통화안정증권을 상환 또는 환매(조기상환)할 경우 기명자의 등록통화안정증권상환(환매)청구서 또는 한은금융망(BOK-Wire+)을 통한 상환(환매)청구에 따라 등록을 삭제

3. 현재액 증명

□ 등록기명자에 한하여 서면("통화안정증권등록관련서류발급청구서") 또는 한은금융망(BOK-Wire+)을 통하여 "통화안정증권등록부현재액증명서"를 청구

<참고 Ⅱ-4> 증권·대금 동시결제(DVP, Delivery Versus Payment)

□ DVP란 한국예탁결제원의 예탁대상 유가증권(국채, 공채, 회사채, 특수채, 금융채 등)을 한은금융망(BOK-Wire+) 참가기관이 장외시장에서 거래하는 경우 한국은행과 한국예탁결제원의 시스템을 상호 연결하여 증권과 대금을 동시에 결제하는 시스템으로, 1999년 11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업무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음

1) 매수 및 매도기관이 한국예탁결제원 시스템을 통하여 매매자료를 입력

2) 한국예탁결제원은 매매자료의 일치여부 확인, 매도증권의 예탁여부 확인 및 증권처분 제한 후 한국은행앞 결제대금 이체의뢰 신청

3) 채권매수기관이 한국은행에 개설된 채권매도기관의 당좌계좌로 결제대금을 입금

4) 자금이체와 동시에 한국예탁결제원은 한국예탁결제원에 개설된 매도기관의 계좌에서 매수기관의 계좌로 계좌대체 처리

제4장 통화안정증권의 상환

제1절 개 요

□ 통화안정증권의 상환은 크게 이자상환, 만기상환, 중도환매(조기상환)로 구분 가능

□ 상환방식은 한은금융망(BOK-Wire+)을 통한 상환, 창구상환 및 어음교환을 통한 상환으로 구분 가능하나 현재는 이자상환 및 만기상환의 경우에는 예탁결제원과의 전문으로 상환이 이루어지며 중도환매는 낙찰기관이 한은금융망(BOK-Wire+)을 통해 상환신청을 하고 있음

ㅇ 창구상환의 경우 고객으로부터 통화안정증권 원리금지급청구서와 등록통지서 또는 현물을 접수하여 현금 지급 또는 한국은행에 개설된 금융기관의 당좌예금계정 입금 등의 방법으로 상환

ㅇ 어음교환을 통한 상환의 경우 통화안정증권 원리금지급청구서와 등록통지서(청구자의 사업자등록증 포함) 또는 현물을 어음교환시 회부받아 어음교환금액과 상환금액(원천징수액 차감 후 순지급액)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상환처리하며, 만약 어음교환금액과 상환금액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부도처리

□ 부기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원금 및 환매원금은 부기등록 해당액을 제외한 등록잔액에 한해 지급하고, 이자는 이자부분에 대해 부기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지급

제2절 이자상환 및 만기상환

□ 이표채 통화안정증권의 이자지급은 이자지급일에 한국은행이 관리하는 통화안정증권등록부에 등록된 명의인(예: 한국예탁결제원)이 한은금융망(BOK-Wire+)을 통해 이자지급을 청구하면, 한국은행은 한국은행에 개설된 명의인 당좌예금 계정(한국예탁결제원)에 해당 이자를 입금하여 상환

□ 통화안정증권의 만기상환은 통화안정증권의 만기일에 한국은행이 관리하는 통화안정증권등록부에 등록된 명의인(예: 한국예탁결제원)이 한은금융망(BOK-Wire+)을 통해 원리금 지급을 청구하면, 한국은행은 한국은행에 개설된 명의인 당좌예금 계정(한국예탁결제원)에 해당 원리금을 입금하여 상환

ㅇ 할인채의 경우 액면금액을 상환

ㅇ 이표채의 경우 액면금액과 함께 최종 지급기의 이자를 함께 상환

제3절 중도환매(조기상환)

□ 통화안정증권 통합발행으로 인한 만기집중을 완화하고 유동성을 제고하기 위해 1년물 및 2년물 통화안정증권을 대상으로 만기에 앞서 일부 환매

ㅇ 통화안정증권 2년물 중에서는 잔존만기가 9개월, 7개월, 5개월인 종목을 대상으로, 1년물 중에서는 잔존만기가 4개월인 종목을 대상으로 매 홀수월 첫 번째 및 세 번째 화요일에 입찰을 실시하고, 자금결제 및 채권양수도는 입찰일 이후 2번째 영업일에 이루어짐

□ 한국예탁결제원 명의로 등록된 증권을 중도환매(조기상환)할 경우 낙찰기관은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등록부상 명의를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낙찰기관 명의로 변경해줄 것을 한국예탁결제원(e-SAFE) 앞 요청

ㅇ 한국예탁결제원은 이를 근거로 한은금융망(BOK-Wire+)을 통하여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등록부상 명의를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낙찰기관 명의로 양수도 변경을 요청

□ 통화안정증권등록부에서 해당 증권을 삭제함과 동시에 해당 대금을 낙찰기관 당좌예금 계정에 입금함으로써 증권 상환을 종료

< 참고 Ⅱ - 5 >	통화안정증권의 소멸시효

□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제6조(소멸시효)에 따라 통화안정증권의 소멸시효*는 만기상환일이 지난 날로부터 3년

* 권리의 행사를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사하지 아니할 경우 동 권리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효과를 발생케 하는 제도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기산. 「민법」상 일반채권의 소멸시효는 원금 10년, 이자 3년임

<참고 Ⅱ-6> 통화안정증권의 멸실 또는 분실 증권의 상환

□ 통화안정증권이 멸실 또는 분실되었을 경우 고객으로부터 통화안정증권 멸실(분실)신고서를 접수

□ 멸실 또는 분실한 통화안정증권의 원리금 지급의 경우 고객으로부터 제권판결*문 정본(정본을 제출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등본으로 한다)과 함께 "통화안정증권원리금지급청구서"를 접수

* 제권판결(除權判決)이란 공시최고절차(「민사소송법」 제475조~제497조)를 거쳐 어음·수표의 실권을 선고하고 신청인에게 자격을 회복시켜 주는 판결을 말하는데 지시증권이나 무기명증권을 도난당했거나 분실 또는 멸실된 경우에 공시최고의 절차를 거쳐 증권의 실효를 선고하는 것이 일반적임

제5장 발행 및 상환의 회계처리

제1절 통화안정증권 발행 및 상환 회계처리 개요

□ 통화안정증권 발행시 통화안정증권발행계정(유동부채) 대변에 액면가액으로 기록하며, 원금상환시에는 액면가액으로 차변에 기록

□ 이자상환은 이표채의 경우 이자지급시에 표면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자비용으로 처리하며, 할인채의 경우에는 발행시에 액면가액과 발행가액의 차이를 이자비용으로 처리

ㅇ 결산시에는 발생주의에 따른 이자비용 인식을 위해 이표채의 경우 발행일 또는 직전 이자지급일로부터 결산일까지의 경과기간에 해당하는 이자에 대해서 비용(통화안정증권이자)으로 처리함과 동시에 미지급비용(유동부채)으로 계상하며, 할인채의 경우에는 반대로 결산일로부터 익년도 최초 이자지급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를 비용에서 차감(선급비용환입)함과 동시에 선급비용(유동자산)으로 계상

ㅇ 다음 회계연도 개시일에는 재수정분개를 통해서 미지급비용은 미지급비용환입계정(수익)으로 대체하여 제거하고, 선급비용은 통화안정증권이자(비용)로 가산하여 제거

< 표 Ⅱ - 8 > **통화안정증권 발행 및 상환 회계처리**

		차 변		대 변	
발행	이표채	원화본지점(대금납입액)	XXX	통화안정증권발행	XXX
	할인채	원화본지점(대금납입액) 통화안정증권이자	XXX XXX	통화안정증권발행	XXX
이자 지급	이표채	통화안정증권이자	XXX	원화본지점(지급액)	XXX
결산	이표채	통화안정증권이자	XXX	미지급비용	XXX
	할인채	선급비용	XXX	선급비용환입[1]	XXX
익년도 개시일	이표채	미지급비용	XXX	미지급비용환입[2]	XXX
	할인채	통화안정증권이자	XXX	선급비용	XXX
만기 상환	이표채	통화안정증권발행 통화안정증권이자	XXX XXX	원화본지점(지급액)	XXX
	할인채	통화안정증권발행	XXX	원화본지점(지급액)	XXX

주 : 1) 발행시 계상한 통화안정증권이자(비용)에서 차감
2) 익년도 최초 이자지급시 통화안정증권이자(비용)에서 차감

제2절 통합발행에 따른 회계처리

1. 할인(할증)차금 및 차금상각

□ 할인(할증)차금은 통합발행(매출) 시 ① 발행일과 실제 매출일은 다르고, 표면금리와 낙찰수익률이 같을 때 ② 발행일과 실제 매출일, 표면금리와 낙찰수익률이 다를 때 발생하며, 동 기간 중 시장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격 차이를 할인(할증)차금으로 인식하여 회계처리

ㅇ 매출가액이 액면금액보다 크면 할증액(할증차금)으로, 그 반대의 경우 할인액(할인차금)으로 회계처리

ㅇ 매출가액 = 액면가액 + 할증차금(또는 - 할인차금)

□ 할인(할증)차금은 증권의 상환기간에 걸쳐 상각·배분하여 손익계산서상 이자비용에 가감하여 회계처리하고, 동 상각액만큼 대차대조표 계정과목인 할인(할증)차금에서 차감

ㅇ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유효이자액(장부금액 × 유효이자율)을 산출한 후, 동 유효이자액과 액면이자액(액면금액 × 이표 금리)의 차액을 상각액으로 계상

<참고 Ⅱ-7> 유효이자율 산출

□ 유효이자율이란 채권매출가액(현금 유입액)과 당해채권을 통해 상환기간 동안 기대되는 현금 유출액의 현재가치를 일치시켜주는 이자율로 다음 산식을 만족시키는 이자율(r)

□ 채권의 매출가액 = 매기 이자지급액의 현재가치 + 만기상환액의 현재가치

$$= \sum_{t=1}^{n} \frac{I_t}{(1+r)^t} + \frac{P}{(1+r)^n}$$

* P: 채권의 액면가액, r: 유효이자율, n: 채권의 상환기간,
I: 매기의 채권 이자지급액, t: 매 이자지급기간

2. 매출경과료(기타유동부채)

□ 매출경과료(기타유동부채)는 발행일 또는 직전 이자지급일로부터 매출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한 이자로, 이를 매출일자에 매출경과료라는 경과계정(기타유동부채)에 회계처리(대변)하고 매출한 후 첫 이자지급일에는 동 매출경과료를 반대 변(즉 차변)으로 회계처리함으로써 해당 증권 이자(통화안정증권이자-통안증권이표채이자)에서 차감

<참고 Ⅱ-8> 매출경과료 산출

□ 매출경과료란 발행일 또는 직전 이자지급일이 매출일과 상이하여 발생하며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

□ 매출경과료 $= P \times i/4 \times d/D$

* P: 채권의 액면가액, i: 이표이자율,
d: 발행일 또는 이자지급일과 매출일간의 차이 일수(한편넣기로 산출),
D: 매출일이 속한 이자지급기의 전체 일수

3. 이자지급기별 회계처리

가. 할인(할증)차금 계산

□ 매출일(대금결제일)에 통화안정증권 대금납입액에서 통화안정증권 발행액면과 매출경과료를 차감하여 동 금액이 “0” 보다 큰 경우에는 “통화안정증권발행 할증차금”으로, “0” 보다 작은 경우에는 “통화안정증권발행 할인차금”으로 회계처리

ㅇ 할증차금 ⇒ (통안증권 대금납입액 – 통안증권발행액(액면) – 통안증권매출경과료) > 0

ㅇ 할인차금 ⇒ (통안증권 대금납입액 – 통안증권발행액(액면) – 통안증권매출경과료) < 0

나. 할인(할증)차금 상각액 계산

□ 장부가격 = 액면금액 – 통안증권발행할인차금(또는 + 통안증권발행할증차금)

□ 이자지급기별 할인(할증)차금 상각액
= 유효이자 – (표면이자율에 의한 액면이자 – 매출경과료)

ㅇ 유효이자 및 통안증권 액면이자는 원 미만 절사

□ 유효이자 = 상각 전 장부가격 × 이자지급기별 유효이자율(연 유효이자율/4)

ㅇ 상각액은 이자지급기간을 단위로 계산하며 동 기간 중 일부에 해당하는 상각액은 단위 상각액에 경과일수를 적용하여 안분

ㅇ 매출일의 유효이자율은 유효이자율 산식에 의하여 산출하되 백분율 기준 소수점 열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사용하고, 자릿수 조정으로 인한 상각차액은 만기 상각액에 가감

○ 유효이자율 계산시 이자지급기 단위 미만의 단수기간에 대해서는 단리할인(관행적) 방식 적용

□ 할인(할증)차금상각 테이블은 통화안정증권 종목별로 작성

다. 할인(할증)차금 상각액 인식 시점

□ 상각액은 결산 및 중도환매 또는 만기지급시 회계상 반영

□ 결산시 상각액은 일중거래가 아닌 손익보정거래로 분류(손익보정절차에 포함)하여 계상하고, 반기 및 임시 결산시에는 회계상으로 실제 반영되지 않더라도 당해 결산 결과에 반영됨

라. 중도환매(조기상환)시 할인(할증)차금 상각

□ 통화안정증권 일부를 중도환매(조기상환)하는 경우 환매금액(액면)에 해당하는 할인(할증)차금 상각액 및 미상각잔액은 전체 할인(할증)차금 미상각잔액 및 상각액에 통화안정증권 발행금액 액면잔액 대비 환매대상 액면금액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

마. 계정과목 및 재무제표 표기

□ 할인(할증)차금은 "통화안정증권발행 할인(할증)차금" 계정으로 통화안정증권의 액면금액과 구분하여 계상하고 대차대조표상 "통화안정증권발행" 계정의 가감항목으로 표시

□ 할인(할증)차금 상각은 손익계산서 "통화안정증권이자(통안증권이표채이자)" 계정으로 처리

< 표 Ⅱ - 9 > **통합발행에 따른 할인·할증차금 회계처리**

		차 변		대 변	
발행	할인 발행	원화본지점(대금납입액)	XXX	통화안정증권발행	XXX
		통화안정증권발행 할인차금	XXX	매출경과료	XXX
	할증 발행	원화본지점(대금납입액)	XXX	통화안정증권발행	XXX
				매출경과료	XXX
				통화안정증권발행 할증차금	XXX
이자 지급	최초 이자	통화안정증권이자	XXX	원화본지점(지급액)	XXX
		매출경과료	XXX		
	최초 이후	통화안정증권이자	XXX	원화본지점(지급액)	XXX
결산	할인 발행	통화안정증권이자	XXX	**미지급비용**	**XXX**
		통화안정증권이자 (할인차금상각)	XXX	통화안정증권발행 할인차금	XXX
	할증 발행	통화안정증권이자	XXX	**미지급비용**	**XXX**
		통화안정증권발행 할증차금	XXX	통화안정증권이자 (할증차금상각)	XXX
익년도 개시일	-	**미지급비용**	**XXX**	미지급비용환입	XXX
만기 상환	할인 발행	통화안정증권발행	XXX	원화본지점(지급액)	XXX
		통화안정증권이자	XXX		
		통화안정증권이자 (할인차금상각)	XXX	통화안정증권발행 할인차금	XXX
	할증 발행	통화안정증권발행	XXX	원화본지점(지급액)	XXX
		통화안정증권이자	XXX		
		통화안정증권발행 할증차금	XXX	통화안정증권이자 (할증차금상각)	XXX

제3절 중도환매(조기상환) 회계처리

□ 통화안정증권의 중도환매(조기상환) 회계처리는 환매수익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환매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최초 발행가액과 환매시점에서의 환매수익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사이에 발생한 차액을 통화안정증권상환손익으로 회계처리

ㅇ 「기업회계기준」[15]에서는 자기발행 채권을 취득한 경우 타사발행 채권과 구분하여 별도로 상환손익계정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한국은행은 1999년 1월 통화안정증권상환손익계정을 신설

15) 「기업회계기준」 실6.15 자기사채를 취득한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액면금액과 사채발행차금 등을 당해 계정과목에서 직접 차감하고, 장부금액과 취득대가의 차이는 사채상환이익 또는 사채상환손실의 과목으로 하여 당기손익으로 처리한다.

<참고 Ⅱ-9> 통화안정증권 종류별 환매가액 산정

□ 통화안정증권의 환매가액은 1백만원 단위로 계산하며, 원 미만은 버림

□ 할인채 : 액면금액/$(1+r)^{\frac{d}{365}}$

* r: 환매수익률, d: 만기까지 남은 일수

□ 이표채 : $\left[\sum_{t=1}^{n}\frac{\text{액면금액}\times\frac{R}{m}}{(1+\frac{r}{m})^{t-1}}+\frac{\text{액면금액}}{(1+\frac{r}{m})^{n-1}}\right]\times\frac{1}{(1+\frac{r}{m})^{\frac{d}{D}}}$

* R: 표면금리, r: 환매수익률,
m: 연간 이자지급 횟수, n: 남은 이자지급 횟수,
d: 환매일 다음날부터 다음 이자지급기일까지의 일수,
D: 직전 이자지급기일(이자지급이 없는 경우 발행일) 다음날부터 다음 이자지급 기일까지의 일수

제3-1절 이표채(통합발행) 중도환매 회계처리

□ 결산일 또는 직전 이자지급일로부터 환매일까지 경과기간에 대하여 이자비용(통화안정증권이자)으로 계상하는 한편, 결산일로부터 환매일까지 경과기간에 대해서 할인(할증)차금으로 상각처리하고 비용에서 가감

□ 환매가액이 액면가액과 통화안정증권이자의 합계보다 클 경우 해당 차액을 통화안정증권상환손(비용)으로 계상하고, 작을 경우 통화안정증권상환익(수익)으로 계상

□ 한편 통화안정증권 보유자의 보유기간에 해당하는 이자수익에 대해서는 원천징수하고 가수금 계정에 계상

ㅇ 원천과세금 : 보유기간이자(중도환매일-채권보유기간시작일) ×14% (10원미만 절사)

ㅇ 특별과세금 : 원천과세금 ×10% (10원미만 절사)

< 표 Ⅱ - 10 > 이표채(통합발행) 중도환매 회계처리 예시

		차 변		대 변	
할인발행	상환익	통화안정증권발행	XXX	원화본지점(지급액)	XXX
		통화안정증권이자	XXX	가수금-원천과세금	XXX
				가수금-특별과세금	XXX
		통화안정증권이자 (할인차금상각)	XXX	통화안정증권발행 할인차금	XXX
				통화안정증권상환익	XXX
	상환손	통화안정증권발행	XXX	원화본지점(지급액)	XXX
		통화안정증권이자	XXX	가수금-원천과세금	XXX
				가수금-특별과세금	XXX
		통화안정증권이자 (할인차금상각)	XXX	통화안정증권발행 할인차금	XXX
		통화안정증권상환손	XXX		
할증발행	상환익	통화안정증권발행	XXX	원화본지점(지급액)	XXX
		통화안정증권이자	XXX	가수금-원천과세금	XXX
				가수금-특별과세금	XXX
		통화안정증권발행 할증차금	XXX	통화안정증권이자 (할증차금상각)	XXX
				통화안정증권상환익	XXX
	상환손	통화안정증권발행	XXX	원화본지점(지급액)	XXX
		통화안정증권이자	XXX	가수금-원천과세금	XXX
				가수금-특별과세금	XXX
		통화안정증권발행 할증차금	XXX	통화안정증권이자 (할증차금상각)	XXX
		통화안정증권상환손	XXX		

제3-2절 할인채 중도환매 회계처리

□ 액면금액과 환매가액의 차액 중 환매일 이후 만기일까지의 잔존기간에 대하여 발행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미경과이자에 대하여는 통화안정증권환매이자*로 계상하고 잔여액은 통화안정증권상환손익 계정으로 회계처리

* 환매일 이후 만기일까지 잔존기간 동안의 이자로서 매출시 기 지급된 만기일까지의 할인료를 환입하는 항목

○ 통화안정증권 상환손익＝액면금액－통화안정증권환매이자－환매가액

— 통화안정증권환매이자 = 만기상환시 할인료 － 경과이자

— 경과이자 = 할인료 × 경과일수*/증권기간

* 매출일로부터 환매일까지의 일수(한편넣기)

<표 Ⅱ-11> 할인채 중도환매 회계처리 예시

	차 변		대 변	
상환익	통화안정증권발행	XXX	원화본지점(지급액)	XXX
			통화안정증권환매이자	XXX
			통화안정증권상환익	XXX
			가수금-원천과세금	XXX
			가수금-특별과세금	XXX
상환손	통화안정증권발행	XXX	원화본지점(지급액)	XXX
	통화안정증권상환손	XXX	통화안정증권환매이자	XXX
			가수금-원천과세금	XXX
			가수금-특별과세금	XXX

Ⅲ. 국공채 매매 및 대차 업무

제1장 업무 개요

제2장 환매조건부채권(RP) 매매

제3장 증권 단순매매

제4장 증권대차

제1장 업무 개요

□ 한국은행은「한국은행법」제68조[16]에 따라 시중 유동성을 조절하기 위해 공개시장에서 국공채를 매매

제1절 매매의 종류

□ 국공채 매매는 단순매매와 환매조건부채권(RP) 매매로 구분되며, 한국은행과 국공채매매가 가능한 기관은 '공개시장운영 거래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으로 제한

ㅇ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은「은행법」에 따른 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및 한국수출입은행,「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자금중개회사 및 한국거래소,「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기금 중에서 매년 한국은행총재가 선정

ㅇ 현재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은 RP매매 대상기관, 통화안정증권 경쟁입찰·모집 및 단순매매 대상기관, 증권대차기관으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음

---

16)「한국은행법」제68조(공개시장 조작) ①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기계산으로 다음 각 호의 증권을 공개시장에서 매매하거나 대차할 수 있다.
1. 국채(國債)
2. 원리금 상환을 정부가 보증한 유가증권
3. 그 밖에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한 유가증권

② 제1항 각 호의 유가증권은 자유롭게 유통되고 발행조건이 완전히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표 Ⅲ-1 >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 현황(2021년 5월말 현재)

(개)

구 분	은행	비은행	합 계
RP 매매	18	9	27
통화안정증권 경쟁입찰·모집 및 단순매매	7	13	20
증권대차	5	4	9

제2절 매매 대상증권

□ 매매거래 대상채권은 국채, 정부보증채, 통화안정증권,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하는 주택저당증권으로 제한(「공개시장운영규정」 제4조)되며, 통화안정증권은 한국은행이 발행한 채무증서이므로 RP매입 대상증권에는 포함되나 RP매각 또는 단순매입 대상증권에서는 제외

□ 국공채 매매업무는 한국은행 본부에서만 수행하는데 금융시장국은 매매형태, 종목, 물량, 금리 등 매매조건의 결정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여, 국고증권실은 증권매매와 관련된 자금결제, 증권 인수 및 인도, 이자수취 및 지급, 회계처리 등의 업무를 담당

제2장 환매조건부채권(RP) 매매

□ 환매조건부채권(RP, Repurchase Agreement) 매매란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당해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동일 채권을 미리 정한 가격으로 다시 매수하거나 당해 거래상대방에게 매각하는 조건으로 채권을 매매하는 거래

<표 Ⅲ-2> 환매조건부채권 매매 업무 주기

업 무 명	주 기	비 고
환매조건부채권 매각	매주 목요일	
환매조건부채권 매입	비정기	
환매조건부채권 잔액대사	매일 오전	환매조건부채권 매매거래가 있는 경우 매매거래 완료 후 대사

제1절 매매방식 및 조건

1. 매매방식

□ 매매방식은 공모방식에 의한 매매와 상대매매가 있으며 공모방식에 의한 매매는 한은금융망(BOK-Wire+)을 통해 전자입찰방식으로 실시되는 경쟁입찰과 모집으로 구분

ㅇ 상대매매는 금융시장의 안정 또는 통화신용정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이 아닌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금리는 공모방식으로 매매할 때와 다르게 적용 가능

□ 매매대상 증권은 국채, 정부보증채, 통화안정증권, 주택금융공사 MBS이며 거래대상기관은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 대부분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

□ 한국은행은 RP매매시에 적용하는 금리를 2008년 3월 7일부터 「콜금리(무담보 익일물 기준) 목표금리」에서 「한국은행 기준금리」로 변경하였으며, 7일물 정례 RP매각시에는 금융통화위원회가 결정하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고정입찰금리로, 7일물 RP매입시에는 기준금리를 최저입찰금리로 적용

2. 매매조건

□ RP매각은 단기 유동성 조절을 위하여 7일물(매주 목요일 정례적으로 실시*)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RP거래의 최장 매매기간은 91일로 제한(「공개시장운영규정」 제6조 제1항 제3호)

* 금융통화위원회의 정책금리 결정일이 목요일이 아닌 경우에는 일자와 만기 조정

□ 체결된 RP매매 계약은 만기가 도래하기 이전이라도 매매 쌍방이 합의하거나 한국은행의 통지로 중도해지 가능(「공개시장운영세칙」 제11조)

○ 환매가격 = 매매가격 + (매매가격 × 매매금리 × 보유일수 / 365)

○ 중도환매가격 = 매매가격 + (처음환매가격 - 매매가격)

$$\times \left(\frac{\text{매매일로부터 중도해지일까지의 경과 일수}}{\text{매매일로부터 처음 환매일까지의 일수}}\right)$$

□ 만기환매는 지정된 환매일에 이루어지며, 만기환매이자는 환매일에 지급

< 표 Ⅲ - 3 >	한국은행의 RP제도 변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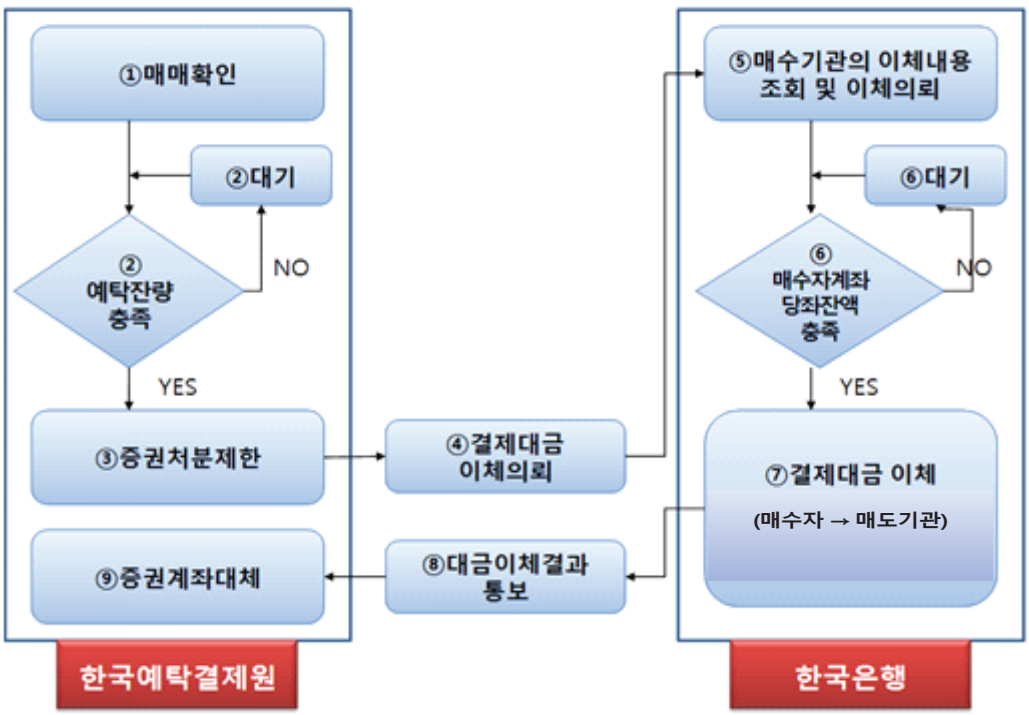
시행연월	내 용
1969년 2월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RP매입 업무 시행
1977년 4월	거래대상기관 범위 확대(은행에서 단자회사와 증권회사 등)
1993년 3월	RP매매 방식을 경쟁입찰방식으로 변경
1997년 8월	경쟁입찰방식을 한은금융망(BOK-Wire+)을 통한 전자방식으로 변경
1999년 10월	기관간 환매조건부채권매매 약관 제정
1999년 11월	증권예탁결제원(현 한국예탁결제원)이 Triparty Repo 서비스 개시
2002년 2월	한국증권거래소(현 한국거래소)에 RP거래 장내시장 개설
2005년 7월	금융기관간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면제, 종전 의제원천징수제도가 폐지되고 보유기간과세제도로 변경
2006년 1월	금융기관의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재개
2006년 4월	「통합도산법」 시행으로 RP거래가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 대상에서 제외되고, 한국은행 RP 거래방식이 담보부 자금대차에서 소유권이전부 채권매매로 변경
2008년 3월	금융통화위원회는 정책금리를 익일물 콜금리에서 7일물 RP금리로 변경하고 공개시장운영 시기를 원칙적으로 매주 목요일 1회로 정례화
2008년 6월	금융기관간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면제
2008년 10월	기관간 환매조건부채권매매 약관 개정 - 채권평가사 평가가격을 기초로 증권사가 유가증권의 가격을 산정하였으나 이를 당사자간 합의한 방법으로 산정하도록 변경 - 매입유가증권 처분제한 근거 삭제 등
2011년 12월	일중 환매조건부 증권매매 제도 도입
2012년 3월	환매조건부 증권매도 만기 확대(7일→7일, 14일, 21일)
2014년 6월	한국주택금융공사 발행 주택저당증권을 환매조건부매매 대상증권에 포함
2015년 1월	RP매입시 대상증권 증거금률을 잔존만기별로 차등화
2020년 4월	RP매매 대상증권에 특수은행채, 은행채 및 공공기관(9개) 발행채권을 한시적으로 포함
2021년 4월	RP매매 대상증권 확대 조치 종료(2020년 4월 이전으로 환원)

제2절 채권의 양수도 및 원천징수

1. 채권의 양수도

□ RP매매시 채권의 양수도 및 대금 결제는 한은금융망(BOK-Wire+)과 한국예탁결제원 증권결제시스템(e-SAFE)간 증권대금동시결제(DVP: Delivery versus Payment) 방법으로 이루어지며, RP매매가격과 환매가격과의 차액인 이자분에 대해서는 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17]

< 그림 Ⅲ-1 > 증권대금동시결제(DVP) 흐름도



17) 「법인세법」 제73조 제1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1항

① 증권거래 쌍방이 거래내역 및 결제방법 등 매매내역을 한국예탁결제원 시스템을 통해 확인, 한국예탁결제원은 통보받은 내역의 일치 여부를 확인

② 한국예탁결제원은 매도기관의 예탁계좌에 매도증권의 예탁 여부 및 예탁잔량 충족 여부 확인, 부족시 충족될 때까지 대기

③ 예탁증권잔량이 충분하면 처분을 제한

④ 매수기관앞 결제대금 이체의뢰

⑤ 증권매수기관은 한국예탁결제원의 결제대금이체의뢰 내역을 조회하여 확인한 후 한국은행에 개설된 매도기관 당좌예금계좌로 결제대금의 이체를 의뢰

⑥ 증권매수기관의 당좌예금잔액이 충분하면 매수기관의 당좌예금 차기 → 매도기관의 당좌예금 입금

⑧ 한국예탁결제원앞 대금이체 완료를 통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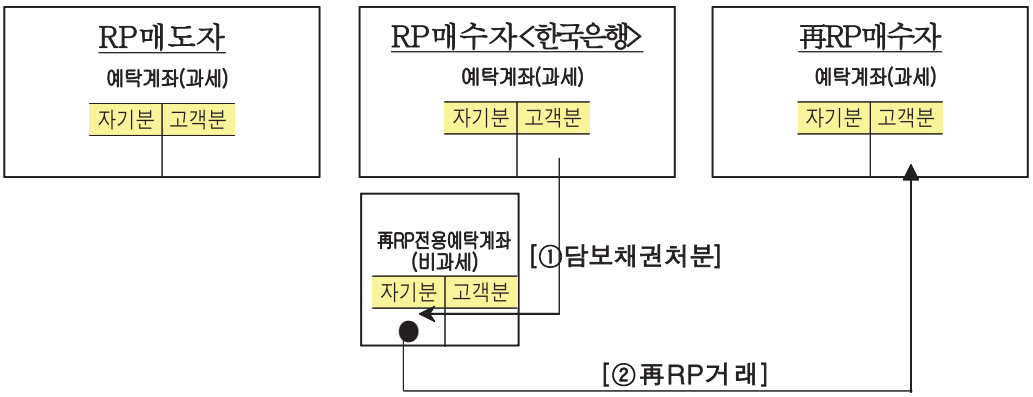
⑨ 한국예탁결제원은 매도자의 증권예탁계좌에서 매수자의 증권예탁계좌로 증권 대체 처리

2. 비과세 계좌 신설을 통한 관리

□ 한국은행은 2010년 1월 금융기관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제도가 부활됨에 따라 한국은행 소유유가증권이 아닌 RP매입채권을 이용하여 RP매각(再RP)시 RP매입증권의 이자소득이 지급되는 경우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가 발생함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RP매입채권 관리를 위한 전용계좌를 비과세 계좌로 신설하고 동 계좌를 통해 관리되는 RP거래에 대해서는 원천징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치

ㅇ 이에 따라 RP거래는 그 성격에 따라 한국은행 소유채권 관리계좌와 비과세 RP매입증권 관리계좌로 각각 구분되어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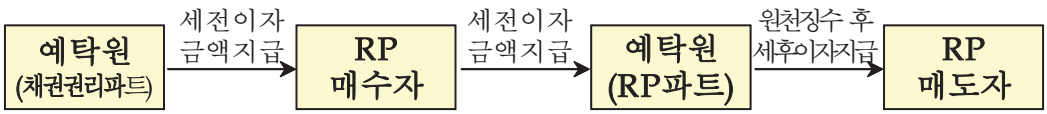
< 그림 Ⅲ-2 > 再RP거래와 이자지급 프로세스 흐름도



<이자지급처리>

① (再RP거래) 담보채권이 再RP매수자의 RP계좌에 보관되어 있으므로 한국예탁결제원(채권권리파트)은 RP매수자를 수익자로 확정하여 이자를 지급 → 비과세계좌로 등록되어 있으므로 RP매수자에 대한 원천징수가 일어나지 않음

② (原RP거래) RP매수자는 지급받은 이자를 한국예탁결제원(RP파트)에 지급하고 예탁원(RP파트)은 이를 매도자에게 다시 지급 → RP매도자의 예탁계좌가 과세계좌이므로 원천징수가 이루어짐



제3절 RP매매방식 변경

□ 한국은행의 유동성 조절을 위한 금융기관과의 RP매매방식이 2006년 4월부터 담보부 자금대차 방식에서 채권매매 방식으로 변경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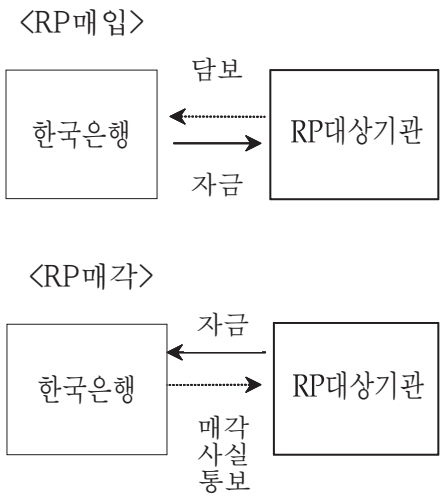
ㅇ 한국은행이 2006년 3월까지 담보부 자금대차 방식을 채택한 것은 채권매매 방식 RP매매의 경우 도산관련법상 거래상대방 도산 등 결제불이행 사태 발생시 채권소멸 행위에 대한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 가능성 등으로 인해 채권 회수에 불확실성이 있었기 때문임

○ 그러나 2006년 4월부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위와 같은 법적 문제점이 해소*됨에 따라 금융기관과의 RP매매 방식을 국제 표준의 채권매매 방식으로 변경

* 파산관재인의 RP매매 관련 부인권 및 선택권을 배제

< 그림 Ⅲ-3 > RP매매 방식 변경

담보부 자금대차 RP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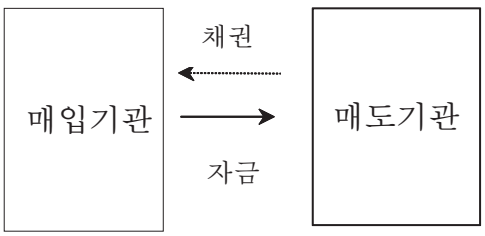
* 한국은행은 환매조건부 매매원장에 매매사실을 기입하고, 환매조건부 매매증명서를 금융기관에게 교부. 금융기관은 한국은행이 매각한 채권에 대해 별도로 질권을 설정하는 절차를 취하지 않음

⇩

자금대차

(채권 소유권 불변)

채권매매 RP방식



⇩

자금대차 + 채권이전

(채권 소유권 이전)

< 표 Ⅲ - 4 > RP거래의 회계처리

		차 변		대 변	
매각	매각	현 금	XXX	환매조건부매각증권	XXX
	환매 (還買)	환매조건부매각증권 환매조건부매각증권이자	XXX XXX	현 금	XXX
매입	매입	환매조건부매입증권	XXX	현 금	XXX
	환매 (還賣)	현 금	XXX	환매조건부매입증권 환매조건부매입증권이자	XXX XXX

제4절 증거금률 및 수수료

1. 증거금률

□ 채권매매 방식에서는 RP매매 채권의 소유권 이전에 따라 동 채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결제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증거금률을 설정하여 대상기관에 대해 증거금 유지 의무를 부과

ㅇ 증거금률은 RP매매 체결일의 매매유가증권의 시장가격을 매매가로 나누어 산출된 비율을 말하며 RP매각일 경우 100%, RP매입일 경우에는 100% 이상으로 하되 한국은행 총재가 대상증권 및 잔존만기별로 결정

ㅇ 매매유가증권의 시장가격은 민간 채권평가회사 3개사(한국.KIS.NICE 채권평가)의 전일자 평가가격을 단순 산술평균하여 산출

□ RP기간 중 매매채권의 일일 시가평가 결과에 따라 추가증거금을 한국은행 RP 대상채권 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나, 채권가격 변동에 따른 빈번한 증거금 납부를 줄이기 위해 평가차손이 기준증거금의 2% 범위내인 경우 추가증거금 납부는 면제되며 한국은행의 경우 결제불이행 상황을 상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증거금 유지의무가 면제

가. RP매입시

□ RP매입시에는 대상기관 결제불이행 또는 파산 등 문제 발생으로 인한 채권 처분 가능성을 감안하여 증거금률을 100% 이상으로 대상증권 및 잔존만기별로 다르게 적용하고 있으며, RP기간 중 채권의 시장가치가 필요담보가치를 하회하는 경우 대상기관은 추가증거금을 납부

ㅇ 채권가격 하락→[채권가격 평가비율* 〈증거금률]→margin call→추가증거금 납부

* 채권 시장가격 / (매입가 + RP이자 발생분)

나. RP매각시

□ RP매각시 한국은행은 결제불이행 위험이 없으므로 보유채권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증거금률을 100%로 적용하며 대상기관은 RP기간 중 채권의 시장가치가 필요담보가치를 상회하는 경우 추가증거금을 납부

ㅇ 채권가격 상승→[채권가격 평가비율〉증거금률]→margin call →추가증거금 납부

□ 이와 함께 한국은행 및 금융기관의 업무부담 경감, 채권매매에 따른 거래편의 등을 위해 한국예탁결제원을 매개로 한 3자간 RP(tri-party RP)거래 시스템을 운용

ㅇ 한국예탁결제원은 대상채권의 보관·관리, 채권의 평가, 일일정산, 증거금 관리, 세금 처리 등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한국은행은 이러한 서비스 이용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

2. RP매매 수수료

□ RP거래 관련 한국예탁결제원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수수료는 한국은행과 한국예탁결제원간 약정에 따라, 업무개시(2006년 4월) 후 1년간 한시적으로 면제되었으나 2007년 4월분부터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음

ㅇ 수수료는 2008년 12월 1일 거래잔액분부터 환매조건부매매 건별 매일의 매입가액에 대하여 1억원당 2원*으로 변경

* 한국예탁결제원의 「증권등의담보관리에관한규정」 제91조(수수료)

제5절 유가증권의 대체 및 교환

1. 유가증권의 대체

□ RP매도자는 RP매입자에게 매도자가 교부한 유가증권을 한국은행의「공개시장운영규정」제4조 및 동「세칙」제9조에서 정한 대상증권에 포함된 다른 유가증권으로 대체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매입자는 매도자의 이러한 대체 요청에 따라 매입유가증권을 대체함에 동의 가능

ㅇ 매도자로부터 매입자에게 대체 교부되는 유가증권의 시장가격은 대체 전 매입유가증권의 시장가격 이상이어야 하며, 매입유가증권 대체시 매도자는 신규로 대체하는 유가증권을 먼저 교부한 후 매입자로부터 기존 매입유가증권을 반환받음

2. 유가증권의 교환

□ 한국은행은 RP매입한 유가증권의 발행인(보증채권의 경우 보증기관을 포함)에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그 밖에 매입유가증권을 교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공개시장운영규정」제4조 및 동「세칙」제9조에서 정한 대상증권 중 다른 유가증권으로 교환하여 교부할 것을 요구 가능

①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의 부도발생이나, 은행과의 거래의 정지 또는 금지
② 영업활동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정지, 영업허가의 취소
③ 파산, 해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 신청이나 사실상의 회생절차 개시

□ 이 경우 해당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은 한국은행의 요구에 따라야 하며, 한국은행앞으로 교부하는 유가증권의 시장가격은 매입유가증권을 처음 매입할 당시의 시장가격 이상이어야 함

제6절 국고금의 RP매입

□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RP매입시 필요한 경우 정부의 국고금을 재원으로 한 RP매입(2000년 10월 31일 최초)을 실시

ㅇ 2000.10.31 ~ 2002.10.4 기간 중 총 29회에 걸쳐 44조원을 운용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국고금 사정이 여의치 않아 운용을 중지하다 2007년 10월 운용을 재개하여 2008년 6월까지 9회에 걸쳐 32.5조원을 운용

□ 국고금의 RP 규모 및 기간 등은 금융시장국(시장운영팀)이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결정

ㅇ 국고금 RP 대상기관은 금융시장국(시장운영팀)이 선정한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

ㅇ 국고금 RP 대상증권은 국공채 및 통화안정증권에 한함

□ 국고금의 RP 운용시에도 대상기관과의 매매절차는 한국은행 자금에 의한 RP매매시와 동일하나, RP매매 수수료는 기획재정부가 부담

< 표 Ⅲ-5 > 환매조건부채권(RP) 매매 현황

(건, 천억원)

	RP매각(한국은행자금)		RP매입(한국은행자금)		RP매입(국고금)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2005	381	2,784	203	830	—	—
2006	387	1,976	83	516	—	—
2007	554	2,416	72	375	58	200
2008	614	3,870	78	151	46	125
2009	724	7,038	110	105	—	—
2010	940	6,567	68	69	—	—
2011	1,155	6,879	47	56	—	—
2012	1,129	6,911	—	—	—	—
2013	1,184	6,894	4	4	—	—
2014	1,254	6,810	2	25	—	—
2015	1,306	7,367	1	20	—	—
2016	1,097	6,018	2	18	—	—
2017	1,062	6,226	6	61	—	—
2018	987	6,009	2	8	—	—
2019	855	5,362	7	115	—	—
2020	755	6,625	88	423	—	—
2021.1~5	347	3,475	—	—	—	—

제3장 증권 단순매매

□ 한국은행은 정부로부터 국채를 직접 인수(「한국은행법」 제75조)하거나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공개시장에서 국채와 정부보증채 등을 자기계산으로 매매할 수 있음(「한국은행법」 제68조)

ㅇ 현재 한국은행은 단순매매를 통해 국고채만 보유하고 있으며 보유채권금액 범위내에서 RP매각을 실시

제1절 매입

□ 국공채 매입형태는 크게 발행매입과 중도매입으로 구분

ㅇ 발행매입 : 특정자금 지원을 목적으로 국채 발행시 정부로부터 직접 인수

ㅇ 중도매입 : 시중 유동성 조절을 위한 공개시장운영의 일환으로 이미 발행된 국공채를 유통시장에서 경쟁입찰 등의 방법을 통해 매입하며, 대부분 이 방식으로 매입

□ 중도매입은 매입할 채권이 결정되면 채권의 발행조건, 매매수익률, 매매단가 등에 따라 회계처리에 필요한 매입금액, 경과이자매입금 및 장부가격 등을 산정

ㅇ 매입금액 = (액면금액 / 10,000) × 10,000원당 매입단가

ㅇ 경과이자매입금은 매각기관의 증권보유기간 중 발생한 경과이자 매입금액을 회계처리(기타유동자산)하며, 최초 이자수취시(복리채의 경우 만기상환시)에 이자수입액과 상계처리

○ 장부가액 = 매입대금 – 경과이자매입금
발행매입의 경우 대체로 액면가격으로 인수하므로 발행금액, 매입금액, 장부가액이 모두 동일함

○ 취득시 매입가격으로 국채 계정 차변에 기록하며, 처분, 만기상환 및 결산시점에는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을 실시(상각액은 국채이자에 가감)

< 매입시 증권의 인수 >

○ 한국예탁결제원 예탁분의 경우 매각기관이 한국예탁결제원의 예탁자계좌부에서 한국은행계좌로 대체한 후, 계좌대체확인서를 한국은행에 제출

○ 등록부에 자사 명의로 등록한 증권의 경우 한국은행을 등록기명인으로 표시한 등록증 및 채권 등 매출확인서를 수령

< 매입시 대금의 결제 >

○ 한국은행이 매입한 증권 관련서류 접수 확인 후 한국은행에 개설된 매각기관의 당좌예금계좌로 매입금액을 입금

제2절 원리금 수취

□ 이표채의 경우 증권발행 조건에 따라 3개월 또는 6개월 단위로 이자를 수취하고 만기시에 원금과 최종 지급기의 이자를 수취하며, 할인채 또는 복리채의 경우 만기시에 원리금을 수취

○ 발행기관에 한국은행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등록증과 원리금지급청구서를, 증권현물 보유시에는 현물 및 원리금지급청구서를 해당 기관에 제시

ㅇ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증권의 경우 e-SAFE 단말기를 통해 한국예탁결제원이 계산한 원리금 지급내역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한국은행에 설치된 한국예탁결제원 당좌예금 계좌에서 차기

< 이자산출 방법[18] >

ㅇ 이표채 : $\text{액면금액} \times \dfrac{\text{표면이자율}}{\text{연간이자지급횟수}} - \text{기타유동자산(경과이자매입분)}$

ㅇ 복리채 : $\text{액면금액} \times \left(1 + \dfrac{\text{표면이자율}}{\text{연간복리계산횟수}}\right)^{\text{이자지급기수}}$

$- \text{액면금액} - \text{기타유동자산(경과이자매입분)}$

* 단, 국채는 10원 미만 버림, 정부보증채는 원 미만 버림

□ 중도매입한 증권에 경과이자매입금이 계상되어 있는 경우에는 매입 후 최초 이자수취시 상계처리

□ 이자수취시 보유기간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므로 한국은행에서는 이를 선급법인세로 회계처리

18) 한국예탁결제원은 각 증권 보유기관으로부터 예탁받은 증권에 대한 이자를 발행기관으로부터 일괄 수령하여 보유기관별로 배분(국민주택채권의 경우 발행기관으로부터 권종별 이자를 수취(10원 미만 버림)한 후, 권종별 보유비율로 배분)하여 지급함에 따라 보유 기관이 보유 증권 액면금액에 표면금리를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와 약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그 차이를 명확히 확인하고 회계처리하여야 함

<참고 Ⅲ-1> 한국예탁결제원 예탁 유가증권의 이자수취 절차

1.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되어 있는 유가증권의 이자수취시에는 이자수취일 2영업일전에 한국예탁결제원의 e-SAFE 시스템에 보유기간을 신고

가. 해당 유가증권을 직전이자수취일 전부터 보유하고 있는 경우(총 이자수취금액 = 총 보유기간 이자금액)에는 보유기간 신고 불필요

나. 동일 종목 채권의 매입일이 각각 다를 경우(총 이자수취금액 ≠ 총 보유기간 이자금액)에는 매입일별로 신고

<예> 국고채권 01500-2503-0500 종목의 매입내역이 다음과 같고 2021년 3월 10일에 이자를 수취하는 경우

매입일	금액(억원)	매입일	금액(억원)
2020.3.24	1,700	2020.9.28	1,100

2. 이자수취 1영업일 전(2021년 3월 9일) 한국예탁결제원 e-SAFE 시스템에서 원리금분배내역을 출력하여 한국은행 회계결제시스템에서 출력한 기일도래명세표(이자수취기일), 이자수취예정내역 명세표와 대조·확인

3. 이자수취일(2021년 3월 10일) 한국예탁결제원 e-SAFE 시스템에서 출력한 원리금분배내역을 기준으로 하여 회계결제시스템을 통해 한국은행에 개설된 한국예탁결제원 당좌계정에서 해당 금액을 차기하는 방식으로 이자를 수취

○ 세금(선급법인세)은 한국예탁결제원의 '원리금분배내역'을 기준으로 계상

<참고 Ⅲ-2> 단순매매시 회계처리

		차 변		대 변	
매 입	발행매입	유가증권(국채)	XXX	정부당좌예금	XXX
	중도매입	유가증권(국채) 기타유동자산(경과이자매입금)	XXX XXX	당좌예금	XXX
중도매입 후 최초이자 수취		당좌예금 선급법인세	XXX XXX	유가증권이자(국채이자) 기타유동자산(경과이자매입금)	XXX XXX
만기 원리금 수취 (최초 이자 수취일과 만기일이 동일한 경우)		당좌예금 선급법인세	XXX XXX	유가증권(국채) 유가증권이자(국채이자) 기타유동자산(경과이자매입금) 유가증권매매익	XXX XXX XXX XXX

제4장 증권대차

제1절 증권대차거래 제도의 개요

□ 증권대차거래(Securities Lending and Borrowing)란 증권보유자(대여자)가 증권을 차입자에게 빌려주는 거래로 대여자는 보유할 때와 같이 배당, 이자, 증자 등의 경제적 이득을 보장받고 담보에 의하여 대여증권의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대여수수료의 이득을 획득하는 한편 차입자는 결제 부족증권의 확보 및 차익거래와 같은 투자활동이 가능

ㅇ 증권 유동성 증대 및 결제불이행 위험 축소를 통하여 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대여기관에게 대여수수료라는 수익기회를, 차입자에게는 차익거래와 같은 무위험 투자기회를 제공

□ 증권대차는 「민법」상 소비대차[19]로 볼 수 있으나 증권대여기간 중에 대여증권에서 발생하는 배당금, 증자, 신주인수권, 이자 등 경제적 소유권은 대여자가 갖게 되고 의결권은 차입자가 행사한다는 점에서 일반 소비대차와 다름

□ 대차거래는 중개기관의 개입 없이 당사자간에 이루어지는 상대거래와 중개기관이 개입하는 중개거래로 구분 가능

ㅇ 중개기관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등으로 거래체결 및 중개, 증권 및 담보증권의 권리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

---

19) 「민법」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2절 한국은행의 증권대차업무 개요

□ 2011년 12월 17일「한국은행법」개정으로 통화신용정책 수행을 위해 공개시장에서 적격 증권의 매매와 함께 대여 또는 차입거래도 가능하게 됨

ㅇ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유동성 조절을 보다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시적인 채권시장 왜곡 등 금융시장 불안시 보다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증권대차시장 활성화, RP시장 육성 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1. 증권대여

□ 신용위험증권의 유통 애로 등으로 금융기관의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신용위험증권을 담보로 한국은행 보유 우량증권을 대여함으로써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

2. 증권차입

□ 연기금, 은행, 보험사 등 공개시장운영 대상증권을 다량 보유하고 있는 기관들로부터 증권을 차입하여 RP매각과 연계하여 유동성 조절에 이용함으로써 한국은행은 주요 유동성 조절 수단인 RP를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 가능

3. 증권대차거래 대상증권

□ 한국은행의 증권대차거래 대상증권은 국채, 정부보증채이며 대차방식은 공모에 따른 경쟁입찰 또는 상대거래로 실시

제3절 증권대차거래 담보관리 및 만기

1. 한국은행의 거래 담보관리

□ 증권대여시 담보 제공이 필요한 경우 그 대상은 현금, 국채, 정부보증채, 통화안정증권이며, 금융통화위원회는 금융시장 안정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담보대상증권의 범위 확대 가능

□ 한국은행이 증권을 차입하는 경우 한국은행은 신용위험이 없는 기관임을 근거로 대여기관과 협의하여 담보제공의무를 면제받음

2. 거래 만기

□ 증권대차시장 관행을 감안하여 증권대차기간은 1년 이내로 함

ㅇ 다만 종료일 이전이라도 거래쌍방이 합의하거나 한국은행의 통지로 중도해지가 가능

제4절 한국은행의 거래 유형 및 수수료

1. 증권대차거래 유형

□ 증권대여시에는 한국예탁결제원(또는 한국증권금융)에서 담보를 관리하는 지정거래로 운용하고, 증권차입시에는 해당기관에서 담보를 직접 관리하는 맞춤거래로 운용

2. 거래 수수료

□ 증권대여시는 차입기관으로부터 대여수수료를 수입하고 중개기관에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며, 증권차입시에는 대여기관과 중개기관에 각각 대차수수료 및 중개수수료를 지급

ㅇ 대차수수료 결정방식은 입찰실시 전에 공고

ㅇ 중개수수료는 대차수수료의 2% 수준이며 한국예탁결제원(또는 한국증권금융)에 지급

제5절 한국은행 증권대차거래의 회계처리

□ 한국은행이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으로부터 증권을 차입하거나 대상기관에게 증권을 대여할 경우 한국은행 대차대조표 "유가증권" 계정 잔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주석으로 표시

ㅇ 차입증권으로 환매조건부채권매각거래를 실행할 경우 대차대조표의 "환매조건부매각증권" 계정 잔액이 증가

Ⅳ. 채권 관련 원천징수 업무

제1장 채권 과세제도 개요

제2장 채권관련 원천징수제도

제3장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관련 원천징수업무

제1장 채권 과세제도 개요

제1절 개 요

1. 채권투자수익

□ 채권투자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원천은 약정이자율에 의한 채권이자와 보유기간 중에 채권을 매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자본차익(양도차익)으로 이루어짐

ㅇ 채권이자소득은 채권발행자가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 채권보유자에게 지급하는 총 지급액에서 발행원금을 차감한 금액

ㅇ 자본차익(양도차익)은 채권의 매도시와 매수시의 가격 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소득으로 채권의 총 투자수익에서 보유기간 중 발생한 채권이자소득 부분을 차감한 금액

2. 과세대상 채권소득

□ 현행 세법은 개인에 대해서는 채권 투자수익 중 채권이자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세 세무조정을 통해 자본차익(양도차익)까지 과세하도록 하고 있음

□ 채권이자소득은 이표채의 경우에는 표면금리에 할인/할증률을 감안하여 산출된 금액이 되며, 할인채의 경우에는 발행가액과 권면액의 차이, 복리채 및 단리채의 경우에는 권면액과 만기지급금액의 차이가 됨

3. 채권과세 법률

□ 채권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 귀속자 구분에 따라 적용 세법을 달리하고 있는데 개인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을, 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을 적용

ㅇ 한편, 조세정책적 목적으로 「조세특례제한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은 양 세법에 대한 특례 규정을 두고 있음

제2절 채권소득에 대한 과세 방법

□ 채권이자소득은 소득발생 시점마다 원천징수하고 연말에는 개인 또는 법인의 소득의 일부로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함을 원칙으로 함

ㅇ 일반적으로 개인 또는 법인 대부분의 소득은 종합소득 신고납부시까지 추가적인 과세절차가 없지만, 채권 이자소득은 배당소득과 함께 세법상 금융소득으로 분류되어 원천징수라는 특별한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1차적으로 소득발생 시점에 원천징수가 이루어지고 당해 소득이 종합과세의 대상인 경우 2차적으로 당해 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납부할 세액을 재산출함

ㅇ 이 때 원천징수[20]한 세액은 산출세액에서 공제함

20) 원천징수는 과세완결성 여부에 따라 구분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이 종합과세의 적용을 받는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예납적 원천징수라 함

< 표 Ⅳ-1 > 채권소득에 대한 과세

구분	개 인	법 인
채권이자소득	· 분리과세(완납적 원천징수)[1)] · 예납적 원천징수 후 종합과세 (개인별로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한 전체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천만원 초과 금융소득만 종합과세)	· 예납적 원천징수 후 종합과세
자본차익	과세하지 않음	종합과세

주 : 1) 분리과세되는 채권이자소득 : (1)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발행된 10년 이상 장기채권(3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으로 분리과세를 신청한 경우의 이자와 할인액(2018년 1월 1일 이후 발행 시 조건부) (2)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한 전체 금융소득(비과세 및 분리과세분 제외)의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제2장 채권관련 원천징수제도

제1절 원천징수제도 개요

□ 원천징수(Tax Withholding) 제도는 납세의무자(소득자)가 자신의 세액을 직접 과세관청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납세의무자에게 이자소득 등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이를 지급할 때에 그 납세의무자의 세액을 징수하여 과세관청에 납부하는 제도임(「소득세법」 제127조, 「법인세법」 제73조)

□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이자소득금액 등을 지급하는 자는 해당 금액의 지급시기에 그 금액을 지급받는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는데, 이 때 이자소득금액 등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됨

□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함

□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였거나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여 납부한 때에는 일정 금액을 가산세(원천징수납부 불성실 가산세)로서 가산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함

ㅇ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함

* 단, 지방소득세의 경우 무납부 또는 과소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0을 한도로 가산세 부과

①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②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2절 채권관련 원천징수제도 변경 추이

□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개인 또는 법인의 이자소득세에 대해서 당해 소득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예납징수하는 제도로서 주요 금융정책의 시행과 함께 많은 변화를 거쳐 현재의 '보유기간별 실제원천징수'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제도는 1996년의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시행과 2001년 채권시장구조 선진화를 위한 세제 개선에 따라 크게 변경되었음

ㅇ 1996년 이전의 원천징수방식은 채권이자를 지급받는 자가 지급받은 전체 이자에 대한 담세자가 되는 방식으로 운영됨

ㅇ 이와 같은 과세방식은 채권의 유통에 따른 각 보유자의 실제보유기간과 관계 없이 최종이자수령자가 모든 세금을 부담함에 따라 과세 형평상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는데, 이 문제점을 해소하고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1996년 도입된 제도가 이른바 보유기간별 과세제도로서 이때부터 원천징수제도는 '보유기간별 원천징수제도'로 변경

□ 보유기간별 원천징수제도는 2001년에 정부가 채권시장구조 선진화방안에 따라 Repo 및 대차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보유기간별 의제원천징수제도[21]'로 변경되었다가 2005년 7월 1일 이후부터 채권거래의 효율성 제고와 원천징수 기준의 국제화를 목적으로 다시 '보유기간별 실제원천징수제도'로 변경되었음

21) 채권의 만기시나 이자지급시에만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채권보유자는 매도일에 보유기간이자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것으로 보는 제도

□ 새로 변경된 '보유기간별 실제원천징수제도'는 종전의 보유기간별 의제원천징수제도가 중도보유자의 이자소득세를 채권가격에서 차감하여 매도하는 방식이어서 채권가격이 복잡해지는 문제가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도입됨

ㅇ 즉, 채권가격구조를 단순화하여 채권거래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제도를 국제 기준에 맞도록 개선하여 채권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시행된 것임

<표 Ⅳ-2> 채권이자소득의 보유기간별 원천징수제도의 변천 추이

구분	원천징수의무자	원천징수방법
1995년 이전	- 이자를 지급하는 자	- 이자지급시 원천징수
1996. 1. 1 ~ 2001. 6. 30	- 중도매도시 : 채권의 매수 또는 매도 법인 - 이자지급시 : 이자를 지급하는 자	- 이자지급시 뿐만 아니라 채권의 중도매도시에도 원천징수
2001. 7. 1 ~ 2005. 6. 30	- 중도매도시 : 없음 - 이자지급시 : 이자를 지급하는 자	- 중도매도시에는 원천징수 의제(세후가격으로 거래)에 따라 원칙적으로 원천징수하지 않음 - 이자지급시에는 지급받는 이자전체에 대하여 원천징수
2005. 7. 1 이후	- 중도매도시 : 채권의 매도 법인, 개인의 경우 채권의 매수 법인 (세전가격으로 거래) - 이자지급시 : 이자를 지급하는 자	- 이자지급 또는 중도매도시각 보유기간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22]

자료: 국세청

22) 2005.7.1~2005.12.31 및 2008.6.1~2009.12.31 까지의 기간에는 금융기관이 채권 등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법인세 원천징수를 면제하였으나 2010년 1월 1일부터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채권이자 법인세 원천징수가 부활됨

제3절 현행 채권관련 원천징수제도

□ 보유기간별 과세제도는 채권뿐만 아니라 채권의 속성을 갖는 기타 유가증권에도 적용되는데 「소득세법」은 채권을 비롯한 유통성이 있는 유가증권을 '채권 등'으로 규정하여 열거하고 있으며, 동 '채권 등'에 대해서는 보유기간별 실제원천징수제도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있음

[**채권 등의 범위**(「소득세법」 제4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내국법인,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 및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

② 타인에게 양도가 가능한 증권으로서 이자 또는 할인액을 발생시키는 증권(법률에 따라 소득세가 면제되는 채권 등은 제외하며, 해당 증권이 신탁재산 등에 편입된 경우에도 적용)

- ㅇ 금융회사 등이 발행한 예금증서 및 이와 유사한 증서. 다만, 금융회사 등이 해당 증서의 발행일부터 만기까지 계속하여 보유하는 예금증서(양도성예금증서제외)는 제외

- ㅇ 어음(금융회사 등이 발행·매출 또는 중개하는 어음포함, 상업어음 제외)

□ 현행 실제원천징수제도는 세전단가로 매매하고 채권이 매매될 때마다 당해 채권의 매도자로부터 채권 보유기간 중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하고 있음

[의제원천징수제도하에서의 원천징수]

□ 거래단계에서는 보유자별로 자신의 매도시점까지의 보유기간 경과이자에 대해 기본세율로 매도단가에서 할인하여 다음 매수자에게 이전하고, 최종이자지급일에는 이자지급자가 최종보유자를 대상으로 이전 보유자의 의제부담세액과 최종보유자의 부담세액을 합하여 실제원천징수를 함

ㅇ 따라서 기본적으로 거래단계에서는 원천징수가 발생하지 않음

□ 다만, 거래단계에서는 기본세율로 의제부담됨에 따라 기본세율과 다른 세율을 적용받는 거래자가 있는 경우(주로 개인) 기본세율과의 차이만큼을 거래단계에서 실제원천징수하거나 환급하여야 함

1. 채권 등의 보유기간

□ 채권 등의 보유기간이란 채권 등의 매수일로부터 매도일까지의 일수를 말하는데, 이 경우 보유기간의 일수는 매수일과 매도일 중 어느 한쪽만을 산입하는 방법으로 계산함

[**채권 등의 보유기간 입증방법** (「소득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8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조 제8항)]

① 채권 등을 금융기관에 개설된 계좌에 의하여 거래하는 경우 : 해당 금융회사 등의 전산처리체계 또는 통장원장에 의하여 확인

② 법인으로부터 채권 등을 매수한 경우 : 해당 법인이 발급하는 채권 등 매출확인서에 의하여 확인

③ 개인으로부터 채권 등을 매수한 경우 :「공증인법」의 규정에 의한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에 의하여 확인

* 거래당사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매매일자·채권 등의 종류와 발행번호·액면금액을 기재한 것에 한함

※ 보유기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 거주자 등이 원천징수기간 중 채권 등을 보유한 기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기간의 이자 등 상당액이 해당 거주자 등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소득세법」 제46조 제2항)

2. 적용 이자율

□ 채권에 대한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와 관련하여 적용되는 이자율은 채권의 발행시점에서부터 채권만기일까지 지급된 총 이자계산의 기준이 되는 채권이자율로서 액면발행된 채권의 경우에는 표면금리가 되고 할인·할증 발행된 채권의 경우에는 표면금리에 할인·할증률을 감안한 수익률이 적용 이자율이 됨

ㅇ 한편, 국채 등의 통합발행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최초 발행채권과 추가 발행채권간의 발행수익률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 발행채권간의 통합이 불가능[23] 해지기 때문에 국고채권 등 특정채권에 대해서는 세법상 특례를 두어 할인·할증률을 감안하지 않고 표면금리만을 적용이자율로 하도록 함

23) 과세대상 채권이자소득은 표면이자에 할인·할증률을 감안한 금액에 대해 과세되기 때문에 최초 발행채권과 추가 발행채권의 유통수익률이 같다고 하더라도 각각의 발행수익률이 다를 경우에는 수익률 차이에 따라 통합유통이 불가능하게 됨

□ 이와 같이 세제상 특례가 적용됨에 따라 국채 등을 수회에 걸쳐 발행하여도 같은 표면금리로 발행되었다면 최초 발행되는 국채 등과 추가발행되는 국채 등은 추가발행시점에서는 유통수익률이 동일해지기 때문에 단일종목으로 유통이 가능해짐

[**국채 등의 이자소득**(「소득세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2항)]

② 다음 각 호의 채권을 공개시장에서 통합발행(일정 기간 동안 추가하여 발행할 채권의 표면금리와 만기 등 발행조건을 통일하여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경우 해당 채권의 매각가액과 액면가액과의 차액은 법 제16조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이자 및 할인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8.2.22., 2010.2.18., 2014.12.30.>

1. 국채
2. 「한국산업은행법」 제23조에 따른 산업금융채권
3. 「예금자보호법」 제26조의2 및 동법 제26조의3의 규정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채권과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
4.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 2015.1.1일 이후 발행되는 물가연동국고채에 대해서는 원금증가분도 이자소득에 포함시켜 과세 대상이 됨

[물가연동국고채 원금증가분 이자소득 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3항)]

③ 국가가 발행한 채권으로서 그 원금이 물가에 연동되는 채권(이하 "물가연동국고채"라 한다)의 경우 해당 채권의 원금증가분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자 및 할인액에 포함된다.<2013.2.15일 개정>

부칙 <제24356호, 2013.2.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8조의2제5항, 제211조제7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212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57조제4항제1호 및 제2호(대주주 범위를 확대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51조제8항 · 제133조제1항 · 제143조제4항 · 제181조의2 및 제20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2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원천징수세율

□ 채권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이나 법인 모두에게 소득세와 법인세의 기본세율 14%를 적용

ㅇ 소득자가 개인 및 내국법인인 경우 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가 소득세에 추가되어 원천징수됨

< 표 Ⅳ-3 > 원천징수세율 변동 내역

대 상	세 목	1995.12.31 이전	1996.1.1	1998.1.1	1998.10.1[3]	2000.1.1	2001.1.1	2001.7.1	2005.1.1
법 인	법인세	20	20	20	22	20	20	15	14
개 인 (일반)	소득세	20	15	20	22	20	15	15	14
	지방소득세[1]	1.5	1.5	2	2.2	2	1.5	1.5	1.4
	계	21.5	16.5	22	24.2	22	16.5	16.5	15.4
개인 (세금 우대)	소득세	5	10	10	10	10	10	10	9
	농어촌특별세[2]	1.5	0.5	1	1.2	1	0.5	0.5	0.5
	계	6.5	11.5	11	11.2	11	10.5	10.5	9.5

주 : 1)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일정비율로 과세. 1996년부터는 소득세의 7.5%에서 10%로 인상
2) 농어촌특별세는 일반소득세율에서 우대소득세율을 차감한 세율의 10%로 계산함
3) 세율 적용은 이자소득이 발생한 기간별로 해당 세율을 각각 적용토록 하고 있으나, 1998년 10월부터 적용되는 세율은 동 일자 이후 발행분에 한하여 1999년말까지 적용되는 것에 유의

제4절 채권 소득자별 원천징수

1. 개인에 대한 원천징수

□ 개인이 발행법인 등으로부터 채권의 이자를 지급받은 경우와 채권의 이자를 받기 전에 발행법인 등에게 매도하는 경우에는 발행법인 등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됨

□ 종전에는 채권의 만기시나 이자지급시에만 실제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채권보유자는 매도일에 보유기간이자에 대해 세후가격으로 채권을 거래하는 의제원천징수제도가 시행되었으나, 2005년 7월부터는 채권거래시마다 개인의 보유기간이자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있으며 개인이 채권을 만기일 이전에 중도 매도할 경우에는 채권의 매수 법인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되고 이자지급시에는 이자를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됨

□ 개인이 채권거래 단계에서 부담한 원천징수세액은 연말에 당해 채권이자소득이 종합과세 대상인 경우 일종의 선납세액에 해당하므로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2. 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 법인에 대한 원천징수방식도 개인에 대한 과세방식과 기본구조는 동일하여 이자지급시 또는 채권거래시마다 법인이 채권보유기간에 대해 원천징수하며, 이렇게 사업년도 중 실제 원천징수된 세액은 법인세 납부시 선납법인세로 공제됨

ㅇ 또한 법인이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할인액의 계산기간 중에 당해 채권을 개인에게 매도하는 경우 채권의 보유기간에 따른 이자 등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이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함

□ 한편,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채권보유기간이자에 대해서는 2005년 7월 1일 세전단가에 의한 보유기간과세제도가 시행되면서 채권거래 편의성을 제고하려고 원천징수가 면제되었으나, 신탁, 일반법인 및 개인에게 지급하는 채권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하는 것과 형평을 맞추기 위하여 2005년 12월 「법인세법」을 개정하여 2006년부터 다시 원천징수하도록 함

ㅇ 이와 같이 금융법인이 채권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이자를 지급하는 금융기관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되나 금융법인이 채권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법인 자신이 원천징수의무자이므로 보유기간 이자소득에 대해 자진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함

□ 2008년 6월, 금융기관이 채권 등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제도가 폐지되었음

ㅇ 이는 금융기관이 지급받는 채권이자가 일반법인과 달리 본업인 금융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인 점을 감안한 것이었으며, 금융기관의 자금 활용도 제고 및 채권시장 활성화를 위한 조치의 일환이었음

ㅇ 이에 따라 금융기관은 채권의 이자를 받을 때 원천징수당하지 않고,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때 채권이자에 대한 법인세도 함께 납부하도록 되었음

□ 그러나 정부의 세제개편으로 2010년 이후 금융기관의 채권이자소득에 대해서도 개인 소득세 및 일반법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14%의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도록 원천징수제도가 부활되었음

□ 2015. 1. 1.부터 원천징수의무자가 내국법인으로부터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의 100분에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로 원천징수해야하는 의무가 신규로 부여됨

[금융기관이 보유한 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제도 변천]
— 2005. 7. 1일부터 원천징수 면제
— 2006. 1. 1일부터 타법인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다시 원천징수
— 2008. 6. 1일부터 채권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시 원천징수 면제
— 2010. 1. 1일부터 금융기관의 채권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제도 부활
— 2015. 1. 1일부터 내국법인의 채권 이자소득에 대한 특별징수 도입

3. 외국인에 대한 원천징수

□ 외국인의 경우에도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라 투자자 구분(개인, 법인)에 관계없이 모두 원천징수를 하고 있음

ㅇ 원천징수 이자소득세율은 국가별로 보통 10~15%정도이나, 조세조약[24]에 따라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가 면제될 수도 있음

□ 외국인 투자자는 국내투자자와 동일하게 개인은 표면이자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며 법인은 표면이자 외에 자본차익에도 과세함

□ 외국인의 국채투자 증대 및 WGBI(World Government Bond Index) 등 선진지수 편입을 위한 기반마련 차원에서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국채·통화안정증권 투자시에는 이자소득과 양도차익에 대하여 2009년 5월 21일부터 비과세[25]를 적용한 바 있음

ㅇ 또한, 비거주자 외국법인이 직접 투자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국세청장이 승인한 적격외국금융기관(Qualified Foreign Intermediary)[26]을 통하여 투자하는 경우에도 비과세 혜택을 적용

□ 한편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국채 · 통화안정증권 투자와 관련된 이자소득 및 양도차익에 관한 비과세는 2011년 1월 1일자로 폐지됨

---

24) 소득 및 자본에 대한 국제적 · 법률적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간에 문서에 의하여 체결된 명시적 합의를 의미하며, 공식적으로는「소득 및 자본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라는 명칭이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실무상으로는 조세조약(tax treaty), 조세협약(tax convention) 등으로 사용되고 있음

25) 「소득세법 」제156조,「법인세법」제98조

26)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에 본점(주사무소)이 있는 외국법인으로서 한국예탁결제원과 유사한 업무를 영위하거나 외국 증권 보관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인. 적격 외국금융기관이 되려는 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국세청장은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는 기관인지 여부를 심사하여 승인

[세법상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정의]

□ 비거주자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라고 하며, 거주자가 아닌 자를 비거주자라고 함. 따라서 비거주자는 국적을 기준으로 구분하는 외국인의 개념과는 다름

ㅇ 주소 :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

ㅇ 거소 :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

ㅇ 거주기간 :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계산

□ 외국법인 :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ㅇ 본점 : 영리법인의 영업상 본거지

ㅇ 주사무소 : 비영리법인의 사업상 본거지

가. 적용이율

□ 해당국가와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 이자소득의 20% 적용. 단, 이자소득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14%를 적용

□ 해당국가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경우 : 「소득세법」(「법인세법」)과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 중 낮은 세율 적용

< 표 Ⅳ-4 > 주요국과의 조세조약상 이자소득 제한세율

국 가	한국의 대상 조세[1]	제한 세율
미국	소득세, 법인세	12%
뉴질랜드, 베트남, 스위스, 싱가폴, 이탈리아, 인도네시아, 중국, 프랑스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10%
덴마크, 말레이시아, 호주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15%
독일, 영국, 일본, 캐나다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농특세	10%

주 : 1) 조세조약상 대상 조세에 지방소득세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예:미국)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대상 조세에 지방소득세가 포함된 경우(예:일본)에는 제한세율을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율로 비례 배분

자료 : 국세청

나. 적용예시

(조세조약 대상 조세에 지방소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 통화안정증권을 보유중인 미국인 A에게 이자 1억원 지급시

ㅇ 과세표준에 제한세율을 곱하여 소득세를 계산하고, 소득세에 지방소득세율을 곱하여 지방소득세를 계산

— 소득세 : 100,000,000원 × 0.12(제한세율) = 12,000,000원
— 지방소득세 : 12,000,000원 × 0.1(지방세법) = 1,200,000원
— 총 징수세액 : 12,000,000 + 1,200,000 = 13,200,000원

(조세조약 대상 조세에 지방소득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 통화안정증권을 보유중인 중국인 B에게 이자 1억원 지급시

ㅇ 소득세의 세율과 지방소득세의 세율을 합하여 제한세율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제한세율을 소득세의 세율과 지방소득세의 세율로 배분하여 소득세의 세율을 산출

① 소득세 원천징수세율 = 제한세율(10%) × 1/(1 + 0.1) = 9.1%
(지방소득세율이 소득세의 10%인 경우)

② 제한세율에 의한 지방소득세 원천징수세율 : 10% - 9.1% = 0.9%

— 소득세 = 100,000,000 × 9.1% = 9,100,000원
— 지방소득세 = 100,000,000 × 0.9% = 900,000원
— 총 징수세액 : 9,100,000 + 900,000 = 10,000,000원

제3장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관련 원천징수업무

제1절 원천징수 개요

□ 한국은행의 통화안정증권 및 국채 발행 사무취급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는 통화안정증권의 중도환매 업무, 국채의 교환 및 조기상환 업무 등과 같이 원리금 지급시 한국은행 등록부에 증권보유자 명의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발생

○ 개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 등 증권 소유자로부터 보유기간이자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원천징수

○ 아울러 「지방세법」에 따라 개인, 내국법인, 외국법인에 대해서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및 법인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지방소득세로 원천징수

□ 한국예탁결제원 명의로 일괄등록된 채권에 대해서는 예탁결제원(예탁자 소유분) 또는 예탁자(투자자 소유분)가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원천징수의무를 수행

< 표 Ⅳ-5 > 통화안정증권 및 국채의 취급사무별 원천징수 현황

대상 업무	원천징수 대상	국 세		지방소득세	
		소득세	법인세	소득세	법인세
이자지급, 만기상환, 교환 및 조기상환 등[1]	개인	○	-	○	-
	내국법인	-	○	-	○
	외국법인	-	○	-	○

주 : 1) 한국예탁결제원 명의로 일괄등록된 증권에 대한 원리금 지급에 대해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원천징수의무자임

□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을 관리 · 운용하는 법인[27]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기금운용법인')과 법률에 따라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 중 건강보험 · 연금관리 및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28](기금운용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기금사업에 한정)이 「국채법」에 따라 등록하거나 「주식 ·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한 다음 각 목의 국공채 등을 발행일부터 이자지급일 또는 상환일까지 계속하여 등록 · 보유함으로써 발생한 이자 및 할인액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29]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
나.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발행한 통화안정증권
다.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

27)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수출보험법」에 따른 한국수출보험공사,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에 따른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2 제1항」]

28) 「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 따른 한국교직원공제회, 「군인공제회법」에 따른 군인공제회,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공제사업에 한정한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건설공제조합 및 전문건설공제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제조합,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에 따른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연합회(공제사업에 한정한다),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과학기술인공제회,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소방산업공제조합, 「건축사법」제38조의3제1항에 따른 건축사공제조합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2 제2항]

29) 「법인세법」제73조 제2항, 「법인세법시행령」제111조 제2항 제5호

제2절 원천징수세액 납부 및 지급명세서 제출

□ 소득세 및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은 익월 10일(공휴일 또는 토요휴무일의 경우에는 익영업일)까지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30], 지방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고 관련 지급명세서를 제출[31]하여야 함

ㅇ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 : 소득세(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에게 이자소득 등에 해당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을 포함)와 그 지급을 대리하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ㅇ 지급명세서 제출 시기 : 이자소득 등의 금액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관할세무서 앞 제출[32]

ㅇ 지급명세서 미제출·불분명 가산세 :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가 지급조서를 소정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하여 부과[33]

[**소액 부징수제도**(「소득세법」 제86조, 「법인세법」 제73조, 「지방세법」 제103조의 60)]

□ 원천징수세액이 일정금액 미만인 때에는 징수를 생략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제도를 소액 부징수제도라 하며 소득세(비거주자에 한함) 및 법인세의 경우 1,000원 미만, 지방소득세의 경우 고지서 1장당 2,000원 미만인 경우 징수 생략이 가능

ㅇ 다만, 이자소득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2002년 이후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소액 부징수제도를 폐지

---

30) 「소득세법」 제128조 제1항, 「법인세법」 제73조 제1항
31) 「소득세법」 제164조, 「법인세법」 제120조
32) 한국은행은 본부에서 본부 및 지역본부분을 종합하여 관할 세무서에 전산매체로 제출
33) 「소득세법」 제81조의11 제1항, 「법인세법」 제75조의7 제1항

제3절 원천징수세액 산출 예시

1. 할인채

□ 통화안정증권 발행일 2020년 11월 17일, 만기 182일물, 매출액 310,000백만원, 할인율 연 0.559%

※ 통화안정증권의 발행가액 계산은 액면 100만원당으로 하며 원 미만 끝수는 버림(「공개시장운영세칙」 제21조)

○ 100만원당 발행가액 = 1,000,000 × (1 - 0.00559 × 182/365) = 997,212원

○ 100만원당 할인료 = 1,000,000 - 997,212 = 2,788원

< 법인의 경우 :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 원천징수 >

○ 법인세 = 100만원당 할인료 × 매출액/1,000,000 × 법인세율
= 2,788 × 310,000 × 0.14 = 120,999,200원 (10원 미만 버림)

○ 법인지방소득세 = 법인세액 × 지방소득세율
= 120,999,200 × 0.10 = 12,099,920원 (10원 미만 버림)

< 개인의 경우 :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원천징수 >

○ 소득세 = 100만원당 할인료 × 매출액/1,000,000 × 소득세율
= 2,788 × 310,000 × 0.14 = 120,999,200원 (10원 미만 버림)

○ 지방소득세 = 소득세액 × 지방소득세율
= 120,999,200 × 0.10 = 12,099,920원 (10원 미만 버림)

2. 이표채

□ 통화안정증권 발행일 2020년 8월 2일, 만기일 2022년 8년 2일, 매출액 2,200,000백만원, 표면금리 연 0.71%, 이자지급 3개월 단위

ㅇ 이자금액 = 매출액 × 표면금리/4 = 2,200,000,000,000 × 0.0071/4 = 3,905,000,000원 (원 미만 버림*)

* 이자계산시 원 미만 버림(한국은행「회계규정시행세칙」제4조)

< 법인의 경우 :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 원천징수 >

ㅇ 법인세 = 이자금액 × 법인세율 = 3,905,000,000× 0.14 = 546,700,000원

ㅇ 법인지방소득세 = 법인세액 × 지방소득세율 = 546,700,000× 0.10 = 54,670,000원

< 개인의 경우 :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원천징수 >

ㅇ 소득세 = 이자금액 × 소득세율 = 3,905,000,000× 0.14 = 546,700,000원

ㅇ 지방소득세 = 소득세액 × 지방소득세율 = 546,700,000× 0.10 = 54,670,000원

[이자소득 계산기간 중에 세율이 변경될 경우]

1. 단수 관련법 적용 : 각각의 세율에 대한 원천징수액을 계산한 후 이를 합산한 총액에 대하여 단수 관련법을 적용

2. 경과일수 : 세율 변경 전 소득 계산시 경과일수는 양편넣기로 계산

3. 복리채

□ 보상채권 발행일 2021년 5월 31일, 만기일 2024년 5월 31일, 매출액 5백만원, 발행금리 연 2.8%, 이자지급 1년복리 만기 일시상환조건

- ㅇ 이자금액 = 5,000,000 × $(1+0.028)^3$ − 5,000,000 = 431,860원(10원 미만 버림)
- ㅇ 소득세 = 431,860 × 0.14 = 60,460원 (10원 미만 버림)
- ㅇ 지방소득세 = 60,460 × 0.1 = 6,040 (10원 미만 버림)

[복리채의 기간별 원천징수 대상 이자소득 산출방법]

복리채에 대한 이자소득 계산에 있어 소득발생 기간별 적용 세율이 다를 경우 동일적용 세율기간별 이자소득을 산출하고 여기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기간별 원천징수 대상 이자소득은 아래와 같이 복리를 적용한 해당기간 이자산출방식으로 산출

<복리에 의한 원천징수 대상 기간별 이자소득 산출식>

$$I_1 = A\times\{1+r\div(12/\text{복리계산단위월수})\}^{k1+d/D}-A$$
$$I_2 = [A\times\{1+r\div(12/\text{복리계산단위월수})\}^{k2+d/D}-A]-I_1$$
$$I_3 = [A\times\{1+r\div(12/\text{복리계산단위월수})\}^{k3+d/D}-A]-I_2-I_1$$
$$\vdots \qquad\qquad \vdots$$
$$I_n = [A\times\{1+r\div(12/\text{복리계산단위월수})\}^{\text{만기기수}}-A]-\sum_{i=1}^{n} I_{n-1}$$

I_n : 동일한 세율 적용기간의 이자
A : 액면금액
r : 표면이자율
d : 직전이자계산일로부터 세율변경일까지의 일수, 한편넣기
D : 직전이자계산일로부터 차기이자계산일까지의 일수, 한편넣기
k_n : 발행일로부터 세율변경전일까지의 경과기수

제4절 국채 통합발행에 따른 발행자 부담세액 환급 (2005년 8월 9일자로 종료)

□ 2001년 7월 1일부터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채권의 중도매도시 채권이자소득에 대하여 관련 세금을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최종 소유자에게 전액 과세함에 따라 채권이 유통시장에서 세후가격[34]으로 거래

ㅇ 국채 발행자인 정부는 국채통합발행으로 발생하는 경과기간이자[35]에 대한 세금을 부담

□ 이에 따라 국채를 발행하는 것이 재정자금 조달을 위한 국고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국채의 통합발행과 관련하여 발행자인 정부가 세금을 부담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채의 통합발행과 관련하여 발행자가 부담하는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함

ㅇ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국채 및 산업금융채권)을 공개시장에서 발행한 후 당해 채권과 발행조건이 동일한 채권을 공개시장에서 추가로 발행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초 채권을 발행한 날부터 채권을 추가발행한 날까지의 이자소득에 대한 세액을 환급 신청할 수 있으며, 발행인(국채의 경우 국채사무를 처리하는 자 포함)은 추가발행일 익월 10일까지 환급신청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 (구「소득세법」제46조, 구「소득세법시행령」제102조의2)

34) 채권 중도보유자의 이자소득세를 채권가격에서 차감
35) 증권상의 발행일로부터 실제 발행일(매출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이자. 국고채권 통합발행의 경우 증권상의 발행일자는 일정기간(통상 6개월에서 1년 사이) 고정되는 반면 실제 발행(매출)은 증권상의 발행일자 이후에 이루어지므로 경과기간이자가 발생하게 됨

< 예 시 >

□ 국고채권 최초 발행조건(발행일 2003년 3월 26일, 표면금리 연5.00%, 이자지급조건 매 6개월 후급, 만기일 2013년 3월 26일)으로 11,000억원 통합발행(매출일 2003년 8월 20일)시 발행자 부담세액

ㅇ 경과이자 : 21,970,108,690원 (11,000억원 × 5.0%/2 × 147일/184일)

ㅇ 부담세액 : 3,295,516,300원 (경과이자 × 원천세율* 15%)

* 발행자부담세액 환급 제도 시행 당시 원천세율임

□ 위와 같은 발행자 부담세액 환급 업무는 2005년 7월 1일부터 원천징수제도가 보유기간과세제도*로 변경되어 채권이 세전 가격으로 거래됨에 따라 2005년 6월분의 환급(2005년 8월 9일)을 끝으로 종료됨(금증 3152-00510, 2005.8.9 참조)

* 채권이 매매될 때마다 당해 채권의 매도자로부터 채권 보유기간 중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제도

Ⅴ. 수입인지 업무

제1장 수입인지 제도 개요

제2장 수입인지의 수급 및 판매

제3장 수입인지 판매대금 회수 및 국고 납입

제4장 수입인지 판매인 관리 및 보고

제1장 수입인지 제도 개요

□ 수입인지란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세나 그 밖의 국가 세입금 및 수수료 등을 납부할 때 사용하는 금액권으로서 그 발행과 관리 주체는 기획재정부장관이며 수입인지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위탁 관리(「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되고 있음

<참고 Ⅴ-1> 수입인지 위탁관리 현황

종류별		위탁기관	담당업무	위탁개시일
우표형 수입인지		한국은행	- 판매계약 체결 및 해지 - 판매기관 및 판매소에 대한 수급 및 관리	1980. 5. 1
전자수입인지	종이문서용[1]	(사)금융결제원	- 판매 및 관리 - 판매대금의 납입 관리[3] - 판매자에 대한 계약 체결 및 해지	2013.12.19
	전자문서용[2]	㈜한국무역정보통신 (KTNET)	- 판매 및 시스템 관리	2017. 7. 1

주 : 1) 종이문서에 첨부하는 출력물 형태의 전자수입인지
2) 전자문서에 첨부하는 전자적 정보형태의 전자수입인지
3) 금융결제원은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의 판매대금 결제 및 납입관리 업무도 수행

□ 한국은행이 관리하고 있는 우표형 수입인지의 경우 인지세를 납부할 때 주로 사용되었으나, 2014. 1. 1일 인지세 납부시 전자수입인지 사용이 의무화(「인지세법」 제8조)됨에 따라 사용처가 일부 한정 수수료로 국한되어 판매량이 급격히 감소

<표 Ⅴ-1> 우표형 수입인지와 전자수입인지 판매대금 비교 (국고납부액 기준)

(단위 : 억원, %)

종류별	2013.12월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1~5월
우표형	397.0 (99.8)	3,806.5 (85.1)	326.1 (6.5)	53.0 (1.0)	45.4 (0.9)	45.7 (0.9)	38.1 (0.7)	23.8 (0.4)	7.5 (0.3)
전자	0.7 (0.2)	667.0 (14.9)	4,723.1 (93.5)	5,024.6 (99.0)	4,948.3 (99.1)	5,028.2 (99.1)	5,116.6 (99.3)	5,825.9 (99.6)	2,508.2 (99.7)
합계	397.7 (100.0)	4,473.5 (100.0)	5,049.2 (100.0)	5,077.6 (100.0)	4,993.7 (100.0)	5,073.9 (100.0)	5,154.7 (100.0)	5,849.7 (100.0)	2,515.7 (100.0)

주 : 1) ( ) 내는 비중

<참고 Ⅴ-2> 수입인지를 첨부하여 납부하는 수수료

수 수 료 종 류
· 국가기관 시행 검정·인정·확인·검인·감정·시험 또는 검사 수수료
· 국가기관 허가·인가·면허·특허 또는 등록 수수료
· 국가기관 공증 또는 증명, 수리(受理) 수수료
· 공부(公簿)의 등본 또는 초본 발급 수수료
· 형사판결의 정본·등본 또는 초본 발급 수수료
· 공부 열람 또는 계약서 정본 발급 수수료
· 공무원(집행관)의 징수 수수료

<참고 Ⅴ-3> 인지세 과세문서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종류(발췌)
· 부동산, 선박, 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 금융·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
· 소유권에 관하여 등록 등을 하여야 하는 동산으로서 자산의 양도에 관한 증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항에 따른 채무증권, 지분증권 및 수익증권
· 예·적금에 관한 증서 또는 통장, 환매조건부채권 매도약정서, 보험증권 및 신탁에 관한 증서 또는 통장

□ 우표형 수입인지는 액면가액에 따라 총 16종(「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2)을 발행할 수 있으나 현재 12개 권종*이 발행·판매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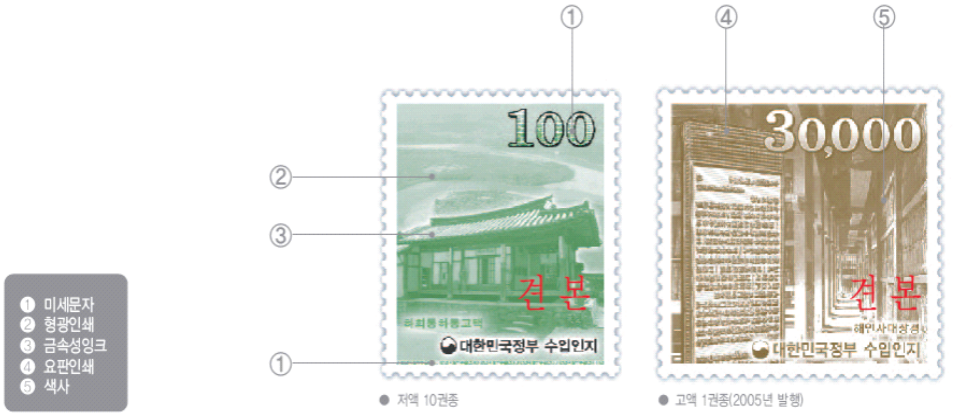
* 10, 50, 100, 200, 300, 400, 500, 1000, 3000, 5000, 10000, 30000원권

** 2000, 20000, 50000, 100000원권은 발행된 바 없음

<표 Ⅴ-2> 수입인지 권종 변화 추이

연월	권종수	수입인지 발행 권종	비 고
1962. 6	6종	(10·20·50) (100·500) (1000)	화폐단위는 환
1963. 5	6종	(1·2·5) (10·50) (100)	화폐단위는 원
1967. 9	7종	(1·5) (10·50) (100·500) (1000)	2원권 발행 중단 500원권, 1000원권 신규 발행
1972.12	8종	(1·5) (10·30·50) (100·500) (1000)	30원권 신규 발행
1978.12	8종	(1) (10·50) (100·500) (1000·5000) (10000)	5원권, 30원권 발행 중단 5000원권, 10000원권 신규 발행
1993. 6	8종	(10·50) (100·500) (1000·3000·5000) (10000)	1원권 발행 중단 3천원권 신규 발행
2004.10	12종	(10·50) (100·200·300·400·500) (1000·3000·5000) (10000·30000)	200원권, 300원권, 400원권, 30000원권 신규 발행

<참고 Ⅴ-4> 현행 우표형 수입인지 도안 및 위·변조 방지요소



● 저액 10권종　　● 고액 1권종(2005년 발행)

● 2007년 발행　● 2005년 발행　● 2005년 발행　● 2005년 발행　● 2005년 발행

● 2005년 발행　● 2005년 발행　● 2005년 발행　● 2005년 발행　● 2005년 발행

❶ 미세문자
육안으로 식별이 어렵도록 아주 작은 문자로 '**대한민국정부수입인지**'를 연속 인쇄하여 확대경 등으로 확인하면 선명하게 나타남

❷ 형광인쇄
형광물질을 넣어 인쇄하여, 어두운 곳에서 자외선 램프를 비추면 밝은 형광이 나타남

❸ 금속성잉크
펄잉크로 인쇄하여 투명한 금색으로 나타남

❹ 요판인쇄
특수 조각한 판으로 인쇄하여 인쇄한 면을 만져보면 볼록한 것을 느낄 수 있음

❺ 색사
용지 전면에 붉은 색과 청색의 가는 실이 들어 있음

<참고 Ⅴ-5> 기타 우표형 수입인지 도안

현용	발행중지권 (2종)

구권 (7종)

□ 한편, 전자수입인지의 액면가격은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는 자가 납부한 금액이고 그 규격 및 모양은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서 정하고 있음

<참고 Ⅴ-6>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견본>

<참고 Ⅴ-7>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견본>

대한민국 수입인지
2017.02.22
18:10:19
고유번호
1309925-000001127
수입인지금액
60,000원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 공 사 명 : 위례신도시 제3공구

2. 공사장소 : 학암동 위례신도시 A3-5블록

3. 착공년월일 : 2017 년 11 월 5 일

4. 준공예정년월일 : 2017 년 12 월 10 일

5. 계약금액 : 일금 165,000,000 원정 (부가가치세 포함)

(노무비1) : 일금 100,000,000 원정, 부가가치세 일금 10,000,000 원정)

1)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제2항, 동시행령 제84제1항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노임

6. 계약보증금 : 일금 60,000,000 원정

7. 선 금 : 일금 60,000,000 원정(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지급)

8. 기성부분금 : (8)월에 1회

9. 지급자재의 품목 및 수량

10. 하자담보책임(복합공종인 경우 공종별로 구분 기재)

공종	공종별계약금액	하자보수보증금률(%) 및 금액	하자담보책임기간
		( ) % 원정	

11. 지체상금률 : 12%

12. 대가지급 지연 이자률 : 20%

13. 기타사항 :

2017 년 4 월 11 일

도 급 인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성명 김길동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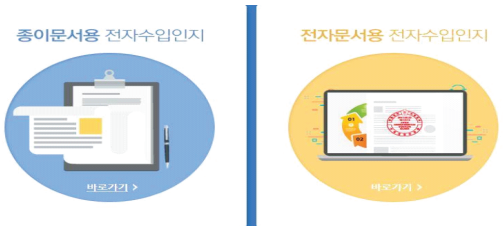
수 급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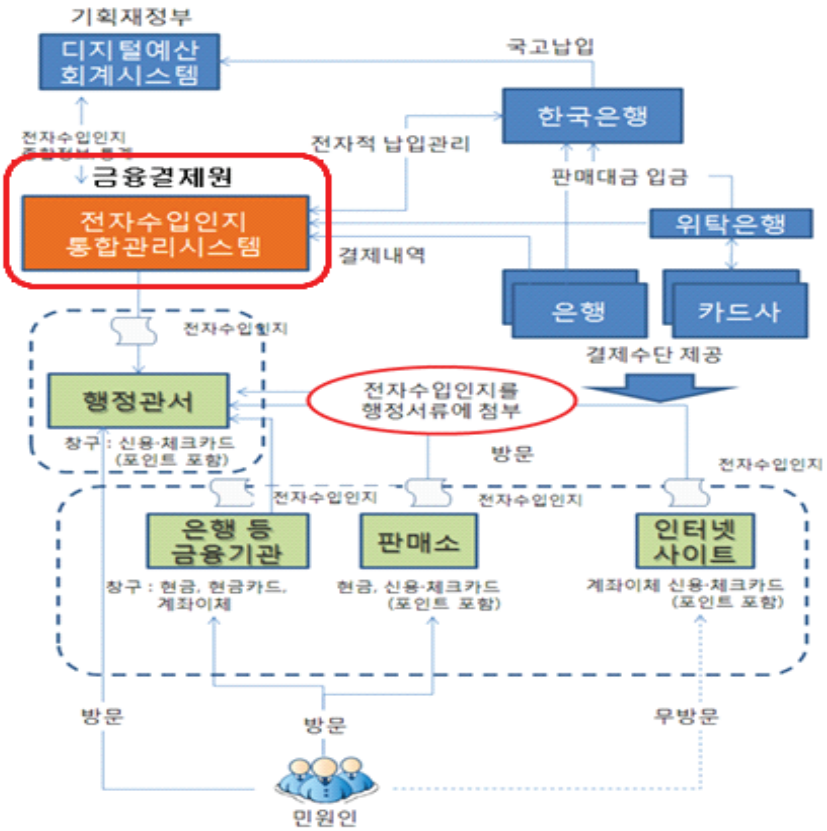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

성명 김길동 (인)

<참고 Ⅴ-8> 전자수입인지 수급 경로

인터넷 전자수입인지 사이트에 접속(www.e-revenuestamp.or.kr)





이하 본 책자에서 언급하는 내용은 한국은행이 관리하는 우표형 수입인지에 대한 설명임

제2장 수입인지의 수급 및 판매

제1절 수입인지의 수급

□ 기획재정부는 매년 한국은행의 수입인지 수급계획에 따라 수입인지 발행계획을 수립하여 한국조폐공사앞 제조를 요청하고(4분기), 한국조폐공사는 수입인지를 제조하여 한국은행 앞 인도(매년 초)하며, 이를 인수한 한국은행(국고증권실)은 각 지역본부의 연간 소요 희망량을 조사하여 매년초 해당 물량을 지역본부에 공급

○ 전자수입인지의 비중이 크게 확대됨에 따라 2017년이후 수입인지 신규제조는 없으며, 지역본부에 대해서도 국고증권실 보유 한도에서 제한적으로 공급

□ 통할점[36]의 판매기관 등에 대한 수입인지 공급은 결제모점 관할 판매기관의 권종별 직전 3개월 월평균 판매량에 6배수를 곱하여 산출한 수량(공급기준량)에서 전월말 재고량을 차감하여 전지 단위로 공급하나, 특별히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판매량 추이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용

공급가능수량 = 공급기준량 - 전월말 재고량 = (직전 3개월 월평균 판매량 × 6배수) - 전월말 재고량

○ 판매기관에 대한 수입인지 공급은 각 통할점별 결제모점 단위로 실시

○ 판매기관은 수입인지 수급 및 판매대금 결제업무시 대조, 확인할 수 있도록 통할점에 인감신고서를 제출

— 통할점은 판매기관에 대한 수입인지 공급시 수입인지청구서를 받고 수입인지송부서를 교부

36) 수입인지 업무를 통할하는 한국은행 국고증권실과 각 지역본부를 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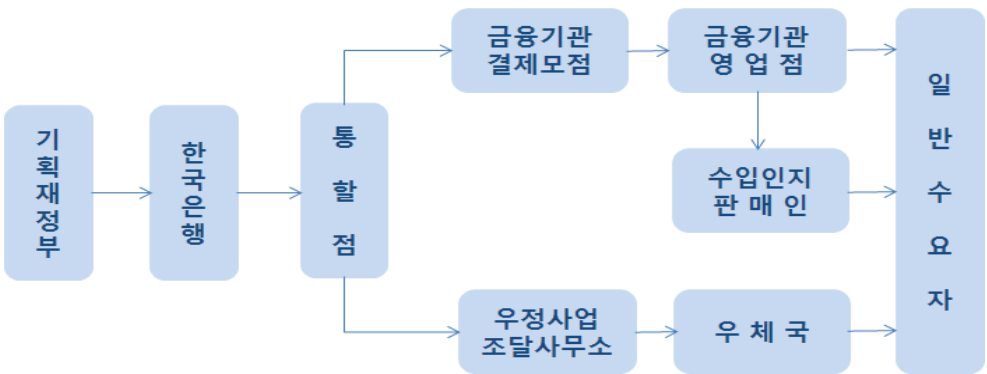
□ 각 통할점은 관할 수입인지 판매기관의 신청에 따라 적정 물량을 공급하고, 전월분 수입인지 판매대금을 매월 10일까지 수납

ㅇ 각 지역본부는 수납한 수입인지 판매대금을 매월 10일 국고증권실앞 전금하며, 국고증권실은 매월 15일까지 국고로 납입

<표 Ⅴ-3> 수입인지 수급 업무별 담당 기관

수급업무명	담당기관명	비 고
발 행	기획재정부(국고과)	
제 조	한국조폐공사	
수급총괄	한국은행 국고증권실	
수급통할	한국은행 통할점 (국고증권실 및 지역본부)	수입인지 공급, 판매대금 회수, 판매인 관리 등
판 매	우체국 및 금융기관 등 (판매인앞 공급 포함)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등에서 정한 판매기관

<그림 Ⅴ-1> 수입인지 수급 경로



□ 현재 수입인지 판매기관[37]은 우체국(「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3조)과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농·수협중앙회 및 회원조합, 농·수협은행, 신용협동조합[38],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로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서 정한 기관임

ㅇ 수입인지 판매기관의 결제모점은 한국은행 통할점에서 수입인지를 공급받아 각 영업점 등을 통해 판매한 후 판매대금을 익월 10일까지 통할점에 납입

<표 Ⅴ-4> 통할점별 수입인지 판매기관과의 수급 거래 현황(2021년 5월말 현재)

판매기관 \ 통할점	국고증권실	부산	대구경북	목포	광주전남	전북	대전충남	충북	강원	인천	제주	경기	경남	강릉	울산	포항	강남	계
경남은행													O					1
광주은행					O													1
국민은행	O																	1
농협은행	O																	1
대구은행			O															1
부산은행		O																1
상호저축은행중앙회	O																	1
새마을금고연합회	O																	1
수협은행	O																	1
신한은행	O																	1
우리은행	O																	1
우체국							O											1
전북은행						O												1
제주은행											O							1
중소기업은행	O																	1
KEB하나은행	O																	1
한국산업은행	O																	1
한국씨티은행	O																	1
한국SC제일은행	O																	1
계	12	1	1	—	1	1	1	—	—	—	1	—	1	—	—	—	—	19

37) 1980년 5월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의 제정 및 시행으로 수입인지 수급관리 총괄업무는 한국은행이, 판매업무는 우체국 및 금융기관이 담당. 동 법 시행 이전에는 체신부(우체국)가 수입인지 수급관리 및 판매를 담당

38) 수입인지 판매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현재 한국은행과의 수입인지 거래는 없음

제2절 수입인지의 판매

□ 판매기관의 수입인지 판매업무는 크게 일반판매와 할인판매로 구분

- ㅇ 일반판매 : 일반수요자를 대상으로 액면가격으로 판매
- ㅇ 할인판매 : 판매기관(공급기관)이 수입인지 판매인에게 할인가격(액면가격의 96%)으로 판매

□ 수입인지 판매인은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판매기관으로부터 수입인지를 할인가격으로 구입하여 일반수요자에게는 액면가격으로 판매하는 개인과 법인으로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공급기관을 거쳐 한국은행과 판매계약을 체결

<표 Ⅴ-5> 수입인지 판매인 추이

(명)

2015년말	2016년말	2017년말	2018년말	2019년말	2020년말
75	37	19	13	6	5

□ 정부는 한국은행, 수입인지 판매기관, 수입인지 판매인에게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수료를 지급하거나 보상

- ㅇ 한국은행은 현송여비, 소모품비 등 수입인지 현물 관리에 소요된 실비 상당액을 매년 기획재정부에 청구
- ㅇ 판매기관은 판매한 수입인지에 대해 액면가액의 4%를 수수료로 공제[39]
- ㅇ 수입인지 판매인은 수입인지 판매기관(거래금융기관)으로부터 4% 할인된 가격으로 수입인지를 구매하여 액면가액으로 판매

39) 수입인지 판매인에 대한 할인판매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매기관 수수료를 지급하거나 보상하지 않음

제3절 수입인지의 교환 및 환매

※ 관련 법령 :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수입인지 사무취급절차」 제14조

□ 수입인지 판매인이 보유하고 있는 수입인지 중 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오염·훼손되어 판매에 부적합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급기관에 교환청구 가능

ㅇ 판매인이 판매업무를 폐지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 또는 상속인이 남은 수입인지를 공급기관에 할인판매가격으로 환매해 줄 것을 청구 가능

□ 판매기관 또는 수입인지 판매인으로부터 수입인지를 구입한 일반인이 사용하지 아니한 수입인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오염·훼손되어 판매에 부적합한 것을 제외하고는 판매기관 또는 수입인지 판매인에게 교환 또는 환매 청구 가능(환매가격은 액면금액의 95%)

ㅇ 판매기관은 보유 수입인지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오염·훼손된 것을 제외한 손상수입인지와 판매인으로부터 교환 청구된 손상수입인지를 결제모점을 거쳐 통할점에 교환을 청구하거나 반납

제3장 수입인지 판매대금 회수 및 국고 납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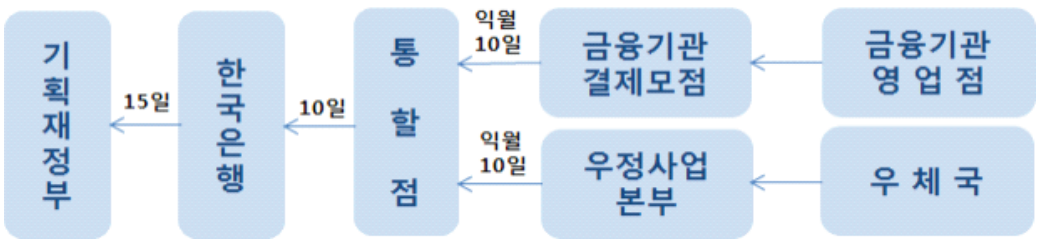
제1절 수입인지 판매대금 회수

□ 수입인지 판매기관은 전월중 판매된 수입인지 대금에서 수수료(액면가액의 4%)를 공제한 금액을 매월 10일까지 각 통할점별로 납부하고 각 지역본부는 이를 본부에 집중(수입인지판매계정)하고, 본부는 이를 15일까지 정부(일반회계)앞 일괄 납부

○ 각 지역본부는 관할 판매기관 결제모점으로부터 '수입인지 판매보고 및 대금납부서'를 접수하여 회계결제시스템에 입력하여 책임자 승인을 거치면 판매기관의 당좌예금계정(우체국은 우체국 예탁금계좌)에서 해당 금액이 차기되어 정부당좌예금의 수입인지판매계정(769)으로 입금

○ 국고증권실의 경우 관할 판매기관 결제모점이 한은금융망(BOK-Wire+)을 통해 "수입인지 판매보고 및 대금납부서"를 입력 제출하면 판매기관의 당좌예금계정에서 해당 금액이 차기되어 정부당좌예금의 수입인지판매계정(769)으로 입금(총괄계리-원화계리-회계처리 사후승인 조치 필요)

< 그림 Ⅴ-2 > 수입인지 판매대금 납입 경로



<참고 Ⅴ-9> 수입인지 판매보고 내용의 전산 심사사항

- 금월보고서의 전월말 재고와 전월 보고서의 금월말 재고수량 일치 여부
- 교환인수량과 교환공급량의 금액 환산액 일치 여부
  = Σ권종별 교환인수량 × 권종별 금액 = Σ권종별 교환공급량 × 권종별 금액
- 판매기관별 인수량과 한국은행 공급량의 일치 여부
- 금월말 재고의 정확성 여부
- 금월말재고량 = 전월말재고 + 본월중 인수량 + 교환인수 − 교환공급 − 일반판매 − 할인판매 + 환매
  ※ 교환인수 = 다른 권종과의 교환인수량 + (2015.4월 판매분부터) 전자수입인지 판매대금으로 환매한 수량
- 각 항목별 합계(=Σ권종별 수량)의 정확성 여부
- 공제금액의 적정성 여부
- 공제금액 = (일반판매액 합계 + 할인판매액 합계 − 환매액 합계) × 0.04
  (단, 공제금액 계산시 10원 미만은 버림)
- 납부금액의 정확성 여부
  ※ 납부금액 = 일반판매액 합계 + 할인판매액 합계 − 환매액 합계 − 공제금액

<표Ⅴ-6> 수입인지 수급 및 판매보고서상의 항목별 내용

구 분	금 월 분	누 계 량
인수량	조폐공사로부터 인수량 (지역본부의 경우 본부로부터의 인수량)	전년 11월말 전체재고(한국은행 + 금융기관 + 우체국) + Σ금월 인수량
폐기량	한국은행 폐기량 (지역본부의 경우 폐기 또는 타 지역본부 현송량)	Σ금월 폐기량 + Σ금월 타 지역본부 현송량
공급량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우체국 공급량	전년 11월말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 재고 + Σ금월 공급량
교환인수 교환공급	금융기관, 우체국의 교환인수, 교환공급	Σ금월 교환인수, 교환공급
판매량	금융기관, 우체국의 판매량	Σ금월 판매량
환매량	금융기관, 우체국의 환매량	Σ금월 환매량

주 : 수입인지는 전월중 판매대금을 금월의 세입으로 계상하므로 연간 누계량 산출은 전년 12월부터 금년 11월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함

<참고 Ⅴ-10> 금융기관 수입인지 판매대금 회계처리

1. 국고증권실

수행부서(팀)	계리구분	계리귀속(원장설치)부서(팀)	차변		대변	
			계정(계좌)	거래(전표)종류■	계정(계좌)	거래(전표)종류■
국고증권실	국고계리	증권팀			수입인지판매 <769>	① 자점국고내 대체
	자금계리	국고증권실	원화본지점 (금융결제국) <111401-0209>	① 대변 환전표	정부당좌예금 (기획재정부) <210401-7569>	② 차변 대체표
		금융결제국	당좌예금 (각금융기관) <210501-9999>	③ 대변 대체표	원화본지점 (국고증권실) <111401-0209>	④ 차변 환역전표

■ 번호는 전표일련번호

2. 지역본부

수행부서(팀)	계리구분	계리귀속(원장설치)부서(팀)	차변		대변	
			계정(계좌)	거래(전표)종류■	계정(계좌)	거래(전표)종류■
취급점	국고계리	증권팀			수입인지판매 <769>	① 자점국고내 대체
	자금계리	취급점	당좌예금 (각금융기관) <210501-9999>	① 대변 대체표	원화본지점 (국고증권실) <111401-0209>	② 차변 환전표
		국고증권실	원화본지점 (취급점) <111401-9999>	③ 대변 환역전표	정부당좌예금 (기획재정부) <210401-7569>	④ 차변 대체표

■ 번호는 전표일련번호

< 참고 Ⅴ-11 > 우체국 수입인지 판매대금 회계처리

수행부서(팀)	계리구분	계리귀속(원장설치)부서(팀)	차변		대변	
			계정(계좌)	거래(전표)종류■	계정(계좌)	거래(전표)종류■
대전충남본부	국고계리	증권팀	우체국예탁금 <771-400176>	① 자점국고내대체	국고송금 <733>	② 자점국고내대체
		대전충남본부	국고송금 <733>	③ 자점국고내대체		
		증권팀			수입인지판매 <769>	④ 자점국고내대체
	자금계리	대전충남본부	원화본지점(국고증권실) <111401-0209>	③ 대변 환역전표		
		국고증권실	정부당좌예금(기획재정부) <210401-7569>	① 대변 대체표	원화본지점(대전충남본부) <111401-0655>	② 차변 환전표
		대전충남본부			원화본지점(국고증권실) <111401-0209>	④ 차변 환전표
		국고증권실	원화본지점(대전충남본부) <111401-0655>	⑤ 대변 환역전표	정부당좌예금(기획재정부) <210401-7569>	⑥ 차변 대체표

■ 번호는 전표일련번호

제2절 판매대금 국고 납입

□ 본부는 입금된 판매대금을 매월 15일까지 기획재정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으로 납입

ㅇ 본부 및 지역본부 수납분을 종합한 '수입인지 수급 및 판매명세서'와 '수입인지 판매대금 납입명세서'상의 판매 수량과 대금 수납액과의 일치 여부 확인한 후 '납입고지서 및 영수증'을 작성하여 이 중 수납기관용은 국고팀 국고계에 송부하고, 납부자용은 '수입인지 수급 및 판매명세서' 및 '수입인지 판매대금 납입명세서'와 함께 기획재정부앞 송부

<참고 Ⅴ-12> 수입인지 판매대금 국고납입시 납입고지서 및 영수증 작성 예시

■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5.11.26>

우체국

요금후납

납입고지서 재중

부 과 내 역

산 출 근 거

▪ 납입고지서 및 영수증(납부자용)

납부자	한국은행	실명번호	104-82-02591
주 소	(04531) 서울 중구 남대문로 39(남대문로3가)		

세 목	납 기 내	납 기 후
	2021년 4월 15일	
수입인지대금납부(2104146)	183,550,470원	
합 계 금 액	183,550,470원	

위금액을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인 은행 또는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산림조합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금액을 정히 영수 합니다.

* 납기후 수납불가

년 월 일 수납인

안 내 말 씀
◆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산림조합을 방문하거나 인터넷 뱅킹의 방법으로 납부 하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납부는 은행 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 (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 납입고지서 및 영수증(수납기관용)

납부번호

회계년도: 2021 회계: 일반회계 소관: 기획재정부

납 부 자: 한국은행 실명번호 : 104-82-02591

금융기관	징수관계좌	세 목 (953)	납 기 내	납 기 후
			2021년 4월 15일	
001	181068	수입인지대금납부(2104146)	183,550,470원	
합 계 금 액			183,550,470원	

위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납기후 수납불가

수납인

제4장 수입인지 판매인 관리 및 보고

제1절 수입인지 판매계약의 체결

□ 수입인지 판매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구비한 후 할인판매금융기관(이하 '거래금융기관')[40]을 경유하여 통할점앞으로 수입인지 판매계약 체결을 신청

<참고 Ⅴ-13> 수입인지 판매계약 체결 신청서류

- 수입인지 판매에 관한 계약체결 신청서
- 수입인지 판매계약서(2부)
- 주민등록증(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는 알아볼 수 없도록 지운 후 접수
- 판매소 설치장소의 신청인 소유 또는 임차 증빙서류
- 수입인지 판매계약 신청내용 확인표(금융기관이 작성)

□ 통할점은 서류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이 관련 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해당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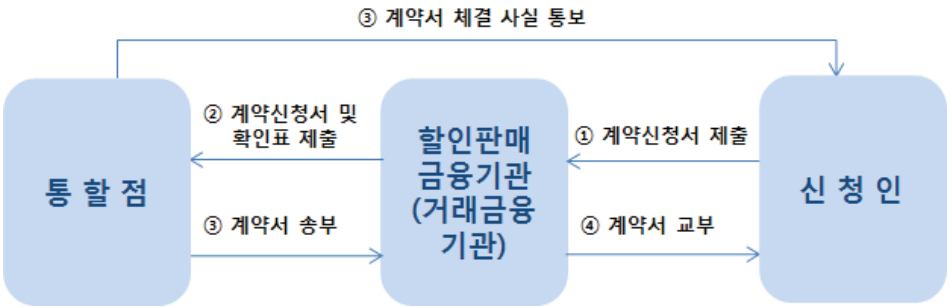
ㅇ 판매계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한 경우 판매계약서 2부에 각각 기명날인한 후 1부는 통할점이 보관하고, 나머지 1부는 거래금융기관을 경유하여 신청인앞 송부

40) 향후 4%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인에게 지속적으로 수입인지를 공급하고자 하는 금융기관 영업점

< 참고 Ⅴ-14 > 수입인지 판매계약 체결시 심사사항

- 최근 1년간 수입인지 판매계약을 위반하여 계약해지를 당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 일반 공중에게 판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
- 판매소 설치 예정 장소를 신청인이 소유하거나 임차하고 있는지 여부
- 신청인의 판매소 설치예정 장소가 기 등록된 판매인이 운영하고 있는 판매소와 동일 주소지인지 여부
- 판매계약 체결내역의 상세화면을 통해 주소 중복 여부 확인
- 수입인지 판매인으로 이미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

< 그림 Ⅴ-3 > 수입인지 판매계약 체결 절차



제2절 수입인지 판매계약의 변경 및 해지

1. 판매계약의 변경

□ 수입인지 판매인은 성명, 판매소 설치장소(주소), 거래금융기관 등 판매계약 내용을 변경한 경우 거래금융기관에 '수입인지 판매계약 변경 통보서'를 작성하여 제출

□ 거래금융기관은 동 변경통보서 등 관련 서류를 통할점 앞으로 송부

ㅇ 판매소 설치장소 변경의 경우 '수입인지 판매계약 신청내용 확인표'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 확인하고 이를 함께 제출

□ 통할점은 동 변경통보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계약이 변경되었음을 판매인 및 거래금융기관앞 통보

ㅇ 거래금융기관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전 거래금융기관'이 당해연도중 수입인지 할인 판매 명세장 사본 1부를 '변경 후 거래금융기관'에 송부하도록 안내

2. 판매계약의 해지

□ 판매인이 판매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수입인지 판매계약 해지통보서를 할인판매 금융기관을 경유하여 통할점에 제출

ㅇ 해당 통할점은 동 판매계약을 해지 처리

□ 통할점은 수입인지 판매인이 1) 최근 1년 이상 거래금융기관으로부터 수입인지 구매실적이 없는 경우 또는 2) 판매계약서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판매인을 대상으로 판매의사 유무, 계약 미이행사실 등에 관한 의견을 조회한 후 판매계약의 해지 여부를 결정

<참고 Ⅴ-15> 수입인지 판매인의 준수사항

- 일반인의 수요에 부족하지 않도록 수입인지 비치
- 수입인지의 정가 판매
- 주소 및 성명 변경(개명을 말함), 수입인지 판매소 이전시 지체없이 공급기관을 경유하여 통할점에 통보
- 지정된 공급기관 이외로부터의 수입인지 공급을 받지 않을 것

제3절 수입인지 판매인의 판매실적 관리

□ 할인판매금융기관 본점은 판매인의 연간 수입인지 판매실적을 판매인별 할인판매보고서에 의해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 국고증권실 앞 제출

ㅇ 국고증권실은 이를 통할점별로 분류하여 해당 통할점 앞 송부

□ 통할점은 전년도 중 수입인지 구매실적이 없는 판매인을 대상으로 매년 상반기 중 판매의사 유무를 조사

— 최근 1년간 수입인지 판매실적이 없는 판매인과 판매지속의사가 없는 판매인에게는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관할 세무서 앞 수입인지 판매인 과세자료 통보(2010. 2월 폐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별표의 개정(2010년 2월 10일)으로 한국은행의 수입인지 판매인 관리업무와 관련된 '과세자료 제출기관', '과세자료의 범위 및 제출시기 등'이 삭제됨

ㅇ 이에 따라 수입인지 판매인과 관련하여 각 통할점의 관할 세무서 앞 정기적 세무자료 제출 의무[41]가 없어짐

41) 2010년 2월 10일 이전, 각 통할점은 전년도중 거래금융기관에서 수입인지를 1억원 이상 매수한 수입인지 판매인에 관한 자료를 매년 1월 31일까지 관할 세무서 앞으로 제출하여야 하였음

제4절 수입인지 관련 보고(기획재정부 앞)

※ 관련 법령 :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수입인지 사무취급절차」제17조

1. 수입인지 수급·판매명세 및 대금납입명세서 제출(월보)

□ 국고증권실은 매월 15일까지 '월중 수입인지 수급 및 판매명세서' 및 '수입인지 판매대금 납입명세서'를 기획재정부 앞 제출

2. 수입인지 출납·보관자 현황 일람표 제출(연보)

□ 판매기관 본점은 연도말 현재의 '수입인지 출납·보관자[42] 현황 일람표'를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 국고증권실 앞 제출

□ 국고증권실은 한국은행 및 판매기관의 연도말 현재의 '수입인지 출납·보관자 현황 일람표'를 다음 연도 1월 15일까지 기획재정부앞 제출

3. 수입인지 판매계약 체결 및 해지 현황(연보)

□ 국고증권실은 전년도중 한국은행의 '수입인지 판매계약 체결 및 해지현황'을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 15일까지 기획재정부앞 제출

---

42) 한국은행 및 판매기관이 관리하는 수입인지는 국가의 소유물로서 출납·보관자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에 대하여 변상책임을 부담

Ⅵ. 정부유가증권 업무

제1장 업무 개요

제2장 정부유가증권 수급 및 관리

제3장 정부유가증권 수탁 및 환부

제4장 정부유가증권 월계대사 및 계산보고

제5장 정부유가증권 관련 기타 업무

<참고 Ⅵ-1> 정부유가증권 관련 용어 해설

□ 정부유가증권 : 정부소유유가증권 및 정부보관유가증권

ㅇ 정부소유유가증권 : 정부소유의 국공채, 정부에서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증권 등 정부에 귀속된 유가증권

ㅇ 정부보관유가증권 : 정부와의 각종 계약보증금 또는 법령에 의해 제출되어 정부가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유가증권이며 소유권은 제출자에게 귀속

□ 취급점 : 한국은행 국고증권실·지역본부 또는 정부유가증권 업무를 취급하는 국고수납대리점

ㅇ 통할점 : 국고수납대리점을 관할하는 한국은행 국고증권실 또는 지역본부

ㅇ 대리점 : 정부유가증권 업무를 취급하는 국고수납대리점

□ 기탁·환부

ㅇ 기탁 : 유가증권의 보관의뢰

ㅇ 환부 : 유가증권의 반환

□ 월계대사표·수불계산서

ㅇ 월계대사표 : 정부유가증권 취급공무원과 취급점이 상호 대조·확인하기 위하여 전월중 수급내역(수탁, 환부, 잔액)을 나타내는 증명서

ㅇ 수불계산서 : 각 회계별 월계대사표를 집계한 증명서로 한국은행에 정부유가증권 계좌를 개설한 관서의 전월중/연간 수급내역을 종합적으로 파악 가능

제1장 업무 개요

□ 정부유가증권은 정부 소유 또는 정부가 일시 보관하는 증권으로서 한국은행 또는 국고수납대리점은 정부유가증권을 수탁받아 보관·관리하는 업무를 수행

ㅇ 정부소유유가증권 : 정부소유의 국공채, 정부에서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증권 등 정부에 귀속된 유가증권

ㅇ 정부보관유가증권 : 정부와의 각종 계약보증금 또는 법령에 의해 제출되어 정부가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유가증권이며 소유권은 제출자에게 귀속

□ 정부유가증권 관련 법규는 한국은행과 정부의 정부유가증권 취급에 관한 절차 등을 규정

ㅇ 관련 법규 : 「한국은행법」 제72조(보호예수업무), 「국가재정법」 제93조(유가증권의 보관), 「국유재산법」 제15조(증권의 보관·취급),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기획재정부령)」, 「한국은행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기획재정부령)」 및 「정부유가증권 사무취급절차」 등

□ 정부유가증권은 증권 종류에 따라 국공채, 주식, 증권으로 분류

ㅇ 국공채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국채 또는 지방채, 기타 공공단체가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채권으로서, 대부분 채권이 한국예탁결제원 및 한국은행을 통해 등록발행되므로 과거에 실물 발행된 국민주택채권 등 일부를 제외하면 보관 실적이 거의 없음

ㅇ 주식 :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권으로 한국은행에 기탁된 주식은 1) 계약보증금 용도로 제출된 정부보관유가증권, 2) 납세자가 물납제도[43]를 이용함으로써 정부로 소유권이 귀속된 정부소유유가증권, 3) 정부가 공기업 등의 지분을 보유하여 실물발행된 정부소유유가증권[44]이 대부분

ㅇ 증권 : 국공채나 주식을 제외한 기타 증권으로서 한국은행에 기탁된 증권은 대부분 출자증권

· 사채
· 특별법에 의하여 채권발행이 인정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 증권투자신탁 또는 신탁에 의한 수익증권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
· 상품을 대표하는 창고증권 등

* 정부유가증권은 현물 유가증권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등록발행된 유가증권의 등록통지서 등은 유가증권에 포함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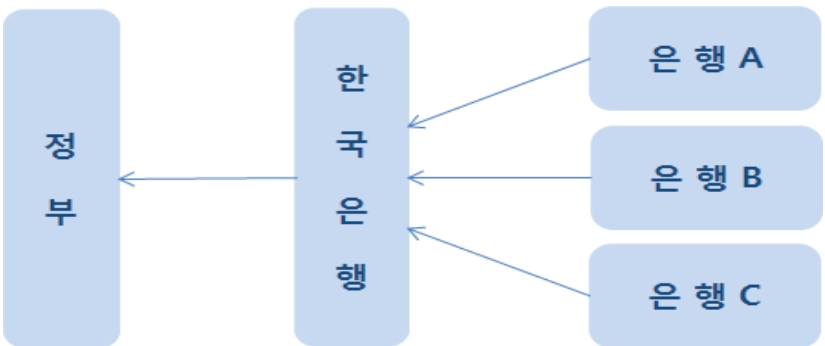
43) 현금 대신 주식, 부동산, 채권 등으로 조세채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한 제도
44) 한국전력공사, 한국감정원, 인천국제공항철도 등

제2장 정부유가증권 수급 및 관리

□ 한국은행 또는 국고수납대리점은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하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이 기탁한 정부유가증권을 보관·관리

ㅇ 국고수납대리점(이하 대리점)은 전월중의 정부유가증권 수급내역을 매월 20일까지 소속 통할점에 보고하며, 통할점은 관할 대리점 및 자체 수급분을 종합하여 국고증권실로 매월 25일까지 보고

<그림 Ⅵ-1> 정부유가증권 수급내역 관리 체계



※ 정부유가증권 총량(정부)
= 한국은행 보고분 + 정부 자체 보관분(불소지주권, 등록채권 등)

제3장 정부유가증권 수탁 및 환부

제1절 정부유가증권 계좌 관리

1. 계좌 개설

□ 중앙관서의 장 또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으로부터 정부유가증권 계좌개설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대리점 및 통할점은 다음 서류를 접수

① 계좌개설요청공문 ②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의 직위와 성명을 표시한 임명통지 공문 (중앙관서장 명의) ③ 인감명판(서명) 신고서

□ 대리점이 업무를 취급하는 경우 접수된 서류의 사본을 등기우편 또는 Fax로 소속 통할점에 송부하고, 통할점은 해당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 대한 수탁계좌번호를 부여하여 관리

ㅇ 해당 대리점이 신규로 정부유가증권사무를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 정부유가증권 사무취급신청서를 통할점으로 사무개시 예정일 2일전까지 제출

ㅇ 통할점은 소관부서의 부처 또는 특별회계의 국고코드를 입력하여 계좌번호를 생성

□ 계좌개설 후 대리점 및 통할점은 인감명판(서명)신고서를 인감부에 비치하여 인감 대조용으로 사용

2. 계좌 폐쇄

□ 취급관서로부터 당해관서의 이전 또는 폐쇄 등으로 당해 취급공무원 명의의 계좌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 취급관서의 이전 또는 폐지 공문 접수

ㅇ 계좌를 마감한 후 폐지 계좌에 대하여 당해월분 월계대사표 3통을 작성하여 계좌폐쇄의 표시를 한 후 취급공무원에게 송부하고 그 중 2통은 취급공무원의 증명을 받아 통할점 경유 한국은행 국고증권실에 1통을 송부

ㅇ 인감명판(서명) 신고서는 계좌 폐쇄일자 및 폐기 표시 후 별도 보관

3. 취급 공무원의 변경

□ 취급관서의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이 변경되는 경우 아래의 서류를 징구

ㅇ 변경공문, 신임 취급공무원 임명통지서 및 신규 인감명판(서명)신고서

ㅇ 전임 취급공무원 인감명판(서명)신고서 폐기 표시 후 별도 보관

ㅇ 신임 취급공무원 인감명판(서명)신고서 인감부 편철

4. 취급 관서 명칭 변경

□ 취급관서로부터 명칭변경에 관한 공문과 명칭변경 후 인감명판(서명) 신고서 접수

ㅇ 변경 전 인감명판(서명) 신고서는 폐기표시 후 별도 보관하고, 변경 후 인감명판(서명) 신고서는 인감부에 편철

제2절 정부유가증권 수탁

1. 정부소유유가증권

□ 정부소유유가증권은 유가증권취급공무원 또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이 지정한 대리인이 기탁하며 유가증권 실물과 함께 다음의 서류를 제출

① 정부소유유가증권 기탁서 ② 위임장(유가증권취급공무원이 지정한 대리인이 제출시) ③ 신분증(신분증은 복사하여 그 사본을 별도 보관)

□ 통상적으로 담당자는 수탁 1영업일전까지 Fax로 상기 서류와 유가증권 사본을 접수받아 기재사항의 오류 여부 등을 사전 점검하고 유가증권 수탁시 다음 사항을 점검

① 정부소유유가증권 기탁서, 위임장에 날인된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의 인감과 한국은행에 등록된 인감과의 일치 여부 ② 기탁서에 기재된 금액, 장수의 오류 여부 ③ 유가증권 실물과 기탁서 기재사항과의 일치 여부

□ 수탁이 완료되면 담당자는 정부소유유가증권 수탁증서를 해당 유가증권취급공무원 또는 대리인에게 직접 교부

< 참고 Ⅵ - 2 > 정부소유유가증권 기탁서 작성 예시

<정부유가증권 취급규칙 : 별지 제1호 서식>

정부소유유가증권기탁서

한국은행 국고증권실앞 2021년 3월 2일

기탁 제2021-3호

회계명 : 일반회계

기획재정부 유가증권취급공무원 신고인감

아래의 증권을 기탁합니다.

증권명칭	권 면 액	기 번 호	장수	금 액	부속이표	비고
산은금융지주주권	1,000,000,000	산가 제00001호	1	1,000,000,000		
계			1	1,000,000,000		

< 참고 Ⅵ - 3 > **정부소유유가증권 수탁증서 작성 예시**

<한국은행 정부유가증권 취급규칙 : 별지 제1호 서식>

정부소유유가증권수탁증서

수탁번호 : 2021-001 2021년 3월 2일

정부유가증권 취급공무원 한국은행 국고증권실 한국은행 인감
기획재정부 OO과
김성실 앞
회 계 명 : 일반회계

아래의 증권을 수탁합니다.

증권명칭	권면액	기번호	장수	금액	부속이표	비고
한국수자원 공사출자 증권	1,000,000,000	제589호	1	1,000,000,000	0	
합 계			1	1,000,000,000	0	

2. 정부보관유가증권

□ 정부보관유가증권은 유가증권취급공무원 또는 동 공무원으로부터 납입인가를 받은 제출자가 기탁하며 유가증권 실물과 함께 다음의 서류를 제출

① 정부보관유가증권 납입서 ② 정부보관유가증권 격지납입인가서(제출자 기탁시) ③ <한국은행 정부유가증권 사무취급절차 : 별지 제5호> 인감신고서 (제출자 기탁시) ④ 위임장(제출자가 법인이거나 대리인을 통해 기탁시)

□ 통상적으로 담당자는 수탁 1영업일전까지 Fax로 상기 서류와 유가증권 사본을 접수받아 기재사항의 오류 여부 등을 사전 점검하고 유가증권 수탁시 다음 사항을 점검

① 정부보관유가증권 납입서, 위임장에 날인된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의 인감과 한국은행에 등록된 인감과의 일치 여부 ② 납입서에 기재된 금액, 장수의 오류 여부 ③ 유가증권 실물과 납입서 기재사항과의 일치 여부

□ 수탁이 완료되면 담당자는 정부보관유가증권 납입통지서를 제출자에게 교부하고 정부보관유가증권 수탁증서를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송부

< 참고 Ⅵ - 4 > 정부보관유가증권 납입서 작성 예시

<정부유가증권 취급규칙 : 별지 제6호 서식>

제 호

정부보관유가증권납입서

한국은행 국고증권실 앞

2021년 4월 20일

제출자 주소 서울 강동구 둔촌동 100번지

생년월일 1980. 10. 10.

성명 이 한 은 ㊞

기획재정부의 보관유가증권으로서 아래와 같이 납입합니다.

납 입						
증권명칭	권 면 액	기 번 호	장 수	금 액	부속이표	비 고
대한은행	100,000,000	제82~83호	2	200,000,000	-	-
계			2	200,000,000		

<참고 Ⅵ - 5> 정부보관유가증권 격지납입인가서 작성 예시

<정부유가증권 취급규칙 : 별지 제5호 서식>

제　　호

정부보관유가증권격지납입인가서

기획재정부 유가증권취급공무원　　2021년　　3월　　2일

(성 명) 김 성 실 앞

제출자 주소 서울 강동구 둔촌동 100번지

생년월일 1980. 10. 10.

성명　이 한 은 ㊞

아래의 증권을 한국은행 국고증권실에 납입하고자 하오니 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사유	계 약 보 증 금		격 지 납입사유	업 무 상 편 의		
증권명칭	권 면 액	기 번 호	장 수	금 액	부속이표	비 고
대한은행	100,000,000	제82~83호	2	200,000,000	-	-
계			2	200,000,000		

위 증권의 납입을 인가합니다.

2021년　　3월　　2일

기획재정부 유가증권취급공무원

(성 명) 김 성 실 신고 인감

주 소　서울 강동구 둔촌동 100번지

생년월일 1980. 10. 10.

성 명　이 한 은　앞

< 참고 Ⅵ - 6 > 정부보관유가증권 납입 통지서 작성 예시

<한국은행 정부유가증권 취급규칙 : 별지 제3호 서식>

정부보관유가증권 납입통지서

기획재정부 OO과 정부유가증권 취급공무원 2021년 4월 20일
(성명) 김성실 앞
보관번호 : 2021-001
납입자 주소 :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100번지
생년월일 : 1980. 10. 10.
성명 : 이한은

한국은행 국고증권실 한국은행 인감

귀 관서의 보관유가증권으로서 아래의 증권을 정히 수령함

증권 명칭	권면액	기번호	장수	금액	부속 이표	비고
대한 은행	100,000,000	제82~83호	2	200,000,000	0	
합 계			2	200,000,000	0	

위의 증권을 (○○)에게 환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관서)유가증권 취급공무원 (성 명) (인) 한국은행(○○)점 앞	위의 증권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납입자 주소 : 생년월일 성 명 (인) 한국은행(○○)점 앞

3. 예탁대상증권*

* 상장증권, 집합투자증권, 한국예탁결제원 또는 한국은행을 등록기관으로 하여 등록발행하는 채권, 기업어음증권 및 기타 어음, 양도성예금증서, 상장채권과 매출일자만 다른 동종의 비상장채권, 예탁주권의 권리행사 등으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권, 신주인수권 증서·증권

□ 예탁대상증권은 한국예탁결제원에 집중예탁되어 있는 증권으로 이를 실물로 인출하여 한국은행 또는 대리점에 기탁 가능

ㅇ 보증금이나 공탁금 등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2조에 따라 상장증권(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채무증권, 지분증권)으로 대납하는 경우가 대부분

□ 예탁대상증권을 수탁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추가적으로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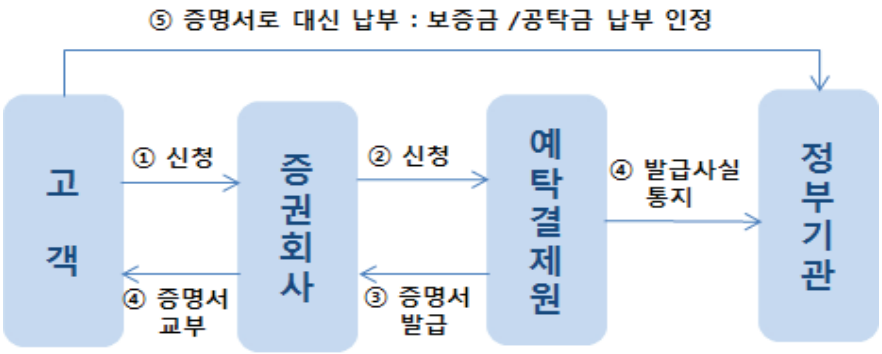
① 유가증권의 명의개서(한국예탁결제원→실질소유주)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② 통일규격유가증권[45] 과 일치하는지 여부 ③ 상장증권의 경우 기탁 관련 서류에 기재된 금액이 한국거래소가 고시하는 대용가격과 일치하는지 여부

□ 예탁대상증권을 한국은행에 기탁하고자 하는 경우 실물 인·수도에 따른 위·변조사고 위험, 집중예탁제도 등을 감안하여 예탁증명서제도를 이용하도록 지도

ㅇ「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71조(보증금 등의 대신 납부) 등에 따라 각종 보증금 및 공탁금 등을 상장증권으로 대납할 수 있으며 대납된 유가증권은 처분이 제한됨

45) 유가증권의 위·변조를 방지하여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이 정한 바(통일규격증권등취급규정)에 의하여 통일되어 발행된 주권,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 증권

< 그림 Ⅵ - 2 > 예탁증명서 제도를 이용한 보증금/공탁금 납부 절차



제3절 정부유가증권 환부

1. 정부소유유가증권

□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이 기탁한 정부소유유가증권을 환부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

① 정부소유유가증권 환부청구서 및 수탁증서 ② 위임장(유가증권취급공무원이 지정한 대리인이 수령시) ③ 신분증(신분증은 복사하여 그 사본을 보관하되 생년월일 뒷자리는 알아볼 수 없도록 지워서 보관)

□ 담당자 및 책임자는 다음사항을 상호 확인하여 정부유가증권 환부절차를 진행

① 정부소유유가증권 환부청구서 및 수탁증서의 인감을 한국은행에 등록된 인감과의 일치 여부 ②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이 지정한 대리인이 유가증권을 대리수령할 경우 1) 위임장에 날인된 인감과 한국은행에 등록된 인감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2) 위임장에 기재된 대리인과 본인과의 일치 여부를 신분증 확인을 통해 점검

<참고 Ⅵ-7> 정부소유유가증권 환부청구서 작성 예시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정부소유유가증권환부청구서

한국은행 국고증권실 앞 2021년 4월 2일

수탁증서번호 2021-001

청구 제 호 기획재정부 유가증권취급공무원

회계명 : 일반회계 (성 명) 김성실 신고인감

아래의 증권을 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권명칭	권 면 액	기 번 호	장 수	금 액	비 고
한국전력	1,000,000	제1호~100호	100	100,000,000	
계			100	100,000,000	

위의 증권을 영수합니다.

2021년 4월 2일

기획재정부 유가증권취급공무원

회계명 : 일반회계 (성 명) 김성실

한국은행 국고증권실 앞 신고인감

2. 정부보관유가증권

(유가증권 취급공무원이 직접 환부받고자 하는 경우)

□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이 기탁한 정부보관유가증권을 환부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

① 정부보관유가증권 환부청구서 및 수탁증서 ② 위임장(유가증권취급공무원이 지정한 대리인이 수령시) ③ 신분증(신분증은 복사하여 그 사본을 보관하되 생년월일 뒷자리는 알아볼 수 없도록 지워서 보관)

□ 담당자 및 책임자는 다음 사항을 상호 확인하여 정부유가증권 환부절차를 진행

① 정부보관유가증권 환부청구서 및 수탁증서의 인감을 한국은행에 등록된 인감과의 일치 여부 ②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이 지정한 대리인이 유가증권을 대리수령할 경우 1) 위임장에 날인된 인감과 한국은행에 등록된 인감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2) 위임장에 기재된 대리인과 본인과의 일치 여부를 신분증 확인을 통해 점검

(정부보관유가증권 제출자가 환부받고자 하는 경우)

□ 제출자가 유가증권취급공무원 앞으로 정부보관유가증권 환부청구서를 제출하면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정부보관유가증권 수탁증서 및 정부보관유가증권 납입통지서에 환부예정일, 환부증권 수령인을 기재하여 제출자에게 교부

□ 제출자는 유가증권이 기탁되어 있는 한국은행 또는 대리점에 다음 서류를 제출

① 정부보관유가증권 수탁증서 및 정부보관유가증권 납입통지서 ②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제출자가 지정한 대리인이 수령시) ③ 신분증(신분증은 복사하여 그 사본을 보관하되 생년월일 뒷자리는 알아볼 수 없도록 지워서 보관)

□ 담당자 및 책임자는 다음 사항을 상호 확인하여 정부유가증권 환부절차를 진행

① 정부보관유가증권 수탁증서 및 납입통지서의 유가증권취급공무원 인감과 한국은행에 등록된 인감과의 일치 여부 ② 정부보관유가증권 수탁증서 및 납입통지서에 기재된 유가증권 수령인의 인감이 한국은행에 등록된 인감과의 일치 여부 ③ 위임장에 기재된 대리인과 본인과의 일치 여부를 신분증 확인을 통해 확인하고 제출받은 인감증명서의 진위 여부를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여 확인* * 필요시 해당 유가증권취급공무원 및 위임인 앞으로 유선 확인

제4장 정부유가증권 월계대사 및 계산보고

제1절 월계대사

□ 정부유가증권 월계대사는 유가증권 수탁기관인 각 통할점과 대리점이 유가증권취급공무원 앞으로 월중 유가증권 수탁·환부내역 및 월별 유가증권 보관내역을 송부하여 이에 대한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의 확인을 받는 것을 말함

□ 통할점 및 대리점은 전월중 정부유가증권 수탁·환부 등 거래 내역을 각 유가증권취급공무원 앞으로 통보하여 상호 대조확인하며 한국은행 국고증권실은 이를 종합관리하여 익월말까지 기획재정부앞으로 통보

ㅇ 월계대사 절차는 1) 통할점·대리점－유가증권취급공무원간 전월중 거래내역 확인, 2) 전월중 전체 거래내역의 종합, 3) 기획재정부앞 수불계산서 송부로 구분

1) 통할점·대리점－유가증권취급공무원간 전월중 거래내역 확인

① 취급점은 전월중 거래내역을 표기한 정부유가증권 월계대사표 3부를 유가증권취급공무원 앞으로 매월 7일까지 송부

②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동 월계대사표의 거래내역을 확인한 후 인감을 날인하여 월계대사표 1부는 자체 보관, 2부는 취급점으로 송부

③ 취급점(국고수납대리점)은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의 인감 일치 여부 등을 확인 점검하고 월계대사표 1부를 통할점(관할 한국은행)앞으로 20일까지 송부

④ 통할점은 관할 국고수납대리점의 거래내역 및 통할점 취급 정부유가증권 거래내역을 종합하여 정부유가증권 수급명세서를 작성한 후 월계대사표와 함께 국고증권실앞으로 25일까지 송부

<참고 Ⅵ-8> 정부유가증권 월계대사표 작성 예시

<한국은행 정부유가증권 취급규칙 : 별지 제6호 서식>

정부(소유·보관)유가증권월계대사표
(2021년 3월분)

정부유가증권취급공무원 2021년 4월 1일
기획재정부 OO과 김성실 앞
회계명 : 일반회계 수탁계좌번호 123456 한국은행 국고증권실 (인)

한국은행 인감

종 별	수 입		환 급		잔 액		비 고
	장 수	권면액	장 수	권면액	장 수	권면액	
국공채	0	0	0	0	0	0	
주식	0	0	0	0	12,000	12,000,000,000	
증권	70	5,000,000,000	0	0	70	5,000,000,000	
계					12,070	17,000,000,000	

위의 사항을 증명합니다.

2021년 4월 12일

기획재정부 OO과
김성실 (인)
한국은행 국고증권실 앞

신고 인감

정부유가증권취급공무원

2) 전월중 전체 거래내역의 종합

① 국고증권실은 통할점이 송부한 정부유가증권 수급명세서 및 월계대사표를 대조·확인하며 수급명세서와 회계결제시스템 자료의 일치 여부를 검증

② 개별자료의 검증이 완료되면 국고증권실은 통할점의 정부유가증권 수급명세서를 종합하여 수불계산서를 작성

□ 기획재정부앞 수불계산서 송부

ㅇ 국고증권실은 매월말까지 전월중 정부유가증권 수불계산서를 기획재정부 출자관리과 앞으로 송부

— 수불계산서에는 각 회계별 전월중 정부유가증권 수탁·환부내역 및 전월말 기준 잔액이 기재

제2절 감사원앞 자료 송부

□「국가재정법 시행령」제46조(유가증권의 관리), 감사원의 「계산증명규칙」 제83조에 따라 한국은행은 매년 1월말까지 전년도 정부유가증권 수불계산서를 감사원 앞으로 송부

ㅇ 국고증권실 담당자는 회계결제시스템에서 전산자료 변환을 실행하여 감사원의 계산증명자료제출시스템(http://enais.bai.go.kr)에 전산자료(text file)를 업로드한 후 감사원 앞으로 동 자료를 송부했음을 공문으로 통보

제5장 정부유가증권 관련 기타 업무

제1절 정부유가증권 보관 전환

□ 보관 전환이란 취급점이 보관·관리중인 정부보관유가증권을 다른 유가증권 취급공무원 계좌로 대체하는 업무로써 다음 절차에 따라 처리

ㅇ 다른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의 계좌로 보관 전환하고자 하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정부보관유가증권 보관전환청구서에 보관전환의사를 기재하여 해당 취급공무원에게 송부하고 정부보관유가증권 수탁증서 및 납입통지서에 보관전환 의사를 기재하여 취급점으로 송부

ㅇ 취급점은 구 취급공무원의 계좌에서 해당 유가증권을 환부하고 신 취급공무원의 계좌로 수탁 처리하며 신 취급공무원 앞으로 수탁증서, 구 취급공무원 앞으로 보관전환필통지서를 송부

ㅇ 취급공무원의 계좌가 서로 다른 취급점에 개설된 경우 구 취급점은 해당 유가증권을 환부처리하여 보관유가증권 실물 및 정부유가증권 송부서를 신 취급점으로 인계하며, 신 취급점은 이를 수탁처리한 후 구 취급점에 정부유가증권 수령증을, 신 취급공무원에 수탁증서를 각각 교부

제2절 상환 등이 개시되는 유가증권의 처리

□ 취급점이 관리·보관중인 정부소유유가증권 중 원금상환 또는 이자지급이 개시되는 증권이 있을 경우 이를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함으로써 소유유가증권에 대한 원활한 권리행사를 지원하며 다음 절차에 따라 처리

① 원금상환 또는 이자지급이 예정된 정부소유유가증권이 있는 경우 해당 유가증권 취급공무원앞으로 정부유가증권 상환기일통지서 또는 정부유가증권 이자지급기일통지서를 1개월 전 송부

② 원금상환 또는 이자지급이 개시된 후 1년이 경과되어도 해당 유가증권취급공무원으로부터 환부청구가 없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취급공무원에게 이관하여야 하는 바, 지역본부의 경우 이를 국고증권실앞 보고

③ 국고증권실은 기획재정부장관(해당 유가증권이 특별회계에 속하는 경우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 이관할 취급공무원 및 취급점에 대한 지시를 받아 취급점에 통보

제3절 잔액 증명(현재액증명서 발급)

□ 정부유가증권 현재액증명서는 해당 계좌의 정부유가증권 종류 및 잔액을 증명해주는 문서로 유가증권취급공무원 교체시 한국은행 앞으로 발급을 의뢰

ㅇ 한국은행은 전임 유가증권취급공무원으로부터 <한국은행 정부유가증권 사무취급절차 : 별지 제14호>의 정부유가증권 현재액증명청구서를 받아 유가증권취급공무원 인감과 한국은행에 등록된 인감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정부유가증권 현재액증명서를 발급

ㅇ 전임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이 인사 이동 등으로 인해 동 청구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관서로부터 정부유가증권 현재액증명서 발급요청 공문 및 신임 유가증권취급공무원 인감신고서를 접수하여 처리

□ 한편 계약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보관유가증권을 기탁한 제출자가 보관한 유가증권의 잔액증명을 의뢰할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

ㅇ 해당 제출자로부터 잔액증명청구서를 접수한 후 다음 형태의 잔액증명서를 발급

<참고 Ⅵ-9> 정부보관유가증권 현재액증명서 작성 예시

정부유가증권 취급공무원 한국은행 국고증권실(인)
기획재정부 OO과
김성실 앞

2021년 4월 30일 현재 귀 관서의 유가증권 현재액은 다음과 같음

==========
정부보관유가증권 현재액 : ₩ 10,000,000,000
==========
*** 현재액 내역 ***
==========

수탁번호	수탁일자	증권명칭	장수	금액	구분	증권종류
2017-001	2017.01.05	대한은행	5	5,000,000,000	보관	주식
2017-007	2017.05.10	OO해운	10	5,000,000,000	보관	주식
합 계			15	10,000,000,000		

==========
유가증권 제출자 : (주)OO상사 대표이사 홍길동

동 증명서는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제공되는 것으로 회계감사실시에 따른 잔고증명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권리 양도 등 기타 거래의 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한국은행 국고증권실(인)

Ⅶ. 징발보상증권 관련 업무

제1장 업무 개요

제2장 징발보상증권 발행 및 상환

제3장 징발보상금의 공탁

제4장 징발재산의 환매

제1장 업무 개요

제1절 징발보상증권 발행 배경

□ 1963. 5. 1.「징발법」의 제정으로 국가가 군사상 필요로 하는 토지, 물자, 시설 및 권리 등의 재산을 징발하고 그 사용료를 지급하였으나, 징발재산의 재산권 행사제한에 따른 소유주들의 보상요구가 급증하자 1970. 1. 1.「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징발재산중 군사상 긴요하여 계속 사용할 사유재산은 국가가 이를 매수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징발을 해제토록 하였음

o 징발재산의 매수절차는 국가가 피징발자에게 매수결정을 통지하여 대금을 수령토록 한 후 소유권을 국가로 이전하였으며, 만약 피징발자가 6개월 이내에 대금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을 공탁자로 하여 매수대금을 법원에 공탁하고 국가가 소유권을 이전받도록 하였음

□ 한편 1971. 12. 31. 제정된「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4항에 의한 동원지역내의 토지의수용·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이하 '특별조치령')에 따라 국가비상시에 군작전 수행을 위해 긴절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동원대상지역의 토지를 국가가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o 토지의 수용·사용절차는 '특별조치법'의 경우와 거의 유사함

제2절 한국은행의 업무

□ 한국은행(국고증권실 및 지역본부)은 상기 법령에 따라 징발재산 매수대금 및 보상금의 지급을 위하여 「징발보상증권교부사무취급절차」를 제정(1970. 9.16 제정)하여 증권의 교부 및 공탁에 관한 사무를 취급하였음

○ 징발보상증권은 1970년(12월1일)부터 1977년(12월1일)까지 총 13회에 걸쳐 발행(발행금액 : 353억원) 되어 1년 거치후 10년간 추첨방식으로 균등분할 상환되었으며, 최종 발행된 1977년 발행분 원금의 소멸시효가 1992년 11월 30일 완성되어 현재 징발보상증권을 보유한 자에 대한 원리금 상환은 불가한 상태임

○ 징발보상증권 발행대장 발행일로부터 6개월 경과시까지 지급되지 아니한 징발보상증권 및 현금에 대하여 한국은행을 공탁자로 하여 피징발자 주소지 관할 법원의 공탁공무원에 변제공탁을 실시(1971년부터 1982년까지 25,000여건)하였고 징발보상증권의 원리금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이 대공탁. 부속공탁을 실시하였음

○ 특별조치법 및 특별조치령에 따른 한국은행의 매수대금 지급, 징발보상증권 발행 및 상환, 공탁업무는 최종 발행된 징발보상증권 원본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1992년 11월말로 사실상 종료되었음
따라서 한국은행은 징발보상교부금계정 잔액(₩13,711,681)을 2001.5.31. 국고세입편입하여 잔액을 정리하였으며 실제 공탁정정, 재공탁 및 공탁회수 업무는 2005년 이후로 발생한 사례가 없음

□ 그러나 한국은행이 매수대금 공탁시 명시한 "당해 재산의 등기부등본(발행일로부터 10일 이내)을 공탁자에게 제출할 것"이라는 반대급부조건* 표시로 인해 동 공탁서가 미결문서로 남아있어 징발보상증권 발행 및 공탁관련 서류 일체(지역본부 취급분 포함)를 국고증권실에서 영구보존문서로 보존하고 있음

*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 등은 변제공탁의 경우 한국은행의 공탁금회수청구권은 「공탁일」로부터, 피징발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은 「공탁통지서 수령일」로부터 기산함이 원칙이나, 공탁에 반대급부의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반대급부가 이행된 때」로부터 기산

공탁물지급청구권은 재산권 중 채권의 성질을 가진 이상 이 청구권도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은 당연한데 공탁물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공탁업무의 수임기관이 국가기관이므로, 주권 수임기관 즉 대법원이 정한 바에 따라 10년을 적용하게 되나「반대급부가 이행된 때」라는 조건이 만족되지 않는 공탁서는 언제까지나 영구적으로 미결문서로 남게 됨

□ 현재 한국은행은 징발보상증권과 관련하여 국방부의 요청에 의하여 공탁서 사본을 국방부에 송부하는 업무만을 취급하고 있으나 징발재산의 소송 등과 관련하여 민원 및 정보공개청구가 종종 제기되고 있어 과거의 업무처리절차를 숙지하고 있음

국방부 앞 공탁서 사본 송부 건수

연도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1~5월
건수	15	2	11	10	11	5

제2장 징발보상증권 발행 및 상환

제1절 발행

□ 징발보상증권은 1970년 12월 1일(70년 1차)부터 1977년 12월 1일(77년 1차)까지 13차에 걸쳐 교부[46]방식으로 발행

ㅇ 징발보상증권의 발행 및 상환업무는 징발재산 소재지의 통할점 또는 국고대리점(이하 '취급점')에서 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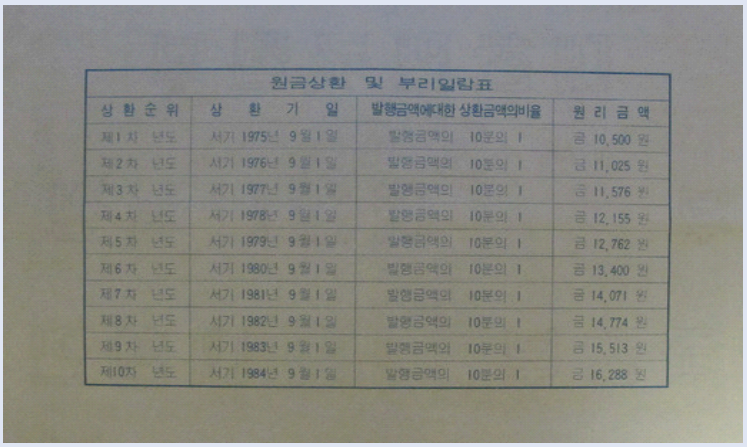
ㅇ 증권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1만원(1만원 미만의 금액은 현금 교부)이며 연리 5%(연복리)에 1년 거치 10년간 추첨식 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발행

< 표 Ⅶ - 1 > 징발보상증권의 발행근거 및 발행회차 내역

증권발행 근거 (재무부령)	적 용 법 령	발행 회차
징발보상증권의 발행등에 관한규정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70년 1차 71년 1차~71년 4차
징발보상증권의 추가 발행등에 관한규정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72년 1차 73년 1차~73년 2차 74년 1차~74년 2차
징발보상증권규칙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내의 토지의수용·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	76년 1차~76년 2차 77년 1차

46) 국방부로부터 증권발행일, 소유자의 주소, 성명, 징발재산 내역 및 매수대금 등이 기재된 매수(수용) 징발(사용)보상금 지급통지서 발행대장(이하 '발행대장')을 접수하고 피징발자의 청구에 따라 교부

< 참고 Ⅶ - 1 > 징발보상증권 (앞면, 뒷면)(보기)



원금상환 및 부리일람표

상 환 순 위	상 환 가 일	발행금액에대한 상환금액의비율	원 리 금 액
제1차 년도	서기 1975년 9월 1일	발행금액의 10분의 1	금 10,500 원
제2차 년도	서기 1976년 9월 1일	발행금액의 10분의 1	금 11,025 원
제3차 년도	서기 1977년 9월 1일	발행금액의 10분의 1	금 11,576 원
제4차 년도	서기 1978년 9월 1일	발행금액의 10분의 1	금 12,155 원
제5차 년도	서기 1979년 9월 1일	발행금액의 10분의 1	금 12,762 원
제6차 년도	서기 1980년 9월 1일	발행금액의 10분의 1	금 13,400 원
제7차 년도	서기 1981년 9월 1일	발행금액의 10분의 1	금 14,071 원
제8차 년도	서기 1982년 9월 1일	발행금액의 10분의 1	금 14,774 원
제9차 년도	서기 1983년 9월 1일	발행금액의 10분의 1	금 15,513 원
제10차 년도	서기 1984년 9월 1일	발행금액의 10분의 1	금 16,288 원

제2절 상환

□ 징발보상증권의 원리금 상환은 매년 증권의 끝번호를 추첨하여 해당 번호에 해당하는 증권에 대해서만 상환

ㅇ 취급점은 상환에 필요한 자금을 국방부로부터 수령하여 징발보상증권의 상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지급[47]

— 한국은행 지역본부의 경우 상환대금을 본부앞 역이체

< 표 Ⅶ - 2 > 징발보상증권 상환금액 및 상환일 예시

증권내용: 권종 1만원권, 발행일 1977.12.1 증권기호: 가

회 별	당첨기호 (증권끝번호)	장당이자 (원)	원리금상환 개 시 일	소멸시효 완성일	
				이 자	원 금
1	1	500	1978.12.1	1980.11.30	1983.11.30
2	9	1,025	1979.12.1	1981.11.30	1984.11.30
3	6	1,576	1980.12.1	1982.11.30	1985.11.30
4	2	2,155	1981.12.1	1983.11.30	1986.11.30
5	3	2,762	1982.12.1	1984.11.30	1987.11.30
6	4	3,400	1983.12.1	1985.11.30	1988.11.30
7	5	4,071	1984.12.1	1986.11.30	1989.11.30
8	0	4,774	1985.12.1	1987.11.30	1990.11.30
9	7	5,513	1986.12.1	1988.11.30	1991.11.30
10	8	6,288	1987.12.1	1989.11.30	1992.11.30

47) 현재 징발보상증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상환이 불가능

< 참고 Ⅶ - 2 > 발행대장 발행일별 징발보상증권 회차

회차	발 행 대 장 발 행 일		증권발행일
	매수 (수용)	보상 (사용)	
70년 1차	70.11.20 71. 5.24	71. 6. 3 70.12. 1	70.12. 1
71년 1차	71. 2.12 71. 2.20 71. 5.11 71. 5.29 71. 5.30 71. 5.31 71. 6.30 71. 7. 2 71. 9. 6	71. 5. 1 71. 6. 1	71. 3. 1
71년 2차	71. 8.10	71. 7. 1 71. 9. 1	71. 6. 1
71년 3차	71.11.10 71.12.20 72. 1.20 72. 2.10	71.11. 1 71.12.20	71. 9. 1
71년 4차	72. 1.10 72. 2.25 72. 5.17	72. 5.11 72. 7. 8 72. 8.20 72.10. 4 72.10.20	71.12. 1
72년 1차	72.12. 1 73. 9.10	72.12.20 73. 4.20 73. 6.20 73. 8. 8 73.10. 8	72.12. 1
73년 1차	73. 1.10 73.12.24	73.12.20 73.12.21 74. 1.21 74. 2.22 74. 3.26 74. 4.24	73. 9. 1
73년 2차		74. 4.24 74. 5.20 74. 6.28 74. 9.11 74.10.31 74.12.27	73.12. 1
74년 1차		74. 9. 1 74.12.27 75. 3.31 75. 5.22 75. 7.22 75.10.29 75.12.28 76. 2.25	74. 9. 1
74년 2차		76. 2.25 76. 9.16	74.12. 1
76년 1차	76. 3.23 76. 9.20 77. 1.20	76.12. 7 77. 4.25	76. 2. 1
76년 2차	77. 3.25 77. 6.25 77.12.20 78. 3.10 78.12.20	77. 4.25 77. 5.17 77. 7.15 77. 9.23 77.11.11 77.12.28 78. 3.13 78. 5.29 78. 9.11 78.11.15 79. 3.20	76. 9. 1
77년 1차		78. 5.31 78. 6. 1 78. 9. 8 78. 9.11 78.11.15 79. 3.20 79. 1.15 79. 3.21 79. 6.15 79. 6.16 79.10.24 80. 2.19 80. 5.10 80. 8.22 80.10.15 80.12.18 81. 4.24 81. 6.20 81.10.24 81.12.10	77.12. 1

제3장 징발보상금의 공탁

제1절 공탁 개요

□ 징발보상금 공탁의 경우 금전공탁, 유가증권 공탁, 그리고 변제공탁의 성격을 가짐

ㅇ 변제공탁이란 채무자가 변제를 하려고 하여도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또는 과실없이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 채무자가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맡김으로서 그 채무를 면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이러한 변제공탁을 통하여 채무자는 채권자의 협조없이도 채무를 청산하고 채무자의 지위에서 가지는 여러 가지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음

ㅇ 변제공탁의 요건으로는

1) 채무의 목적물이 공탁 가능하여야 하고,
2) 채무가 현존되고 확정되어야 하며,
3) 공탁의 원인이 있어야 하는데, 즉 채권자의 수령거절, 수령불능*, 채권자 불확지(不確地) 중의 하나이어야 함

* 채권자의 수령불능은 채무를 이행하려 해도 채권자측의 사정으로 채권자가 수령할 수 없는 경우로 채권자 부재 또는 소재불명 등의 경우를 들 수 있으며, 채권자 불확지는 변제자가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도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인데, 예를 들어 수용토지가 미등기이어서 토지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상속권자가 확정되지 않는 경우 등을 들 수 있음

ㅇ 변제공탁을 할 경우 공탁자는 반대급부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반대급부조건이 붙은 공탁물을 출급하려는 채권자는 반대급부를 이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공탁물 수령이 가능함

— 한국은행의 경우 매수대금 공탁시 "당해 재산의 등기부등본(발행일로부터 10일 이내)을 공탁자에게 제출할 것"이라는 반대급부조건을 표시하였으며, 이 경우 피공탁자가 법원에서 공탁물을 출급하기 위해서는 한국은행이 발급한 반대급부이행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 반대급부 조건을 붙이는 이유는

1) 피징발자가 법원으로부터 공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공탁자인 한국은행의 반대급부이행증명서 발급이 필수적 요건이므로 공탁금 출급청구자가 정당한 권리자임을 확인할 수 있고

2) 공탁금의 소멸시효 기산과 관련하여 일반 금전공탁의 소멸시효가 10년인 데 반해 반대급부조건부 금전공탁의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이 반대급부이행증명서 발급일이므로 피징발자의 채권을 보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임

< 참고 Ⅶ-3> 공탁의 종류

기준	공탁의 종류	
공탁물	금전공탁	
	유가증권공탁	
	기타 물품공탁	
공탁원인	변제공탁	
	보증공탁	
	집행공탁	
	보관공탁	
주종관계 (시간적 단계)	주공탁(기본공탁)	유가증권공탁
	종공탁	대공탁(代供託)
		부속공탁

제2절 공탁 실무

1. 공탁

□ 발행대장 발행일로부터 6개월 경과시까지 교부되지 아니한 매수대금(증권 및 현금)은 관할법원 공탁공무원에게 공탁

ㅇ 「민법」 제488조에 따르면 변제공탁은 채무이행지 소재 공탁소에 공탁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미지급 매수대금은 피징발자 주소지(피징발자가 복수인 경우 다수인 주소지) 관할 법원에 공탁하였으며 피징발자의 주소·성명이 불확지인 경우 피징발물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였음

ㅇ 징발보상증권의 발행·상환업무는 국고대리점에서도 취급하였으나, 공탁은 한국은행 본부 및 지역본부에서만 취급하였음

ㅇ 매수대금 중 징발보상증권은 유가증권공탁을 실시하였으며 보상금액 전체 또는 그 단수가 증권액면금액(일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금전공탁을 실시하였음

ㅇ 원리금 상환이 개시된 유가증권 공탁분 중 증권의 원금 및 이자부분에 대하여 각각 대공탁* 및 부속공탁**을 실시하였음

* 대공탁(代供託) : 공탁중에 있는 유가증권(원금)의 상환기한이 도래한 경우 공탁자 등이 당해 유가증권을 상환받아 공탁하는 것으로, 유가증권공탁을 금전공탁으로 변경하는 절차임

** 부속공탁(附屬供託) : 공탁유가증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 또는 배당금을 지급받는 경우 원공탁에 부속시켜 금전공탁하는 절차로, 이자 또는 배당금을 종전의 공탁물(유가증권)과 별개로 공탁하는 것보다 그 유가증권상의 공탁효력을 당해 이자 또는 배당금 공탁까지 부속시키도록 하기 위한 것임

2. 공탁 정정

□ 공탁 정정은 공탁서의 착오기재가 발견된 경우 공탁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공탁서를 정정하는 절차를 말함

□ 국방부로부터 송부된 발행대장 정정표의 정정 내용이 소유자의 주소 정정, 징발재산의 소재지 지번 및 지적 정정, 불확지 징발재산에 대한 소유자 지정 등일 경우 공탁 정정 처리절차를 취함

< 법원 앞 공탁 정정 신청시 필요문서 >
- 공탁서 정정신청서(2부)
- 공탁자의 등기부초본 및 인감증명서
- 원공탁서, 대 · 부속공탁서
- 발행대장정정표(국방부)

□ 공탁공무원이 공탁서 정정 신청을 수리한 경우 수리의 뜻이 기재된 신청서를 교부받아 발행대장과 공탁건별장에 정정내용 및 근거를 주기

□ 수리된 공탁서 정정 신청서는 원공탁서에 첨부 · 보관하고 공탁정정명세표, 원공탁서와 공탁서 정정 신청서 사본은 한국은행 본부에서 취합 후 국방부로 송부

ㅇ 지역본부의 경우 공탁정정명세표에 원공탁서 및 공탁서 정정신청서 사본을 첨부하여 본부에 송부하고, 본부는 공탁 정정내용을 종합하여 국방부에 통보

3. 공탁 회수

□ 공탁물의 회수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한 회수원인이 있을 때 공탁관계를 더 이상 존속시킬 필요가 없음을 이유로 공탁자의 청구에 의해 공탁물을 되돌려주는 것으로서 대부분 공탁물의 착오공탁이나 공탁원인이 소멸된 경우에 발생함

□ 국방부로부터 송부된 발행대장 정정표의 정정 구분이 매수취소 또는 국가 패소판결 등일 경우에는 공탁금을 회수

<법원앞 공탁 회수 신청시 필요서류>
· 공탁물회수청구서 2부
· 공탁자의 등기부초본 및 인감증명서
· 원공탁서 및 대공탁서·부속공탁서
· 소유권미이전확인서
· 발행대장정정표(국방부)

□ 공탁공무원이 공탁물 회수청구를 수리하면 공탁금을 회수하여 각 계정으로 입금

ㅇ 최초 현금공탁액은 징발보상교부금 계정으로, 대공탁 및 부속공탁 금액은 매수취소인 경우 가수금 계정(일시보관금계좌), 재공탁인 경우 가수금 계정(기타일시수입금계좌)으로, 공탁금에 대한 이자금액은 가수금 계정(공탁금 이자계좌)으로 각각 입금

<공탁금 회수시의 장부 정리>
· 징발보상증권 및 현금교부내역장
· 징발보상증권 공탁내역장
· 징발보상증권 대·부속공탁명세장
· 발행대장에 회수표시 후 검인
· 공탁건별장의 공탁해제란에 회수표시 후 별도 보관

□ 지역본부의 경우 징발보상증권 및 현금교부일보, 징발보상증권 공탁일보, 징발보상증권 및 현금공탁 회수보고를 본부에 송부하고 본부는 이를 종합하여 국방부에 통보

□ 가수금에 입금된 금액은 국방부에 납입고지서 발급을 의뢰한 후 납입고지서에 따라 세입 처리

4. 공탁 회수 후 재공탁

□ 국방부로부터 송부된 발행대장 정정표의 정정내용이 소유자 변경, 소유자 삭제, 공탁금액 정정, 발행번호 분리 등일 경우에는 공탁의 동일성이 상실되므로 기존 공탁물을 공탁회수절차에 의해 회수한 후 재공탁하는 절차를 취하여야 함

□ 공탁서 작성시 공탁의 원인을 수령거절 또는 불확지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증권회차, 근거 법령을 간단하게 명시하는 한편 매수대금 재공탁시 반드시 반대급부조건을 표시하여 공탁

< 법원앞 공탁 신청시 필요서류 >

· 공탁서(현금) 2부
· 공탁대상분명세표
· 공탁통지서
· 공탁자의 등기부초본 및 인감증명서

□ 공탁공무원이 공탁서를 수리한 경우 공탁공무원으로부터 교부받는 공탁서 및 공탁금납입서와 함께 공탁물을 지정된 은행에 납입

□ 공탁물 납입 후 공탁공무원이 공탁통지서를 피공탁자(피징발자)에게 발송함으로써 공탁은 완료되며, 한국은행은 공탁서를 수령

□ 공탁금 회수시 최초 현금공탁분은 징발보상교부금계정으로 입금하며 대공탁·부속공탁 회수액은 가수금계정(일시수입금계좌)으로 각각 입금조치

ㅇ 재공탁시 동 계정에서 인출하여 공탁하며 공탁금에 대한 이자액은 가수금계정(공탁금이자계좌)에 입금하였다가 세입 조치[48)]

48) 재공탁 대상금액은 발행대장 금액 중 최초 현금공탁금액, 대공탁·부속공탁 금액이며 법원에 공탁함에 따라 발생한 이자는 제외. 또한 재공탁은 상기의 금액 전액을 하나의 금전공탁으로 처리

□ 지역본부에서의 회수금액은 전액 본부앞 전금하였다가 재공탁 때에는 역이체 처리함

<재공탁 후 장부 정리>

· 징발보상증권 및 현금교부내역장
· 징발보상증권 공탁명세장
· 징발보상증권 대·부속공탁명세장
· 발행대장에 공탁표시 후 검인
· 공탁건별장 작성(대·부속공탁란에 기재)

□ 지역본부의 경우 징발보상증권 및 현금공탁보고서, 징발보상증권 및 현금교부일보, 징발보상증권 및 현금공탁일보, 공탁서사본을 본부에 송부하며, 본부는 이들을 종합하여 국방부에 통보

제3절 반대급부이행증명서 발급

□ 한국은행이 매수(수용)대금을 공탁할 때 "당해 재산의 등기부등본(발행일로부터 10일 이내)을 공탁자에게 제출할 것"이라는 반대급부조건을 표시하여 공탁하였으므로 피징발자가 법원으로부터 공탁물을 출급[49]하기 위해서는 공탁자인 한국은행이 발급한 반대급부이행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ㅇ 토지매수결정통지서 또는 공탁통지서가 없어 징발재산에 관한 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국방부로 문의

49) 공탁 성립 후에 확정된 피공탁자 또는 그 상속인의 청구에 의해 공탁물을 지급하는 것

□ 반대급부이행증명서 발급시 피공탁자가 법원에서 공탁금을 출급하는데 필요한 아래의 서류도 함께 발급

ㅇ 승낙서 : 피공탁자가 공탁통지서를 분실한 경우 공탁서 사본과 함께 법원에 제출하면 공탁통지서에 갈음할 수 있음

— 승낙서는 공탁통지서 없이 공탁물을 출급하는데 있어 공탁자가 동의한다는 내용임

ㅇ 공탁자의 법인 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

<피공탁자의 한국은행앞 반대급부이행증명서 발급 청구시 제출서류>

ㅇ 공통서류

· 공탁통지서 : 공탁공무원이 공탁 수리 후 피공탁자에게 송부한 서류이며, 한국은행은 확인 후 피공탁자앞 반환

· 토지 등기부등본(국방부 소유권이전 내용 확인) · 수령자 인감

ㅇ 반대급부이행증명서 발급신청자별 별도 준비서류

· 본인 : 주민등록증(사본 1부 비치 후 반환), 본인 인감증명서(공탁수령용)

· 대리인 : 위임자 및 대리인 인감증명서, 위임장

· 소유자 사망 : 호적(또는 제적)등본 및 상속자 전원의 인감증명서, 대표위임장

· 법인 :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대표자 인감증명서

· 미성년자 : 호적등본, 친권대리인 또는 법정후견인 동의서

· 종중 : 종중규약(대표자 선임방법과 종중재산처분관계 조문 명기), 대표자를 선임한 결의서, 결의자 전원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 대표위임장

□ 지역본부의 경우 반대급부이행증명서 발급보고를 본부에 송부하고, 본부는 이를 종합하여 국방부에 통보

< 반대급부이행증명서 발급 후 장부 정리 >

· 반대급부이행증명서 발급명세장
· 발행대장
· 공탁 건별장

< 피공탁자의 법원앞 공탁금 출급청구시 제출서류 >

· 공탁금(유가증권) 출급청구서 2부
· 공탁통지서(분실시 공탁자가 발급한 승낙서)
· 반대급부이행증명서
· 인감증명서(대리인인 경우 대리인의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 포함)
· 공탁자의 법인 등기부등본 및 대표자 인감증명서
· 기타 필요한 서류

제4절 공탁의 소멸시효

□ 공탁금, 공탁금 이자의 출급 및 회수청구권의 소멸시효는「민법」제16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10년이 적용되며, 공탁유가증권에 대하여는 소유권에 관한 청구가 가능하므로 소멸시효의 적용이 없음

ㅇ 소멸시효 기산일은 출급청구권의 경우 공탁통지서 수령일로부터, 회수청구권의 경우 공탁일로부터 기산함을 원칙으로 함

— 채권자의 수령불능이나 절대적 불확지 공탁의 경우 출급청구권은 공탁서 정정 등을 통한 공탁통지서의 수령 등에 의하여 피공탁자가 공탁사실을 안 날(공탁통지서 수령일)로부터 기산

— 상대적 불확지 공탁의 경우 출급청구권은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을 가진 자가 확정된 때부터 기산

— 공탁에 반대급부의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반대급부가 이행된 때로부터 기산함

□ 법원은 공탁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공탁사건의 공탁금을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아「공탁규칙」제62조에 따라 편의적 국고 귀속 조치

ㅇ 국고 귀속 조치 후 피공탁자 등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실을 증명하여 공탁금 지급청구를 한 경우에는「공탁규칙」제64조에 따라 공탁공무원이 착오 국고 귀속 공탁금의 반환절차에 따라 세입 징수관으로부터 공탁금을 반환 받아 지급

※ 공탁금 소멸시효와 국고귀속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공탁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국고귀속절차」(1976. 12. 8「행정예규」제49호, 1998. 11. 17「행정예규」제362호 전문개정, 2013. 3. 13「행정예규」제948호 개정) 참조

제4장 징발재산의 환매

□ 「특별조치법」 및 「특별조치령」에 따라 징발재산이 군사상 필요 없게 된 때에는 피징발자에게 환매 또는 매각할 수 있음

ㅇ 이 경우 매수대금으로 지급한 증권의 상환종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증권의 상환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50]에 징발재산이 군사상 필요 없게 된 때에는 피징발자(상속인 포함, 이하 같음)에게 우선 매각할 수 있음

— 매각가격은 징발당시 매수가격에 증권 발행연도부터 환매년도까지 연 5%의 이자를 가산한 금액임

□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피징발자에게 환매통지나 공고가 없었을 경우 환매권이 발생한 날, 즉 징발재산이 군사상 필요 없게 된 때로부터 10년간으로 봄(대법원 판결, 1990. 1. 12 88다카25342, 1991. 9. 24 91다8456 참조)

□ 또한 증권의 상환종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 수의계약에 의해 피징발자에게 매각할 수 있으며[51] 이 경우 매각가격은 매각당시의 시가임

□ 국방부장관이 피징발자에게 환매 또는 수의매각하고자 하는 경우 피징발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52] 그 통지 또는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매수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수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

---

50) 증권의 상환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라는 것은 환매권 발생기간을 규정한 것이며, 환매권을 이 기간 중에 행사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님

51) 증권 상환종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고 하여, 피징발자에게 우선 매수권을 인정한 것은 아님(대법원 판결, 1995. 12. 22. 95다5622 참조)

52) 피징발자의 주소 등을 모를 경우 일간지 등에 공고하여야 함

□「특별조치령」은 1994년 6월 30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53]에 따라 폐지되고, 1997년 1월 13일「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대체입법되었음

ㅇ「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상의 환매 또는 매각에 관한 내용은 폐지된「특별조치령」의 내용과 유사하나, 수의매각의 경우 통지 후 6개월 이내에 매수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매수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다름

□ 한편 국방부의 통지 또는 공고 없이 환매권이 소멸한 징발재산에 대한 구제를 위하여「특별조치법」개정 및「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정 등을 통하여 소멸된 환매권을 재행사할 수 있도록 한 바 있음

ㅇ「특별조치법」개정(1993. 12. 27, 부칙 제2조)에 따라 1983년말 이전에 통지 또는 공고 없이 환매권이 소멸한 재산에 대하여 국방부장관은 1995년말까지 환매에 관한 통지 또는 공고를 하도록 하였음

ㅇ「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정(1997. 1. 13.)에 따라「특별조치령」에 의해 수용된 토지 중 법 시행일 현재 통지 또는 공고 없이 환매권이 소멸한 토지에 대하여 국방부장관은 1998년말까지 환매에 관한 통지 또는 공고를 하도록 하였음

※「특별조치법」부칙(1993. 12. 27)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통지를 받은 피징발자 또는 그 상속인은 동조 제2항에 따라 환매대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하며,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국방부장관의 통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이나,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이미 소멸된 환매권을 재행사할 수 있도록 배려한 점과 국방부장관의 통지가 있는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1996년 3월 31일까지로 봄(대법원 판결, 1995. 8. 25. 94다27748 참조)

---

53) 헌법재판소는「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초헌법적인 국가긴급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헌일 뿐 아니라, 특히 동 법 제5조 제4항은 토지수용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조차 모두 대통령에게 위임하고 있어 재산권 제한을 법률에 의하도록 규정한「헌법」제23조 제3항 및 위임입법의 한계를 규정한「헌법」제75조 등에 위반되므로 위헌이라고 판결. 그러나「특별조치령」에 근거하여 실시된 수용처분의 무효 여부는 별도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임을 판시

Ⅷ. 현물보관 업무

제1장 증권 과목

제2장 증권 출납, 관리, 폐기 및 현송

제3장 시재검사

제1장 증권 과목

□ 증권 과목은 미발행증권, 보관증권, 폐기증권 및 보기증권으로 구분

ㅇ 증권은 금고에 보관토록 하되 장기간 보관이 필요한 증권의 경우 별도의 용기에 넣어 계산감사 책임자 또는 감사실 검사역 입회하에 봉인하여 보관할 수 있으며, 보기증권의 경우 거치금고에 보관 가능

* 수입인지 및 정부유가증권의 현물관리업무는 해당 업무편 참조

< 표 Ⅷ - 1 > 증권 과목의 구분 (「국채사무취급절차」 <별표>)

대 과 목	소 과 목	내 용
미발행증권	미완성증권	· 문자, 인장, 회차번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입하지 아니한 증권
	예비증권	· 예비용으로 등록말소, 권종교환 및 손상증권교환에 충당하는 증권
	발매증권	· 발매용 미발행증권
보관증권	보관증권	· 타과목에 속하지 아니하는 일시보관증권
폐기증권	지급완료증권	· 원리금 지급완료로 회수한 증권
	매입소각증권	· 매입소각으로 수입한 증권
	등록변환증권	· 등록으로 회수한 증권
	제권판결증권	· 지급완료된 제권판결문
	기타증권	· 교환 또는 전환으로 회수한 증권, 기타 불필요하게 된 증권
보기증권	보기증권	· 증권의 진위감별을 위해 비치, 보관하는 증권

ㅇ 금고구역의 설정 및 관리는「발권규정시행세칙」및「발권규정시행절차」를 준용

제2장 증권 출납, 관리, 폐기 및 현송

※ 근거 규정 : 「국채사무 취급절차」 및 「증권 등의 현송에 관한 절차」

제1절 증권 출납

□ 증권의 출납은 증권명칭별, 권종별, 소과목별, 회차·일물별로 증권수입표 또는 증권교부표를 작성

□ 현물발행을 위한 증권은 원칙적으로 번호순으로 출고

□ 고객에게 증권을 교부할 경우 국채(또는 통화안정증권) 수령증을 받음

□ 무효증권에 대하여는 원리금 지급, 교환 또는 등록이 불가능함

ㅇ 무효증권은 각 통할점이 소지인 입회하에 무효권의 표시를 한 후 소각자 및 입회자를 지정하여 폐기처리

< 표 Ⅷ - 2 > 무효증권의 기준

· 기호, 번호, 인장, 액면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것
· 증권의 1/3 이상이 없어진 것
· 분열된 세편을 접속한 증권으로서 동일지편으로 감식하기 곤란한 것
· 증권의 지질 또는 채색의 변화나 기타 원인으로 진위 판별이 곤란한 것

□ 소실, 위·변조증권이 발생한 경우 본부에 연락하고 본부는 동 내용을 기획재정부에 송부

제2절 증권 관리

□ 증권은 증권명칭별, 권종별, 소과목별, 회차·일물별로 100장씩을 작은 묶음으로 하고 작은 묶음 10개를 같은 방향으로 정리한 후 노끈으로 가로 세로의 중앙을 묶어 보관

ㅇ 폐기증권의 경우 증권명칭별, 권종별, 소과목별로 정리 가능

ㅇ 작은 묶음의 경우 같은 방향으로 정리하고 전면을 향하여 밑변 및 오른쪽 변을 정렬하여 소형 띠지로 중앙을 세로로 묶은 후, 띠지 윗면에는 취급점명과 일자, 아랫면에는 담당자인 날인

ㅇ 작은 묶음을 2명이 정사한 경우 1차 정사자는 오른쪽 후면, 2차 정사자는 왼쪽 후면을 향하여 날인하되, 1차 정사자는 위조, 변조 또는 손상으로 인한 무효의 책임을 지고, 2차 정사자는 장수에 대한 책임을 짐

□ 증권이 남거나 부족한 경우 그 사유를 규명하고 그 경위를 본부에 보고

ㅇ 부족 증권은 관련 담당자가 해당 증권 또는 현금으로 변상토록 하며 현금인 경우에는 가수금으로 수입하고 본부의 지시에 따라 처리

ㅇ 남는 증권은 보관증권 과목으로 정리

제3절 증권 폐기

□ 상환에 따른 회수 또는 용도말소된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은 아래의 방법으로 폐기증권임을 표시

ㅇ 일자, 통할점명이 있는 직경 2.5cm의 폐기증권임을 표시하는 원형도장을 발행자인 위에 날인

ㅇ 증권 앞면의 좌우양단 중앙에 「PAID」 또는 「무효」 표시 구멍 뚫기

□ 폐기 표시된 증권은 회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3개월간 이를 보존 후 폐기처분하되, 제권판결증권의 경우 해당증권의 만기일로부터 5년간 보존

ㅇ 폐기 처분은 감사실 검사역 입회하에 통할점장이 실시

□ 해당 증권의 발행, 상환업무 종료 등으로 보유가 불필요하게 된 보기증권은 통할점장이 폐기 처분하고 그 내용을 본부에 통보

제4절 증권 현송

□ 수입인지 및 증권 등의 현송은 원칙적으로 본부 국고증권실에서 주관

ㅇ 필요한 경우 화폐 현송편을 이용토록 하거나 통할점에서 현송 실시

□ 증권 등의 현송은 자동차편, 비행기편 또는 휴대현송에 의함

□ 증권 물량 및 기번호 등을 확인 후 증권을 인수도

ㅇ 본부·지역본부간 증권 등 현물의 인수, 인계는

— 현송주임이 증권 등 송부서 원부를 발송점에 제출하고,
— 발송점이 증권 등 송부서를 수납점앞으로,
— 수납점이 증권 등 수령증을 발송점앞으로 각각 제출

ㅇ 수납점은 현물 인수당일에 발송점앞으로 수납에 관한 사항을 보안 Fax등으로 통보하여야 함

* 현송은「증권등의현송에관한절차」에 따라 실시

제3장 시재검사

□ 부서장은 매월 2회 이상 입회인을 세우고 증권 등 현물에 대한 시재검사 실시

ㅇ 감사실 또는 감사원이 실시하는 현물감사의 경우에도 실시 횟수에 포함

ㅇ 보기증권은 매분기 1회 이상 현물 시재검사(마지막분기 실시일로부터 15일 이내 본부통보)

< 표 Ⅷ - 3 > 증권 종류별 시재검사 근거

증권종류	시 재 검 사 근 거	규 정 내 용
국 채	「국채사무취급절차」 제36조	「발권규정시행세칙」 및 「발권규정시행절차」 준용
통화안정증권 보유유가증권	「공개시장운영에 관한 사무취급절차」 제29조	「국채사무취급절차」 준용
수 입 인 지	「수입인지사무취급절차」 제21조	「국채사무취급절차」 준용
국고수표용지	「국고금취급절차」 제112조	「발권규정시행세칙」 준용
정부유가증권	「한국은행정부유가증권사무취급절차」 제28조	매월 2회 이상
자기앞수표용지	「자산관리절차」 제91조	매월 1회 이상

Ⅸ. 증권 커스터디(Custody) 업무

제1장 한국은행 증권 커스터디 업무 개요

제2장 증권 커스터디 약정체결 절차

제3장 증권 커스터디 업무 세부절차

제4장 유관기관의 역할 및 프로세스

제5장 BOK-CS 등 관련 시스템

제6장 SWIFT 메시지

제1장 한국은행 증권 커스터디 업무 개요

제1절 증권 커스터디 업무 개요

□ 증권 커스터디 업무란 유가증권에 투자하는 투자자를 대신하여 해당 증권의 보관(safekeeping) 및 기록(record keeping), 결제, 원리금 및 배당금 수령, 통지 등 제반 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말함

□ 증권 커스터디 업무의 범위는 기본업무와 부수업무로 구분할 수 있음

ㅇ 기본업무는 증권 보관, 결제, 원리금 및 배당금 수령, 세금 관련 업무(원천징수, 환급 등), 계좌내역 통지 등이며, 부수업무는 환전(foreign exchange), 증권대차(securities lending), 여유자금 운용 등임

□ 한국은행은 현재 증권 커스터디 업무와 관련하여 외국 중앙은행 등 공적기관을 대상으로 국고채권, 재정증권, 통화안정증권 투자와 관련하여 한국은행에 해당 기관 명의의 증권관리계좌와 원화 당좌예금계좌를 개설해 주고 채권 보관, 결제, 원리금 수령, 세금 관련 업무 등 제반 관리 서비스를 제공

제2절 한국은행의 증권 커스터디 업무

1. 업무 추진 배경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외국 중앙은행 및 국제금융기구(이하 "외국 중앙은행 등")는 투자자산 다변화 필요성과 상대적으로 높은 국내 채권수익률 등을 고려하여 국내 채권투자를 크게 확대

□ 외국 중앙은행 등은 국내 채권 투자 시 주로 외국계 상업은행으로부터 증권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었으나 상업은행은 지급불능, 자산의 부정이용, 부실관리 등의 보관리스크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제공하는 증권 커스터디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존재

□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외환보유액 운용과 같이 공적인 성격을 갖는 외국 중앙은행 등의 국내채권 투자에 대해 보관리스크 해소 등 증권투자 인프라 제공, 국제협력 강화 등을 위해 2015년부터 증권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

<표 IX-1> 외국 중앙은행 등의 국내 채권투자 현황

(조원, 개)

	2016년말	2017년말	2018년말	2019년말	2020년말	2021.5월말
투자채권 잔액	49.3	57.2	67.4	67.7	78.8	96.1
투자기관 수	23	19	22	21	21	21

2. 업무 범위

□ 한국은행은 국고채권, 재정증권, 통화안정증권에 투자하는 외국 중앙은행, 외국 정부, 국제금융기구 등의 공적기관을 대상으로 기본업무 중심의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

ㅇ 채권의 보관, 거래내역 관리, 원리금수령, 결제, 원천징수 등의 기본 업무를 수행하며 환전, 증권대차, 여유자금 운용 등의 부가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고 있음

<표 IX-2>	한국은행의 증권 커스터디 업무

대상기관	대상증권	대상업무
외국 중앙은행, 외국정부, 국제금융기구	국고채권, 재정증권, 통화안정증권	보호예수, 거래내역 관리, 원리금 수령, 결제, 원천징수 등

3. 업무 추진 경과

□ 한국은행은 2011년 지급결제 선진화 방안의 하나로 증권 커스터디 업무 제공을 검토과제로 선정한 이후 각국 중앙은행 사례에 대한 조사연구를 통해 2012년 8월 증권 커스터디 업무 추진방안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업무개발에 착수

□ 이후 전산시스템(BOK-CS 시스템) 구축, 세부 업무 프로세스 마련, 표준 약정서 제정 등 업무에 필요한 제반 사항 준비를 완료하고 2014년 3월 「한국은행 증권 커스터디 업무 규정」 및 동 「절차」를 제정

ㅇ 한편, 외국 중앙은행 및 국제금융기구 등을 대상으로 방문협의, 서한발송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소개 활동을 수행하였으며 다수의 외국 중앙은행 및 국제금융기구와 약정을 체결하고 증권 커스터디 업무를 제공 중

<표 IX-3>	증권 커스터디 업무 추진 경과

연월		주요 추진 과제
2011년	10월	외국 중앙은행 등의 국내 채권투자 확대에 대응한 한국은행의 커스터디 서비스 제공 추진방안 마련
2011년 ~2012년	12월 ~2월	영란은행, 호주중앙은행, 뉴욕연방준비은행, 일본은행을 방문하여 주요국 중앙은행의 증권 커스터디 업무 파악
2012년	7월	부서장 및 실무책임자 회의를 통한 관련 부서 의견 수렴
	8월	증권 커스터디 업무 추진방안 수립
	10~11월	증권 커스터디 업무 관련 법규 검토

연월		주요 추진 과제
2013년	3월	증권 커스터디 업무 세부추진방안 마련
	5월	증권 커스터디 업무 관련 주요 유관기관 실무 T/F 구성
	5월	증권 커스터디 전산시스템 개발 의뢰
	7월	한국은행의 증권 커스터디 업무 제공에 따른 유관기관과의 업무범위 및 업무프로세스 검토 완료
	7~8월	SWIFT 컨설팅 실시(1~3차)
	9월	한은금융망(BOK-Wire+)을 이용한 증권 커스터디 자금이체 수행방안 마련
	11월	증권 커스터디 관련 세무업무 수행방안 마련
2013년 ~2014년	12월 ~3월	SWIFT 등과 연계하여 증권 커스터디 시스템(BOK-CS) 테스트 실시 및 전산시스템 구축 완료
2014년	3월	증권 커스터디 업무 영문 약정서 및 안내서(Handbook) 마련
	3월	증권 커스터디 업무 관련 규정 및 취급절차 제정
	3월	증권 커스터디 업무 수행에 따른 리스크 관리 대책 마련
	3월	증권 커스터디 업무 수수료 책정 방안 마련
	5~6월	한국은행의 증권 커스터디 업무 소개(출장, 이메일, 전화 등)
2015년	5~9월	이용 약정체결
	12월	제3차 공적부문서비스제공기관(OSSP) 라운드테이블 개최
2016년	12월	이용 약정체결
2018년	2월	이용 약정체결

4. 기대효과

□ 한국은행의 증권 커스터디 업무는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에 투자하는 외국 중앙은행 등에게 신뢰할 수 있는 자금결제 인프라를 제공한다는 의미를 가지며 국제협력 강화 및 국내 외환·자본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ㅇ 증권 커스터디 업무 관련 국제회의 참석 등을 통해 주요국 중앙은행간 협력과 교류를 강화함으로써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역할을 제고

- 한국은행은 2013년 이후 증권 커스터디 업무 관련 중앙은행 간 정례 회의*에 정회원으로 참여중

  * 증권 커스터디 업무를 수행하는 11개 중앙은행과 BIS로 구성된 국제협의체[54] (OSSP (Official Sector Service Providers) 라운드테이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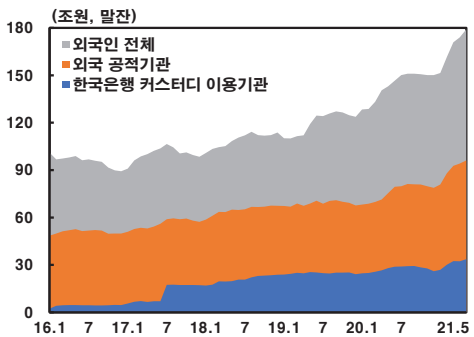
○ 외국 중앙은행 등 공적기관의 국내채권 투자 활성화도 기대

- 외국 중앙은행 등의 채권 투자는 일반적으로 보유기간이 길고 자금의 유출입 빈도가 낮아 국내 채권시장과 외환시장의 변동성을 완화하는데 기여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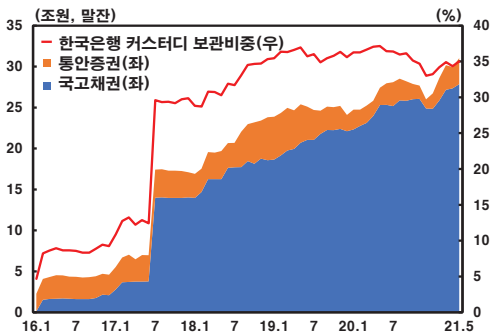
○ 증권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외국 중앙은행 등의 투자 동향에 대한 신속한 정보도 취득 가능

<참고 Ⅸ-1> 한국은행 증권커스터디 이용기관의 국내 채권 투자 현황

외국인의 국내 채권 보유 규모



이용기관의 국내채권 보유 현황



54) 각 참가기관의 증권 커스터디 업무 관련 리스크 관리, 커스터디 업무수행과 통화정책 및 금융안정과의 연관성, 업무지속계획 등에 대한 논의 및 상호이해 제고 등을 위해 뉴욕연방준비은행(FRB NY)이 주도하여 구성

제2장 증권 커스터디 약정체결 절차

제1절 계약 체결

1. 계약 체결 절차

□ 한국은행의 증권 커스터디 업무 이용을 위해서는 별도의 계약 체결을 해야 함

ㅇ 계약 체결 과정은 1) 잠재 거래기관의 커스터디 업무 이용 문의, 2) 적격기관 여부 심사, 3) 약정내용 협의, 4) 약정 체결로 구분

1) 커스터디 업무 이용 문의

ㅇ 외국 중앙은행 등이 한국은행에 증권 커스터디 업무에 대해 문의를 해 올 경우 전화 또는 이메일 등을 통해 고객에게 필요한 사항 등을 기술한 안내서(Handbook)와 표준약정서 등 상세 정보를 제공

2) 적격기관 여부 심사

ㅇ 거래 희망기관의 적격 여부 심사는 고객의 투자등록증(Investment Registration Certificate, IRC)에 나타난 투자자 분류 정보를 이용하되 홈페이지, 이메일, 전화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정보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국제국 등 관련 부서에 의뢰하여 판단

ㅇ 국제금융기구의 경우에는「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기구로 한정[55]

55) 국제통화기금(IMF),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국제개발협회(IDA), 국제금융공사

3) 약정내용 협의

ㅇ 한국은행의 증권 커스터디 약정서는 다수의 거래기관을 대상으로 업무를 수행할 것을 예정하여 표준식(form agreement) 계약[56] 형태로 운영

ㅇ 표준약정서 중 증권 커스터디 서비스 범위, 수수료 금액 등 계약당사자의 실질적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은 거래기관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일관되게 유지

ㅇ 다만, 거래기관이 사실상 한정되어 있고 거래금액이 거액이라는 점에서 잠재 거래기관 요청 시 거래기관의 문화와 제도적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증권 커스터디 업무 수행의 안정성과 실질적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술적 사항에 대한 협상은 가능

<참고 Ⅸ-2> 증권 커스터디 약정서 주요 내용

본문은 15개의 조항으로 계약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규정 10개, 계약 자체의 관리에 관한 규정 5개로 구성

(1) 계약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규정(Promises and Policies Clause)
① 한국은행이 제공하는 증권 커스터디 서비스의 범위와 영업시간(제2조)
② 원화계좌의 개설 및 관리, 입출금 절차와 조건(제3조)
③ 증권보관계좌의 개설 및 관리, 증권이체의 절차와 조건, 원리금 수취 및 지급, 세금면제 및 납부대행(제4조)

(IFC), 아시아개발은행(ADB), 아프리카개발기금(AFDF),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상품공동기금(CFC), 국제투자보증기구(MIGA),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국제결제은행(BIS), 미주개발은행(IDB), 미주투자공사(IIC), 다자투자기금(MIF),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AIIB) 등

56) 국제계약은 크게 편지식(letter agreement)과 표준식(form agreement)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편지식은 당사자간 간단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할 때 사용되며 표준식은 대부분의 국제계약서가 취하는 형식으로 계약 내용이 복잡하거나 다자간 계약인 경우 사용

④ 원화계좌 및 증권보관계좌 잔고 통지, 원리금 지급 통지(제5조)
⑤ 한국은행과 거래기관 간의 통신수단(제6조)
⑥ 수수료 및 비용(제7조)
⑦ 약정서의 유효성 보장(제8조)
⑧ 한국은행 및 업무담당자의 면책 및 책임범위(제9조)
⑨ 거래기관 관련 정보 보안(제10조)
⑩ 불가항력에 의한 의무위반에 대한 면책(제12조)

(2) 계약 자체의 관리에 관한 규정(Housekeeping Clauses)
① 약정서상 용어의 의미 정의(제1조)
② 계약의 해지 절차(제11조)
③ 준거법 및 재판 관할권(제13조)
④ 약정서의 완결성(제14조)
⑤ 약정서의 발효일(제15조)

4) 약정 체결

ㅇ 계약 체결 시 한국은행의 계약자 대표는 총재의 위임을 받은 국고증권실장이 되며 대표의 인감 또는 서명을 날인한 약정서를 계약 당사자가 1부씩 보관

ㅇ 약정 체결기관은 약정서와 함께 서명부[57], 투자등록증, 환거래은행의 계좌정보 등을 한국은행에 제공해야 하며 이후 계좌개설과 SWIFT RMA[58] 개설과정을 거쳐 증권 커스터디 업무를 이용하게 됨

57) 서명 권한을 지닌 해당 기관 직원의 이름, 직위 및 서명이 기재된 문서로서 약정체결 시 서명자가 기관을 대표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을 지녔는지 판단하기 위해 징구

58) Relationship Management Application. 상대기관과 SWIFT 전문을 최초로 교환하기 위한 SWIFT상 관계 개설 절차를 말함

<참고 IX-3> 증권 커스터디 업무 제공 절차

약정 체결 절차 중 일반적으로 아래 ③~⑤ 단계에 긴 시간이 소요되는데 전산시스템 보완 및 약정체결은 타 부서와의 업무협의가 필요하고 향후 업무 수행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

① 한국은행 업무소개, 잠재고객기관과의 한국은행 서비스 이용 협의
② 한국은행 서비스 이용 결정(고객기관 경영층)
③ 약정서 검토 및 세부 업무처리절차 협의, 전산시스템 변경・보완
④ 약정서 수정・보완(필요시)
⑤ 약정 체결
⑥ SWIFT RMA 개설 및 전산 테스트(필요시)
⑦ 증권 커스터디 서비스 제공·이용

2. 거래기관 정보 관리

□ 증권 커스터디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외국 중앙은행 등(이하 "거래기관") 및 거래기관의 담당직원 정보를 증권 커스터디 시스템(BOK-CS)을 통해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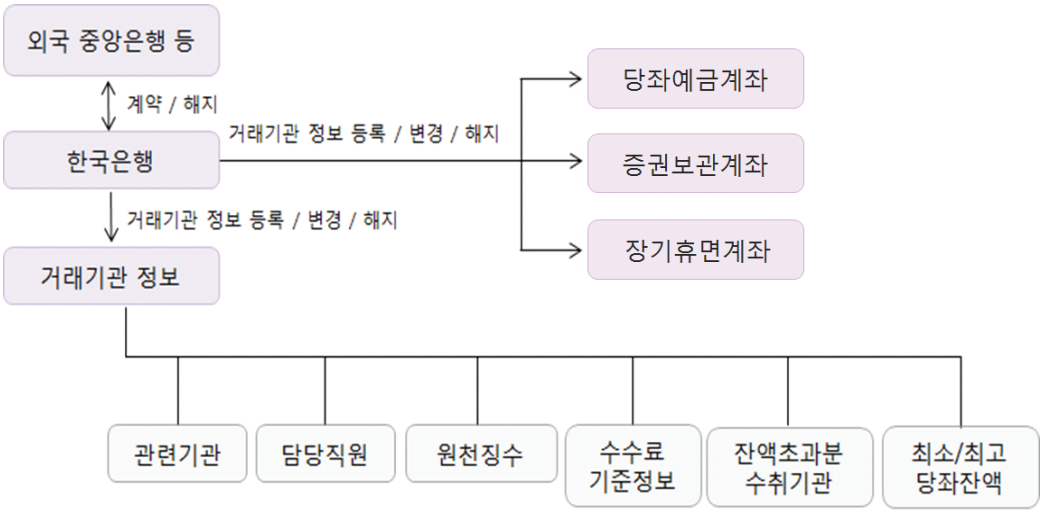
ㅇ 거래기관의 기본 정보는 거래기관명, 국적,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계좌번호, SWIFT 식별코드(Bank Identifier Code, BIC) 등임

□ 한국은행은 거래기관의 정보 보호를 위해 선량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거래기관의 어떠한 정보도 공개해서는 안 됨[59)]

ㅇ 다만, 약정서상의 의무 이행, 공적 통계의 편제, 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정보 제공 요구, 고객기관의 서면 동의, 일반적으로 입수 가능한 정보로서 정보 제공 요구 등이 있을 경우 정보 보호 의무에서 면책

59)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등

<그림 IX-1> 거래기관 정보 관리



3. 계약의 수정

□ 한국은행은 계약체결 이후에도 거래기관의 요청, 업무 여건 변화, 기타 필요한 경우에 약정서의 수정을 고려할 수 있음

ㅇ 다만, 계약 수정시 거래기관별 형평성 및 증권 커스터디 업무의 안정성 저해 여부 등을 감안

4. 계약의 해지

□ 한국은행 또는 거래기관은 약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종료하기를 원할 경우 계약으로 정한 기일(예를 들어 해지 예정일 1개월 전) 이전에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계약해지 의사를 통보하여야 함

ㅇ 거래기관과의 증권 커스터디 서비스 이용 약정을 해지하는 경우 해당 거래기관의 증권보관계좌와 원화 당좌예금계좌를 즉시 폐쇄하고 그 사실을 거래기관에 통보

ㅇ 향후 동 거래기관이 다시 한국은행의 증권 커스터디 서비스를 이용할 가능성 등에 대비하여 폐쇄된 계좌 및 거래기관 정보 등은 전산상으로 10년간 관리

제2절 계좌 개설

□ 약정체결 직후 증권 커스터디 시스템(BOK-CS) 내에 거래기관 명의의 원화 당좌예금계좌 및 증권보관계좌를 개설하고 한국예탁결제원에 고객관리계좌를 개설

1. 원화 당좌예금계좌의 개설

□ 거래기관이 한국은행에 개설하는 원화 당좌예금계좌는 거래기관이 국내 채권투자와 관련한 투자자금 등을 관리하는 계좌임

ㅇ 원화 당좌예금계좌는 거래기관 당 1개만 개설할 수 있으며 해당 계좌잔액에 대해서는 별도의 이자가 지급되지 않고 일중당좌대월 또한 허용되지 않음

□ 거래기관의 원화 당좌예금계좌의 잔액 변동은 한국은행의 지준관리에 장애요소로 작용[60]할 수 있으므로 잔액의 규모와 변동 범위에 대해 적절한 관리가 필요

ㅇ 동 계좌를 통해 지급되는 예탁수수료 등을 감안하여 거래기관은 매일 1억원 이상의 잔액을 유지해야하며 약정서에 명시된 최고 보유한도 초과 금액은 거래기관의 환거래은행으로 이체해야 함

60) 거래기관의 국내 환거래은행이 한국은행에 보유한 지급준비금 계좌의 잔고는 최저 지급준비금 유지 의무를 충족시키는 데 사용될 수 있는 반면, 거래기관이 한국은행에 개설한 원화 당좌예금계좌잔고는 지급준비금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양 계좌 간 자금이체는 지준관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거래기관의 원화 당좌예금계좌는 「외국환거래규정」에서 상정하는 투자전용비거주자원화계정에 해당하며 「동 규정」 제7-37조 제4항[61] 및 제5항[62]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자금의 예치 및 처분이 제한됨

2. 증권보관계좌의 개설

□ 한국은행에 개설하는 증권보관계좌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10조에 따른 투자자계좌부[63]에 해당하는 장부로서 증권 보유 및 증감 내역 등을 기재·관리하며 거래기관마다 5개 계좌까지 개설을 허용

ㅇ 증권보관계좌는 원리금 수령, 원천징수, 증권 커스터디 수수료 산출 등의 근거가 되며 보존기간은「증권등예탁업무규정」제13조 제3항에 따라 10년임

---

61) 외국환거래규정 제7-37조(투자전용계정 등) ④ 외국인투자자가 투자전용비거주자원화계정에 예치할 수 있는 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한한다.
1. 제7-36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의 매각대금·배당금·이자 및 인정된 증권대차거래·환매조건부매매와 관련된 자금 등 (후략)
2. 본인 명의의 다른 투자전용비거주자원화계정·비거주자자유원계정·비거주자원화신탁계정으로부터 이체되어 온 자금
3. 증권매매와 관련한 위탁증거금
4. 본인 명의의 투자전용대외계정에 예치된 외화자금을 내국지급수단을 대가로 매각한 자금
5. (생략)

62) 외국환거래규정 제7-37조(투자전용계정 등) ⑤ 투자전용비거주자원화계정을 처분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한한다.
1. 제2항의 본인 명의 투자전용대외계정으로 이체
2. 제7-36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 취득 관련 자금 또는 인정된 증권대차거래·환매조건부매매와 관련된 자금의 지급을 위한 외국환은행·투자중개업자등·예탁결제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상호저축은행 또는 체신관서의 원화계정으로의 이체
3. 본인명의의 다른 투자전용비거주자원화계정·비거주자자유원계정·비거주자원화신탁계정으로의 이체
4. 외국인투자자가 국내에서 체재함에 수반하는 생활비, 일상품 또는 용역의 구입 등을 위한 내국지급수단으로의 인출
5. 외국환은행으로부터의 제7-36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증권의 매수
6. (생략)

6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0조(투자자의 예탁자에의 예탁 등) ① 투자자로부터 예탁받은 증권등을 예탁결제원에 다시 예탁하는 예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투자자계좌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ㅇ 한국은행은 증권보관계좌와 한국예탁결제원에 개설한 고객관리계좌 간 상호 대사를 통해 증권보관계좌 잔고를 점검하고 보관리스크를 관리

3. 고객관리계좌의 개설

□ 한국은행은 고객기관의 원화 당좌예금계좌와 증권보관계좌 개설과 함께 한국예탁결제원에 고객관리계좌[64] 개설을 신청

ㅇ 고객관리계좌는 한국은행 명의로 거래기관별로 개설되며 거래고객의 증권 매매 결제와 증권 양수도 등은 예탁결제정보통신망(e-SAFE)을 통해 계좌간 계좌대체 방식으로 이루어짐

ㅇ 거래기관의 증권 보유 및 증감 내역 등은 고객관리계좌에 기재되어 관리되며 이는 한국은행에 개설된 증권보관계좌에 기재된 내역과 일치해야 함

□ 한국예탁결제원은 고객관리계좌에 기재된 내역에 따라 해당 채권의 원리금 상환내역을 산출하고 고객관리계좌 잔고에 따라 매월 예탁 및 결제 수수료를 산정

---

1. 투자자의 성명 및 주소
2. 예탁증권등의 종류 및 수와 그 발행인의 명칭
3.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64) 한국예탁결제원에 개설되는 계좌는 업무 목적별로 2가지로 나뉨
1.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자기분 계좌) : 예탁자의 자기소유분인 증권 등을 관리하는 계좌
2. 고객관리계좌(투자자분 계좌) : 예탁자의 투자자 예탁분인 증권 등을 관리하는 계좌

제3장 증권 커스터디 업무 세부절차

제1절 채권 결제

1. 채권 결제 개요

□ 거래기관의 채권 결제는 SWIFT 등을 통한 거래기관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며 채권은 예탁결제정보통신망(e-SAFE)을 통해, 자금은 한은금융망(BOK-Wire+)을 통해 결제 처리

ㅇ 자금거래가 수반되는 채권 결제의 경우, 채권은 한국예탁결제원 결제 참가자의 고객관리계좌 및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간 계좌대체 방식을 통해 결제가 이루어지며 이와 동시에 한은금융망(BOK-Wire+)에 개설된 결제기관 간 결제전용계좌 사이에 자금이체가 이루어짐(동시결제, DVP : Delivery Versus Payment)

2. 채권 결제 과정

□ 채권 결제 과정은 1) 투자중개업자 또는 투자매매업자(이하 "투자중개업자 등")를 통한 채권매매 계약 체결, 2) 결제지시서 수신, 3) 프리매칭(Pre-matching), 4) 채권 결제 실행, 5) 결제내역 보고 등으로 구성

1) 투자중개업자 등을 통한 채권매매 계약 체결

ㅇ 거래기관(외국 중앙은행 등)은 투자중개업자 등[65]을 거래상대방으로 하여 채권매매 계약을 체결

65) 이 때, 투자중개업자 등은 채권중개인 겸 거래상대방으로서 거래기관이 요청하는 채권의 매수 또는 매도 거래의 결제상대방이 됨

○ 이후 투자중개업자 등은 이메일 등을 통해 한국은행에 매매내역을 통지하고 동 내역을 한국예탁결제원의 예탁결제정보통신망(e-SAFE)에 입력

2) 결제지시서 수신

○ 거래기관은 SWIFT 등을 통해 채권 매매내역을 포함한 채권 결제지시서를 약정서에 명시된 시각까지 한국은행에 통지

3) 프리매칭(Pre-matching)

○ 한국은행은 거래기관의 결제지시서와 거래상대방이 예탁결제정보통신망(e-SAFE)에 입력한 매매내역을 상호 대조(프리매칭[66])하고, 그 결과를 SWIFT로 거래기관에 통보

○ 이때, 거래유형, 증권보관계좌번호, 증권식별코드(ISIN), 증권수량, 결제금액 등 필수정보가 반드시 일치해야 하며 상호 일치하지 않는 경우 거래기관에게 통보하고 수정지시서를 송부해 줄 것을 요청

4) 채권 결제 실행

○ 결제일 전일까지 예탁결제정보통신망(e-SAFE)에 입력된 매매내역이 결제일 오전 9시 이후 예상결제내역으로 확정되며 거래상대방의 계좌에 입고된 결제대상 채권은 자동으로 처분제한이 설정됨

○ 처분제한 설정 이후 한국은행은 거래기관의 원화 당좌예금 잔고가 충분한지 확인한 후 매수 결제자금 지급을 처리하며, 이 때 대상 채권은 거래상대방의 계좌에서 한국은행 명의의 거래기관 고객관리계좌로 동시에 계좌대체 처리

66) 채권 결제를 진행하기 위해 사전에 거래기관과 결제상대방의 거래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의무사항은 아니나 결제의 안정성을 위해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한국은행 증권 커스터디 시스템도 프리매칭을 거쳐야만 결제가 이루어지도록 설계됨

ㅇ 해당 거래내역은 한국은행에 개설된 거래기관의 증권보관계좌와 한국예탁결제원에 개설된 계좌에 동시에 기재

5) 결제내역 보고

ㅇ 모든 결제가 완료되면 한국은행은 결제내역과 증권보관계좌 잔고내역 등에 대해 거래기관에 SWIFT로 통지

3. 채권 결제 실패

□ 프리매칭 과정에서 필수사항이 불일치하는데도 수정 지시서가 마감시각[67]까지 도착하지 않거나, 동시결제를 통한 증권매매 마감시각(오후 5시 30분)까지 필요한 결제대금 혹은 대상 증권이 확보되지 못할 경우 거래가 결제일 업무종료 시까지 미실행 상태로 남겨질 수 있음

ㅇ 미실행된 거래에 대해서 이를 거래기관에 통지하되 거래기관으로부터 동 미실행거래에 대한 취소 지시서[68]가 없는 경우 결제일 등 거래내역을 수정하여 익영업일에 실행(Roll-over)

4. 채권 결제 금지 기간

□ 한국예탁결제원은 계좌부에 기재된 채권에 대한 원리금 상환금액 확정을 위해 특정기간 동안에는 채권 결제를 금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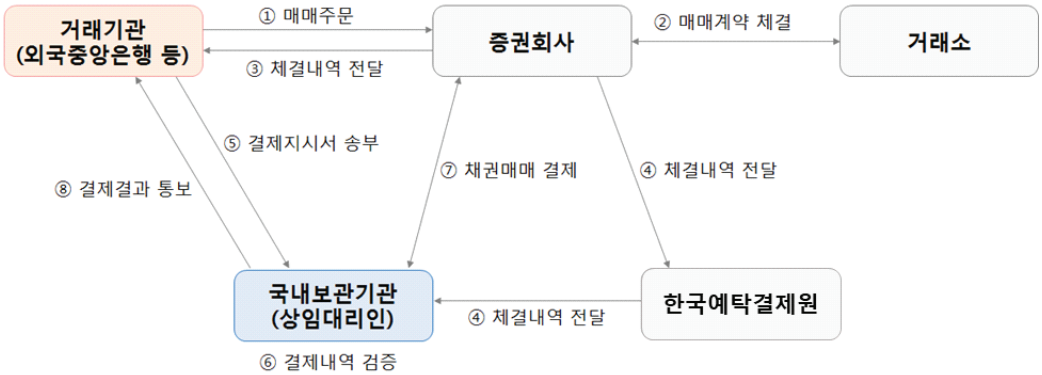
ㅇ 채권 양수도는 원리금 상환일 2영업일 전부터 상환 당일까지, 동시결제는 원금 상환일 당일 결제가 금지됨

---

67) 표준약정서 상 결제일 오전 9시까지이나 고객기관별로 달리 정할 수 있음

68) 표준약정서 상 결제일 익영업일 오전 9시까지이나 고객기관별로 달리 정할 수 있음

<그림 Ⅸ-2> 증권 커스터디 업무 관련 채권결제 과정



제2절 자금거래

1. 자금거래 업무 개요

□ 한은금융망(BOK-Wire+)을 통한 증권 커스터디 자금거래 업무는 증권거래(DVP결제방식)에 따른 자금 결제, 거래기관과 환거래은행간 단순 자금거래, 보관증권의 원리금 수령, 수수료 납부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2. 증권거래(DVP결제방식)에 따른 자금 결제

□ 증권거래(DVP결제방식)에 따른 자금 결제는 거래기관의 채권매매 시 증권결제와 동시에 대금을 수취하거나 지급함

ㅇ 거래기관이 채권을 매도할 경우 자금은 거래상대방인 투자중개업자 등(한은금융망(BOK-Wire+) 참가기관)의 당좌예금계좌에서 거래기관의 원화 당좌예금계좌로 입금 처리

○ 반대로 거래기관이 채권을 매수하여 자금을 지급하는 경우 거래기관의 원화 당좌예금계좌에서 투자중개업자 등의 당좌예금계좌로 입금 처리

<표 Ⅸ-4> 증권거래(DVP결제방식) 시 자금 회계처리

(증권 매도)

처리부서	처리시스템	차변	대변
투자중개업자 (한은금융망(BOK-Wire+) 참가기관)	한은금융망 (BOK-Wire+)	당좌예금 xxx (거래기관)	원화본지점 xxx (국고증권실)
	BOK-CS	원화본지점 xxx (결제운영팀)	당좌예금 xxx (거래기관)

(증권 매수)

처리부서	처리시스템	차변	대변
국고증권실 (증권팀)	BOK-CS	당좌예금 xxx (거래기관)	원화본지점 xxx (결제운영팀)
	한은금융망 (BOK-Wire+)	원화본지점 xxx (국고증권실)	당좌예금 xxx (거래기관)

3. 거래기관과 환거래은행간 단순 자금거래

□ 거래기관은 환거래은행[69] 계좌에서 한국은행에 개설된 원화 당좌예금계좌로 자금을 수취하거나 한국은행 원화 당좌예금계좌에서 환거래은행 계좌로 자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 SWIFT를 통해 자금수취예정내역 혹은 지급지시서를 수신 마감시각까지 한국은행에 통보해야 함

○ 자금 수취나 지급은 「외국환거래규정」 제7-37조 제4항 및 제5항에서 정하고 있는 자금 수취나 처분 가능 범주를 벗어나서는 안됨

69) 자금이체를 위해서는 사전에 거래기관별로 해당 기관의 환거래은행 정보를 미리 입수하여 증권 커스터디 시스템에 등록해야 함

□ 한국은행은 거래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자금수취예정내역 혹은 지급지시서에 대해 환거래은행과 결제일, 결제방향, 결제금액 등을 상호 확인 후 결제일에 증권 커스터디 시스템(BOK-CS)을 통해 자금을 수취 혹은 이체 처리

ㅇ 자금 수취 혹은 지급 완료 후에는 거래내역을 SWIFT를 통해 거래기관에 통지

□ 거래기관이 자금지급 지시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 취소지시서를 송부하여야 하며, 지시를 수정하고자 할 경우 취소지시서를 통해 기존 지급지시를 취소하고 신규 지급지시를 송부하여야 함

<표 IX-5> 단순 자금거래 시 회계처리

(자금 수취)

처리부서	처리시스템	차변	대변
환거래은행	한은금융망 (BOK-Wire+)	당좌예금 xxx (환거래은행)	원화본지점 xxx (국고증권실)
국고증권실 (증권팀)	BOK-CS	원화본지점 xxx (금융결제국)	당좌예금 xxx (거래기관)

(자금 지급)

처리부서	처리시스템	차변	대변
국고증권실 (증권팀)	BOK-CS	당좌예금 xxx (거래기관)	원화본지점 xxx (금융결제국)
		원화본지점 xxx (국고증권실)	당좌예금 xxx (환거래은행)

4. 보관증권의 원리금 수령

□ 한국은행은 거래기관의 보관증권 만기 상환일 또는 이자 지급일에 한국예탁결제원 당좌예금계좌에서 거래기관의 원화 당좌예금계좌로 원리금 이체를 처리

ㅇ 이자소득에 대한 거래기관별 원천징수를 실시하고 그 차액을 거래기관의 원화 당좌예금계좌에 입금 처리

<표 Ⅸ-6> 국고채권 원리금 수취 회계처리

처리부서	처리시스템	차변	대변
국고증권실 (증권팀)	BOK-CS	당좌예금 xxx (한국예탁결제원)	원화본지점 xxx (국고증권실)
		원화본지점 xxx (금융결제국)	당좌예금 xxx (거래기관) 가수금(이자소득세) xxx 가수금(특별과세금) xxx

5. 수수료 납부

□ 한국은행은 매월 20일 한국예탁결제원이 부과하는 예탁 및 결제수수료(전월 발생분)를 고객기관의 원화 당좌예금계좌에서 한국예탁결제원이 지정한 당좌예금계좌로 지급처리함

ㅇ 또한 한국은행의 커스터디 서비스 제공에 대한 보관 및 결제수수료를 같은 날 거래기관의 원화 당좌예금계좌에서 차기하여 한국은행 잡수수료 수익으로 처리

<표 IX-7> 수수료 납부 회계처리

(한국예탁결제원 수수료)

처리부서	처리시스템	차변	대변
국고증권실 (증권팀)	BOK-CS	당좌예금 xxx (거래기관)	원화본지점 xxx (금융결제국)
		원화본지점 xxx (국고증권실)	당좌예금 xxx (예결원 지정은행[1)])

(증권 커스터디 수수료)

처리부서	처리시스템	차변	대변
국고증권실 (증권팀)	BOK-CS	당좌예금 xxx (거래기관)	잡수수료 xxx (한국은행)

주: 1) 한국예탁결제원이 지정한 수수료 납부계좌로 입금되며 증권 커스터디 시스템 상에서 설정가능

제3절 원리금 수령 및 원천징수

1. 원리금 수령

□ 한국은행은 거래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증권에서 발생하는 원리금을 사전 확인 및 검증을 거쳐 정확한 금액을 적기에 수령

○ 증권 커스터디 시스템(BOK-CS)을 통해 거래기관 보유 증권의 이자수취 및 만기상환 내역을 미리 확인하고, 원리금 수취 2영업일 전 한국예탁결제정보통신망(e-SAFE)를 통해 조회된 원리금분배내역과 상호 대사하여 정확성을 검증

○ 검증된 원리금 수령 내역을 원리금 수령일 2영업일 전에 SWIFT를 통해 거래기관에게 통보

□ 원리금 수령일에는 증권 커스터디 시스템(BOK-CS)을 통해 한국예탁결제원의 당좌예금계좌에서 거래기관의 원화 당좌예금계좌로 이체 실행 후 원리금 수령 내역을 거래기관에 SWIFT로 통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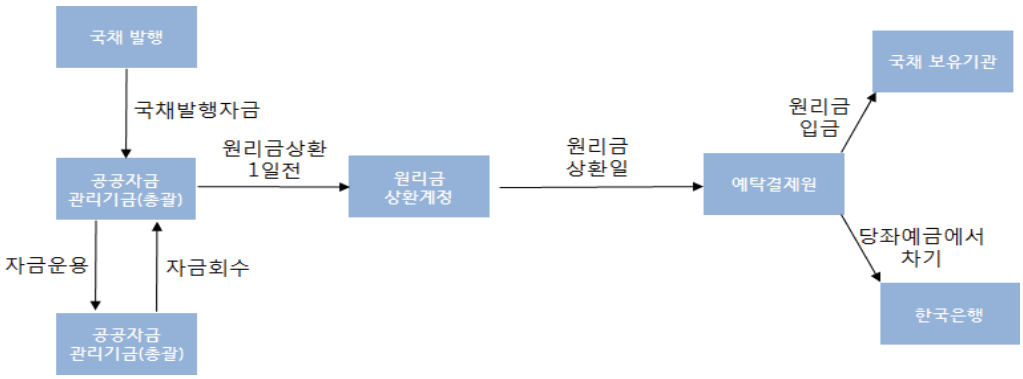
<참고 Ⅸ-4> 국채 원리금 상환자금 흐름

· 국채 발행자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을 통해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등으로 분배

· 원리금 상환일 전일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등으로부터 회수한 자금을 한국은행의 원리금 상환계정에 입금

· 원리금 상환일에 한국은행의 원리금 상환계정에서 한국예탁결제원의 당좌예금계좌로 상환자금을 입금

· 한국예탁결제원은 국고채권 보유기관의 한국은행 당좌예금계좌 또는 커스터디 거래기관 계좌에 원리금을 입금



2. 원천징수

□ 한국은행은 거래기관이 보유한 증권에 대한 이자지급 시 원천징수 의무자로서 이자지급일이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원천징수 금액을 납부

ㅇ 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법인세법 상 기본세율인 14%와 지방세 1.4%가 적용되나 해당 국가와 조세조약[70]이 체결된 경우에는 국내 세법상 세율과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 중 낮은 세율을 적용

- 조세조약상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가 면제되는 경우 '이자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 신청서'등 관련 서류를 이자 지급일이 속한달 다음달 9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

ㅇ 이에 따라, 증권 커스터디 약정 체결 시 미리 거래기관의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여부 및 적용세율 등을 국세청을 통해 확인해야 하며 세율 변경, 관련 법규 제·개정 등 정보를 수시로 입수하여 거래기관에 통보

□ 한편, 거래기관이 2015.1.1일 이후 발행된 물가연동국고채를 보유한 경우 동 채권의 원금 상환 시 보유기간 중 원금 증가분에 대해서도 이자소득에 준하여 원천징수함[71]

□ 원리금 수령 시 원천징수액을 공제한 금액을 거래기관의 원화 당좌예금계좌에 입금하며 원천징수한 금액은 한국은행 재무운영팀에 익월 10일 이전에 이체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면 재무운영팀이 관할 세무서로 일괄 제출

ㅇ 또한, 이자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 앞으로 지급명세서를 제출

---

70) 소득 및 및 자본에 대한 국제적인 이중과세 및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 간 문서에 의하여 체결하는 명시적 합의로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조세조약을 '소득·자본·재산에 대한 조세 또는 조세행정의 협력에 관하여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체결한 조약·협약·협정·각서 등 국제법에 따라 규율되는 모든 유형의 국제적 합의'로 정의

71) 「소득세법 시행령」 제22조의2(국채 등의 이자소득) ③ 국가가 발행한 채권으로서 그 원금이 물가에 연동되는 채권(이하 "물가연동국고채"라고 한다)의 경우 해당 채권의 원금증가분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자 및 할인액에 포함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4356호, 2013.2.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생략)...제22조의2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절 수수료 관리

1. 수수료 개요

□ 증권 커스터디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수료는 크게 거래기관이 지급하는 수수료와 한국은행이 외부에 지급하는 수수료로 구분할 수 있음

ㅇ 거래기관의 지급 수수료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지급하는 예탁·결제수수료와 한국은행에 지급하는 보관·결제수수료 등이며, 한국은행이 외부에 지급하는 수수료는 SWIFT 수수료 및 주변 기기 유지비 등임

2. 거래기관 지급 수수료

□ 거래기관이 한국은행에 지급하는 수수료는 보관수수료 및 결제수수료로 구성[72)]

ㅇ 보관수수료는 계좌 개설 및 유지, 시스템 개발 및 유지 등 거래기관의 증권 및 자금 관리를 위한 한국은행의 업무 수행에 대한 수수료임

- 매월 말일 기준으로 거래기관의 증권계좌 잔고가 있을 경우 정액으로 부과

ㅇ 결제수수료는 증권결제 및 자금지급 거래에 대한 수수료로 결제 건당 일정금액으로 책정되며, 리스크 관리를 위해 증권결제 및 자금지급 취소 거래에 대해서도 동일한 금액을 부과

---

72) 한편, 거래기관의 증권매매, 자금이체 등은 한은금융망(BOK-Wire+)을 이용하여 처리되나 자금이체가 한국은행과 한은금융망(BOK-Wire+) 참가기관간 결제로 간주됨에 따라 거래기관에 대해 한은금융망(BOK-Wire+) 수수료를 부과하지는 않음. 다만, 거래기관이 자금을 수취하는 경우 해당 자금을 지급하는 한은금융망(BOK-Wire+) 참가자는 한은금융망(BOK-Wire+) 수수료를 한국은행 금융결제국에 납부

○ 지급 수수료율은 주요국 중앙은행 및 국내 커스터디 서비스 제공업체 수수료 수준 등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비용 보전 차원에서 결정

□ 한국예탁결제원에 대해서는 예탁수수료 및 결제수수료를 지급

○ 거래기관은 한국은행을 통해 한국예탁결제원에 보유증권을 예탁하고 있으므로 예탁된 증권 잔고에 대해 일정요율로 예탁수수료를 지급

○ 거래기관은 보관증권 매매 시 한국예탁결제원의 증권결제시스템과 한국은행의 한은금융망(BOK-Wire+)을 연계한 동시결제시스템을 이용하므로 채권 결제금액에 대해 일정 요율의 결제수수료를 지급

<표 IX-8> 거래기관 지급 수수료 수준[1)]

부과기관	종류	부과기준	수수료
한국은행	보관수수료[2)]	증권보관계좌별 월 정액	150,000원
	결제수수료[3)]	증권/자금 결제 건당	10,000원
예탁결제원	예탁수수료	일별 증권잔고	10,000원당 0.00075원~0.00125원
	결제수수료	증권결제 건당	10,000원당 0.001646원

주: 1) 2021.5월 현재
2) 거래기관의 증권보관계좌에 전월말 기준으로 잔고가 있는 경우, 해당 증권보관계좌별로 월 단위의 정액 수수료를 부과
3) 증권결제와 자금결제의 각 결제(해당 결제의 취소를 포함) 건마다 해당 수수료를 부과. 다만, 증권대금동시결제(DVP)의 경우에는 증권결제에 대해서만 부과하며 자금결제는 거래기관의 이체지시에 의한 출금 건에 대해서만 부과

□ 한국은행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대해 지급해야 할 수수료 청구서(Invoice)는 발생월 익월 8일까지 이메일을 통해 거래기관에 발송

○ 익월 20일에 한국예탁결제원 수수료는 거래기관의 원화 당좌예금계좌에서 한국예탁결제원이 지정한 수수료 수취계좌로 이체처리하고 한국은행 수수료는 거래기관의 원화 당좌예금계좌에서 차기하여 잡수익으로 처리

3. 한국은행 지급 수수료

□ 증권 커스터디 업무와 관련하여 한국은행은 SWIFT 수수료와 주변기기 유지비용을 외부에 지불

ㅇ SWIFT 수수료는 SWIFT 시스템 이용을 위한 은행식별코드(BIC, Bank Identifier Code) 유지비용, 전문 발송 비용 등으로 구성되며 외화수수료이므로 한국은행 외자운용원이 보유한 외화계좌에서 지급

ㅇ 주변기기 유지비용은 SWIFT 전문 정보를 변환하여 증권 커스터디 시스템(BOK-CS)으로 전달하기 위한 미들웨어 유지 및 보수비용으로서 매년 외자운용원 원화계좌에서 유지보수기관의 계좌로 지급

제5절 보고서 제출

1. 거래기관에 대한 보고

□ 한국은행은 증권결제 등으로 거래기관의 원화 당좌예금계좌 잔액 혹은 증권보관계좌의 잔고가 변동하였을 경우 일중 및 업무마감 이후 SWIFT를 통해 거래기관에 결제 및 잔고 내역을 보고

ㅇ 거래기관의 원화 당좌예금계좌에서 자금 입금 혹은 출금이 발생한 경우 입금거래내역(MT910[73]) 혹은 출금거래내역(MT900)을 결제 직후에 통보

ㅇ 증권 거래에 대한 결제 이후, 증권 매수는 MT545, 매도는 MT547, 양수는 MT544, 양도는 MT546 등 해당 거래의 결제 확인서를 거래기관에게 송부

73) SWIFT 전문 종류(Message Type, MT)는 세 자리 숫자로 표시되며 맨 앞자리 숫자는 해당 전문이 속하는 카테고리를 의미. 「제6장 SWIFT 메시지」 참조

- 증권 결제과정에서 프리매칭(Pre-matching) 내역은 MT548을 사용

ㅇ 원리금 수령의 경우 수령일 2영업일 전에 수령 예정내역(MT564)을 거래기관에게 통보하고 원리금 수령 이후에는 수취 완료 내역(MT566)을 통지

ㅇ 매일 업무 마감 이후에는 거래기관의 원화 당좌계좌변동분(MT950) 및 증권보관계좌 잔고(MT535)를 거래기관에게 통보

□ 또한, 세제 변경, 공휴일 알림 등 각종 거래관련 정보를 부정기적으로 통지하며, 거래기관의 질의에 대한 답변, 거래기관의 요청에 따른 계좌 명세서 제출 등도 부정기적으로 수행

2. 유관기관에 대한 보고

□ 증권 커스터디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 한국은행 내 유관부서에 각 보고서의 제출 주기에 맞춰 정기적으로 보고서를 제출함

<표 IX-9> 보고서별 제출 주기 및 제출 기관

보고서 종류	제출 주기	제출 기관
외환전산망 제출 보고서[1]	일[2]	한국은행 자본이동분석팀
세무기초자료 합계표	월	한국은행 재무운영팀
외국인취득증권보관현황	분기	한국예탁결제원[3]
비거주자 국내유가증권보유현황	분기	한국은행 국외투자통계팀
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	년	국세청

주: 1) 「비거주자 원화계정/자유원계정/원화신탁계정 거래」 보고서(FX0019)
2) 거래 발생일에만 송부
3) 한국예탁결제원을 거쳐 최종적으로 금융감독원에 제출

<표 IX-10> 증권 커스터디 정례 및 비정례업무

주기	정례업무	비정례업무
일	·고객 질의사항 응대 ·익일 결제내역 점검 ·증권 및 자금 결제 실행·통보 ·원리금 지급 예정내역 확인 ·원리금 지급 ·증권 잔고 대사 및 통보 ·원화계좌 잔고 통보 ·외환전산망 보고서 제출 ·익일 원화계좌 변동액 통보	·증권 커스터디 시스템 개선 ·잠재고객기관 대상 안내활동 ·신규 고객기관 약정 협의 및 체결 ·증권 커스터디 관련 기획·조사 ·OSSP Roundtable 관련 기획·조사
월	·비과세·면제 신청서 제출 ·세무기초자료 합계표 제출 ·고객 앞 커스터디 수수료 통보 및 수수료 차기	
분기	·외국인취득증권 보관현황보고 ·비거주자 국내유가증권 보유현황보고	
년	·이자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제4장 유관기관의 역할 및 프로세스

1. 개요

□ 외국 중앙은행 등의 국내채권 투자와 관련해서는 상임대리인, 커스터디은행(Custodian Bank, 보관기관), 투자중개업자, 투자매매업자, 환거래은행 등이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2. 외국인의 국내채권 투자 절차

(1) 상임대리인 및 보관기관 선임

□ 국내보관기관을 이용하여 국채나 통화안정증권 등에 투자하려는 외국인 투자자는 먼저 우리나라 내에서 제반 수속 및 업무 등을 대행해 줄 상임대리인 및 취득한 유가증권을 보관하는 보관기관을 선임[74)]

ㅇ 보관기관과 상임대리인이 별개의 기관이 될 수도 있고, 동일 기관이 보관기관과 상임대리인 업무를 병행할 수도 있음

(2) 투자등록

□ 외국인이 국내증권을 최초로 취득 또는 처분하고자 하는 때에는 직접 또는 상임대리인을 통해 금융감독원에 투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금융감독원은 심사를 거쳐 외국인투자등록증(IRC)을 발급

---

74) 상임대리인은 한국예탁결제원, 외국환은행,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국제적으로 인정된 외국보관기관, 한국은행 등으로 한정(「금융투자업규정」 제6-22조(상임대리인의 선임)

(3) 계좌 개설

□ 외국인 투자자는 직접 또는 상임대리인을 통하여 외국환은행에 본인 명의의 투자전용대외계정 및 투자전용비거주자원화계정을 개설하여야 하며[75], 투자중개업자 또는 투자매매업자에 매매위탁계좌를 개설

(4) 매매주문 및 매매결과 보고

□ 외국인투자자는 직접 또는 상임대리인을 통해서 매매주문을 하게 되며 비거주 외국인투자자의 경우 상임대리인에게 매매결과를 통보

(5) 결제지시 및 결제이행

□ 외국인투자자가 국내보관기관에 외화결제자금을 입금하면 국내보관기관은 이를 원화로 환전하여 거래상대방과의 결제를 처리

(6) 결제완료 통보

□ 결제가 완료되면 보관기관은 결제내역을 외국인 투자자에게 송부

3. 유관기관의 업무수행 범위 및 프로세스

□ 커스터디은행(Custodian Bank, 보관기관)은 외국인 투자자를 위해 증권보관, 투자자계좌부 관리, 환전, 증권 및 대금결제, 원리금 수령 및 원천징수, 증권 및 자금 운용 등의 서비스를 제공

---

75) 「외국환거래규정」 제7-37조(투자전용계정 등) ① 외국인투자자는 국내원화 증권에 투자(증권매각대금의 외국으로 송금을 포함한다)하거나 인정된 증권대차거래 및 환매조건부 매매와 관련된 자금의 지급 등을 위해 외국환은행에 본인 명의 투자전용대외계정 및 투자전용비거주자원화계정(이하 "투자전용계정"이라 한다)을 통해 관련자금을 예치·처분할 수 있다.(후략)

□ 상임대리인은 외국인 투자자의 취득증권을 보관하는 기관 중에서 계약을 통해 취득증권의 권리행사 등을 대리 또는 대행하는 자를 말하며 취득증권 권리행사 외에도 외국인투자등록 신청, 거래기관 명의의 매매위탁계좌 개설, 금융감독원 앞 보고 등을 대행

□ 우리나라에서는 통상 커스터디은행과 약정체결 시 상임대리인 업무를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커스터디은행이 상임대리인 업무까지 함께 담당

ㅇ 다만, 한국은행은 투자등록증 신청, 매매위탁 계좌 개설 등 일부 상임대리인 업무는 제공하지 않고 있음

□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인 외국 중앙은행 등을 위하여 증권매매 또는 증권 중개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투자 정보를 제공

ㅇ 외국 중앙은행 등은 증권투자를 위하여 투자중개업자 등에게 매매위탁계좌를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등록증을 투자중개업자에게 제시하고 본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76)]

□ 환거래은행(외국환은행)은 외국 중앙은행 등이 국내 원화증권에 투자 시 관련 자금의 지급 등을 위해 환전 업무와 고객의 요구에 따라 증권 및 자금 운용 서비스 등을 제공

ㅇ 거래기관은 한국은행이 제공하지 않는 환전, 증권 및 자금 운용 등의 서비스를 외국환은행을 통해 제공받을 수 있음

---

76) 「금융투자업규정」 제6-14조(계좌의 개설) ① 외국인이 증권투자를 위하여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 매매거래계좌를 개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증권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매매거래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인은 제6-11조 제1항에 따른 투자등록증을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등 금융기관에 제시하고 투자등록명의로 매매거래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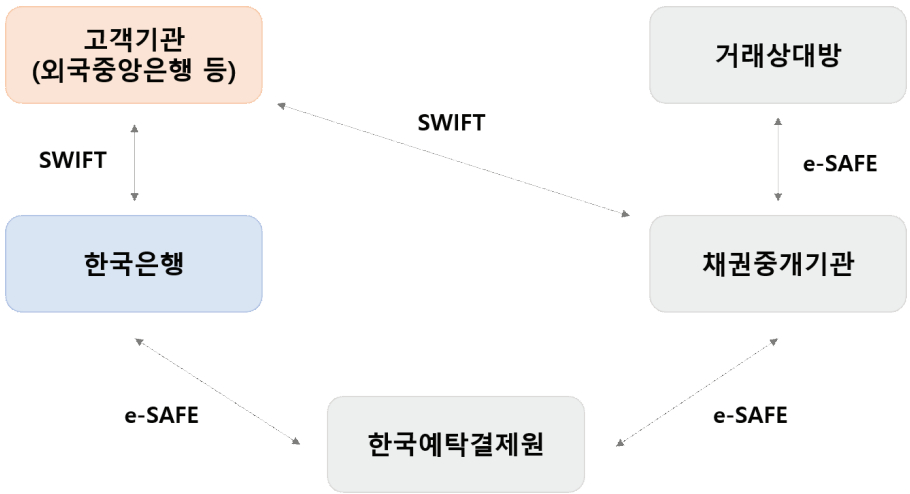
제5장 BOK-CS 등 관련 시스템

1. 개요

□ 한국은행의 증권 커스터디 업무는 증권 커스터디 시스템(BOK-CS)을 중심으로 SWIFT 네트워크, 예탁결제정보통신망(e-SAFE), 한은금융망(BOK-Wire+)과 연계하여 수행

○ 거래기관과는 SWIFT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결제지시서 송수신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채권 및 자금 결제, 원리금 수령 등은 예탁결제정보통신망(e-SAFE)과 한은금융망(BOK-Wire+)을 이용하여 수행

< 그림 Ⅸ-3 > 한국은행 증권 커스터디 업무 네트워크



2. 증권 커스터디 시스템(BOK-CS)

□ 증권 커스터디 시스템(BOK-CS)은 증권시스템의 하위 시스템으로 설치되어 거래기관 관리, 수수료 처리, 자금 및 증권 결제, 송·수신 전문 관리, 기본정보 및 처리결과 조회, 각종 보고서 작성 등의 기능으로 구성

○ (거래기관 관리) 거래기관의 담당직원, 원천징수 정보, 수수료 기준, 원화 당좌예금계좌 잔액한도 등 기본 정보를 등록하고 당좌예금 약정체결, 계좌 개설 등을 처리

○ (수수료 처리) 매월 거래기관의 거래 및 증권 잔액에 따라 증권 커스터디 수수료 및 한국예탁결제원 수수료 지급을 처리

○ (자금 및 증권 결제) 거래기관으로부터 지시서를 수신하여 그에 따른 증권 및 자금을 결제하고, 보유 증권의 원리금을 수령하여 거래기관에 지급하는 등 커스터디 업무를 처리

○ (송·수신 전문 관리) 거래기관이 보낸 지시서 접수와 한국은행의 통보 전문 전송을 처리하고 송·수신 내역을 조회

3. SWIFT 전문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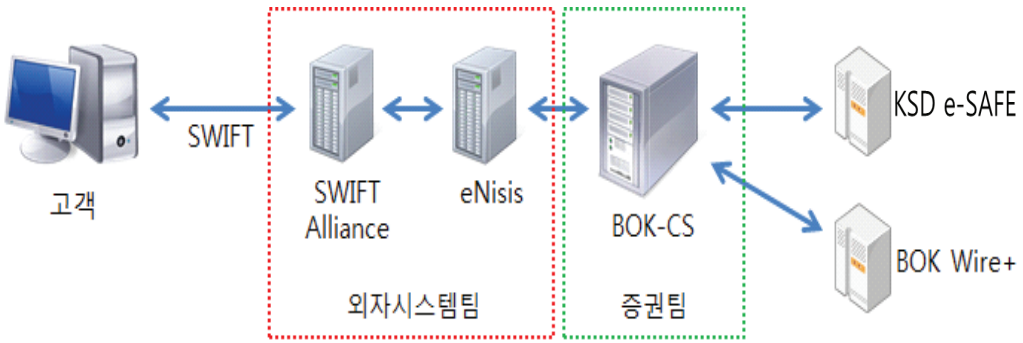
□ 한국은행과 거래기관이 SWIFT를 통해 전문을 송·수신할 경우 미들웨어인 이니시스(eNisis)가 증권 커스터디 시스템 전문과 SWIFT 전문 간 변환작업을 수행하며 SWIFT 전문은 SWIFT Alliance를 거쳐 SWIFT 서버와 연결

○ 증권 커스터디 시스템에서 생성한 전문을 거래기관 앞으로 전송하기 위해 이니시스 앞으로 해당 전문을 보내면 이니시스는 이를 유형별 SWIFT 전문으로 변환하여 SWIFT Alliance 앞으로 전달하고 SWIFT Alliance는 변환된 전문을 SWIFT로 전송

- 이 때, 이니시스는 증권 커스터디 시스템 앞으로 전문 변환결과를 전달하며 SWIFT는 전문 수신 이후 SWIFT Alliance 앞으로 응답전문을 전송하고 해당 내용은 다시 증권 커스터디 시스템으로 전달

○ 한국은행이 거래기관의 전문을 수신할 때는 반대 순서로 SWIFT Alliance와 이니시스를 거쳐 BOK-CS가 수신

<그림 IX-4> 증권 커스터디 시스템 하드웨어 구성



제6장 SWIFT 메시지

1. SWIFT 개요

□ SWIFT(Society Worldwide Interchange Financial Telecommunication) 社는 각국 주요 은행의 지급 및 송금 업무 등을 데이터 통신을 통해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

□ SWIFT 통신망은 200여 개국 11,000개 이상의 금융기관을 연결하여 데이터와 메시지 전송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전 세계 대부분의 자금 및 증권 결제업무가 SWIFT 통신망을 통한 전문 송·수신을 통해 이루어짐

2. BIC 및 RMA

□ SWIFT 통신망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용자별 식별기호인 BIC(Bank Identifier Code)를 부여받아야 하며, BIC는 은행, 국가, 지역, 지점코드를 합한 최대 11자리로 구성

<표 IX-11> BIC(Bank Identifier Code) 사례

BIC	기관코드	국가코드	지역코드	지점코드[1]
BOKRKRSEXXX	BOKR	KR	SE	XXX
	한국은행	대한민국	서울	본점
FRNYUS33XXX	FRNY	US	33	XXX
	뉴욕연방준비은행	미국	뉴욕	본점

주: 1) 지점코드는 선택적 입력사항으로 본점(Primary office)의 경우 'XXX'로 표기

□ RMA(Relationship Management Application)는 SWIFT에서 제공하는 거래기관 간 네트워크 관리 프로그램으로서 상대기관과 SWIFT 전문을 교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록되어야 함

ㅇ 상대기관 명의의 BIC로 한국은행과 RMA 교환을 요청하면 한국은행 또한 상대방에게 한국은행 명의의 BIC로 RMA 교환 요청을 하여 상호간 교차 승인을 통해 RMA 체결이 완료

3. SWIFT 전문 체계 및 전문별 상세 내용

□ 전문 종류(Message Type, MT)는 세 자리의 숫자로 표시되는데 맨 앞자리의 숫자는 해당 전문이 속하는 카테고리를 의미하며 가령, MT541전문은 카테고리 5에 41번 전문이라는 의미

ㅇ 한국은행과 거래기관은 증권 커스터디 업무와 관련하여 주로 자금이체(2), 증권거래(5), 계좌관리(9)의 카테고리 전문을 사용하며 이외에 프리 포맷(free format) 형태(MT n99) 전문도 간혹 사용

<표 IX-12> SWIFT 전문 유형

형식	업무종류
MT 1XX	고객송금
MT 2XX	금융기관간 자금이체
MT 3XX	환전(FX), 단기금융시장
MT 4XX	추심
MT 5XX	유가증권
MT 6XX	귀금속 및 신디케이션(Syndications)
MT 7XX	신용장 및 무역금융(L/C)
MT 8XX	여행자수표
MT 9XX	계좌관리 및 리포트

X. 참고 자료

제1장 채권의 종류

제2장 전자증권제도의 개요

제3장 증권업무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관련 세법조항

제1장 채권의 종류

제1절 채권의 종류

□ 채권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조 제3항에 따라 발행주체를 기준으로 국채, 지방채, 특수채, 회사채로 분류

<표 Ⅹ-1> 채권의 분류 체계

원화표시 채권	국내채권	국 채	국고채권 / 재정증권 / 국민주택채권	
		지방채	도시철도채권	서울/부산/대구/대전/인천/광주도시철도채권
			지역개발채권	서울/부산/대구/대전/인천/광주/울산/경기/강원 충남/충북/전남/전북/경남/경북/제주/세종/창원지역개발채권
			공모지방채 / 기타지방채	
		특수채	통화안정증권	
			금융특수채	특수은행채(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은행채)
			비금융특수채	한국전력공사채권/토지주택채권 한국도로공사고속도로건설채권/한국자산관리공사채권 예금보험공사채권/기타비금융특수채
		회사채	일반사채	
			주식관련사채	전환사채/신주인부권부사채/교환사채 이익참가부사채
			금융회사채	일반은행채(은행법에 의한 은행채)
				카드채/리스채/종합금융채/할부금융채 증권금융채/기타금융채
	외국채권			
외화표시 채권	달러화표시채권 / 엔화표시채권 / 유로화표시채권 등			

1. 국채

□ 국채란 국가가 공공목적에 필요한 자금의 확보 등을 위하여 발행하는 채권으로 국가의 세입은 대부분이 조세수입이지만,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 재정수지상 부족이 생길 수 있고 이때 부족액을 보전하고 수지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채를 발행하게 됨

ㅇ 현재 국고채권, 재정증권, 제1종 국민주택채권, 외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등 4종의 국채가 발행되고 있음

□ 국채는 정부가 발행하기 때문에 신용도가 가장 높은 채권이라 할 수 있으며, 국채 중 발행물량이 많고 정기적으로 발행되며 거래가 활발한 최근 발행 국고채권의 유통수익률이 지표금리 역할을 하고 있음

가. 국고채권

□ 국고채권은 국가의 재정정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의 부담으로 발행하는 국채로「국채법」을 근거로 발행됨

ㅇ 농지채권, 철도채권, 농어촌발전채권, 국민주택기금채권 등으로 각각 발행되던 채권을 1994년부터 국채관리기금의 부담으로 일원화하여 국채관리기금채권을 발행하였는데, 동 명칭을 1998년 11월부터 국고채권으로 변경하였음

ㅇ 자금부담 주체인 국채관리기금은 2000년 4월부터 공공자금관리기금에 통합되었음

□ 현재 국고채권은 한은금융망(BOK-Wire^{+})을 통한 경쟁입찰에 따라 시장실세금리로 발행되며, 만기는 7종류(2년, 3년, 5년, 10년(물가연동국고채도 10년), 20년, 30년, 50년)

나. 재정증권

□ 재정증권은 단기적인 재정수급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경쟁입찰방식에 의해 공개시장에서 시장실세금리로 발행됨

ㅇ 재정증권은 재정수급 상황, 한국은행 차입 여건 등에 따라 발행이 불규칙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로 28일물, 63일물, 91일물 등이 발행되어 왔음

다. 국민주택채권

□ 제1종 국민주택채권은 국민주택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조달 목적으로「주택건설촉진법」(현「주택법」)에 따라 1973년부터 발행되었으며 초기에는 한국주택은행(현 국민은행)이 채권을 발행하고 정부가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정부보증채로 발행되었으나 1981년 국채로 전환

ㅇ 건축 허가, 식품영업 허가, 부동산 등기 등의 인허가·등기·등록시 매입을 의무화하여 발행하고 있으며, 발행조건은 만기 5년, 금리 연 1%(2019년 8월 8일 발행분부터 적용, 연 단위 복리계산)임

□ 제2종 국민주택채권은「주택건설촉진법」(현「주택법」)에 의하여 부동산 투기과열지구내의 신규건설 아파트 입주예정자 선정시 채권입찰제를 실시하여 매입토록 하는 채권으로, 국민은행(구 한국주택은행)에서 취급

ㅇ 1983년부터 만기 20년, 금리 연 3% 조건으로 발행되었으나 1999년 7월 15일 채권입찰제 폐지로 발행이 중단되었으며, 이후 발행이 재개된 2006년 2월 24일부터 만기 10년, 금리 0%로 발행되다가 2013년 5월 31일부터 신규발행이 중단되었음

라. 외국환평형기금채권

□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은 외환수급 조절을 통한 외환거래의 원활화 목적으로 1987년부터 발행되었으며, 원화표시채권은 2003년 11월부터 국고채로 통합 발행되고 있음

□ 외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은 국제금융시장에서 국내금융기관의 외화차입 시 기준금리를 제시하기 위한 목적에서 「외국환거래법」을 근거로 하여 외국환평형기금의 부담으로 발행되고 있음

2. 지방채

□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입의 부족을 보충하거나 지하철·교량·하수종말처리장 등 대규모 건설사업, 지방공기업의 설비투자 또는 재해복구 등 특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금을 차입하는 채무로서, 그 이행이 여러 해에 걸쳐 이루어지면서 증서차입 또는 증권의 형식으로 발행됨

ㅇ 지방채는「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도시철도법」,「지방공기업법」,「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및「도시개발법」에 근거하여 발행됨

가. 도시철도채권

□ 도시철도채권은「도시철도법」에 따라 지역의 도시철도 건설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방채이며, 발행시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 후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ㅇ 도시철도채권은 서울·부산·인천·대구·광주·대전에서 발행되었으며 발행주체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임

□ 서울도시철도채권은 7년 만기 일시상환이지만, 다른 도시철도채권은 5년 만기 일시상환 방식임

ㅇ 이자 계산 방식은 서울도시철도채권의 경우 복5단2(5년 복리 후 2년 단리)로, 기타 지방도시철도채권은 5년 연복리로 계산되며 첨가소화[77]되어 매출되고 있음

나. 지역개발채권

□ 지역개발채권은「지방자치법」,「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등에 의거하여 지역개발기금의 재원조달용으로 발행되는 지방채로 전국 16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연복리 5년 만기 일시상환의 조건으로 발행되고 있으며, 도시철도채권과 같이 첨가소화되어 매출되고 있음

다. 공모지방채

□ 공모지방채는 도시철도채권과 지역개발채권 이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모발행되는 채권이며, 서울특별시가 발행하는 서울특별시채권, 인천광역시가 발행하는 인천지방채권 등이 있음

3. 특수채

□ 특수채는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을 말하며,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통화안정증권,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은행(특수은행)이 발행하는 금융특수채, 특수은행을 제외한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기관이 발행하는 비금융특수채가 있음

---

77) 주택, 자동차, 항공기 등의 구매시 각종 등기, 인허가, 등록에 포함(첨가)시켜서 일반인들에게 공공적인 목적으로 강제 매입(소화)시키는 것을 말함

4. 회사채

□ 회사채는 주식회사가 일반대중으로부터 비교적 거액의 장기자금을 일시에 대량으로 조달하기 위해 채무증서 형식으로 발행하는 증권을 말함

□ 회사채는 일반사채, 금융회사채, 주식관련사채로 구분되며, 일반사채는 일반기업이 발행하는 채권으로 발행회사의 상환능력을 기초로 발행되므로 해당회사의 신용도에 따라 이율 등 발행조건에 차이가 있음

□ 일반기업이 발행하는 채권 중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교환사채(EB), 이익참가부사채(PB)와 같이 주식으로 전환하거나 신주 발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붙어 있는 채권은 주식관련사채로 별도 구분

<표 X-2> 특수채 발행기관 및 기관 설치 근거법

구분	근 거 법	발 행 기 관
통화안정증권	한국은행법 /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법	한국은행
금융특수채	한국산업은행법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법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법	한국수출입은행
	농업협동조합법	농협은행
	수산업협동조합법	수협은행
비금융특수채	예금자보호법	예금보험공사
	금융회사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법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법	한국도로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전력공사법	한국전력공사
	한국석유공사법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법	한국가스공사
	대한석탄공사법	대한석탄공사
	한국수자원공사법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공항공사법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인천국제공항공사
	항만공사법	항만공사
	한국관광공사법	한국관광공사
	한국철도공사법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법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환경공단법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	중소기업진흥공단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장학재단설립등에관한법률	한국장학재단
	한국광물자원공사법	한국광물자원공사
	무역보험법	한국무역보험공사
	집단에너지사업법	한국지역난방공사
지방공사채	지방공기업법	지방공사·공단

[**기타 채권분류방법**]

— 이자지급방법 : 이표채, 할인채, 복리채, 단리채
— 상환기간 : 단기채(1년 이하), 중기채(1년 초과 5년 이하), 장기채(5년 초과)
— 보증유무 : 보증채*, 무보증채

* 보증채는 정부가 지급을 보증하는 정부보증채(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 예금보험기금채권, 1995년 이전에 발행된 산업금융채권 등)와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하는 일반보증채로 구분

제2절 증권표준코드

1. 증권표준코드의 의의

□ 국제 증권거래가 급속하게 증대되고 금융거래의 전 과정이 전산시스템을 통해 처리됨에 따라 매매, 결제, 관리 등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모든 증권상품에는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등록번호가 사용되고 있음

□ 국제증권식별번호(ISIN[78])에 관한 기준은 국제표준화기구(ISO[79])를 주축으로 하여 국제표준코드부여기관협회(ANNA[80])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한국거래소에서 발급하고 있음

ㅇ 이와 같은 국제증권식별번호(ISIN)를 우리나라에서는 증권표준코드라 부르며, 한국거래소는 ISO가 제정한 증권코드체계 KX X ISO 6166과 한국산업규격(KS규격)에서 정한 표준코드 체계(KS X ISO 6166)를 바탕으로한 「증권 및 관련 금융상품 표준코드 관리기준」에 따라 증권표준코드를 발급 및 관리하고 있음

□ 증권표준코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유일성이며 표준코드가 중복될 경우 식별번호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의 증권에는 전세계적으로 하나의 표준코드가 부여됨

□ 이러한 표준코드는 12자리로 이루어져 있는데, 처음 2자리는 국가가 식별될 수 있도록 알파벳을 사용하며 발행기관, 발행연월 등 금융상품의 기본정보를 반영하는 9자리와 검사코드(오류식별코드) 1자리로 구성되어 있음

---

78) ISIN : International Securities Identification Number
79) ISO :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80) ANNA : Association of National Numbering Agencies. 1992년 증권표준코드 부여와 배포에 관한 기준 제정, 기준준수 권고, 대외홍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으로 국제표준화기구(ISO)로부터 ISO 6166(ISIN) 및 ISO 10962(CFI) 공식 등록기관(Registration Authority)으로 지정됨

[증권표준코드 신청시 입력하는 금융상품분류코드(CFI)와 금융상품약명(FISN)]

□ 한국거래소는 국내 유일의 증권표준코드 발급기관으로서 증권표준코드와 함께 금융상품분류코드(CFI)와 금융상품약명(FISN) 등 국제 표준에 따른 보완 코드도 함께 발급하고 있음

□ '증권표준코드(ISIN)'가 금융상품을 구별하는 기본코드라면, '금융상품분류코드(CFI : Classification of Financial Instruments)'는 해당 금융상품의 속성을 보다 세부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증권표준코드의 보완코드임. 금융상품분류코드는 증권표준코드와 마찬가지로 ANNA를 공식등록기관으로 하며, ISO가 제정한 코드체계인 ISO 10962를 따르고 있음

□ 증권표준코드는 알파벳과 숫자가 혼합된 12자리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금융상품분류코드(CFI)는 알파벳 6자리로 구성되어 있음

ㅇ 구성(총 6자리) : 상품분류 1자리, 그룹구분 1자리, 상품속성 4자리
(예1) ESVUFR ⇒ 주식, 보통주, 1주1의결권, 소유 및 양도제한無, 전액납입, 기명
(예2) DBFUFB ⇒ 채권, 일반채권, 고정금리, 무담보/무보증, 만기일시상환, 무기명

□ 금융상품분류코드(CFI)가 금융상품의 성격을 표현하기는 하나 알파벳으로 구성되어 있어 일반인들이 한눈에 알아보기 어려운 한계를 극복하고자, ISO는 2015년 11월 금융상품약명표준안(ISO 18774 FISN : Financial Instrument Short Name)을 제정하였음

□ '금융상품약명(FISN : Financial Instrument Short Name)'이란 그 자체만으로 금융상품의 속성을 파악할 수 있는 코드로, 금융상품의 정보전달력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되었음. 전세계적으로는 2017년부터 발급하기 시작하였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2018년 신규 도입함

ㅇ 구성(총 35자 이내) : 발행자약명, 구분자(/), 금융상품 특성 약어
(예1) KTB/2.625 Bd 20280610 Sr Ungtd ⇒ (발행자)한국정부, (표면이율)2.625, 채권, (상환일)2028.6.10. 선순위, 무보증

2. 증권표준코드 체계

가. 기본 체계

<표 Ⅹ-3> 표준코드의 기본 체계

국가코드 (2자리)	기본코드 (9자리)	검사코드 (1자리)
O O	O O O O O O O O O	O
우리나라는 'KR' 사용	금융상품에 따라 상이	Double-Add-Double 방식으로 계산

(1) 국가코드

□ 국가코드는 ISO 3166(International Standard for Country Codes)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를 나타내기 위한 두 자리의 알파벳을 말하며, 우리나라의 국가코드는 'KR'임

<표 Ⅹ-4> 주요국 국가코드 예시

국가	코드	국가	코드
미국	US	독일	DE
일본	JP	홍콩	HK
영국	GB	싱가포르	SG
프랑스	FR	중국	CN

(2) 기본코드

□ 기본코드는 각 국가의 환경에 맞추어 정의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는 한국거래소의 「증권 및 관련 금융상품 표준코드 관리기준」에서 금융상품별로 속성코드 1자리[81], 발행체고유코드 5자리 그리고 종목구분코드 3자리로 기본코드를 정의하고 있음

(3) 검사코드

□ 검사코드는 특정 표준코드가 오류 없이 완전하게 부여되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사용되는 오류식별코드임

3. 증권표준코드 부여 절차

가. 발행기관 등록

□ 증권의 표준코드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우선 발행기관의 고유번호인 발행기관 코드*(발행체 고유코드)를 한국거래소에서 발급받아야 함

* 증권표준코드에서 발행기관을 식별하기 위한 고유번호를 나타냄

ㅇ 발행기관코드가 없는 상태에서 증권의 표준코드 신청이 불가하므로, 증권을 신규로 발행하는 기업은 한국거래소 표준코드시스템(http://isin.krx.co.kr)에서 발행기관 등록을 하면 됨

나. 증권표준코드 신청절차

□ 발행기관 코드를 발급받은 후 발행사 혹은 증권발행의 주관사는 발행될 증권의 표준코드를 표준코드시스템을 통해 신청

81) 금융상품별 속성코드 : 국채 1, 지방채 2, 특수채 3, 선물 및 옵션 4, 수익증권 5, 회사채 6, 주권 7, 유가증권예탁증서 8, 신주인수권증서 및 신주인수권증권(ELW 포함) A, 외국채권 B, 스트립 C 등

(1) 증권표준코드의 신청 및 발급

□ 표준코드시스템에서 신청하고자 하는 증권의 메뉴(주권, 채권 등)를 선택하여 발행정보를 입력하는데, 발행정보의 정확성을 위하여 주권 및 비상장 채권은 신청 시 증권표준코드부여신청서를 한국거래소에 송부하여야 함

ㅇ 단, 상장예정 채권은 상장신청 시 증권신고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므로 증권표준코드부여신청서의 제출의무는 면제됨

ㅇ 표준코드 신청 시 표준코드 부여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며 국채, 지방채, 통화안정증권 및 국채스트립의 경우 수수료가 면제됨

□ 한국거래소는 표준코드 신청내용과 증빙서류를 근거로 표준코드를 부여하며, 오류사항 또는 특이사항 발견시에는 신청자에게 유선으로 확인하는 과정을 거침

ㅇ 부여된 표준코드는 이메일로 신청자에게 신청결과 및 표준코드 내용이 통보될 뿐만 아니라 표준코드시스템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

(2) 증권표준코드의 공표

□ 증권표준코드는 발급된 즉시 국내 정보사업자 혹은 유관기관의 시스템을 통하여 공표되며, ANNA에 코드부여 및 관리내역을 일별로 통보하여 ANNA 회원국 및 협력사, 세계 주요 금융기관 및 주요 정보사업자에게 전달되어 해외투자자가 이를 이용할 수 있게 됨

(3) 증권표준코드의 관리

□ 증권표준코드를 부여받은 후 채권의 발행금액, 이자율 등 발행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 표준코드시스템에서 변경 신청할 수 있음

ㅇ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들은 표준코드 담당자에게 발행정보 변경 신청서를 팩스 송부함으로써 발행정보를 변경할 수 있음

<표 X-5> [국고채권 및 통화안정증권 표준코드 부여 및 상장 절차]

표준코드시스템 접속 (http://isin.krx.co.kr)	입찰 전
↓	
국고채권 및 통화안정증권 정보입력 및 표준코드 부여신청	〃
↓	
신청결과 조회 (표준코드입수)	〃
↓	
국고채권 및 통화안정증권 발행정보에 표준코드 입력	입찰 후
↓	
국고채권 및 통화안정증권 발행정보 한국예탁결제원앞 송부	〃
↓	
채권상장시스템 접속 (http://bonds.krx.co.kr)	〃
↓	
발행정보 수정* 및 상장신청	〃

* 표준코드 신청시 입력된 내용이 기본적으로 보이나 채권발행액 등이 변경될 수 있음

제2장 전자증권제도의 개요

1. 전자증권제도

가. 의 의

□ 전자증권제도(Electronic Securities System)는 증권의 실물을 발행하지 않고 증권의 발행, 유통, 권리행사 등 증권 관련 모든 사무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는 제도로서 증권은 전자적 장부에만 등록되고, 동 장부에의 기재를 통하여 양도, 담보 및 권리행사 등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임

○ 채권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자는 전자등록된 채권의 매매, 질권 및 담보권의 설정, 신탁재산의 표시 등에 대한 내용을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함으로써 해당 채권의 발행기관 및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음

* 전자등록이란 증권의 종류, 종목, 금액, 권리자 및 권리 내용 등 해당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에 관한 정보를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적 방식으로 기재하는 것(「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을 의미

○ 2019년 9월 16일「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채권등록제도가 전자증권제도로 전환됨

□ 동 제도를 통해 채권발행자, 투자자, 금융기관 등 관련 당사자의 증권 발행 및 관리 부담이 경감되고 채권유통의 활성화를 통해 증권시장의 효율성이 증대, 실물증권 취급 및 증권의 위변조 등 사회적 비용이 절감되며 발행 및 유통정보의 투명성이 제고

나. 근 거

□ 전자증권제도에 관한 법적 근거는 해당 채권에 관한 개별 법률 또는「전자증권법」임

□ 한국은행은 국채(국고채권 및 재정증권) 및 통화안정증권의 등록기관으로서 전자등록을 위한 발행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전자등록기관(한국예탁결제원)이 발행된 국채와 통화안정증권의 유통을 위한 전자등록업무를 수행하고 있음[82)]

ㅇ 관련법에서 채권자의 청구에 의해 등록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현재는 채권 발행공고문에 발행방법을 등록발행으로 명기하고 있으며 모두 등록발행되고 있음

< 표 Ⅹ-6 > 채권의 등록발행

□ 채권의 등록발행은 현물을 교부하지 않고 채권등록부에 일정 내역을 기재·관리함으로써 현물을 소유하는 것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는 것으로, 현물소지에 따른 분실위험을 제거하고 현물관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1) 주등록

— 소유권의 발생, 소멸 및 변경사항 등 등록증권의 소유권 자체에 대한 변경상황을 등록부에 기재하는 것

(2) 질(담보)권 등록(부기등록)

— 소유권 자체는 변동이 없이 주등록금액 범위내에서 질권, 전질, 기타 담보권 및 신탁에 관한 등록과 말소상황 등을 기재하는 것

82) 전자증권제도 시행 이후 채권의 전자등록업무는 전자등록기관(한국예탁결제원)에서 수행하고 있으나, 제도 시행 이전에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의 발행은 한국은행이, 기타 공사채의 발행은 한국예탁결제원이 각각 담당하였던 점을 감안하여 전자증권제도에서도 각 채권의 발행사무는 기존에 담당하였던 기관이 각각 수행

○ 발행 절차는 한국은행의 채권등록부에 전자등록기관(한국예탁결제원) 명의로 일괄등록되어 발행한 후 한국예탁결제원 및 계좌관리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각 매수자의 명의로 전자등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음

< 표 Ⅹ-7 > 채권의 양수도 절차(일괄등록 vs 개별등록)

□ 등록채권의 소유권 이전은 일괄등록의 경우 전자등록기관(한국예탁결제원)에 개설된 계좌간 대체로 가능하나, 개별등록의 경우에는 등록채권 양수도 절차가 필요

(1) 일괄등록의 경우 전자등록기관(한국예탁결제원)은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만 보유하고 있고, 고객계좌부는 계좌관리기관이 보유하고 있음

— 계좌관리기관과 고객간 또는 동일한 계좌관리기관의 고객간 거래의 진위 여부를 계좌관리기관이 확인한 후 계좌간 대체방법으로 채권을 양수도

— 계좌관리기관간 거래 또는 서로 다른 계좌관리기관의 고객간 거래에 있어서도 전자등록기관은 계좌관리기관의 의사만으로(고객의 거래의사 확인은 각 계좌관리기관이 실시) 계좌간 대체의 방법으로 채권을 양수도

(2) 개별등록의 경우 등록기관이 채권 양수도 당사자 상호간의 거래 의사를 확인하여 등록부에 이전등록

— 온라인 거래에 있어서도 거래 당사자 모두 등록기관에 고객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가능

□ 한편, 증권 등을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신규발행하는 모든 발행인은 전자등록기관에 발행인관리계좌를 개설하여 발행내역을 관리하여야 함

다. 전자등록계좌부

□ 증권에 관한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에 대한 정보를 전자적 방식으로 편성한 장부로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및 고객계좌부를 말함

(1) 전자등록계좌부의 종류

①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 전자등록기관이 계좌관리기관등별로 작성 및 관리하는 장부

* 계좌관리기관(전자등록주식등의 권리자가 되려는 자에게 그 신청을 받아 고객계좌를 개설하여 주고 이를 관리하는 자(증권회사, 은행 등)),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 그 밖에 전자등록기관에 주식등을 전자등록할 필요가 있는 자

② 고객계좌부 : 계좌관리기관이 고객별로 작성 및 관리하는 장부

(2) 전자등록계좌부의 기재 효력

□ **(권리 추정력)**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증권에 대한 권리를 적법하게 보유하는 것으로 추정(「상법」 제356조의2, 「전자증권법」 제35조)

□ **(효력 발생 요건)** 전자등록된 증권을 이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여야 효력이 발생

□ **(신탁 대항력 요건)** 전자등록된 증권을 신탁하는 경우 전자등록계좌부에 신탁재산의 표시를 전자등록하여야 제3자에 대항

□ **(선의 취득)** 전자등록계좌부를 선의로 중대한 과실 없이 신뢰하고 전자등록한 경우 그 권리를 적법하게 취득

(3)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제한

□ 전자등록기관은 계좌관리기관의 파산, 해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증권의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제한할 수 있음(「전자증권법」 제47조)

(4) 초과분에 대한 해소 의무

□ **(초과분 확인·해소)** 전자등록된 증권의 수량 및 금액이 실제 발행분을 초과하는 오류에 대비하여 전자등록기관 및 계좌관리기관은 전자증권이 초과 전자등록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해소할 의무를 부담(「전자증권법」 제42조, 제43조,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36조)

ㅇ 초과등록이 발생할 경우, 거래안정성 유지를 위해 선의취득자의 권리를 인정하고 해소의무기관이 시장에서 동 수량을 매입하여 소각

ㅇ 계좌관리기관은 전자등록기관에 개설한 계좌를 폐쇄한 이후에도 이러한 해소의무를 부담(다만, 계좌를 폐쇄한 때부터 5년이 지난 경우에는 해당 의무가 소멸)

□ **(대지급 책임)** 초과분 해소시점까지 해소의무기관은 해소되지 아니한 초과분에 해당하는 전자증권등에 대하여 지급되는 원리금, 배당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

□ **(권리행사 제한)** 초과분 해소의무가 이행될 때까지 해당 권리자는 발행인을 상대로 권리행사가 제한

□ **(구상권 행사)** 해소의무기관은 해당 초과분 발생에 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할 수 있음

(5) 권리 행사

□ 전자증권의 권리자는 전자등록기관(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원리금 등의 수령 등 전자증권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전자증권법」 제38조)

ㅇ 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권리자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신청

< 표 Ⅹ-8 > 전자증권제도 계좌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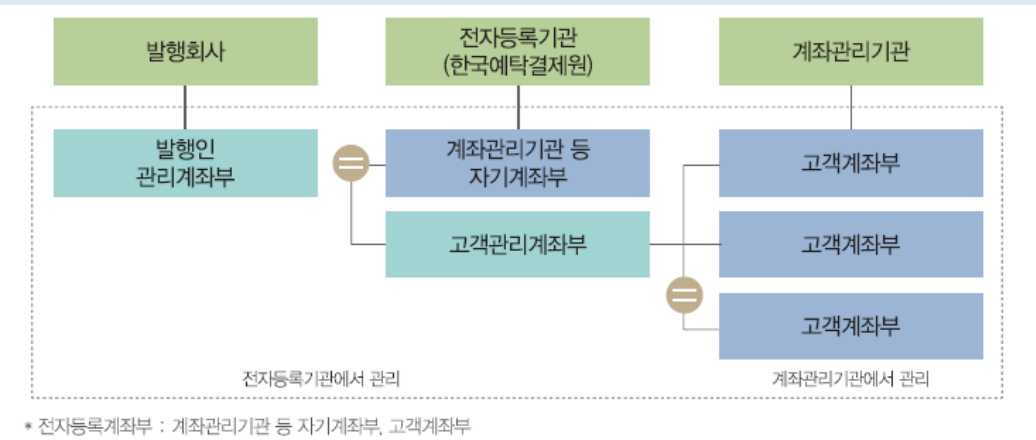
□ 전자등록계좌(계좌관리기관 등 자기계좌부, 고객계좌부)는 전자증권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자 하는 자가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에 개설하는 계좌이며, 계좌부 기재에 권리추정력 등이 인정됨

(1)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 : 계좌관리기관(금융기관 등) 등이 전자등록기관(한국예탁결제원)에 개설한 계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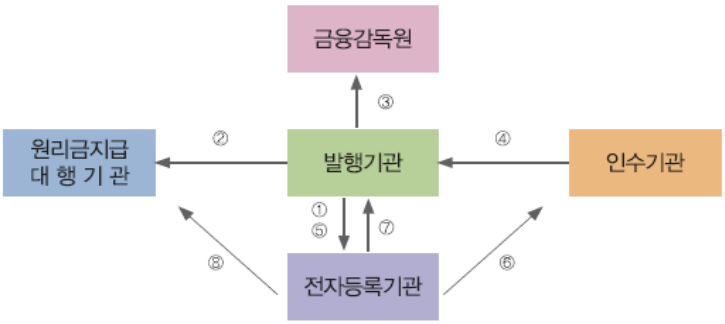
(2) 고객계좌 : 일반투자자가 계좌관리기관에 개설한 계좌

□ 발행인관리계좌는 발행인이 자신이 발행한 전자증권 내역을 관리하기 위하여 전자등록기관에 개설하는 계좌로, 계좌부 기재에 법적효력은 없음

□ 고객관리계좌는 계좌관리기관이 고객계좌부 등록 증권을 관리하기 위해 전자등록기관에 개설하는 계좌이며, 계좌부 기재에 법적효력은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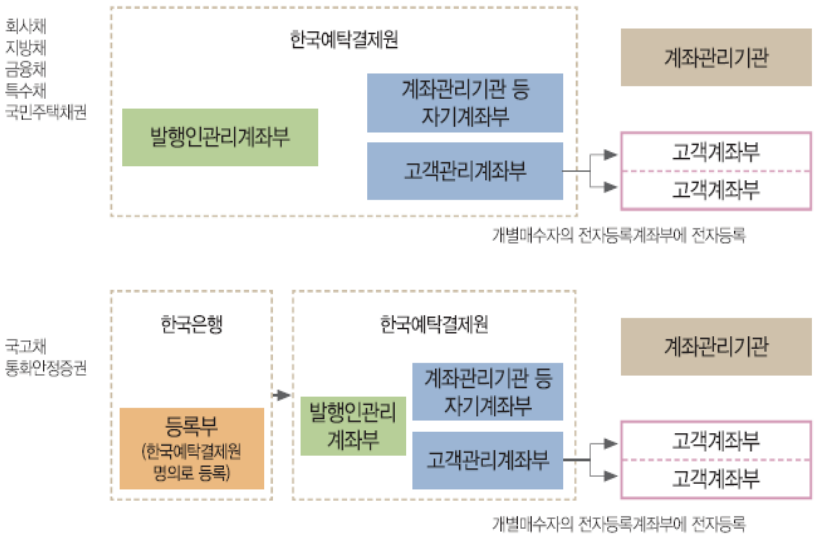


< 그림 Ⅹ-1 > 채권 전자등록발행 절차



① 발행인관리계좌개설 및 전자등록업무참가신청(발행기관 → 전자등록기관)
② 원리금지급대행계약체결 (발행기관 → 원리금지급대행기관)
③ 증권신고서 제출 (발행기관 → 금융감독원
④ 청약 및 전자등록 청구 (인수기관 → 발행기관)
⑤ 채권전자등록(발행내역)신청 및 납입증명서 송부(발행기관 → 전자등록기관)
⑥ 전자등록내역 통지 (전자등록기관 → 인수기관)
⑦ 전자등록내역 통지 (전자등록기관 → 발행기관)
⑧ 전자등록내역 통지 (전자등록기관 → 원리금지급대행기관)

< 그림 Ⅹ-2 > 채권의 전자등록 발행 흐름도



<표 X-9>	채권별 등록과 관련된 법률

국채법 [시행 2015.7.1, 2014.12.30 일부개정]

제8조(국채의 등록 및 등록의 말소) ① 제5조에 따라 발행된 국채는 증권(證券)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국채등록부에 전자적인 방식에 의하여 기명식(記名式) 또는 무기명식(無記名式)으로 등록한다. 다만,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의 경우에는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 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국채는 원금의 상환, 제13조에 따른 매입·교환, 시효로 인한 소멸 등으로 국채에 대한 권리가 소멸된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등록 및 등록의 말소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하 "한국은행"이라 한다)으로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국채의 등록, 등록 사항의 변경 및 등록의 말소와 증권의 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등록국채의 이전 등) ① 제8조에 따라 등록한 국채(이하 "등록국채"라 한다)를 이전(移轉)하거나 등록국채에 질권(質權)을 설정한 경우에는 그 이전 사실 또는 질권 설정 사실을 등록하지 아니하면 정부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② 등록국채를 법령에 따라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공탁(供託)하거나 임치(任置)하는 경우에는 그 공탁 또는 임치 사실을 등록함으로써 등록국채의 담보 제공을 대신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등록국채의 이전 또는 질권의 설정 및 담보 제공의 절차와 등록의 말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국채 등록의 정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권리 이전을 원인으로 하여 제9조에 따른 등록을 할 때에는 국채의 상환기일 또는 국채에 대한 이자 지급기일이 되기 전 1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상속, 유증(遺贈) 및 강제집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9조제3항에 따른 등록의 말소를 정지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주식 ·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 2019. 9. 16, 2016. 3. 22, 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식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주식
   나. 사채(「신탁법」에 따른 신탁사채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건부자본증권을 포함한다)
   다. 국채
   라. 지방채
   마.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채무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
   바~거. <생 략>
2. "전자등록"이란 주식등의 종류, 종목, 금액, 권리자 및 권리 내용 등 주식등에 관한 권리의 발생 · 변경 · 소멸에 관한 정보를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적 방식으로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3. "전자등록계좌부"란 주식등에 관한 권리의 발생 · 변경 · 소멸에 대한 정보를 전자적 방식으로 편성한 장부로서 다음 각 목의 장부를 말한다.
   가. 제22조제2항에 따라 작성되는 고객계좌부(이하 "고객계좌부"라 한다)
   나. 제23조제2항에 따라 작성되는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自己計座簿)(이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라 한다)
4. "전자등록주식등"이란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주식등을 말한다.
5. "권리자"란 전자등록주식등의 소유자 또는 질권자, 그 밖에 전자등록주식등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6. "전자등록기관"이란 주식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제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7. "계좌관리기관"이란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22조제1항에 따른 고객계좌를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제5조(전자등록업의 허가) ① 전자등록업을 하려는 자는 전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주식등의 범위를 구성요소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단위(이하 "전자등록업 허가업무 단위"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택하여 금융위원회 및 법무부장관으로부터 하나의 전자등록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하생략>

제19조(계좌관리기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계좌관리기관이 될 수 있다.

1~2. <생 략>
3.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하 "한국은행"이라 한다)
<이하생략>

제21조(발행인관리계좌의 개설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전자등록기관에 발행인관리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1. 주식등을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새로 발행하려는 자
2. 이미 주권(株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 또는 증서(이하 "주권등"이라 한다)가 발행된 주식등의 권리자에게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주식등을 보유하게 하거나 취득하게 하려는 자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발행인관리계좌가 개설된 경우 전자등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 발행인(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같은 항에 따라 발행인관리계좌를 개설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발행인관리계좌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발행인의 명칭 및 사업자등록번호, 그 밖에 발행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2. 전자등록주식등의 종류, 종목 및 종목별 수량 또는 금액
3. 그 밖에 발행인관리계좌부에 기록할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작성된 발행인관리계좌부에 기록된 전자등록주식등의 종목별 수량 또는 금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부에 기재된 주식등의 종목별 수량 또는 금액과 다른 경우에는 그 장부에 기재된 수량 또는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1. 주주명부
2. 수익자명부(「신탁법」 제79조에 따른 수익자명부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9조에 따른 수익자명부를 말한다)
3. 「국채법」, 「국고금 관리법」 또는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에 따른 등록부
4. 그 밖에 주식등의 권리자에 관한 장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부

④ 발행인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전자등록기관에 통지하여야 하고, 전자등록기관은 그 통지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발행인관리계좌부의 기록을 변경하여야 한다.

⑤ 전자등록기관은 제4항에 따라 발행인관리계좌부의 기록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변경 내용의 계좌관리기관에 대한 통지
2. 고객관리계좌부의 기록 및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의 전자등록의 변경

⑥ 계좌관리기관은 제5항 제1호의 통지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통지 내용에 따라 고객계좌부의 전자등록을 변경하여야 한다.

제22조(고객계좌 및 고객관리계좌의 개설 등) ① 전자등록주식등의 권리자가 되려는 자는 계좌관리기관에 고객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고객계좌가 개설된 경우 계좌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자등록하여 권리자별로 고객계좌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발행인의 명칭
3. 전자등록주식등의 종류, 종목 및 종목별 수량 또는 금액
4. 전자등록주식등에 질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그 사실
5. 전자등록주식등이 신탁재산인 경우에는 그 사실
6. 전자등록주식등의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고객계좌부에 등록할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계좌관리기관은 제2항의 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전자등록주식등의 총수량 또는 총금액을 관리하기 위하여 전자등록기관에 고객관리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고객관리계좌가 개설된 경우 전자등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 계좌관리기관별로 고객관리계좌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계좌관리기관의 명칭 및 주소
2. 전자등록주식등의 종류, 종목 및 종목별 수량 또는 금액
3. 그 밖에 고객관리계좌부에 등록할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3조(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의 개설 등) ① 제22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좌관리기관,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 그 밖에 전자등록기관에 주식등을 전자등록할 필요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계좌관리기관등"이라 한다)가 전자등록주식등의 권리자가 되려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에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가 개설된 경우 전자등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자등록하여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계좌관리기관등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제22조 제2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3. 그 밖에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에 등록할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4조(전자등록의 신청 등) ① 주식등의 전자등록은 발행인이나 권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에 따라 한다. 다만,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이 직권으로 할 수 있다.

② 주식등의 전자등록은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발행인이나 권리자 단독으로 신청한다.

③ 관공서의 촉탁에 따라 전자등록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신청에 따른 전자등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0조(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① 전자등록주식등의 양도(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계좌간 대체를 하려는 자는 해당 전자등록주식등이 전자등록된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에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제29조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상속 · 합병 등을 원인으로 전자등록주식등의 포괄승계를 받은 자가 자기의 전자등록계좌로 그 전자등록주식등을 이전하는 경우
3. 그 밖에 계좌간 대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전자등록 신청을 받은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은 지체 없이 전자등록계좌부에 해당 전자등록주식등의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제31조(질권 설정 및 말소의 전자등록) ① 전자등록주식등에 질권을 설정하거나 말소하려는 자는 해당 전자등록주식등이 전자등록된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에 질권 설정 또는 말소의 전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자등록 신청을 받은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은 지체 없이 해당 전자등록주식등이 질물(質物)이라는 사실과 질권자를 질권설정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는 방법으로 해당 전자등록주식등에 질권 설정 또는 말소의 전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제32조(신탁재산이라는 사실의 표시 및 말소의 전자등록) ①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하여 신탁재산이라는 사실을 표시하거나 그 표시를 말소하려는 자는 해당 전자등록주식등이 전자등록된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에 신탁재산이라는 사실의 표시 또는 말소의 전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자등록 신청을 받은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은 지체 없이 해당 전자등록주식등이 신탁재산이라는 사실을 전자등록계좌부에 표시하거나 말소하는 전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제33조(권리의 소멸 등에 따른 변경·말소의 전자등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규 전자등록을 변경하거나 말소하려는 자는 해당 전자등록주식등이 전자등록된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에 신규 전자등록의 변경 · 말소의 전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원리금 · 상환금 지급 등으로 인한 전자등록주식등에 관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소멸

2~5.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전자등록 신청을 받은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은 지체 없이 전자등록주식등에 관한 권리 내용을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전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제35조(전자등록의 효력) ①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하여 전자등록된 권리를 적법하게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② 전자등록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③ 전자등록주식등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31조에 따른 질권 설정의 전자등록을 하여야 입질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 경우 「상법」 제340조 제1항에 따른 주식의 등록질(登錄質)의 경우 질권자의 성명을 주권에 기재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성명을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④ 전자등록주식등의 신탁은 제32조에 따라 해당 전자등록주식등이 신탁재산이라는 사실을 전자등록함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⑤ 선의(善意)로 중대한 과실 없이 전자등록계좌부의 권리 내용을 신뢰하고 소유자 또는 질권자로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권리를 적법하게 취득한다.

제38조(전자등록기관을 통한 권리 행사) ① 전자등록주식등의 권리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배당금 · 원리금 · 상환금 등의 수령, 그 밖에 주식등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려는 전자등록주식등의 권리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한다는 뜻과 권리 행사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전자등록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권리자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전자등록주식등의 발행인은 제1항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을 통한 권리 행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체 없이 전자등록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생 략>

제42조(초과분에 대한 해소 의무 등) ① 계좌관리기관은 제1호의 총수량 또는 총금액이 제2호의 총수량 또는 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초과분을 해소하여야 한다.

1. 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주식등의 종목별 총수량 또는 총금액
2. 고객관리계좌부에 기록된 전자등록주식등의 종목별 총수량 또는 총금액

② 전자등록기관은 제1호의 총수량 또는 총금액이 제2호의 총수량 또는 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초과분을 해소하여야 한다.

1.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주식등의 종목별 총수량 또는 총금액과 고객관리계좌부에 기록된 전자등록주식등의 종목별 총수량 또는 총금액의 합
2. 발행인관리계좌부에 기록된 전자등록주식등의 종목별 총수량 또는 총금액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초과분에 대한 해소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좌관리기관과 전자등록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그 초과분을 해소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초과분에 대한 해소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해소 의무가 있는 계좌관리기관 또는 전자등록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소되지 아니한 초과분에 해당하는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하여 지급되는 원리금, 배당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의무를 진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한 계좌관리기관 또는 전자등록기관은 각각 해당 초과분 발생에 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할 수 있다.

⑥ 계좌관리기관은 전자등록기관에 개설한 계좌를 폐쇄한 이후에도 제3항에 따른 해소 의무를 부담한다. 다만, 계좌를 폐쇄한 때부터 5년이 지난 경우에는 해당 의무가 소멸한다.

제43조(초과분에 대한 권리 행사의 제한) ① 제42조 제1항에 따른 초과분이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의무가 이행될 때까지 그 의무가 발생한 계좌관리기관의 고객계좌부에 해당 전자등록주식등의 권리자로 전자등록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된 수량 또는 금액에 대한 권리를 발행인에게 주장할 수 없다.

② 제42조 제2항에 따른 초과분이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의무가 이행될 때까지 해당 전자등록주식등의 권리자로 전자등록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된 수량 또는 금액에 대한 권리를 발행인에게 주장할 수 없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권리 행사의 제한으로 해당 전자등록주식등의 권리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4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해소 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해당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좌관리기관 및 전자등록기관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제42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제47조(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제한) 전자등록기관은 계좌관리기관의 파산·해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전자등록주식등의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제72조(한국은행에 관한 특례) ① 한국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국채등"이라 한다)의 소유자가 되려는 자가 국채등의 발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가 되려는 자의 신청으로 이들을 갈음하여 전자등록기관을 명의인으로 하는 국채등의 등록(「국채법」, 「국고금 관리법」 또는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에 따른 등록을 말한다)을 할 수 있다.

1. 「국채법」에 따른 국고채권
2. 「국고금 관리법」에 따른 재정증권
3.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에 따른 통화안정증권

② 한국은행은 제1항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의 명의로 등록된 국채등이 이 법에 따라 소유자의 명의로 전자등록될 수 있도록 제1항의 등록 내용을 전자등록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5조 및 제26조를 준용한다.

부칙 <제14096호, 2016. 3. 22.>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① 「공사채 등록법」은 폐지한다.

②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은 폐지한다.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법 [시행 2016.6.3, 2016.3.2 일부개정]

제3조(무기명증권과 등록증권) ② 제2조에 따라 발행된 통화안정증권은 증권(證券)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통화안정증권등록부에 전자적인 방식에 의하여 기명식(記名式) 또는 무기명식(無記名式)으로 등록한다. 다만,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의 경우에는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 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등록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한국은행으로 한다.

<표 X-10> 예탁결제제도 관련 용어 정리

(1) 예탁

□ 대체성이 있는 유가증권을 예탁받아 혼합보관하고,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권리 이전을 계좌간 대체방식에 의해 처리하는 것으로 혼장임치[83]와 위임의 혼합계약임

(2) 계좌대체

□ 증권의 권리이전, 질권 설정 등을 실물 이동 없이 계좌부상 대체기재로 완료하는 것을 의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좌대체만으로도 증권의 권리가 실제로 이전하는 효력이 발생

(3) 반환

□ 예탁자나 고객은 언제든지 예탁증권을 반환 청구할 수 있으나, 이는 예탁했던 증권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동종, 동량의 증권을 반환 청구하는 것임

□ 반환이 완료되면 반환된 증권은 예탁된 해당 유가증권 물량에서 차감되며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공유지분 보유도 소멸됨

(4) 공유권

□ 예탁기관이 예탁받은 유가증권을 혼합보관함에 따라 예탁자(예탁자의 고객 포함)는 예탁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수량에 따라 공유지분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

83) 증권을 예탁 받음에 있어 동종의 증권을 혼합하여 보관하고 반환할 때에도 동종, 동량의 유가증권을 반환하는 것을 의미(예탁자는 예탁유가증권에 대해 공유지분 보유)

<표 Ⅹ-11> 예탁결제제도의 변천

시행연월	내 용
1973. 2	「증권거래법」 제127조의2(대체결제업무의 허가) 신설
1974.12	「증권거래법」 제127조의2(대체결제업무의 허가) 개정 집중예탁제도 신설 및 집중예탁을 통한 대체결제를 할 수 있는 '대체결제회사' 설립의 근거 마련
1974.12.	'한국증권대체결제(주)'(현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신) 설립
1994. 4.	「증권거래법」 제173조(설립) 개정으로 증권예탁원을 법인으로 설립하도록 별도의 조항 신설
1995. 9.	「유가증권의 장외거래에 관한 규정」 제21조(결제방법) 제3항 신설로 기관투자자들의 장외거래시 증권예탁원으로의 집중예탁을 유도
1995.12.	증권예탁원, 한국은행 원화당좌예금 계좌개설 및 금융결제망 가입
1999. 4.	「증권거래법」 제44조의4(고객예탁유가증권 등의 예탁) 신설 증권회사에서 보유하게 되는 고객 또는 보유자산의 유가증권 등을 모두 증권예탁원에 예탁하도록 강제
1999.12	「유가증권의 장외거래에 관한 규정」 제5조(결제방법) 제3항에 채권과 대금의 동시결제(DVP) 규정
2009.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금융투자업자의 고유재산 또는 투자자 소유의 증권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집중 예탁하도록 규정
2012. 2.	장내외 국채결제를 위한 일중RP제도 도입
2013. 1.	전자단기사채업무 개시
2013. 7.	코넥스(KONEX)시장 결제서비스 개시
2016. 4.	외국통화의 원활한 결제를 위하여 「외국환거래규정」 제11조의21 제1항의 청산은행을 대금결제은행으로 추가 지정
2016. 9.	한국예탁결제원을 전자증권등록기관으로 허가
2017. 9.	청산결제리스크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완료
2019. 9.	「전자증권법」 시행

<표 X-12> 예탁 관련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 2021.4.6, 2021.1.5 일부개정]
제61조(소유증권의 예탁) ①금융투자업자(겸영금융투자업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그 고유재산을 운용함에 따라 소유하게 되는 증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예탁결제원에 지체 없이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증권의 유통 가능성, 다른 법령에 따른 유통방법이 있는지 여부, 예탁의 실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탁결제원에 예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② 금융투자업자가 제1항 본문에 따라 외화증권(「외국환거래법」제3조 제1항 제8호의 외화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예탁결제원에 예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예탁하여야 한다. <신설 2013.5.28.>
제75조(투자자 예탁증권의 예탁) ①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따라 보관하게 되는 투자자 소유의 증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예탁결제원에 지체 없이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증권의 유통 가능성, 다른 법령에 따른 유통방법이 있는지 여부, 예탁의 실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탁결제원에 예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②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제1항 본문에 따라 외화증권을 예탁결제원에 예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예탁하여야 한다. <신설 2013.5.28.>

제3장 증권업무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관련 세법조항

1.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② < 생략 >

③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 법인세: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2. ~ 4. < 생략 > [전문개정 2018. 12. 31.]

제47조(가산세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稅目)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③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신설 2011. 12. 31.> [전문개정 2010. 1. 1.]

제47조의5(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①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제2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징수한 세액)을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50(제1호의 금액과 제2호 중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은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개정 2013. 1. 1., 2019. 12. 31., 2020. 12. 29.>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2.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에서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를 말한다. <개정 2013. 6. 7.>

1.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2. ~ 3. < 생략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1. 1.>

1. ~ 2. < 생략 >

3.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인 경우(「소득세법」 제128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국세징수법」 제13조에 따라 지정납부기한과 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기간은 제외한다)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5년으로 한다. <신설 2019. 12. 31., 2020. 12. 29.>

⑤ 체납된 국세의 납부고지서별 · 세목별 세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 제2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 12. 31., 2020. 12. 29.>

[전문개정 2011. 12. 31.]

[제목개정 2020. 12. 22.]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 ④ < 생략 >

⑤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서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그 환급액은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충당(다른 세목의 원천징수세액에의 충당은「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에 그 충당·조정명세를 적어 신고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하고 남은 금액을 환급한다. 다만,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환급액을 즉시 환급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나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즉시 환급한다. <개정 2010.12.27>

< 이하 생략 >

2. 소득세법

제2조(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개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비거주자
3. 내국법인
4.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출장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5.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

③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법인 아닌 단체 중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외의 법인 아닌 단체는 국내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경우에는 1거주자로, 그 밖의 경우에는 1비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구분에 따라 해당 단체의 각 구성원별로 이 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해당 구성원이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인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개정 2010. 12. 27., 2013. 1. 1., 2018. 12. 31.>

1.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고 해당 구성원별로 이익의 분배비율이 확인되는 경우
2.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나 사실상 구성원별로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단체의 전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의 분배비율만 확인되거나 일부 구성원에게만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신설 2018. 12. 31.>

1. 확인되는 부분: 해당 구성원별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한 납세의무 부담

2. 확인되지 아니하는 부분: 해당 단체를 1거주자 또는 1비거주자로 보아 소득세에 대한 납세의무 부담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에 해당하는 국외투자기구(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 등을 가지고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 처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투자행위를 하는 기구로서 국외에서 설립된 기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11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는 경우 그 국외투자기구는 1비거주자로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신설 2018. 12. 31.>

제7조(원천징수 등의 경우의 납세지) ①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2.1.1.>

1. 원천징수하는 자가 거주자인 경우: 그 거주자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 다만, 주된 사업장 외의 사업장에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소재지,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로 한다.
2. 원천징수하는 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그 비거주자의 주된 국내사업장 소재지. 다만, 주된 국내사업장 외의 국내사업장에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그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 비거주자의 거류지(居留地) 또는 체류지로 한다.
3. 원천징수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4. 원천징수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로서 그 법인의 지점, 영업소, 그 밖의 사업장이 독립채산제(獨立採算制)에 따라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제3호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장의 소재지(그 사업장의 소재지가 국외에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로 할 수 있다.

< 이하 생략 >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0. 3. 22., 2012. 1. 1., 2016. 12. 20., 2020. 12. 29.>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의2. ~ 13. < 생략 >

②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이자소득 및 제2항에 따른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46조(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 특례) ① 거주자가 제16조 제1항 제1호 · 제2호 ·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채권 또는 증권과 타인에게 양도가 가능한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조, 제133조의2 및 제156조의3에서 "채권등"이라 한다)의 발행법인으로부터 해당 채권등에서 발생하는 이자 또는 할인액(이하 이 조, 제133조의2 및 제156조의3에서 "이자등"이라 한다)을 지급[전환사채의 주식전환, 교환사채의 주식교환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행사(신주 발행대금을 해당 신주인수권부사채로 납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7항 제3호 ·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해당하는 채권등이 주식으로 전환 · 상환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받거나 해당 채권등을 매도(증여 · 변제 및 출자 등으로 채권등의 소유권 또는 이자소득의 수급권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매도를 위탁하거나 중개 또는 알선시키는 경우를 포함하되,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제133조의2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에게 그 보유기간별로 귀속되는 이자등 상당액을 해당 거주자의 제16조에 따른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개정 2010.12.27., 2012.1.1., 2020.12.29.>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주자가 해당 채권등을 보유한 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133조의2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기간의 이자등 상당액이 해당 거주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개정 2010. 12. 27.>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자등 상당액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81조의11(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① 제164조, 제164조의2 또는 「법인세법」 제120조, 제120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라 한다) 또는 이 법 제164조의3에 따른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

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90조의2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12. 29.>

1. 지급명세서 또는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등"이라 한다)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가. 지급명세서의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나.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만분의 125로 한다)
2. 제출된 지급명세서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등에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가. 지급명세서의 경우: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
   나.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본조신설 2019. 12. 31.]

제85조(징수와 환급) ① ~ ② < 생략 >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을 더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그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만을 징수한다. <개정 2012.1.1., 2013.1.1.>

1.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이 이미 산입된 경우
2.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에 대해서 납세의무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제80조 및 제114조에 따라 그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징수하는 경우

< 이하 생략 >

제86조(소액부징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1., 2014.1.1.>

1. 제127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2.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의 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3. 삭제 <2013.1.1.>
4. 제65조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전문개정 2009.12.31.]

[제목개정 2014.1.1.]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0. 12. 27., 2012. 1. 1., 2013. 1. 1., 2015. 12. 15., 2016. 12. 20.,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29.>

1. 국내원천 이자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제16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이자(같은 항 제7호의 소득은 제외한다).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제156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같다), 거주자, 내국법인, 「법인세법」 제94조에서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또는 제120조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받는 소득
   나.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받는 소득으로서 그 소득을 지급하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하여 그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것

<이하 생략>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0.12.27, 2015.12.15>

1. 이자소득

2. ~ 8. < 생략 >

②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제1항 제3호에 따른 소득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授權) 또는 위임의 범위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 2009.12.31, 2010.12.27>

③ ~ ⑥ < 생략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 <개정 2010.12.27>

<이하 생략>

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 이하 생략 >

제129조(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0. 12. 27., 2013. 1. 1., 2014. 1. 1., 2014. 12. 23., 2017. 12. 19.,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29.>

1.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가. 삭제 <2017. 12. 19.>
   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는 100분의 25. 다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하여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로 한다.
   다.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해서는 기본세율
   라. 그 밖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

<이하 생략>

제130조(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원천징수의무자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제목개정 2010.12.27.]

제133조(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① 국내에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지급할 때 소득을 받는 자에게 그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받는 자에게 그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12. 27., 2020. 6. 9.>

< 이하 생략 >

제15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① 제119조 제1호 · 제2호 ·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제119조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 양도소득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127조에도 불구하고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1., 2016. 12. 20., 2018. 12. 31., 2019. 12. 31.>

1. 제119조 제1호에 따른 국내원천 이자소득: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국가 · 지방자치단체 및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14
   나. 가목 외의 이자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20
2. ~ 8. < 생략 >

② 외국인의 국내 투자자금의 변동성이 확대되어 외환부문의 건전성을 해치는 등 금융시장에 불안이 초래되고 통화정책 수행을 어렵게 하거나 어렵게 할 우려가 있어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비거주자의 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의 세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하하거나 영의 세율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인하할 세율과 그 필요성에

관한 내용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0. 12. 27., 2018. 12. 31.>

1. 제119조 제1호에 따른 국내원천 이자소득 중「국채법」제5조 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국채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하 이 조에서 "국채등"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제119조 제11호에 따른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 중 국채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③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이 국외에서 지급되는 경우에 그 지급자가 국내에 주소, 거소, 본점, 주사무소 또는 국내사업장(「법인세법」 제94조에 규정된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을 둔 경우에는 그 지급자가 해당 국내원천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보고 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 2010. 12. 27.>

④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외국차관자금으로 제119조 제1호 · 제5호 · 제6호 및 제10호의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해당 계약조건에 따라 그 소득을 자기가 직접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계약상의 지급 조건에 따라 그 소득이 지급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7., 2013. 1. 1.>

< 이하 생략 >

제156조의3(비거주자의 채권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제156조 제1항을 적용받는 비거주자에게 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하는 자 또는 해당 비거주자로부터 채권등을 매수(증여·변제 및 출자 등으로 채권등의 소유권 또는 이자소득의 수급권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매도를 위탁받거나 중개·알선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자는 그 비거주자의 보유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전문개정 2009.12.31.]

제156조의4(특정지역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① 제156조, 제156조의3 및 제156조의6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국가 또는 지역에 소재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중 제119조제1호, 제2호, 같은 조 제9호나목, 같은 조 제10호 또는 제11호에 따른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제156조의2 및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 · 면제 또는 제한세율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5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우선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 또는 제한세율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을 국세청장이 사전 승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1. 1.>

② 제1항에서 규정한 국내원천소득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자(그 대리인 또는 「국세기본법」 제82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을 포함한다)가 그 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 또는 제한세율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세액이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0., 2019. 12. 31.>

③ 제2항에 따른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목개정 2018. 12. 31.]

제156조의8(이자·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세율의 적용 특례) ① 조세조약의 규정상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중 이자, 배당 또는 사용료소득에 대해서는 제한세율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세율 중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1. 조세조약의 대상 조세에 지방소득세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56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6호에서 규정하는 세율
2. 조세조약의 대상 조세에 지방소득세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제156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6호에서 규정하는 세율에 「지방세법」 제103조의18 제1항의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을 반영한 세율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56조의4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56조의4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이 경우 제156조의4 제3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한세율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세율 중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본조신설 2020. 12. 29.]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제127조

제5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법인세법」제9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제131조, 제135조, 제144조의5 또는 제147조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과 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제6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 및 제7호에 따른 봉사료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3.6.7., 2015.12.15., 2018.12.31., 2019.12.31.>

1. 이자소득

2. ~ 8. < 생략 >

② 제1항 각 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지급명세서의 기재 사항을 「국세기본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하거나 디스켓 등 전자적 정보저장매체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④ 국세청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업종 또는 일정 규모 이하에 해당되는 자에게는 지급명세서를 문서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이하 생략 >

[전문개정 2009. 12. 31.]

제164조의2(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①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자본시장과 금융투

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식을 상장하는 경우로서 상장 전 이미 발행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는 지급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119조 제7호 또는 제8호에 따른 소득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56조의2에 따라 비과세ㆍ면제대상임이 확인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1. 1., 2020. 12. 29.>

② 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하여는 제164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3. 소득세법 시행령

제22조의2(국채 등의 이자소득) ①국가가 발행한 채권이 원금과 이자가 분리되는 경우에는 원금에 해당하는 채권 및 이자에 해당하는 채권의 할인액은 이를 법 제1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채권의 할인액으로 본다.

②다음 각 호의 채권을 공개시장에서 통합발행(일정 기간 동안 추가하여 발행할 채권의 표면금리와 만기 등 발행조건을 통일하여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경우 해당 채권의 매각가액과 액면가액과의 차액은 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이자 및 할인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8.2.22., 2010.2.18., 2014.12.30.>

1. 국채
2. 「한국산업은행법」 제23조에 따른 산업금융채권
3. 「예금자보호법」 제26조의2 및 동법 제26조의3의 규정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채권과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
4.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③국가가 발행한 채권으로서 그 원금이 물가에 연동되는 채권(이하 "물가연동국고채"라 한다)의 경우 해당 채권의 원금증가분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자 및 할인액에 포함된다. <신설 2007.2.28., 2013.2.15., 2016.2.17.>

[전문개정 2006.2.9.]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개정 1995.12.30., 1996.12.31., 1997.12.31., 1998.12.31., 2001.12.31., 2003.12.30., 2005.2.19., 2007.2.28., 2009.2.4., 2010.2.18., 2012.2.2., 2013.2.15., 2015.2.3.>

1.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및 제13호에 따른 이자와 할인액
   약정에 따른 상환일. 다만, 기일 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
2. 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으로서 무기명인 것의 이자와 할인액
   그 지급을 받은 날
3. 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으로서 기명인 것의 이자와 할인액
   약정에 의한 지급일
4. ~ 9의 2. < 생략 >
10. 제193조의2에 따른 채권 등의 보유기간이자등상당액 해당 채권 등의 매도일 또는 이자 등의 지급일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상속재산이 상속되거나 증여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제102조(채권등의 범위등) ①법 제4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이자 또는 할인액을 발생시키는 증권(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되, 법률에 따라 소득세가 면제된 채권등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1996.12.31., 1998.4.1., 1999.12.31., 2003.12.30., 2005.2.19., 2007.2.28., 2008.2.29., 2009.2.4., 2009.12.31., 2010.2.18., 2010.12.30.>

< 각호 생략 >

② < 생략 >

③ 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이자 등 상당액은 제193조의2 제3항의 보유기간이자등상당액 중 해당 거주자에게 그 보유기간별로 귀속되는 이자등 상당액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10.12.30.>

④ 법 제46조 제1항에서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각 호가 혼합되는 거래를 말한다. <신설 2010.6.8., 2016.2.17.>

1. 거주자가 일정기간 후에 일정가격으로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채권등을 매도하는 거래(해당 거래가 연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그 거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의 계좌를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
2. 거주자가 일정기간 후에 같은 종류로서 같은 양의 채권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채권을 대여하는 거래(해당 거래가 연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그 거래에 해당하는 사실이 채권대차거래중개기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 증권금융회사,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작성한 거래 원장(전자적 형태의 원장을 포함한다)을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

⑤ 제4항에 따른 거래의 경우 채권등을 매도 또는 대여한 날부터 환매수 또는 반환받은 날까지의 기간 동안 그 채권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상당하는 금액은 매도자 또는 대여자(해당 거래가 연속되는 경우나 제4항 각 호의 거래가 혼합되는 경우에는 최초 매도자 또는 최초 대여자를 말한다)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법 제46조 및 제133조의2를 적용한다. <신설 2010.6.8., 2012.2.2., 2016.2.17.>

⑥ ~ ⑦ < 생략 >

⑧ 법 제46조 제2항에 따른 보유기간 입증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1998.4.1, 2000.12.29, 2005.2.19, 2008.2.29, 2010.2.18>

1. 채권 등을 금융회사 등에 개설된 계좌에 의하여 거래하는 경우
   해당 금융회사 등의 전산처리체계 또는 통장원장으로 확인하는 방법
2. 제1호외의 경우
   법인으로부터 채권 등을 매수한 때에는 당해 법인이 발급하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채권 등 매출확인서에 의하며, 개인으로부터 채권 등을 매수한 경우에는「공증인법」의 규정에 의한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거래당사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매매일자·채권 등의 종류와 발행번호·액면금액을 기재한 것에 한한다)에 의하여 확인하는 방법

⑨ < 생략 >

⑩ 법 제46조 및 제133조의2를 적용할 때 금융회사 등의 승낙을 받아 채권 등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 등이 매도를 중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2.18>

< 이하 생략 >

제185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 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법 제128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와 함께 원천징수 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1997.12.31, 1998.4.1, 2004.3.17, 2005.2.19, 2008.2.29>

② 제1항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한 것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1997.12.31.>

제193조(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① ~ ② < 생략 >

③ 법 제133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지급받은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연간합계액과 원천징수세액명세 및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그 상호 또는 법인명(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번호등"이라 한다)

을 기재하거나 통보하는 때에도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5. 12. 30., 1997. 12. 31., 1998. 12. 31., 1999. 12. 31., 2010. 2. 18., 2021. 1. 5.>

1. 금융회사 등이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을 받은 자의 통장 또는 금융거래명세서에 그 지급내용과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여 통보하는 경우
2. 금융회사 등이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을 받는 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그 지급내용과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우편,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정보통신 또는 팩스로 통보하여 주는 경우

④ 법 제133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란 계좌별로 1년간 발생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0.12.29, 2010.2.18.>

제207조(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법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에 관하여는 제18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국내에 주소·거소·본점·주사무소 또는 국내사업장(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이 없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2005.2.19., 2013.2.15.>

② 법 제156조 제1항 제4호 단서에서 “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국외에서 제공하는 제179조 제6항 제2호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신설 2017. 2. 3., 2019. 2. 12.>

③ 법 제156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자가 법 제121조 제2항에 따라 소득세를 신고 · 납부한 후 양수자가 법 제156조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양도자가 신고 · 납부한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9. 2. 4., 2010. 2. 18., 2017. 2. 3., 2019. 2. 12.>

④ 법 제156조 제1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신설 2003. 12. 30., 2005. 2. 19., 2009. 2. 4., 2010. 2. 18., 2012. 2. 2., 2017. 2. 3.>

1.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가목 및 같은 항 제8호의2(합병 · 분할의 경우로 한정한다)의 경우 :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그 합병등기를 한 날,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소멸 또는 존속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등기 또는 분할합병등기를 한 날

2. < 생략 >

⑤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내국법인은 법 제119조 제12호 자목에 따른 국내원천 기타소득을 제4항에 따른 시기에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18., 2012. 2. 2., 2017. 2. 3., 2019. 2. 12.>

⑥ 법 제156조 제1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미리 납부하였거나 그 소득이 비과세 또는 과세미달되는 것임을 증명하는 경우"란 비거주자가 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비과세 또는 과세미달)확인 신청서에 당해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 ·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신청하고, 그 확인을 받아 이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6. 2. 9., 2008. 2. 22., 2008. 2. 29., 2009. 2. 4., 2010. 2. 18., 2012. 2. 2., 2017. 2. 3.>

제207조의3(비거주자의 채권등의 이자등에 대한 원천징수특례) ①법 제156조 제1항을 적용받는 비거주자에 대하여 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하는 자 또는 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받기 전에 비거주자로부터 채권등을 매수하는 자는 그 이자등의 지급금액에 대하여 법·「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조세조약에 따른 세율(이하 이 조에서 "적용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는 경우에 그 지급금액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따른 적용세율이 법 제12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세율보다 높은 경우로서 당해 비거주자가 채권등의 보유기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 전액을 당해 비거주자의 보유기간이자등상당액으로 보며, 제1호에 따른 적용세율이 법 제12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세율보다 낮은 경우로서 당해 비거주자가 채권등의 보유기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 비거주자의 보유기간이자등상당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9.2.4.>

1. 지급금액 중 해당 비거주자의 보유기간이자등상당액에 대하여는 해당 비거주자에 대한 적용세율
2. 지급금액 중 제1호의 보유기간이자등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는 법 제12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세율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90조는 비거주자의 채권등의 이자등에 대한 지급시기에 관하여 준용하고, 제102조 및 제193조의2는 채권등의 보유기간계산, 보유기간이자등상당액의 계산방법 및 보유기간 입증방법에 관하여 준용하며, 제207조 제1항은 원천징수세액납부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 2010.2.18.>

③ 법 제156조의3에서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각 호가 혼합되는 거래를 말한다. <개정 2010.6.8., 2016.2.17.>

1. 비거주자가 일정기간 후에 일정가격으로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채권등을 매도하는 거래(해당 거래가 연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그 거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의 계좌를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
2. 비거주자가 일정기간 후에 같은 종류로서 같은 양의 채권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채권을 대여하는 거래(해당 거래가 연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그 거래에 해당하는 사실이 채권대차거래중개기관이 작성한 거래 원장(전자적 형태의 원장을 포함한다)을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른 거래의 경우 채권등을 매도 또는 대여한 날부터 환매수 또는 반환받은 날까지의 기간 동안 그 채권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상당하는 금액은 매도자 또는 대여자(해당 거래가 연속되는 경우나 제3항 각 호의 거래가 혼합되는 경우에는 최초 매도자 또는 최초 대여자를 말한다)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법 제46조·제133조의2 및 제156조의3을 적용한다. <개정 2010.6.8., 2013.2.15., 2016.2.17.>

< 이하 생략 >

제213조(지급명세서 및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① 법 제164조 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 및 법 제164조의3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는 그 소득을 지급받는 소득자별로 구분하되, 그 서식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2. 12.> < 이하 생략 >

제214조(지급명세서 및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 면제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 제164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06. 2. 9., 2008. 2. 22., 2008. 2. 29., 2010. 2. 18., 2017. 12. 29., 2021. 2. 17.>

1. 법 제1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되는 기타소득. 다만, 제19조 제3항 제3호에 따른 금액 및 물품은 제외한다.
2. 법 제2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서 1건당 당첨금품의 가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2의2. 법 제12조 제3호 가목부터 사목까지, 카목, 타목, 하목, 너목, 러목, 버목 및 저목의 소득

2의3. 제12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8호의 소득
3.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
< 이하 생략 >

제216조의2(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① 법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는 법 제164조의2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12.31., 2005.2.19., 2006.2.9., 2008.2.29., 2009.2.4., 2010.2.18., 2013.2.15., 2014.2.21.>< 단서 생략 >
② < 생략 >
③법 제46조 또는 제156조 제6항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지급금액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1.12.31., 2009.2.4., 2012.2.2.>
④ 법 제119조 제1호·제2호·제11호 및 법 제156조의5의 소득에 대하여 제출하는 지급명세서는 따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2., 2008.2.29., 2010.2.18.>
⑤ < 생략 >
⑥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에 관하여는 제215조 및 제21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9.2.4., 2010.2.18.>
[본조신설 2000.12.29.]
[제목개정 2008.2.22.]

제217조(이자 · 배당 ·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부의 비치 · 기록) ① 국내에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 · 배당원천징수부를 비치 ·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1. 2. 17.>
② 국내에서 금융투자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소득원천징수부를 비치 · 기록해야 한다. <신설 2021. 2. 17.>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천징수부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으로 수록 · 보관하여 항시 출력이 가능한 상태에 둔 때에는 원천징수부를 비치 · 기록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1. 2. 17.>
[제목개정 2021. 2. 17.]
[시행일 : 2023. 1. 1.] 제217조제2항

4.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7조(지급명세서제출의무의 면제) 영 제214조 제1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 4. 14., 2014. 3. 14., 2015. 3. 13., 2020. 3. 13.>

1. 법 제21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서 1건당 환급금이 200만원 미만(체육진흥투표권의 경우 10만원 이하)인 경우
2. 법 제84조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기타소득. 다만, 법 제21조 제1항 제15호 및 제19호에 따른 기타소득을 제외한다.
3. 영 제184조의2 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한 안마시술소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소득으로서 안마시술소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소득

[적용일자 2004. 1. 1.부터]

[제목개정 2009. 4. 14.]

제97조의2(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면제) 영 제216조의2 제1항 제8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호의 소득을 말한다. <개정 2009.4.14.>

1. 예금 등의 잔액이 30만원 미만으로서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2. 계좌별로 1년간 발생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이 3만원 미만인 경우의 당해 소득
3. 법 제119조 제7호의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일용근로자의 소득

[본조신설 2002.4.13.]

[제목개정 2009.4.14.]

5. 법인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법인은 이 법에 따라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10. 12. 30.>

1. 내국법인
2.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외국법인

② 내국법인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개정 2018. 12. 24.>

③ 연결법인은 제76조의14 제1항에 따른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각 연결법인의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를 포함한다)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10. 12. 30., 2014. 12. 23., 2017. 12. 19., 2018. 12. 24.>

④ 이 법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자는 해당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18. 12. 24.>

[제목개정 2018. 12. 24.]

[제2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18. 12. 24.>]

제71조(징수 및 환급)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내국법인이 제64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미납된 법인세액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1.>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내국법인이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중간예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미납된 중간예납세액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법인이 제63조의2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세액을 결정하여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1., 2018. 12. 24.>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징수한 세액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체 없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을 더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법인세액을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그 가산세만 징수한다. <개정 2011. 12. 31., 2018. 12. 24.>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63조, 제63조의2, 제69조, 제73조 또는 제73조의2에 따라 중간예납·수시부과 또는 원천징수한 법인세액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가산세를 포함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라 환급하거나 다른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4., 2020. 12. 22.>

[전문개정 2010. 12. 30.]

제73조(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① 내국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경우에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1천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4., 2019. 12. 31.>

1.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금융보험업을 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2.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의 이익(이하 "투자신탁의 이익"이라 한다)의 금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 12. 24.>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의 소득금액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시점에는 해당 소득금액이 지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2. 30., 2018. 12. 24.>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授權) 또는 위임의 범위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본다. <개정

2010. 12. 30., 2018. 12. 24.>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 내국법인(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발행한 어음이나 채무증서를 인수 · 매매 · 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 등과 그 내국법인 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12. 30., 2018. 12. 24.>

⑥ 제1항을 적용할 때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에서 발생하는 제1항 각 호의 소득을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그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권한을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자가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3. 1. 1., 2018. 12. 24.>

⑦ 상시 고용인원수 및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半期)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0.>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이자소득의 지급시기, 법인세 원천징수대상소득의 범위 및 금액의 계산, 원천징수세액의 계산 및 납부와 원천징수의무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12. 30., 2013. 1. 1., 2018. 12. 24.>

[제목개정 2010. 12. 30.]

[제목개정 2018. 12. 24.]

제73조의2(내국법인의 채권등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 ① 내국법인이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채권등 또는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이하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이라 한다)을 타인에게 매도(중개 · 알선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환매조건부 채권매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74조 및 제75조의18에서 같다)하는 경우 그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해당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의 보유기간에 따른 이자, 할인액 및 투자신탁의 이익(이하 이 조 및 제98조의3에서 "이자등"이라 한다)의 금액에 100분의 14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1천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내국법인을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20. 12. 2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등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법인에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을 매도하는 경우로서 당사자 간의 약정이 있을 때에는 그 약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본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에 속한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을 매도하는 경우 같은 법에 따른 신탁업자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 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12. 22.>
1. 제5조 제1항에 따른 신탁재산: 해당 신탁재산의 수익자
2. 제5조 제3항에 따른 신탁재산: 해당 신탁재산의 위탁자
⑤ 원천징수의무의 위임ㆍ대리 및 납부에 관하여는 제73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의 보유기간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12. 24.]

제74조(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①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납세의무자로부터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그 납세의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4.>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73조의2에 따라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의 매도에 따른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가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한 법인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법인을 납세의무자로 본다. <개정 2018. 12. 24.>
③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12. 30.]

제75조의7(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① 제120조, 제120조의2, 「소득세법」 제164조, 제164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 또는 같은 법 제164조의3에 따른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이하 이 항에서 "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

액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2.>

1. 명세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가. 지급명세서의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나.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만분의 125로 한다)
2. 제출된 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제출된 명세서에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가. 지급명세서의 경우: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
   나.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법인이 합병·분할 또는 해산하는 경우 지급금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12. 24.]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1. 12. 31., 2015. 12. 15., 2016. 12. 20., 2018. 12. 24., 2019. 12. 31., 2020. 12. 22.>

1. 국내원천 이자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같은 항 제7호의 소득은 제외한다)과 그 밖의 대금의 이자 및 신탁의 이익.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나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 이하 생략 >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

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 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1., 2016. 12. 20., 2018. 12. 24., 2019. 12. 31.>

1. 제93조 제1호에 따른 국내원천 이자소득: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국가 · 지방자치단체 및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14
   나. 가목 외의 이자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20
2. ~ 8. < 생략 >

② 외국인의 국내 투자자금의 변동성이 확대되어 외환부문의 건전성을 해치는 등 금융시장에 불안이 초래되고 통화정책 수행을 어렵게 하거나 어렵게 할 우려가 있어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외국법인의 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의 세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하하거나 영의 세율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인하할 세율과 그 필요성에 관한 내용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1., 2018. 12. 24.>

1. 제93조 제1호에 따른 국내원천 이자소득 중 「국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국채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하 이 조에서 "국채등"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제93조 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 중 국채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③ 삭제 <2011. 12. 31.>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항 및 제5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야 할 금액을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원천징수한 금액을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체 없이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는 금액에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에 따른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1.>

< 이하 생략 >

제98조의3(외국법인의 원천징수대상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① 외국

법인(제98조 제1항을 적용받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원천징수대상채권 등의 이자 등을 지급하는 자 또는 원천징수대상채권 등의 이자 등을 지급받기 전에 외국법인으로부터 원천징수대상채권 등을 매수(중개·알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환매조건부 채권매매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자는 그 외국법인의 보유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 이하 생략 >

제120조(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 ① 내국법인에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73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73조의2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제5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법인에 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1., 2013. 1. 1., 2018. 12. 24., 2020. 12. 22.>

② 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64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 12. 30.]

제120조의2(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의 특례) ①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식을 상장하는 경우로서 상장 전 이미 발행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는 지급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98조의4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대상임이 확인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12. 22.>

② 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64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 12. 30.]

6. 법인세법 시행령

제7조(납세지의 범위)) ① ~ ③ <생략>

④ 법 제9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중 당해 외국법인이 납세지로 신고하는 장소를 말한다. 이 경우 그 신고는 2 이상의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게 된 날부터 1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납세지신고서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1. 6. 3.>

⑤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영해에 소재하는 이유 등으로 국내사업장을 납세지로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국내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다만, 등기부상 소재지가 없으면 국내에서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납세지로 한다. <신설 2009. 2. 4.>

⑥ 법 제9조 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원천징수의무자의 소재지"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장소를 말한다. <신설 2019. 2. 12.>

1. 원천징수의무자가 개인인 경우: 「소득세법」 제7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재지
2.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인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장소
   가. 해당 법인의 본점 · 주사무소 또는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가 소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이하 "본점등"이라 한다)의 소재지(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소재지로,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법인의 지점 · 영업소 또는 그 밖의 사업장이 독립채산제에 의해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소재지(그 사업장의 소재지가 국외에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법인이 지점 · 영업소 또는 그 밖의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본점등에서 전자계산조직 등에 의해 일괄계산하는 경우로서 본점등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거나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사업자단위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본점등의 소재지로 한다.

⑦ 법 제9조 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장소를 말한다. <신설 2019. 2. 12.>

1. 법 제93조 제7호 나목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 및 이 영 제132조

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유가증권을 발행한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2. 제1호 외의 경우: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장소

⑧ 제6항 제2호 나목 단서에 따라 일괄계산하여 신고하는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 2. 12.>

[제6조에서 이동 <2019. 2. 12.>]

제111조(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① 법 제7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에 지급하는 소득을 말하며, 법 제73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원천징수대상채권등(「주식 ·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59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단기사채등 중 같은 법 제2조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만기 1개월 이내의 것은 제외한다)의 이자등(법 제73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이자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13조 및 제138조의3에서 같다)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및 제16호의 자본확충목적회사가 아닌 법인에 지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02. 12. 30., 2003. 12. 30., 2005. 2. 19., 2005. 12. 30., 2008. 2. 22., 2008. 2. 29., 2009. 2. 4., 2009. 6. 8., 2009. 12. 31., 2010. 2. 18., 2015. 10. 23., 2019. 2. 12., 2019. 7. 1., 2020. 2. 11., 2021. 2. 17.>

1.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28호까지의 법인
2.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및 투자합자회사(같은 법 제9조 제19항 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
5.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7.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8.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9.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금융회사
11. 거래소(위약손해공동기금으로 한정한다)

1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
13. 「한국투자공사법」에 따른 한국투자공사
14. 「국가재정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한정한다)
15. 법률에 따라 자금대부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기금(다른 사업과 구분 경리되는 것에 한정한다)
16.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 제1항에 따른 자본확충목적회사
17.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

② 법 제73조 제2항에서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개정 1999. 12. 31., 2000. 3. 28., 2000. 12. 29., 2001. 12. 31., 2003. 11. 29., 2003. 12. 30., 2005. 2. 19., 2007. 2. 28., 2008. 2. 22., 2008. 2. 29., 2009. 2. 4., 2009. 9. 21., 2009. 12. 31., 2015. 6. 30., 2019. 2. 12., 2019. 6. 25.>

1.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2. 삭제 <2009. 2. 4.>
3. 신고한 과세표준에 이미 산입된 미지급 소득
4. 법령 또는 정관에 의하여 비영리법인이 회원 또는 조합원에게 대부한 융자금과 비영리법인이 당해 비영리법인의 연합회 또는 중앙회에 예탁한 예탁금에 대한 이자수입
5.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기금운용법인"이라 한다)과 법률에 따라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 중 건강보험ㆍ연금관리 및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기금운용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기금사업에 한정한다)이 「국채법」에 따라 등록하거나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한 다음 각 목의 국공채 등을 발행일부터 이자지급일 또는 상환일까지 계속하여 등록ㆍ보유함으로써 발생한 이자 및 할인액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
나.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발행한 통화안정증권
다.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

< 이하 생략 >

제113조(내국법인의 채권등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 ① 법 제73조 및 제73조의2를 적용할 때 채권등의 이자등(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받기 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채권등을 매도하는 경우의 이자등을 말한다)에 대한 원천징수대상소득은 내국법인이 채권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운용하는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채권등을 포함한다)을 취득하여 보유한 기간에 발생한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05. 2. 19., 2009. 2. 4., 2019. 2. 12.>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채권등을 취득하여 보유한 기간에 발생한 소득은 채권등의 액면가액 등에 제1호 각목의 기간과 제2호 각목의 이자율 등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 제114조의2 및 제138조의3에서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0. 5. 16., 2000. 12. 29., 2001. 12. 31., 2005. 2. 19., 2005. 12. 30., 2006. 2. 9., 2008. 2. 29., 2010. 2. 18., 2013. 2. 15.>

1. 채권등을 보유한 기간
   가. 채권등의 이자소득금액을 지급받기 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등을 취득한 날 또는 직전 이자소득금액의 계산기간종료일의 다음날부터 매도하는 날(매도하기 위하여 알선·중개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매도하는 날)까지의 기간. 다만, 취득한 날 또는 직전 이자소득금액의 계산기간종료일부터 매도하는 날 전일까지로 기간을 계산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나. 채권등의 이자소득금액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등을 취득한 날 또는 직전 이자소득금액의 계산기간종료일의 다음날부터 이자소득금액의 계산기간종료일까지의 기간. 다만, 취득한 날 또는 직전 이자소득금액의 계산기간종료일부터 매도하는 날 전일까지로 기간을 계산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2. 적용이자율
   가. 당해 채권등의 이자계산기간에 대하여 약정된 이자계산방식에 의한 이자율에 발행시의 할인율을 가산하고 할증률을 차감한 이자율. 다만, 공개시장에서 발행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채권의 경우에는 발행시의 할인율과 할증률을 가감하지 아니한다.
   나. 만기상환일에 각 이자계산기간에 대한 보장이율을 추가로 지급하는 조건이 있는 전환사채·교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경우에는 가목의

이자율에 당해 추가지급이율을 가산한 이자율. 다만, 전환사채 또는 교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청구 또는 교환청구한 경우로서 이자지급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환청구일 또는 교환청구일부터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약정이자율로 한다.

③ ~ ⑤ < 생략 >

⑥ 법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90조 제1호에 규정하는 날에 원천징수하는 채권등(이하 "선이자지급방식의 채권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사업연도가 종료되어 원천징수된 세액을 전액 공제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나 그 후의 사업연도중 해당 채권등의 만기상환일이 도래하기 전에 이를 매도함으로써 해당 사업연도전에 공제한 원천징수세액이 제2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해당 채권등을 매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2. 29., 2005. 2. 19., 2009. 2. 4.>

⑦ 법인이 취득일이 서로 다른 동일종목의 채권등을 매도하는 경우 제2항제1호의 기간계산방법은 제74조 제1항 제1호 가목 내지 다목을 준용하는 방법 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당해 법인은 이를 다음 각호의 1의 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계속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이 보유기간의 계산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방법과 상이한 방법을 적용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제74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방법을 준용하여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개정 2000.12.29., 2008.2.29.>

1.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납부일
2.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일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채권등의 보유기간 확인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8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 2. 18.>

⑨ ~ ⑩ < 생략 >

⑪ 법인이 선이자지급방식의 채권등(채권등의 매출시 세금을 원천징수한 채권등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이자계산기간 중에 매도하는 경우 해당 법인(금융회사 등이 해당 채권등의 매도를 중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 등을 말한다)은 중도 매도일에 해당 채권등을 새로이 매출한 것으로 보아 이자등을 계산하여 세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신설 2001. 12. 31., 2009. 2. 4., 2010. 2. 18.>

⑫ 법 제73조의2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란 제61조 제2항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9. 2. 12.>

⑬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등의 매도로 보는 경우 관리하는 재산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에 관하여는 당해 재산을 관리하는 법인이 채권등을 매도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05. 2. 19.>

< 이하 생략 >

제114조의2(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의 원천징수 및 환급 등) ① 법 제73조의2 제1항 전단에서 “환매조건부 채권매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각 호가 혼합되는 거래를 말한다. <개정 2011. 3. 31., 2016. 2. 12., 2019. 2. 12., 2021. 2. 17.>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과 이 영 제11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일정기간 후에 일정가격으로 환매수 또는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채권등을 매도 또는 매수하는 거래(해당 거래가 연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그 거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의 계좌 또는 같은 법 제373조에 따른 거래소의 거래원장(전자적 형태의 거래원장을 포함한다)을 통하여 확인되는 거래
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과 이 영 제11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일정기간 후에 같은 종류로서 같은 양의 채권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채권을 대여하는 거래(해당 거래가 연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그 거래에 해당하는 사실이 채권대차거래중개기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 증권금융회사,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이 작성한 거래 원장(전자적 형태의 원장을 포함한다)을 통하여 확인되는 거래

② 제1항에 따른 거래의 경우 채권등을 매도 또는 대여한 날부터 환매수 또는 반환받은 날까지의 기간 동안 그 채권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상당하는 금액은 매도자 또는 대여자(해당 거래가 연속되는 경우 또는 제1항 각 호의 거래가 혼합되는 경우에는 최초 매도자 또는 대여자를 말한다)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법 제73조의2를 적용한다. <개정 2013. 2. 15., 2016. 2. 12., 2019. 2. 12.>

③ 제1항에 따른 거래를 통하여 매수자 또는 차입자(이하 이 조에서 “매수자등”이라 한다)가 매입 또는 차입한 채권등이 제3자에게 매도 또는 대여되는 경우에는 매수자등(제1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에게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세액을 법 제73조의2 및 제98조의3, 「소득세법」 제133조의2 및 제156조의3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매수자등은 원천징수당한 세액을 제4항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다. <개정 2019. 2. 12.>

④ 제3항에 따라 원천징수된 세액을 환급받으려는 매수자등은 제3자에게 매도 또는 대여한 채권등이 제1항에 따른 거래를 통하여 매입 또는 차입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의 납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매수자등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환급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거래사실 및 환급신청내용을 확인한 후 즉시 환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6. 8.]

제115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 법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국세징수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4. 3. 17., 2005. 2. 19., 2008. 2. 29., 2012. 2. 2., 2019. 2. 12.>

< 이하 생략 >

제117조(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① 법 제74조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3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5. 2. 19., 2021. 2. 17.>

② 제1항의 규정은 선이자지급방식의 채권등에 대한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법인이 원천징수한 법인세액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138조의3(외국법인의 채권등의 이자등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① 법 제98조 제1항을 적용받는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하는 자 또는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받기 전에 외국법인으로부터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을 매수하는 자는 그 지급금액에 대하여 법·「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조세조약에 의한 세율(이하 이

조에서 “적용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는 경우에 그 지급금액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세율이 법 제73조의2 제1항 전단에 따른 세율보다 높은 경우로서 해당 외국법인이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의 보유기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 전액을 해당 외국법인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으로 보며, 제1호에 따른 적용세율이 법 제73조의2 제1항 전단에 따른 세율보다 낮은 경우로서 해당 외국법인이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의 보유기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법인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5. 2. 19., 2006. 2. 9., 2010. 12. 30., 2012. 2. 2., 2019. 2. 12.>

1. 지급금액 중 당해 외국법인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하여는 당해 외국법인에 대한 적용세율
2. 지급금액 중 제1호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는 법 제73조의2 제1항 전단에 따른 세율

② 법 제98조의3 제1항에서 “환매조건부 채권매매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각 호가 혼합되는 거래를 말한다. <개정 2010. 6. 8., 2011. 6. 3., 2016. 2. 12.>

1. 외국법인이 일정기간 후에 일정가격으로 환매수 또는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채권등을 매도 또는 매수하는 거래(해당 거래가 연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그 거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의 계좌를 통하여 확인되는 거래
2. 외국법인이 일정기간 후에 같은 종류로서 같은 양의 채권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채권을 대여하는 거래(해당 거래가 연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그 거래에 해당하는 사실이 채권대차거래중개기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 증권금융회사,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이 작성한 거래 원장(전자적 형태의 원장을 포함한다)을 통하여 확인되는 거래

③ 제2항에 따른 거래의 경우 채권등을 매도 또는 대여한 날부터 환매수 또는 반환받은 날까지의 기간 동안 그 채권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상당하는 금액은 매도자 또는 대여자(해당 거래가 연속되는 경우 또는 제2항 각 호의 거래가 혼합되는 경우에는 최초 매도자 또는 대여자를 말한다)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법 제98조의3을 적용한다. <개정 2010. 6. 8., 2016. 2. 12.>

④ 제2항에 따른 거래를 통하여 매수자 또는 차입자(이하 이 조에서 “매수자등”이

라 한다)가 매입 또는 차입한 채권등이 제3자에게 매도 또는 대여되는 경우에는 매수자등(제11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에게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세액을 법 제73조의2 및 제98조의3, 「소득세법」 제133조의2 및 제156조의3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매수자등은 원천징수당한 세액을 제5항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다. <개정 2010. 6. 8., 2019. 2. 12.>

⑤ 제4항에 따라 원천징수된 세액을 환급받으려는 매수자등은 제3자에게 매도 또는 대여한 채권등이 제2항에 따른 거래를 통하여 매입 또는 차입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의 납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매수자등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환급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거래사실 및 환급신청내용을 확인한 후 즉시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8.>

⑥ 제111조 제6항은 외국법인의 채권등의 이자등에 대한 지급시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고, 제113조의 규정은 채권등의 보유기간계산,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 및 보유기간 입증방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며, 제137조 제2항의 규정은 원천징수세액납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9. 12. 31.>

⑦ 삭제 <2005. 2. 19.>

[본조신설 2000. 12. 29.]

제162조(지급명세서의 제출) 내국법인에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이 영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득세법」 제16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2., 2012. 2. 2., 2013. 2. 15., 2019. 2. 12., 2019. 7. 1.>

1. 제111조 제1항 각 호의 금융회사 등에 지급하는 이자소득(같은 항에 따라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이 증권회사 등 예탁자에게 지급하는 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소득

[제목개정 2008. 2. 22.]

제162조의2(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① 법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법 제120조의2 제1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 단서 생략 >

7.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9조(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의 계산 등) ① 영 제113조 제2항 제2호 나목 단서에 다른 이자율의 적용에 관하여는「소득세법 시행규칙」제88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11.2.28>

② 영 제113조 제3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3조 제1호에 따른 특정금전신탁이 중도해지되거나 그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해당 특정금전신탁에서 운용하던 채권 등을 위탁자에게 유상이체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3.30>

③ 영 제113조 제7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 경우 보유기간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두자리까지만 할 수 있다. <개정 2001.3.28, 2008.3.31>

1. 채권 등을 매도할 때마다 그 매도일 현재의 보유채권 등 및 매도채권 등의 취득일별 채권 등의 수에 당해채권 등의 취득일부터 매도일까지의 보유기간을 곱하여 계산한 기간의 합계를 채권 등의 총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방법. 이 경우 직전 매도일 현재의 보유채권 등에 대하여는 직전 매도시에 계산한 평균 보유기간에 직전 매도일부터 당해매도일까지의 기간을 합한 기간을 취득일부터 매도일까지의 보유기간으로 한다.
2. 가목의 기간에서 나목의 평균경과기간을 차감한 기간을 보유기간으로 하는 방법
   가. 채권 등의 발행일(발행일 이전에 매출하는 경우에는 매출일)부터 매도일까지의 보유기간
   나. 채권 등의 매도일 직전에 취득한 채권 등의 취득수에 발행일(발행일이전에 매출하는 경우에는 매출일)부터 취득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목에서 "경과기간"이라 한다)을 곱한 기간과 당해채권 등의 취득 직전에 보유한 채권 등의 경과기간을 평균한 기간에 보유채권수를 곱한 기간의 합계를 채권 등의 수로 나누어 계산한 평균경과기간
3. 채권 등을 취득할 때마다 계산한 평균보유기간에 매도일까지의 기간을 합하는 방법

제68조(원천징수의 범위) ①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소득과 다른 법률에 의하여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다.

② 삭제 <2013.2.23.>

8.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저축(이하 "세금우대종합저축"이라 한다)에 201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로 하고, 그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하며, 그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1., 2011.7.14., 2011.12.31., 2014.1.1.>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이 취급하는 적립식 또는 거치식 저축(집합투자증권저축 · 공제 · 보험 · 증권저축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저축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저축 가입 당시 저축자가 세금우대 적용을 신청할 것
2.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3. 모든 금융회사등에 가입한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금액 총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일 것. 다만, 세금우대종합저축에서 발생하여 원금에 전입되는 이자 및 배당 등은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보되, 계약금액 총액의 1명당 한도를 계산할 때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가. 20세 이상인 자: 1명당 1천만원
   나. 제88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명당 3천만원

② ~ ⑥ < 생략 >

⑦ 세금우대종합저축을 계약일부터 1년 이내에 해지 또는 인출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하는 경우 해당 원천징수의무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한 세액과 「소득세법」 제129조를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차액을 제146조의2에 따라 추징하여야 한다. 다만, 가입자의 사망 · 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1., 2020. 12. 29.>

⑧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금액 총액의 계산방법과 운용 · 관리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1. 1.>

[전문개정 1999. 12. 28.] [제목개정 2010. 1. 1.]

9.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3조(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① 법 제89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저축"이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저축을 말한다. <개정 2001. 12. 31., 2005. 2. 19., 2010. 2. 18., 2019. 6. 25.>

1.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이하 이 항에서 "채권등"이라 한다)으로서 상환기간이 1년 이상인 채권등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에 계좌를 개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전자등록(「주식 ·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등록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보유하거나 예탁할 것
2. 금융기관으로부터 환매기간에 따른 사전약정이율을 적용하여 환매수 또는 환매도를 조건으로 취득하는 채권등이 아닐 것
3. 채권등을 계좌에서 인출하지 아니할 것. 채권등을 인출한 경우에는 인출한 날부터 당해 채권등에 대하여 세금우대종합저축을 해지한 것으로 본다.

< 이하 생략 >

10. 지방세법

제74조(정의)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 1., 2018. 12. 31., 2020. 12. 29.>

1. "개인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에 대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2. "사업소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및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3. "종업원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4.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5. "사업주"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자를 말한다.
6. "사업소 연면적"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한다.
7. "종업원의 급여총액"이란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급, 임금, 상여금 및 이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종업원"이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직원, 그 밖의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75조(납세의무자) ① 개인분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지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둔 개인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20. 12. 29.>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민법」에 따른 미성년자(그 미성년자가 성년자와 「주민등록법」상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원 및 이에 준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4.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외국인

②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과세기준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고 있는 자는 제외한다)로 한다. 다만,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2020. 12. 29.>

1. 지방자치단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
2.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및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③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로 한다. <신설 2014. 1. 1.>

제76조(납세지) ① 개인분의 납세지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소지로 한다. <개정 2020. 12. 29.>

② 사업소분의 납세지는 과세기준일 현재 각 사업소 소재지로 한다. <개정 2020. 12. 29.>

③ 종업원분의 납세지는 급여를 지급한 날(월 2회 이상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급여를 지급한 날을 말한다)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사업소를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하는 날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를 말한다)로 한다. <신설 2014. 1. 1., 2018. 12. 31., 2020. 12. 29.>

제77조(비과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
2. 주한외국정부기관·주한국제기구·「외국 민간원조단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 민간원조단체(이하 "주한외국원조단체"라 한다) 및 주한외국정부기관·주한국제기구에 근무하는 외국인. 다만, 대한민국의 정부기관·국제기구 또는 대한민국의 정부기관·국제기구에 근무하는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주민세와 동일한 성격의 조세를 부과하는 국가와 그 국적을 가진 외국인 및 그 국가의 정부 또는 원조단체의 재산에 대하여는 주민세를 부과한다.

② 삭제 <2019. 12. 31.>

③ 삭제 <2018. 12. 31.>

제78조(세율) 개인분의 세율은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0. 12. 29.]

제79조(징수방법 등) ① 개인분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개정 2020. 12. 29.>

② 개인분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7월 1일로 한다. <개정 2018. 12. 31., 2020. 12. 29.>

③ 개인분의 납기는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0. 12. 29.>

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 ①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거주자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한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원천징수와 동시에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는 개인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의무자(이하 이 절에서 "특별징수의무자"라 한다)로 한다.

② 특별징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하였을 경우에는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28조 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반기(半期)별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반기의 마지막 달 말일 현재의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9.>

③ 제1항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의무자가 제89조 제3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납부한 지방자치단체별 특별징수세액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과부족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할 특별징수세액에서 가감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감으로 인하여 추가로 납부하는 특별징수세액에 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환급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지방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12. 27.>

④ 개인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4. 1. 1.]

제103조의29(특별징수의무) ① 「법인세법」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내국법인으로부터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한 법인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4.>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징수를 하여야 하는 자를 "특별징수의무자"라 한다.

③ 특별징수의무자는 특별징수한 지방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제3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6조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며,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법인지방소득세액을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그 가산세액만을 부과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특별징수의무자인 경우에는 특별징수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12. 27., 2018. 12. 31.>

⑤ 법인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4. 1. 1.]

제103조의60(소액 징수면제) 지방소득세로 징수할 세액이 고지서 1장당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지방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8. 12. 31.]

11.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5(특별징수의무) ① 법 제103조의13 제1항 후단에 따른 특별징수의무자(이하 이 절에서 "특별징수의무자"라 한다)는 법 제103조의13 제2항에 따라 징수한 특별징수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서에 계산서와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한 특별징수세액을 납부할 때에는 근로소득, 이자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연금소득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그 명세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과세권자가 납세증명 발급 등 민원처리를 위하여 개인별 납세실적 파악이 필요하여 명세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여야 한다.

③ 개인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의무자가 법 제103조의13 제3항 전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별 특별징수세액에서 오류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과부족분(過不足分)을 오류를 발견한 날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할 특별징수세액에서 가감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남는 부분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할 다음 달의 특별징수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달의 특별징수세액에서 조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3.14.]

제100조의19(특별징수의무) ①법 제103조의29 제2항에 따른 특별징수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특별징수의무자”라 한다)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징수한 특별징수세액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1., 2017. 7. 26.>

② 특별징수의무자는 납세의무자별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를 특별징수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2월 말일(특별징수의무자가 휴업, 폐업 및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 폐업 및 해산일이 속하는 달 말일의 다음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특별징수의무자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징수의무자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징수의무자의 소재지와 납세의무자의 사업장 소재지가 다른 경우 납세의무자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지방법인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5. 6. 1., 2017. 7. 26., 2018. 12. 31.>

③ 특별징수의무자는 제2항 전단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6. 1.>
1. 출력하거나 디스켓 등 전자적 정보저장매체에 저장하여 인편 또는 우편으로 제출
2. 「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1항 제28호에 따른 지방세정보통신망으로 제출
④ 특별징수의무자는 납세의무자로부터 법인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한 경우에는 그 납세의무자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세법」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같은 법 제74조에 따른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할 때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액과 그 납세지 정보를 포함하여 발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5. 6. 1., 2017. 7. 26., 2019. 2. 12.>
⑤ 제4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른 이자소득금액 또는 배당소득금액이 계좌별로 1년간 1백만원 이하로 발생한 경우에는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영수증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5. 6. 1., 2019. 2. 12.>
⑥ 법 제103조의29 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주한 미국군을 말한다. <신설 2019. 2. 8.>
[본조신설 2014. 3. 14.]

12.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①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1994.12.22., 1998.12.28., 1999.12.28., 2000.12.29., 2001.12.29., 2005.1.5., 2007.12.31., 2010.12.30., 2013.5.28.>

호별	과세표준	세율
1	「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을 받는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세액(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100분의 20
2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받은 이자소득·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세액	100분의 10
3	삭제 <2010.12.30>	
4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개별소비세액	
	가.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3항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
	나. 가목 외의 경우	100분의 10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증권의 양도가액	1만분의 15
6	「지방세법」 제11조 및 제12조의 표준세율을 100분의 2로 적용하여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액	100분의 10
7	「지방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레저세액	100분의 20
8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액	100분의 20

②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제1항에 따른 조합법인 등의 경우에는 제1호에 규정된 세액에서 제2호에 규정된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감면을 받는 세액으로 보아 제1항 제1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0.12.30.>

1.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금액에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
2.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금액에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제1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

③ 비과세 및 소득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산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감면을 받는 세액으로 보아 제1항 제1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0.12.30.>

④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소득세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1호에 규정된 세액에서 제2호에 규정된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감면을 받는 세액으로 보아 제1항 제2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0.12.30.>

1. 이자소득·배당소득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100분의 14
   나. 배당소득의 경우에는 100분의 14
2.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납부하는 소득세액(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⑤ 제1항 제6호에도 불구하고「지방세법」제15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계산한 취득세액을 제1항 제6호의 과세표준으로 본다. <신설 2010.12.30.>

제6조(납세지)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지는 해당 본세의 납세지로 한다.
[전문개정 2010.12.30.]

제7조(신고·납부 등) ①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는 해당 본세를 신고·납부(중간예납은 제외한다)하는 때에 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신고·납부할 본세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본세의 신고·납부의 예에 따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에 따른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조 제9호에 따른 연결모법인이 신고 ·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3조 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1. 12. 31., 2018. 12. 24.>

③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제5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를 적용받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법」의 원천징수의 예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징수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④ 제5조 제1항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어촌특별세는 해당 본세를 신고·납부하거나 거래징수(「증권거래세법」제9조에 따른 거래징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납부하는 때에 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납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30., 2011.12.31.>
[제목개정 2010.12.30.]

13. 국고금관리법

제47조(국고금의 끝수 계산) ① 국고금의 수입 또는 지출에서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에는 그 끝수는 계산하지 아니하고, 전액이 10원 미만일 때에도 그 전액을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세의 과세표준액을 산정할 때 1원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③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와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할 수 있다. 다만,「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4.4]

2021년 한국은행 증권업무해설 집필진

목 록	원고집필 담당
Ⅰ. 국채 업무 제1장 국채 제도 개요 제2장 국채의 발행 제3장 국채의 상환 제4장 국고채전문딜러 제도 제5장 국채 원금·이자 분리거래제도(STRIPS)	차 장 김 혜 경 조사역 염 지 인 〃 이 경 숙 〃 박 미 애
Ⅱ 통화안정증권 업무 제1장 업무 개요 제2장 통화안정증권의 발행 제3장 통화안정증권의 등록 제4장 통화안정증권의 상환 제5장 발행 및 상환의 회계처리 제6장 통합발행 회계처리 예시	과 장 신 성 욱 조사역 박 나 라 〃 최 인 실
Ⅲ 국공채 매매 및 대차 업무 제1장 업무 개요 제2장 환매조건부채권(RP) 매매 제3장 증권 단순매매 제4장 증권대차	과 장 신 성 욱 조사역 박 나 라 〃 최 인 실

목 록	집 필 자
Ⅳ 채권 관련 원천징수 업무 제1장 채권 과세제도 개요 제2장 채권관련 원천징수제도 제3장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관련 원천징수업무	차 장 김 혜 경 과 장 신 성 욱 조사역 박 나 라 〃 염 지 인 〃 이 경 숙 〃 최 인 실 〃 박 미 애
Ⅴ 수입인지 업무 제1장 수입인지 제도 개요 제2장 수입인지 수급 및 판매 제3장 수입인지 판매대금 회수 및 국고 납입 제4장 수입인지 판매인 관리 및 보고	과 장 박 경 호 〃 김 수
Ⅵ 정부유가증권 업무 제1장 업무 개요 제2장 정부유가증권 수급 및 관리 제3장 정부유가증권 수탁 및 환부 제4장 정부유가증권 월계대사 및 계산보고 제5장 정부유가증권 관련 기타 업무	과 장 박 경 호 〃 김 수
Ⅶ 징발보상증권 관련 업무 제1장 업무 개요 제2장 징발보상증권 발행 및 상환 제3장 징발보상금의 공탁 제4장 징발재산의 환매	과 장 박 경 호 〃 김 수

목 록	집 필 자
Ⅷ 현물보관 업무 제1장 증권 과목 제2장 증권 출납, 관리, 폐기 및 현송 제3장 시재검사	과 장 박 경 호 〃 김 수
Ⅸ 증권 커스터디(Custody) 업무 제1장 한국은행 증권 커스터디 업무 개요 제2장 증권 커스터디 약정체결 절차 제3장 증권 커스터디 업무 세부절차 제4장 유관기관의 역할 및 프로세스 제5장 BOK-CS 등 관련 시스템 제6장 SWIFT 메세지	과 장 박 경 호 〃 고 태 호 조사역 송 병 헌 〃 이 보 미
Ⅹ 참고 자료 제1장 채권의 종류 제2장 전자증권제도의 개요 제3장 증권업무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관련 세법조항	차 장 김 혜 경 과 장 신 성 욱 조사역 박 나 라 〃 염 지 인 〃 이 경 숙 〃 최 인 실 〃 박 미 애

03320
9 791155 385852
ISBN 979-11-5538-585-2

m.bok.or.kr